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김기태·김문길·임완섭·이주미·조보배·장윤선·김한나·박형준

윤상용·이석민·권신정·김우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보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장윤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한나	충신대학교 사범학부 교직과 부교수
	박형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석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권신정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김우성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39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14-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39>

발|간|사

국민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사뭇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1970~1990년대를 관통하던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 ‘계층 사다리’ 등으로 상징되던 사회이동성의 기능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안정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사회이동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이동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은 청소년 및 청년에게는 희망의 감소를, 중장년 및 노령세대에게는 자녀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된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언제든지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지는 사회가 발전되고 더 좋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사회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사회이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소득과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우리 연구진은 소득과 교육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자산, 사회적 관계는 물론 장애인과 젠더 관점에서도 사회이동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번 연구는 사회이동성 관련 3개년 연구 중 첫 번째 해로 한국의 사회이동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올해 연구를 기초로 향후 2년간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연구위원, 이주미 부연구위원, 조보배 전문연구원, 장운선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외부에서는 김한나 충신대학교 교수, 박형존 광주대학교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김우성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이석민 사무관

과 원신정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견을 주신 우리 원의 조성은 연구위원과 원외의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실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연구진은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 연구가 사회정책, 사회복지, 공공부조 등에 관심이 있는 교수, 전문가 및 학생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신 영 석





요 약	1
-----------	---

제1부 총론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34
제2장 사회이동성 이론적 배경 및 사회이동성 현황	37
제1절 이론적 배경	39
제2절 기존 통계를 통해 본 사회이동성 진단	60
제3장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	97
제1절 조사 개요	99
제2절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	10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56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63
제2절 정책적 함의	167

제2부 한국 사회 분야 사회이동성 진단

제5장 자산 이동성 진단	173
제1절 문제제기	175
제2절 이론적 논의	178
제3절 분석결과	185
제4절 시사점	198
 제6장 노동(일자리) 이동성 진단	203
제1절 서론	205
제2절 개념적 검토와 주요 선행연구	207
제3절 일자리 이동 관련 현황 및 추이 검토	213
제4절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형태 중심으로	224
제5절 주요 결과 및 함의	241
 제7장 교육 이동성 진단	245
제1절 서론	247
제2절 사회이동성과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249
제3절 분석개요 및 방법	254
제4절 분석결과	259
제5절 결론	269



제8장 사회적 관계 이동성 진단	273
제1절 서론	275
제2절 분석결과	285
제3절 소결	294
 제9장 장애인의 사회이동성 진단	 295
제1절 들어가며	297
제2절 연구방법	302
제3절 분석 결과: 세대 내 이동	304
제4절 분석 결과: 세대 간 이동	321
제5절 소결	342
 제10장 성별 사회이동성 진단	 345
제1절 서론	34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349
제3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352
제4절 분석결과	354
제5절 연구 요약 및 정책적 함의	367
 참고문헌	 371
 [부록 1]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조사표	 391

[부록 2] 스웨덴 사회이동 연구의 현황과 함의	413
제1절 서론	413
제2절 사회이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	416
제3절 스웨덴 사회이동성의 변화	420
제4절 전 국민 등록 인구 데이터 활용과 사회이동성 연구	426
제5절 결론: 스웨덴 사회이동성 연구의 함의	428
 [부록 3] 부표	431
 Abstract	443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국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4
〈표 1-2〉 특정 계층 소득분위 유지·탈출·진입	27
〈표 1-3〉 특정 계층 소득분위 지속성(6년 연속 비교)	27
〈표 1-4〉 분야별 사회이동성 분석에서 사회이동성 정의 및 측정 기준	33
〈표 2-1〉 계층의식(2021→2023년)	63
〈표 2-2〉 본인 세대 계층이동(2021→2023년)	63
〈표 2-3〉 자식 세대 계층이동(2021→2023년)	64
〈표 2-4〉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2006~2023년)	65
〈표 2-5〉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2006~2023년)	65
〈표 2-6〉 분석 대상에 대한 기초통계량	67
〈표 2-7〉 분석 변수 및 요인 분류	68
〈표 2-8〉 연도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71
〈표 2-9〉 연령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74
〈표 2-10〉 소득계층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	76
〈표 2-11〉 지역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78
〈표 2-12〉 소득이동통계 개요	80
〈표 2-13〉 소득이동성 추이(2017~2022년)	81
〈표 2-14〉 소득분위별 이동비율(2021→2022년)	82
〈표 2-15〉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이동비율(2017~2022년)	83
〈표 2-16〉 개인 소득금액 변화에 따른 인구구성비(2017~2022년)	84
〈표 2-17〉 2017년 소득 1분위 지속기간별 비율(2017→2022년)	85
〈표 2-18〉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이동비율(2021→2022년)	86
〈표 2-19〉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유지비율(2021→2022년)	87
〈표 2-20〉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구성비(2022년)	88
〈표 2-21〉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이동분포(2021→2022년)	90
〈표 2-22〉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이동비율(2021→2022년)	91
〈표 2-23〉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비율(2017~2022년)	92

〈표 2-24〉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비율(2021년→2022년)	93
〈표 2-25〉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비율(2021년→2022년):성별 구분 ..	94
〈표 2-26〉 소득계층별 소득이동성(2017~2022년)	95
〈표 3-1〉 조사 설계	99
〈표 3-2〉 조사 내용	100
〈표 3-3〉 조사 응답자 특성	101
〈표 3-4〉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연령별 응답 결과	103
〈표 3-5〉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연령별 응답 결과	104
〈표 3-6〉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국민인식	105
〈표 3-7〉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국민인식	106
〈표 3-8〉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태의 응답 결과	108
〈표 3-9〉 5년 전(2020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	109
〈표 3-10〉 현재(2025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	110
〈표 3-11〉 5년 후(2030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	111
〈표 3-12〉 5년 전(2020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상태	112
〈표 3-13〉 현재(2025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상태	113
〈표 3-14〉 5년 후(2030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상태	114
〈표 3-15〉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	117
〈표 3-16〉 우리나라의 이상적 소득 분배 상태	118
〈표 3-17〉 정부 지원에 관한 동의 정도의 응답 결과	119
〈표 3-18〉 사회 전체 및 분야별 공정성에 관한 응답 결과	120
〈표 3-19〉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	122
〈표 3-20〉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123
〈표 3-21〉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124
〈표 3-22〉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주는 영향 ..	125
〈표 3-23〉 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친 영향	126
〈표 3-24〉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친 영향	127



〈표 3-25〉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 성별, 연령별, 이념적 성격, 주관적 계층	128
〈표 3-26〉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 소득분위별	129
〈표 3-27〉 분야별 사회이동성 인식	130
〈표 3-28〉 분야별 사회이동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32
〈표 3-29〉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	134
〈표 3-30〉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135
〈표 3-31〉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중요도	136
〈표 3-32〉 경제적 생활상태의 보기 문항의 5개 범주 계층 구분	138
〈표 3-33〉 현재의 경제적 생활상태에 기반한 소득계층 인식	139
〈표 3-34〉 현재와 아동기(15세 무렵) 경제생활상태 비교	141
〈표 3-35〉 현재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낮아진 주된 이유	143
〈표 3-36〉 현재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높아진 주된 이유	145
〈표 3-37〉 어린 시절 부모님과 헤어진 경험(사망, 이혼 등)	147
〈표 3-38〉 어린 시절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중 주 소득자)께서 실직한 경험	148
〈표 3-39〉 부모, 조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험	150
〈표 3-40〉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제적 도움 정도	151
〈표 3-41〉 평일 하루 동안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친인척 혹은 친구·지인의 수 비율 ..	152
〈표 3-42〉 가족·친인척 및 친구·지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주된 방식	153
〈표 3-43〉 응답자의 15세 당시 및 현재 기준 주관적 계층 집단별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의 수	155
〈표 5-1〉 분석 대상 세대구분 및 연령구분	183
〈표 5-2〉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	193
〈표 5-3〉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	195
〈표 5-4〉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변수 간 상관관계	197
〈표 6-1〉 일자리이동통계 지표의 정의	214
〈표 6-2〉 등록취업자 및 미등록자 현황 및 추이	215
〈표 6-3〉 등록취업자의 진입률, 유지율, 이동을 현황과 추이	216

〈표 6-4〉 종사상 지위별(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진입률, 유지율, 이동을 현황과 추이 ...	217
〈표 6-5〉 기업규모별 진입률, 유지율, 이동을 현황과 추이	219
〈표 6-6〉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간 일자리 상황 이동 현황 및 추이: 성별, 연령별 ..	220
〈표 6-7〉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각 연도 8월 기준)	222
〈표 6-8〉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고용형태 변화	225
〈표 6-9〉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고용형태 변화	226
〈표 6-10〉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기업규모 변화 추이	232
〈표 6-11〉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기업규모 변화 추이	232
〈표 6-12〉 18차 자료(3~17차와 동일)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237
〈표 6-13〉 비정규직→정규직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그 내용	238
〈표 6-14〉 비정규직→정규직 결정요인 분석: 패널 로짓 적용	239
〈표 7-1〉 원자료에서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소득 수준 분포	255
〈표 7-2〉 원자료에서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256
〈표 7-3〉 소득 수준 변인을 재범주화한 하위 범주	257
〈표 7-4〉 교육 수준 변인을 재범주화한 하위 범주	258
〈표 7-5〉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식 세대의 소득 수준 분포	260
〈표 7-6〉 부모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식 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261
〈표 7-7〉 동일 세대 및 세대 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상관분석	263
〈표 7-8〉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 세대의 소득 수준 간 상관분석	264
〈표 7-9〉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식 세대의 교육 수준 차이 검정	265
〈표 7-10〉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 세대의 교육 수준 간 상관분석	266
〈표 7-11〉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 세대의 교육 수준 간 대응분석	267
〈표 7-12〉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268
〈표 7-13〉 자식 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268
〈표 8-1〉 사회자본의 정의 및 사회적 관계	277
〈표 8-2〉 사회적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선행연구	281
〈표 8-3〉 부모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와 기초통계	289



〈표 8-4〉 부모의 네트워크 분포	290
〈표 8-5〉 아빠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 사이 상관관계	293
〈표 8-6〉 엄마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 사이 상관관계	293
〈표 9-1〉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	304
〈표 9-2〉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장애인	305
〈표 9-3〉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이 중도장애를 입은 경우	305
〈표 9-4〉 노동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	306
〈표 9-5〉 노동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장애인	307
〈표 9-6〉 노동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이 중도장애를 입은 경우	307
〈표 9-7〉 총자산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	308
〈표 9-8〉 총자산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장애인	309
〈표 9-9〉 총자산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이 중도장애를 입은 경우	309
〈표 9-10〉 장애 발생 '전-후' 소득 백분위: 65세 '전-후'와 비교	310
〈표 9-11〉 장애 발생 '전-후' 소득 하위 1분위 소속 비율: 65세 '전-후'와 비교	311
〈표 9-12〉 장애 발생 '전-후' 실업·비경활 및 건강상태: 65세 '전-후'와 비교	318
〈표 9-13〉 소득 백분위 평균 비교	322
〈표 9-14〉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5분위)	323
〈표 9-15〉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종사상 지위 이동	324
〈표 9-16〉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교육 수준 이동	326
〈표 9-17〉 소득 백분위 평균 비교	327
〈표 9-18〉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5분위)	329
〈표 9-19〉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종사상 지위 이동	330
〈표 9-20〉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교육 수준 이동	331
〈표 9-21〉 자녀의 가처분소득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소득	333
〈표 9-22〉 자녀의 노동소득 수준 및 자산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소득	335
〈표 9-23〉 자녀의 가처분소득과 자산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자산	336
〈표 9-24〉 자녀의 노동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자산	337

〈표 9-25〉 부모의 장애와 자녀의 장애 및 건강	339
〈표 9-26〉 자녀 장애 및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부모 장애의 영향	340
〈표 9-27〉 자녀 건강과 의료 이용에 대한 부모 장애의 영향	341
〈부표 1-1〉 스웨덴의 세대 간 사회 이동성 관련 선행 연구 정리	425
〈부표 1-2〉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성별 구성 분포 추이	431
〈부표 1-3〉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연령대 구성 분포 추이	431
〈부표 1-4〉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성별 구성 분포 추이	432
〈부표 1-5〉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연령대 구성 분포 추이	432
〈부표 1-6〉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학력 분포 추이	433
〈부표 1-7〉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아동기 주관적 경제적 생활상태 분포 추이 ...	433
〈부표 1-8〉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학력 분포 추이	434
〈부표 1-9〉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아동기 주관적 경제적 생활상태 분포 추이 ..	434
〈부표 1-10〉 10장: 연령별 성별 월평균 임금	435
〈부표 1-11〉 10장: 연령별 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	437
〈부표 1-12〉 10장: 5분위별 연령별 월평균 임금	439
〈부표 1-13〉 10장: 5분위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440
〈부표 1-14〉 10장: 5분위별 연령별 분위유지율(월평균 임금)	441
〈부표 1-15〉 10장: 5분위별 연령별 분위유지율(시간당 임금)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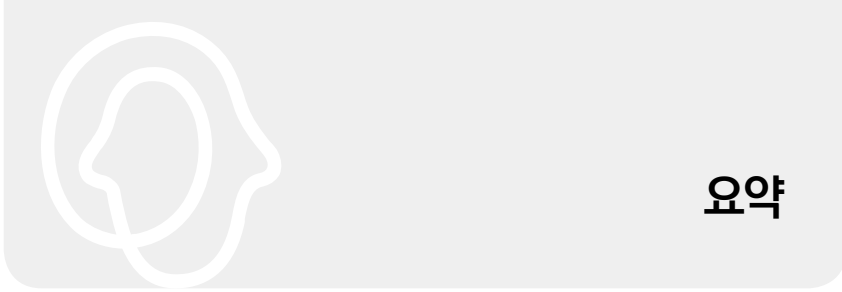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분야별 불평등과 이동성	25
[그림 1-2] 5년간 동일 분위 유지 비율(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비교)	26
[그림 1-3] 소득 5분위 분배율, 격차 및 동일 분위 유지율 간 비교(시장소득 기준)	28
[그림 2-1]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소득·재산 평등 정도 인식	68
[그림 2-2]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소득·재산 평등 정도 인식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식(2012~2021년)	70
[그림 2-3] 연령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72
[그림 2-4] 소득계층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	75
[그림 2-5] 지역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77
[그림 3-1] 현재 우리나라 소득 분배 상태와 이상적 분배 상태 질문의 국가 예시	116
[그림 5-1] 총자산과 순자산의 분위 이동 분포 비교(5년 주기)	184
[그림 5-2] 연령대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185
[그림 5-3] 세대구분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186
[그림 5-4] 성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187
[그림 5-5] 지역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187
[그림 5-6] 소득계층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188
[그림 5-7] 연령대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189
[그림 5-8] 세대구분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190
[그림 5-9] 성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191
[그림 5-10] 지역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191
[그림 5-11] 소득계층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192
[그림 6-1] 등록취업자 및 미등록자 현황 및 추이	215
[그림 6-2] 등록취업자의 진입률, 유지율, 이동률 현황과 추이	216
[그림 6-3] 기업규모별 진입률, 유지율, 이동률 현황과 추이	219
[그림 6-4]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정규직 규모(비중)	221
[그림 6-5] 정규직 전환율: 기간별, 유형별, 규모별, 연령별	223
[그림 6-6]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227

[그림 6-7]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와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229
[그림 6-8]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와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학력, 아동기의 주관적 경제상태 분포	230
[그림 6-9]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와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기업규모 변화 추이	234
[그림 7-1]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 세대의 교육 수준 간 대응분석 시각화	267
[그림 8-1] 영국 사회이동성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회이동성의 동인	279
[그림 8-2]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83
[그림 8-3]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284
[그림 8-4]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단체 참여 여부	291
[그림 8-5]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292
[그림 9-1] 가처분소득 백분위 변화	312
[그림 9-2] 가처분소득 1분위 소속 비율 변화	313
[그림 9-3] 노동소득 백분위 변화	314
[그림 9-4] 노동소득 1분위 소속 비율 변화	315
[그림 9-5] 총자산 백분위 변화	316
[그림 9-6] 총자산 1분위 소속 비율 변화	317
[그림 9-7] 실업·비경활 상태 비율 변화	319
[그림 9-8]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	320
[그림 10-1] 연령별 코호트별 임금 추이(월평균 실질 임금): 전체, 남성, 여성	357
[그림 10-2] 연령별 코호트별 임금 추이(시간당 실질임 임금): 전체, 남성, 여성	358
[그림 10-3] 30세 기준 5분위 별 임금 추이(월평균 실질 임금): 전체, 남성, 여성	361
[그림 10-4] 30세 기준 5분위 별 임금 추이(시간당 실질 임금): 전체, 남성, 여성	362
[그림 10-5] 30세 기준 5분위 기준: 분위 유지율(월평균 임금 기준): 전체, 남성, 여성	365
[그림 10-6] 30세 기준 5분위 기준: 분위 유지율(시간당 임금 기준): 전체, 남성, 여성	36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이동성이 불평등과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 측면의 대응은 미비하였다. 이에 빈곤, 불평등 및 사회이동성 간 관계는 물론 한국의 세대 간, 사회부문별 사회이동성 측정을 통해 사회이동성 저하의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이동성 연구의 경우 주로 교육과 자산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현 한국의 사회이동성 저하는 특정 영역의 영향이기보다는 사회발전과정, 주기적 위기발생, 국민 다수가 사회이동성이 저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인발생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사회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고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연구는 3년 연구 중 1차 년도에 해당하는 연구로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1부의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사회이동성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 및 국가데이터처의 주요 결과를 다루었다. 1부의 3장에서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분야별 사회이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자산, 교육, 장애인, 성별에 관한 사회이동성을 살펴보고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1) 사회이동성 이론적 배경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은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서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이동성은 여러 하위 개념으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세대 간 이동성과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 그리고 절대적 이동성(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 이동성(relative mobility)이 주요한 구분 기준이다.

사회이동성의 양상은 이를 관찰하는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고 이해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는 한 개인의 생애 동안 또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중심이 되며, 사회 수준에서는 이러한 개인들의 이동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구조적 특성이 중심이 된다. 개인의 사회이동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양상, 즉 상향 이동(upward mobility), 하향 이동(downward mobility), 그리고 수평 이동(horizontal mobility)으로 구분된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 이동성 양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의 이동 양상의 총합으로서 개인들의 이동 양상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생산적 사회와 비재생산적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불평등, 빈곤, 사회 이동성 개념은 상호 중첩되며, 특히 구조적 불평등은 빈곤의 지속을 낳고, 사회이동성을 제약함으로써 계급의 재생산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이동성(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의 관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의 경로는 부동/재생산 메커니즘과 이행/계급횡단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낮은 사회이동성의 경로에 해당하는 부동/재생산 메커니즘은 사회자본-교육-고용-소득-사회자본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재생산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행/계급횡단은 개인의 주체성과 제도적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행은 특정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만 가능하거나 촉진될 수 있다.

2) 기존 통계를 통해 본 사회이동성 진단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2023년 사회조사 결과 19세 이상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년 전(2021년)의 응답 결과와 비교할 때, 본인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나 자식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은 감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본인세대뿐만 아니라 자식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으로써 개인이 인지하는 소득수준과 개인이 인지하는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가능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새롭게 작성된 소득이동통계를 분석하였다. 소득분위기준 연령을 세분하여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소득분위 이동비율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성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청년층(15~34세)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았으며, 노년층(65세 이상)은 가장 낮았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상향 이동 비율이 높으나, 장년층(35~49세)에 접어들면서 하향 이동 비율이 상향 이동을 상회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하향 이동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소득분위 유지비율과 소득분위 구성을 보면, 청년층에서 남자는 4분위 유지비율(18.8%)이, 여

4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자는 1분위 유지비율(15.8%)이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장년층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분위가 아닌 네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시장소득 관점에서 사회이동성을 보면, 빈곤에서 벗어난 비율(빈곤탈출률)은 '17년 21.6%, '22년 20.3%로 감소하였으며, 역시 빈곤진입률도 동기간 9.0%에서 8.3%로 감소하였다. 빈곤층(중위 50%)과 차상위층(중위 50~75%) 간 이동 역시 동기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빈곤에서 차상위로의 이동은 10%대인 반면에 차상위에서 빈곤층으로의 이동이 20%대 후반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21년과 '22년 시점 기준으로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률이 줄어든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의 경우 9.1%로 감소한 반면, 빈곤으로의 진입은 1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과 성별을 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탈출률은 여성이 더 낮고, 빈곤진입률은 여성이 더 높았으며, 차상위로의 이동 역시 여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3) 사회이동성 국민인식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과 자산배분이 과거(5년 전)보다 현재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했으며, 미래(5년 후)에는 양 극단, 즉 매우 불평등하거나 혹은 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양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보다는 자산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분배 국가 유형별 분석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배분이 완전하게 균등하게 배분된 상태는 아니라는 인식과 현재 배분 상태가 바람

직하지 않다고 인지하지도 않는 인식이 공존하였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4%, 보통 59.2%, 부정적 견해가 15.4%로 사회이동성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1순위를 기준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였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47.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본인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경향도 46.5%로 나타나 많은 국민이 사회이동성이 세대 간 이전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75.0%)’, ‘소득 및 자산격차 지속(74.3%)’, ‘저출산 및 고령화(74.1%)’를 비슷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성차별 및 젠더 문제(48.7%)’,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변화(53.6%)’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낮다고 조사되었다.

4) 자산 이동성 진단

자산(wealth)은 세대를 거쳐 지속되며, 특히 상위 계층에서 소득보다 더 강하게 지속되는 점에서 계층 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장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이동성, 특히 자산 이동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세대 내 자산 이동성의 경우 10년 주기 분석은 5년 주기에서 관찰된 계층 이동성의 한계, 정체성, 대물림 구조를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면서, 시간의 누적 효과로 인해 자산 이동성의 크기와 격차, 지역·계층·세대별 양극화가 더욱 크게 드러났다. 구조적인 계층 고착과 대물림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고해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소득의 양극층에서 자산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며, 소득 중간 계층에서 오히려 자산의

분위 이동이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 대물림 현상이 자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점이 뚜렷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의 자산 분위 상승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광역시, 그다음은 시·군 순으로 자산 분위 상승 비율이 서서히 낮아졌다.

분가가구를 대상으로 세대 간 자산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비교했을 때, 부모세대 대비 자녀세대에서 자산 분위가 유지되는 경우나 상승하는 경우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 65% 정도가 자산 분위 하락을 경험하는데,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립한 경우에는 하락 경향이 더 강했다. 이는 세대 간 자산의 상향 이동이 극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1~3분위) 부모를 둔 자녀는 대다수 자산 분위도 하위권에 머물고, 반대로 상위 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는 자산 분위의 유지와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계층이 자산계층으로 대물림되는 구조가 사회 전반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부모가구의 자산 분위와 자녀가구의 자산 분위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첫째, 자산 이동성은 단기적인 이동성의 결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혹은 실질적인 계층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세대의 자산이 자녀세대의 자산으로 이전되면서 자산 이동성은 세대 간 세습화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세대의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산 분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점에서 본인의 ‘노력의 기회’보다 ‘출발선 위치의 차이’가 이동성을 결정짓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 증여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산축적, 자산형성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필요하다. 셋째, 자산 이동성의 약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사회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산은 단순한 수입의 개념이 아닌 부동

산, 금융자산 등 누적 자원이 증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세습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은 공부를 통한 직업의 선택, 창업 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지는 반면, 자산은 부모세대로부터의 초기 지원 유무에서 결정되는 출발선 자체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 고용, 주거 등 통합적이고 국가적인 구조적 개입 차원의 정책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5) 노동(일자리) 이동

본 장에서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일자리이동통계’ 결과를 통해 노동 이동성 관련 현황과 추이를 살펴본 결과 등록취업자의 경우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지율은 증가하고 진입률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는 비임금근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임금근로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의 경우 진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지율은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노동(일자리) 이동의 역동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측면에서 2020년 이후 정규직 규모는 등락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한시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 추이에 대한 관찰은 임금근로 관련 노동시장 여건과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사회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 차원에서 노동(일자리) 이동 관련 현황 추이를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패널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먼저 동태적 추이를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다소 증가되었다. 한편,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은 등락은 있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규직 집단이 비정규직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용형태 구조가 상당 부문 고착화된 상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 측면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성 비중이 높은 고용형태 측면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성별 차이에 따른 격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집단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정규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30대와 20대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은퇴 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의 증가가, 60대 이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과 정규직 유지 비율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 아동기의 주관적 경제상태에서는 가난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 집단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 ‘중소기업→대기업’ 이동 집단은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근소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일자리 이동에 있어 일자리 상향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로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의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연령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의 경우 고졸 미만 대비 다른 학력 수준들은 고졸 미만과 비교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인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인 경우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동 관련 변수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아동기)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가난’하다고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즉 직업 상향 이동에 있어서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2차 연구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근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또는 강화하고 이를 기업에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의 경제적 수준이 미래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고용형태는 소득이동 및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 차원의 기능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이동성 제고로 인한 계층 사다리 유지 및 그 기능의 제고 차원에서 소득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삼중전환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소득이동성이 최소한 악화되지 않고 미래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보장 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6) 교육 이동성 진단

교육은 사회이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자녀세대의 교육 성취와 이후 소득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사회이동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히 세대 간 교육 수준의 변화와 집단 특성에 따른 교육·소득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도출되었다. 첫째,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대체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분포가 여전히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는 약한 순서 일치성이 존재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부모세대의 교육 자본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소득이동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세대가 ‘대졸 이상’ 학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교육 자본이 세대를 거쳐 이전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육 수준의 세대 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세대에서는 ‘고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자녀세대에서는 ‘대졸 이상’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세대 간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등교육 이수 기회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볼 때,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세대 간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기회는 부모세대의 교육 및 소득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자녀 교육 지원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에서 교육과 소득 간 연계성이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현재의 사회구조가 뚜렷한 세대 간 이동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교육 정책의 개입을 통해 사회이동성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나아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성취를 절대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교육 기회 확대와 소득 기반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사회적 관계 이동성

이번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녀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혹은 대물림에 대해서 기초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의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관계’ 혹은 ‘네트워크’ 측면에 주목했다.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는 매우 희소했다. 국내 연구는 전무했고, 해외 연구가 세 편 정도 확인됐다. 부모의 사회활동이 자녀의 클럽 참여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패널 분석(Brown, McHardy, & Taylor, 2014), 부모의 직업상 대인 기술이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Okumura & Usui, 2010), 어머니의 동아리 참여 경험이 딸의 동아리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Duncan et al., 2005) 등이 있었다. 동물사회에서도 관계·위계의 상속이 관찰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를테면, 하이에나 대상 연구에서는 관계 혹은 위계가 대물림됨을 확인했다(Ilany et al., 2021). 즉, 야생의 동물들도 개별 개체가 적대적 혹은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위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계를 상속받음을 확인했다.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는 특성도 세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한국에서 가장 낮은 80.5%였다(OECD, 2024). 둘째, 한국에서는 세대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크다. OECD(2016)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악화해서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0.9%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졌다. 셋째,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관계의 불평등 수준 또한 한국에서 높다. OECD(2020)의 자료를 보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학력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부모의 네트워크는 세 가지 상황(아플 때, 큰돈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에서 ‘도움을 줄 사람 수’의 합으로 조작화해 ‘네트워크 II’로 정의하였다. 자녀의 네트워크

크는 아홉 개 유형의 단체참여 더미의 합과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를 더한 값으로 '네트워크 I'로 정의한다. 분석 대상은 동거하는 13~24세 자녀와 그 부모다.

주요 결과는 부모의 네트워크 II가 클수록 자녀의 단체참여 유형 수와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가 증가한다. 부·모 각각의 네트워크 지표와 자녀의 두 지표(및 합계) 사이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하다. 따라서 부모의 관계망이 클수록 자녀의 사회 참여 및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도 증가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대물림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은 OECD 국가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과 학력에 따라 관계의 양극화가 극심한 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8) 장애인의 사회이동성 진단

장애인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세대 내 이동을 살펴보면 소득분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은 이미 낮은 소득분위에 집중되어 분포하기 때문에 낮은 소득 수준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소득이동의 하방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산 분위의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고령의 장애인이 자산 축적 없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열악한 경제 상태에 놓일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장애 발생 전-후와 노년기(65세) 진입 전-후를 비교하여 장애 발생과 세대 내 이동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노동소득 수준은 장애 발생 전-후에 매우 단절적으로 감소하였다.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시점부터 실업·비경

제활동 상태의 비율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장애 발생 전-후로 크게 변동한 상태는 장애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즉 장애 발생을 경험한 집단은 장애 발생 전부터 이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장애와 세대 간 사회이동성 현황을 보면,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는 분명하였다. 다만, 소득 5분위,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의 이행 결과를 보면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상향 이동을 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미 낮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자녀세대에 이르러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회이동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더 많은 상향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녀 본인의 장애는 세대 간 이동의 하방성에 영향을 주었다. 장애를 가진 자녀세대는 비장애인 자녀세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하향 이동이 더 많은 편이었으며, 이는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 수준, 자산 수준이 자녀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 본인의 장애 여부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의 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대한 자녀 본인의 장애 여부는 부모의 영향을 조절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주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손상(장애)과 건강상태의 대물림이 입증되었다. 분석 결과, 부모의 장애 여부는 자녀세대의 장애와 건강상태를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의 장애가 다음 세대의 장애와 건강에 대물림되는 장애와 건강의 세대 간 이전이 확인되었다.

9) 성별 사회이동성 진단

여기서는 성별의 사회이동성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주목하며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제언 - 예를 들면 일가정양립제도, 노동시장 정책 등 - 을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 간 이동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메커니즘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료를 결합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고려하였다.

본 장에서는 성별 간 세대내 이동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절대적 이동(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 이동(relative mobility)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성별을 구분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균임금 값을 코호트를 구분하여 관측한 경우 이전 출생 코호트(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와 마찬가지로 최근 출생 코호트(80~89년생)에서도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 평균 임금의 차이가 뚜렷이 관측되었다. 30세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임금 분위를 구분하여 이후 평균임금 추이를 살펴본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고임금 집단의 임금 추이는 다른 하위 분위의 임금 상승 추이와 뚜렷이 다르게 관측되는데, 구체적으로 성별 상관없이 저임금자는 계속해서 생애 전체에서 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이며 고임금자는 계속해서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성별 간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분위별 임금 추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경우 30세 기준 5분위

(상위 20%)의 임금 추이는 남성 5분위(20%)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이와는 다르게 보다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인다는 점인데, 한국의 고임금 여성이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도 성별 간 생애주기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을 보여주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임금패널티가 여전히 여성에게만 관측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을 기점으로 고용 중단이 여성의 임금 하락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이 실질적으로 모든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성별 시장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나 사회 이전 등의 재분배적 정책 기제가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제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시장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 분위에 따른 생애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주요 함의는 첫째,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이동성이 세대 내는 물론 세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 영역이 아닌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과정에서 세대 간 이전이 사회이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출발점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연령, 성별, 지역 등) 부모나 조부모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이들의 영향이 자녀세대의 향후 자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적 실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이동성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통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와 달리 사회이동은 하나의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통해 활발해지거나 고착화된다. 따라서 사회정책 관련 부처 등이 다루고 있는 사회이동과 분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조정실에 조정 및 평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말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실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은 사회이동과 소득분배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조정 및 평가 기능에 더해 통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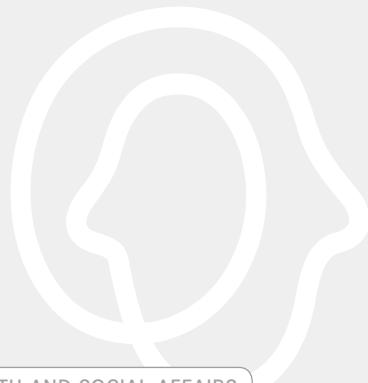
둘째, 계층이나 지위에 따른 부모나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발 시점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칭)사회적 자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태어나서(0세) 일정 연령(25세, 청년)까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부여하고(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 이를 교육,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 용어: 사회이동, 자산, 사회적 관계, 장애, 젠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부

총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 소득분배 측면에서 오랜 기간 우리는 빈곤, 불평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으며,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며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빈곤 및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소득분배 측면에서 양극화를 넘어 격차와 사회이동성 등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논의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놓치고 있었던 사회이동성과 관련하여 한국적 현실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현세대 청년층은 부모세대에 비해 더 좋은 경제적 상황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시장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채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득 5분위 분배율을 기초로 한 사회이동성은 낮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은 200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30.3% 수준이며,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역시 초기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채상태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은 교육 격차, 부동산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이동성 저하 현상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 부동산으로 귀결되는 자산에 대한 양극화 현상 등이 고착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동성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1-1〉 국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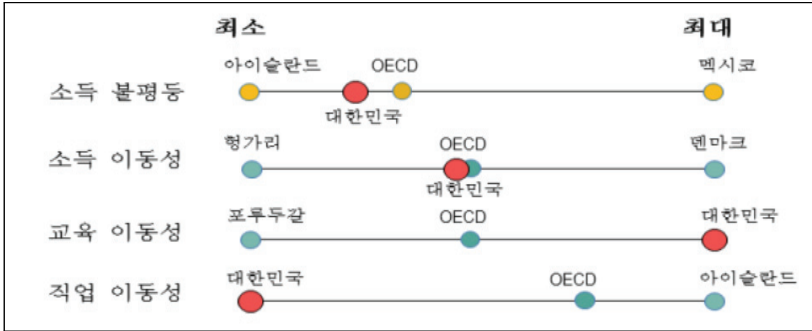
세대 간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39.9	48.4	41.7	39.9	31.0	30.6	29.4	30.3	30.3
성별	남자	41.1	49.7	43.0	40.8	32.3	31.6	30.2	30.9	30.9
	여자	35.0	43.4	37.5	37.1	27.2	27.8	27.1	28.6	29.2
연령별	30세 미만	35.3	44.0	40.1	40.3	31.3	30.3	30.0	27.3	31.3
	30~39세	41.0	48.0	38.4	35.9	26.7	26.2	24.8	25.6	24.8
	40~49세	39.6	49.9	40.4	38.8	30.0	27.6	28.0	30.3	29.4
	50~59세	39.0	49.3	42.4	41.4	31.3	32.1	28.9	31.6	30.4
	60세 이상	41.2	47.1	44.9	41.8	33.5	33.8	32.6	32.0	32.9
교육	초졸이하	35.3	40.8	39.2	36.5	26.5	31.8	29.0	24.7	26.6
	중졸	36.9	42.4	39.8	40.8	30.7	30.0	30.1	31.7	29.1
	고졸	38.6	47.0	39.9	38.6	31.6	30.5	27.6	30.2	30.6
	대학이상	45.4	55.4	45.3	42.6	32.6	30.4	30.9	31.7	31.4
세대 내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27.5	35.7	28.8	28.2	21.8	23.1	23.1	25.5	27.2
성별	남자	28.5	37.0	29.6	29.3	22.8	24.2	23.8	26.6	28.1
	여자	23.8	31.0	26.1	24.7	19.1	20.1	21.3	22.6	25.0
연령별	30세 미만	31.9	43.5	31.1	34.9	28.0	26.0	27.7	27.0	33.5
	30~39세	27.0	36.3	25.7	27.2	20.1	20.7	21.6	24.5	25.8
	40~49세	25.7	35.6	26.7	26.7	19.3	22.6	22.7	25.5	26.0
	50~59세	26.5	35.8	29.4	26.6	21.3	22.6	21.9	27.1	26.2
	60세 이상	30.4	33.2	31.9	29.8	23.8	24.6	23.9	24.6	27.8
교육	초졸이하	23.4	27.0	25.3	23.0	18.7	20.2	19.8	19.0	22.0
	중졸	22.7	27.3	25.6	24.8	20.4	21.4	21.3	22.6	22.7
	고졸	24.3	32.1	25.6	25.4	20.4	21.0	20.1	22.9	24.6
	대학이상	36.2	46.4	34.6	34.7	25.2	26.6	27.4	30.3	31.5

주: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과 세대 내 사회이동가능성 각각에 대해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지표누리-국가발전지표-사회이동가능성 인식. (2025.04.28. 인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3>)

OECD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소득이동성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랜 기간 높은 교육열,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 이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직업 이동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그림 1-1] 분야별 불평등과 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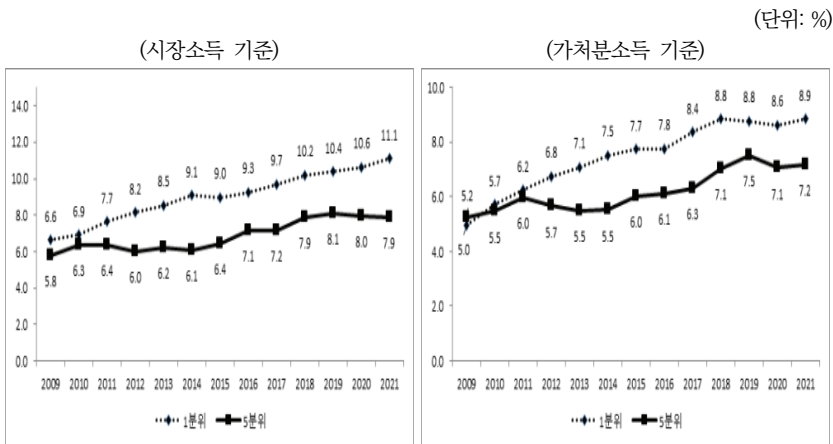
출처: OECD. (2018a).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Chapter 1 (KOR ver summary)

지난 정부에서도 2024년 이후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로 역동경제를 강조하며 그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이동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다. '24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생경제 측면에서 약자복지 및 청년지원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안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주장한 '사회적 이동성'은 사회학 등에서 말하는 '사회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24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관련 통계와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더욱이 지난 정부가 '25년 3월 헌법 재판소 판결을 통해 다음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바가 있다.

비록 정책적으로 사회이동성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회이동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기준으로 5년간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율을 시장소득 기반

으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로 동일한 분위를 유지하는 비율은 2009년 6.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은 11.1%로 증가하였다. 소득 5분위의 경우도 2009년 5.8%에서 2021년 7.9%로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동일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5년간 동일 분위 유지 비율(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비교)



주: 최종연도 종단가중치 기준 분석임(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출처: 김태완, 이주미. (2024). 사회이동성 지표 추이 분석. 기획재정부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발표자료. 재인용

국가데이터처의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24.12.18)에 의하면, 소득 하위에 비해 소득 상위 그룹의 동일 분위 유지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1년간 비교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 6년간 동일 분위 유지율을 기준으로 소득이동성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소득 하위 1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은 31.3%, 소득 상위 5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은 63.1%로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 번 저분위나 고분위에 들어가면 상당기간 동일 분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특정 계층 소득분위 유지·탈출·진입

(단위: %)

대상 소득분위	대상 기간	대상 소득분위 유지율 ¹⁾	대상 소득분위 탈출률 ²⁾	대상 소득분위 진입률 ³⁾
하위 20%	'17→'18년	68.1	31.9	8.0
	'18→'19년	68.3	31.7	7.9
	'19→'20년	67.8	32.2	8.0
	'20→'21년	68.3	31.7	7.9
	'21→'22년	69.1	30.9	7.7
상위 20%	'17→'18년	86.6	-	3.3
	'18→'19년	86.5	-	3.4
	'19→'20년	85.8	-	3.5
	'20→'21년	86.3	-	3.4
	'21→'22년	86.0	-	3.5

주: 1) t-1년 해당 소득분위에 속한 사람 중, t년 소득이 해당 분위를 유지한 사람의 비율.
2) t-1년 해당 소득분위에 속한 사람 중, t년 소득이 해당 분위에서 이동한 사람의 비율.
3) t-1년 해당 소득분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 중, t년 소득이 해당 분위로 이동한 사람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 보도자료(2024. 12. 18)

〈표 1-3〉 특정 계층 소득분위 지속성(6년 연속 비교)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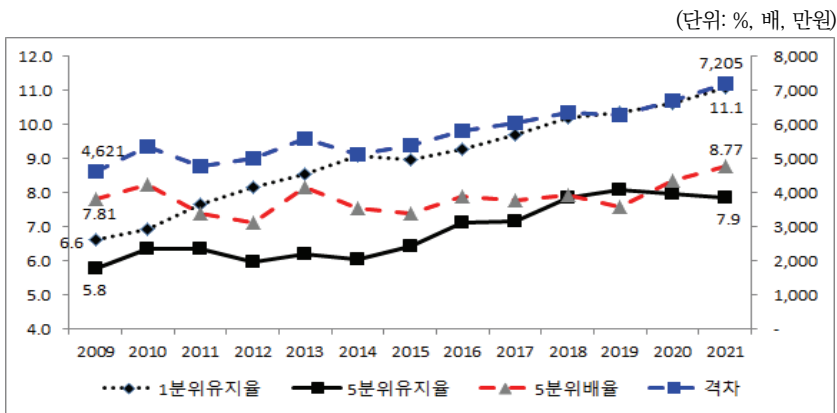
기준 시점	대상 소득분위	소득분위 지속 기간 ²⁾					
		1년 (2017년)	2년 (2018년)	3년 (2019년)	4년 (2020년)	5년 (2021년)	6년 (2022년)
2017년 이후	하위 20%	100.0	67.7	52.2	42.4	35.9	31.3
	상위 20%	100.0	86.9	78.5	72.3	67.3	63.1

주: 1) 2017~2022년 모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
2) 2017년 소득 하위(상위) 20%에 속한 사람의 6년('17~'22년) 동안의 소득 하위(상위) 20% 지속 기간. 예를 들어 2017년 소득분위가 하위 20%였다가 2018년에 하위 20%를 초과하면 지속 기간은 '1년'이며,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소득분위가 지속적으로 하위 20%에 속하면 지속 기간은 '6년'임.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 보도자료(2024. 12. 18)

사회이동성 저하, 특히 저분위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경우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이동성 저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사회이동성이 중요한 이유를 함께 보면, 시장소득 관점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2009년 7.81배에서 2021년 8.77배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12.3% 증). 역시 동일 분위 유지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이동성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 평균 소득 격차는 2009년 4,621만 원(균등화)에서 2021년 7,205만 원(균등화)으로 증가하고 있다(55.9% 증). 소득 5분위 배율에 비해 소득 격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이동성 제고를 통해 격차 혹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3] 소득 5분위 분배율, 격차 및 동일 분위 유지율 간 비교(시장소득 기준)



주: 최종연도 종단가중치 기준 분석임.

출처: 김태완, 이주미. (2024). 사회이동성 지표 추이 분석. 기획재정부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발표자료. 재인용

사회이동성이 불평등과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 측면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빈곤, 불평등 및 사회이동성 간 관계는 물론 한국의 세대 간, 사회부문별 사회이동성 측정을 통해 사회이동성이 저하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이동성 연구의 경우 주로 교육과 자산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현 한국의

사회이동성 저하는 특정 영역의 영향이기보다는 사회발전과정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이동성 저하가 국민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사회이동성 저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사회정책적 지향점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고 사회정책 개편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 현황과 사회정책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사회이동성 연구는 단년도 연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3차 년도의 연구를 계획하였으며 본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차 년도에는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기존 사회정책 한계와 대응 전략”을 다루며 3차 년도에는 “미래 사회적 위기(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가 가져올 사회이동성에의 영향과 사회정책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번 연구는 사회이동성 관련 3개 년도 연구 중 1차 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1차 년도에 진행하는 사회이동성 연구의 주요 연구목적과 방향은 한국의 사회이동성 저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다.

먼저 사회이동성과 관련이 높고, 직간접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간 유사점과 차별점 등에 대해 문헌

분석과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회이동성에 대한 개념, 소득분배와의 차이 등을 개괄하고, 이번 연구에서 각 분야별로 다루고 있는 사회이동성 정책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이동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제공된 사회이동성 관련 통계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의 연구자와 협업을 통해 2024년 새롭게 개발된 소득이동통계를 연구목적에 맞게 추가 분석함으로써 근거기반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진단을 위해 사회정책 분야와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젠더 관점에서 사회이동성이 어떠한 상태인지 분석해 보았다. 우리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이동성 분야는 전통적인 소득 및 자산, 교육, 고용 및 일자리 이외에 새로운 연구접근으로서 관계, 사회적 자본을 다루었으며 대상으로는 장애인과 젠더를 중심으로 부문별 사회이동성 정도를 평가해 보았다.

올해는 사회이동성 진단을 위한 1차년도 연구라는 관점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함께 조사 분석하였다. 기존 국가데이터처,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사회이동성 조사는 내용이 협소하고, 소득분배와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연구에서는 사회이동성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불평등 구조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 관련 분야별 평가와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정책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이론적 배경), 사회이동성 분야 선정 및 관련 분석과 최근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이동성 관련 인식조사를 추진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이동성과 관련이 높은 빈곤, 불평등 등 소득 분배와 사회이동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빈곤 및 불평등이 높은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이 높으며, 빈곤 및 불평등이 낮은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이 낮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빈곤 및 불평등과 사회이동성 간에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이 가지는 본래의 이론적 논의, 우리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이동성의 개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현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실태를 거시 및 미시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거시 및 미시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사회정책 간의 관계도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새롭게 발표한 소득이동통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의 사회이동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2차 년도 연구인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준 사회정책은 무엇이고, 이들 정책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준 영향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에서 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이동성 분야는 기존 이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소득 및 자산, 교육 등을 넘어 여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영역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관련 분야의 사회이동성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각종 조사 및 패널조사 등을 활용하여 사회이동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이동성은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절대적 이동, 상대적 이동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사회이동성을 살펴볼 때 분야별로 중요한 사회이동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자산 이동성의 경우 중요한 관심은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의 부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관심 주제이며, 사회적 관계의 경우에도 부모세대의 사회적 관계자본이 자녀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세대 간 이동성이 주요 주제이다. 반면 성별에 따른 사회이동성을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를 밝히는 세대 내 이동성이 주요 관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분야별로 주요한 이동성 정의는 상이하며 하단의 표에서는 분야별 사회이동성의 정의, 측정 기준 등에 관해 정리하였다.

〈표 1-4〉 분야별 사회이동성 분석에서 사회이동성 정의 및 측정 기준

분석분야	세대 간 이동성 (부모-자녀세대)	세대 내 이동성 (개인의 생애 내)	비고: 분석단위 및 분석자료
진통적 사회이동성	소득	- 중위소득 기준 소득이동성(1년 주기) * 빈곤층, 차상위, 중간계층, 고소득층 - 5분위별 시장소득 이동(1년 주기) (성별, 연령별, 지역별)	- 분석단위: 개인 -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 국가데이터처 (구 통계청) 소득이동통계 - 분석변수: 가구균등화 소득,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자산	- 부모세대 자산 5분위별 자녀세대 자산 분위	- 분석단위: 개인 -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
	노동 (직업)	-	- 분석변수: 가구균등화 자산, 총자산
	교육	- 부모 교육 수준별 자녀소득 - 부모 소득별 자녀교육 수준 - 부모 교육 수준별 자녀교육 수준	- 분석단위: 개인 -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
	사회적 관계	- 부모 네트워크에 따른 자녀 단체 참여	- 분석변수: 기업규모, 고용형태, 근무기간
새로운 접근	장애인	- 부모 장애 유무별 자녀세대 사회경 제적 지위 * 소득, 종사상지위, 교육 수준	- 분석단위: 개인 - 분석자료: 청년패널
	성별	- 부모 장애 유무별 자녀세대 사회경 제적 지위 * 소득, 종사상지위, 교육 수준	- 분석단위: 개인 - 분석자료: 사회조사 - 분석단위: 개인 -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 - 가처분소득, 노동소득
성별			-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 -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 연령별 분석

출처: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이동성 분야별 분석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국민이 사회이동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국민인식조사의 목적은 사회이동성, 양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및 국민 사회이동성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이 설계한 자체 사회이동성 관련 조사표를 기초로 여러 차례의 설문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조사표는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일자리 참여 유형 등), 사회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불평등 및 공정과 사회이동성 인식, 사회적 관계, 기타 가구경제상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인식조사는 2025년 5~7월 사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약 3,000명을 직접 대면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1. 기대효과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보면, 첫째, 세대별 및 분야별 사회이동성 진단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사회이동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기반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회정책의 의의와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정책의 발굴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통해 국민통합 및 국민복지 체감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 연구자 및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이동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폭넓은 통계 기반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이동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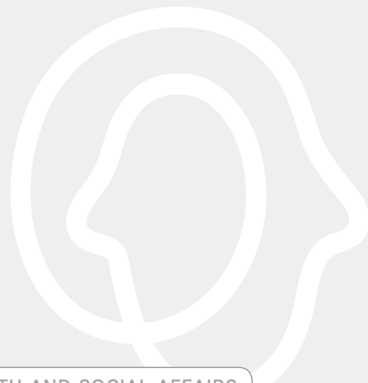
셋째,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정 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한국적 복지국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위기 대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련 사회정책 구축에 기반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및 미래 사회 위기 극복 방안 제시를 통해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대체하는 공정·공평한 사회정책체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한계

이번 연구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전반에 대한 분석을 담고자,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회영역의 사회이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영역분석에 있어서 일부 중복 등이 발생하였으며, 방대한 분야가 포함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회이동성의 지향점이 강조되지 못했으며, 정책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분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이동 역시 특정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차원적이고 상호작용하에서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연구내용과 분석의 한계는 2026년 차기 연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특히 사회 분야별 정책이 사회이동성 제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 연구자 등이 이번 연구 내용을 보고, 우리 연구과정, 분석, 내용 등에서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차기 연구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2장

사회이동성 이론적 배경 및 사회이동성 현황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기존 통계를 통해 본 사회이동성 진단

제2장 사회이동성 이론적 배경 및 사회이동성 현황

제1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이동성의 개념과 측정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 혹은 계층이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이동성은 사회구조의 동학 혹은 역동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로, 특히 현대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나 계층 재생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Erikson & Goldthorpe, 1992). 사회이동성은 단순히 경제적 수준의 변화뿐 아니라,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치 변화를 포함하며(Sorokin, 1927), 역사적, 지리적 조건 속에서 한 사회가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평등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은 이동 기간과 이동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동 기간에 따른 범주로는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과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이 있으며, 이동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는 절대적 이동성(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 이동성(relative mobility)이 있다.

세대 간 이동성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소득,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 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산이 다음 세대에게 어느 정도 전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Solon, 1992; Blanden et al., 2005).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육

체노동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다면 이는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이동성에 해당된다. 세대 간 이동성은 사회의 구조적 기회와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며, 그 수준은 국가 간 비교나 정책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반면 세대 내 이동성은 특정 개인이 생애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Hauser & Featherman, 1977; Fields, 2005). 예컨대, 한 개인이 청년기에 저소득 직종에서 시작하여 중년기에 고소득 전문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세대 내 이동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정 개인의 세대 내 이동성은 교육훈련 이수, 승진, 이직 등의 생애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이동성 개념은 각각 개인의 경험적 이동과 세대 간 구조적 재생산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역사적 변화라는 사회 동학의 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사회이동성 연구의 두 가지 핵심 축을 구성한다.

한편, 절대적 이동성과 상대적 이동성은 이동 정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절대적 이동성이 과거의 자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상대적 이동성은 사회 전체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 즉 타인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거나, 가족 중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직에 진출했다면, 이는 절대적 상향 이동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이동성은 개인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이며, 주로 개인의 청소년기(약 14~16세)와 중년기(30대 중반)의 경제적 위치를 비교하여 측정된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이동성은 출신 계층에 따른 개인의 상대적 사회적 지위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출신 계층이 다른 사람들의 이동률을 비교하거나 세대 간 국민 소득의 상대적 순위에 따른 이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Eyles et al., 2022).

2. 사회이동성의 양상: 개인과 사회 수준의 분석

사회이동성의 양상은 이를 관찰하는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고 이해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는 한 개인의 생애 동안 또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중심이 되며, 모든 개인의 이동성 양상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수준에서는 이러한 개인들의 이동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구조적 특성이 중심이 된다. 본 장에서는 사회이동성의 양상을 개인과 사회 수준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이동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상향 이동(upward mobility), 하향 이동(downward mobility), 그리고 수평 이동(horizontal mobility)이 그것이다. 상향 이동은 개인이 부모세대 혹은 본인의 과거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계급 가정에서 자라난 개인이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하향 이동은 기존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실직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수평 이동은 지위의 위계 변화 없이 동일한 수준 내에서 직종이나 지역을 옮기는 경우를 의미한다(Erikson & Goldthorpe, 1992; Sorokin, 1927).

사회 전체의 구조적 이동성 양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의 이동 양상의 총합으로서 개인들의 이동 양상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생산적 사회와 비재생산적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재생산적 사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높은 확률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세대 간 계층 재생산이 뚜렷한 사회를 의미

한다(Bourdieu & Passeron, 1977). 반대로 비재생산적 사회는 계층 간 이동이 보다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출신 계층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강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Chetty et al., 2020). 프랑스의 철학자 Mouffe(2024)는 그의 저서 『계급 횡단자들 혹은 비-재생산』에서 비재생산적 특성을 계급 횡단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볼 때, 재생산적 사회와 비재생산적 사회는 계급고착적 사회와 계급횡단적 사회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이동성 측정: 전통적 측정 방법과 한계 및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사회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직업의 ‘출발지(origin)’와 ‘도착지(destination)’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제학 기반의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주목해 이동성을 분석해 온 반면, 사회학 기반의 연구에서는 직업 기반의 계층 지표를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Goldthorpe가 ‘직업기반 사회경제적 계층화에 관한 국가통계분류(National Statistics Socio-Economic Classification)’를 활용하여 계층 이동을 추적한 이래로(Breen, 2005a), 그리고 최근 영국 정부가 부모 직업에 기반한 사회이동성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연구를 권장하면서, 영국에서는 사회학적 접근에 기반한 사회이동성 연구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Friedman & Laurison, 2024).

그러나 소득과 직업의 이동을 분석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소득과 직업에 초점을 두는 이동성 분석은 결과적으로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단일 변수를 계급/

계층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 변수만으로는 계층의 개념이 갖는 다차원적 변화를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이동성의 목적지를 특정 시점에서만 측정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개인의 궤적이나 시간에 따른 이동의 역동성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즉, 특정 시점의 최종 상태에 주목하는 이동성 분석으로는 목적지 시점에서 동일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동 경로와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사회학 기반 이동성 연구에서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적 공간(장) 이론에 기반한 분석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르디외가 사회적 공간(장)을 '자본의 양, 자본의 구성, 그리고 축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이동성은 사실상 사회적 공간(장)의 세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은 상속받은 자본의 양에 따라 '가능성 있는 궤적의 범위'라는 고유한 이동성 경로를 갖게 된다(Bourdieu, 1984).

더불어 계급 태생에서 유래한 자본에 의해 구조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동을 이끄는 구조적 힘으로 작용하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은 이동성을 이해할 때 역사와 궤적의 역할을 훨씬 더 미묘하고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체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직업생활을 시작할 때 이미 보유한 자산과 축적된 자산이 그 후 현재와 미래의 행동 가능성과 직업 경로를 구조화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Friedman & Laurison, 2024).

이렇듯 부르디외의 사회적 공간(장)과 아비투스 개념은 이동성 연구의 초점을 시간성과 다차원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동성 연구들은 시퀀스(Sequence) 분석, 궤적 분석

등의 방법론을 통해 직업의 시간적 흐름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과 질적 접근을 혼합하여 자본의 구성과 그 전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예컨대 질적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사례는 설문조사 기반의 단순한 직업 분류로는 포착되지 않는 문화자본 및 상징자본의 변동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정량적 측정 방식이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정보를 교정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사회이동성에 대한 분석은 단일 지표의 활용과 고정 시점의 비교라는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삶의 궤적을 다차원적·시간적으로 구성하는 자본의 구조와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단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와 과정의 평등 문제로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과 방법론의 중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이동성의 의의: 불평등 심화 시대의 핵심 분석틀

사회이동성은 사회정책이 대응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오래된 사회문제이자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는 빈곤(poverty) 및 불평등(inequality)과 개념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을까? 이들 세 개념은 각기 사회적 계층과 자원의 분배, 그리고 개인의 기회에 관한 중요한 개념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 개념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빈곤은 주로 개인이나 가구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Sen, 1999), 불평등은 자원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격차를 의미하며, 특히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의 분배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Piketty, 2014). 한편 사회이동성은 개인이나 가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가 상향 또는 하

향 이동을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Goldthorpe, 1980). 이 세 개념은 상호 중첩되는데, 이 중에서 불평등은 빈곤을 지속하게 하고 사회이동성을 제약함으로써 계급의 재생산을 강화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토대성은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이동성(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의 관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낮다는 경험적 상관관계를 시각화한 곡선으로, OECD(2025)의 연구에서는 불평등 지표(Gini 등)와 부모-자녀 소득/직업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intergenerational persistence)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동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¹⁾

21세기의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최상위 계층의 부와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히 현재의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궤적까지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 불평등의 고착/심화 시대에 사회이동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첫째, 사회이동성은 불평등의 구조적 양상을 더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키워드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최상위 소득분위의 소득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의 양상(Piketty, 2014)은 세대 내 이동성의 지속적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이동성 분석을 통해 불평등의 횡단적 특성을 더

1)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 정책 환경 등이 예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국가 사례를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시장 소득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나 사회이동성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으며, 반대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시장 소득불평등 수준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것보다 사회이동성이 훨씬 낮았다(OECD, 2025).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이동성은 불평등이 장기적 추세에서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이해하고, 미래 불평등의 양상을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 주류 불평등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 불평등 지표(소득분위배율, 최상위분위 소득점유율, 지니계수 등)는 개인의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primary)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구/가족의 관점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종단적/세습적 특성에 대한 주류 불평등 연구에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사회이동성의 세대 간 분석이다. 즉 세대 간 이동성의 약화는 경제적 불평등의 세대 간 이행, 세습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대 내 이동성 분석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세대 간 이동성 분석을 통해 자기복제/재생산적 특성을 갖는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사회이동성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 시대에서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정책적 대응이 그 효과를 발휘하여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척도 또는 시금석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불평등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5분위/10분위 배율의 하락 등 불평등지표의 개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실시된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최하위 소득분위계층의 소득을 일정 부분 개선하며, 하위 계층에서 차상위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세대 내 상향 이동성의 증가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20). 이는 최하위 소득분위계층의 차상위분위로의 이동, 즉 세대 내 이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이 일시적인 소득 변화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족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세대 간 이동성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국

가의 다양한 경제사회정책적 대응을 통해 정말로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지, 불평등의 그 견고한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는 세대 간 이동성 분석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이동성은 사회 불평등을 분석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심층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 정책 효과를 검토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세대 내 이동성과 세대 간 이동성이라는 사회이동성 분석의 두 핵심 요소는 각각 현재 불평등의 역동성과 미래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불평등 사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성공적인 정책 설계와 평가를 가능케 하는 이론적/실천적 분석 렌즈로서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5. 사회이동성의 경로: 세대 간 이동성과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

가. 부동/재생산 메커니즘

사회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단지 개인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세대 간 이동성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일정한 궤적을 따라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사회에서는, 이동성의 경로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불평등의 본질을 밝히는 핵심 과제가 된다. 이러한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은 계급 정체성과 사회적 실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Bourdieu, 1984).

부르디외에 따르면, **아비투스란 개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내면화된 지속적이고 체화된 성향(dispositions)**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취향, 언행, 사고방식을 구성할 뿐 아니라, 계급적 위치를 직·간접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부모세대로부터 계승된 아비투스는 자녀의 선택과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며, 이를 통해 계급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재생산된다.

이러한 계급 재생산의 경로는 단선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순환적인 궤적을 따른다. 아래에서는 사회자본, 교육, 고용, 소득의 주요 경로를 중심으로 재생산의 궤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생산의 출발점은 가정의 사회자본에 있다. 사회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결된 인맥, 네트워크, 문화 자원을 포괄하며, 이는 자녀의 사회적 경험과 계급적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leman, 1988). 특히 상류층 가정은 자녀에게 엘리트 네트워크나 정보 접근성 등 눈에 띄지 않는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출발점부터 차별을 발생시킨다.

이어서 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교육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녀의 교육 기회 접근성과 질은 여전히 부모의 배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특히 고소득층 가정은 사교육, 교육적 지원 등을 통해 자녀의 학력을 강화하는데(Reay, 2017), 이는 단지 교육의 양적 수준(학력)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문화자본의 질적 차이로도 이어진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교육과 문화자본의 상호작용이 계급 간 격차를 재생산하는 핵심 매개라고 지적하였다(Bourdieu & Passeron, 1977).

교육을 통해 형성된 자본은 이후 직업 선택과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보유한 높은 학력과 교육적 배경은 노동시장 진입 시 명

확한 신호(signaling)로 작용하여 이들의 상위 직업군/전문직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다시 직장 내 네트워크 형성, 경력 발전 등으로 이어진다(Granovetter, 1973). 반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습자본이 취약한 자녀는 낮은 학력과 불안정한 교육 경로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시 불리함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상향 이동의 사회이동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약된다.

고소득/전문직군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용의 안정성은 본격적인 경제적 자본인 소득 축적으로 이어진다. 축적된 소득은 현 세대의 소비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교육·문화·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반면 낮은 소득은 삶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자녀세대의 교육과 사회적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의 사회자본(세습자본)에서 출발하여 자녀의 교육, 고용,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동/계급재생산 경로는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자본으로 회귀한다. 즉, 소득 축적이 제공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유는 새로운 사회 네트워크(고소득 전문직/명문 학교 모임, 문화 활동 등)로의 접근과 여기에서 파생되고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계급적 위치를 안정화/강화시킨다. 이는 사회자본-교육-고용-소득-사회자본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재생산 경로의 정식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나. 이행/계급횡단의 메커니즘: 상향 이동을 중심으로

사회이동성 연구에서 상향 이동, 즉 계급의 횡단을 설명하는 주요 접근은 개인의 기질, 특히 사회이동성에 대한 신념(mobility beliefs)에 주목해 왔다. Mouffe(2024)를 포함한 일련의 논자들은 개인의 기질이 상향

이동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미래 자아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가질수록(Markus & Nurius, 1986)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교육을 포함한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Day & Fiske, 2017). 또한 사회이동성 신념은 기대-가치 이론(Vroom, 1995)이나 동기부여 이론(Snyder, 2002)과도 맞물리며,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인지적 동기 자원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사회이동성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교육 참여와 같은 경로를 통해 상향 이동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내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기질만으로 계급횡단의 경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계급횡단은 개인의 내적 성향(기질)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구조와 자원의 분포, 사회제도 등 사회적 요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더 나은 설명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요소(구조적 아비투스)를 통합하여 상향 이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투스는 개인의 계급적 취향이나 행동양식의 내면화된 성향으로 개념화되는 습속/성향으로서의 개인적/계급적 아비투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실천의 조건이자 지배적인 기대의 장치로서의 사회적 아비투스이다. 즉, 교육제도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국가 제도는 사회적 아비투스의 전형으로서 특정한 계급적 행동양식을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이는 다시 개인의 실천에 구조적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비투스는 계급횡단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자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사회적 아비투스로서 교육은 계층의 상향 이동을 위한 가장 유력한 사회적 자원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으며, 일정 시기까지는 실제

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Breen & Müller, 2020).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교육개혁의 결과로 일정 기간 동안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실증적 연구들(Pekkarinen et al., 2009; Holmlund et al., 2010)은 상향 이동의 레버리지로서 교육의 역할을 규명한 수많은 연구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교육의 평등화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와 상류층의 ‘교육 사재기’가 주목받고 있다(Eyles et al., 2022). 앞서 계급 재생산의 경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류층 가정은 사교육, 거주지 선택, 사립학교 등록, 대학 진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자원을 독점하거나 차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자본 및 계급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Bukodi & Goldthorpe, 2019).

부모세대의 세습자본이 자녀세대의 계급 재생산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세습자본 종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은 더 이상 계급 이동을 촉발하는 사회적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며 고착화시키는 계급화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Sorokin, 1927; Lortie-Forgues & Inglis, 2019). 특히 최근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언더매칭(자신의 성적에 비해 낮은 수준의 학위 과정에 지원하거나 진학하는 것)’ 현상은(Wyness & Murphy, 2020), 향후 이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상향 이동의 메커니즘은 단순히 개인의 동기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의 기질(사회이동성 신념), 구조적 맥락(교육·복지 제도), 그리고 이 둘의 교차지점에서 작동하는 아비투스(習性)의 영향이라는 상호구성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사회이동성 연구의 기원과 최근 경향

사회이동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1920년대에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했다(Nico, 2021). 특히 사회학자 소로킨(Pitirim Sorokin)의 저서 『사회 이동성』(1927)은 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최초의 주요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사회이동성을 “개인, 사회적 대상 또는 가치가 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정의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사회학을 지향하였다. 더불어 그는 이론이 몇 가지 사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예시적 방법(exemplificatory method)’을 비판하고,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ico(2021)는 사회이동성 연구의 초기 40년을 ‘흩어진 개념의 출현기’로 평가한다. 특히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초기 연구들은 제한된 규모의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나, 사회이동성의 핵심 주제인 이동성 측정 방법론과 교육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확히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표성 있는 국가 단위의 코호트 조사들이 확산되면서 사회 계층 이동성 연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 연구의 주요 발견으로는 절대적 이동성(부모보다 더 높은 직업이나 소득을 획득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 이동성(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위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뚜렷한 변화 없이 ‘추세 없는 변동(fluctuations without trend)’만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Erikson & Goldthorpe, 1992).

한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득을 기반으로 이동성을 규명하고자 한 실증적 연구들이 경제학자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소득 역학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Solon(1992)과 Zimmerman

(1992)의 연구가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세대 간 이동성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종단적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장기적 소득 흐름을 추적했고, 자녀 소득이 부모 소득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정량화하였다. 영국에서도 Dearden 외(2011)이 유사한 방식으로 최초의 비교 가능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Blanden 외(2005)의 보고서를 계기로 경제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고, 특히 **대규모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그 연구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연구자들은 코호트 조사뿐 아니라 납세 기록, 교육 이력, 고용 기록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자원 이전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연구는 300명 남짓한 표본을 바탕으로 소득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Chetty 외(2014)는 미국 내 부모의 세금 기록과 4,000만 명 이상의 자녀의 소득 정보를 연결하여, 지역 간 이동성 격차와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이동성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지역의 교육 환경, 주거 격리도, 가족 안정성, 사회자본 등이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며, 사회적 배경이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해보면, 사회이동성 연구는 20세기 초 이론 중심의 사회학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21세기에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실증 분석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경제학, 통계학, 정책학 등의 접목을 통해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구조 속 불평등

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Eyles et al., 2022).

7. 소수자의 사회이동성

가. 계층 내 고착(상향 이동 제약)의 가중적 요인으로서 교차성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흑인 여성주의 이론가인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가 여성학 및 법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정식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흑인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억압이 성별 또는 인종과 같은 단일한 정체성에 기반한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흑인 여성에게 내재한 소수자 정체성의 기표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복합적인 차별을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Crenshaw, 1989). 이후 한 개인에게 내재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정체성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성 개념은 여성학을 가로질러 사회과학의 주요한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늘날 교차성은 다양한 소수자성의 기표를 지닌 신체(몸)가 경험하는 다중적인 억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아가 교차성 개념은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의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는 다수 연구의 분석틀에 반영되어 다양한 억압과 정체성의 중첩된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론적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회이동성 분석에 있어서도 교차성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수자의 성별, 인종/민족, 장애 등 소수자 정체성이 계급/계층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복합적 차별과 중첩되는 낙인의 경험이 이들의 계급/계층 이동에 중요한 제약 조건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 이민자, 흑인 장애인, 혹은 지방 출신의 저소득 여성 등은 각기 단일한 소수자 정체성이 아닌 성별과 민족의 교차, 인종과 장애의 교차, 지역과 계급 및 성별의 교차를 통해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교차적 정체성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교육 기회의 불균등, 인적 네트워크 접근의 제약 등 차별의 심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계급 내 소수자들은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더라도 계급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소수자성으로 인해 사회적 인정, 기회 접근성, 자원 축적 가능성에서 지속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전통적으로 교차성은,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사회이동성 분석은 물론이고 부르디외의 사회적 공간(장) 및 사회/문화자본으로서 아비투스 개념 등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소위 부르디외적 계급 및 이동성 이론과 연구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왔다. 즉 소득과 직업지표를 활용한 전통적 이동성 연구 및 이동 경로와 과정을 실증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부르디외적 이동성 연구들은 부동 혹은 계급 재생산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두면서도, 젠더, 인종, 국가/민족, 장애 등의 소수자 정체성과 그것들의 교차적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층의 상향 이동을 이룬 여성과 유색 인종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층 이동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구조적 장벽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들이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Friedman & Laurison, 2024). 이러한 교차성 기반 연구들은 단순히 소득의 상승,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 계층 이동의 외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낙인, 차별, 문화적 배제와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사회이동성의 경험을 구성하는지를 매우 적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질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이동성을 다룬 계량적 연구들은 소수자 정체성의 교차적 영향을 충분

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초기의 대표적인 소득이동성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세대 간 소득 연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당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비정형적 노동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과 유사하게 노동시장에서 지속적 배제를 경험한 소수 인종에 대한 분석 역시 사회이동성 연구에서 오랫동안 누락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만 다뤄져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연구들은 소수자의 사회이동성이 은폐되면서 생겼던 연구의 공백을 점차 채워가고 있다. 일례로서, Bratsberg 외(2007)은 아버지와 딸 간의 소득 지속성을 분석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이동성을 보였다는 점과 함께, 여성의 경우 하향 이동에 대한 수용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이동성의 질적 경험이 남성과 다르다는 점도 밝혀냈다(Bukodi et al., 2017). 또한, Li와 Heath(2016)는 영국 이민 1세대가 사회적 지위의 하락 등 하향 이동을 경험하지만, 2세대는 상향 이동성을 회복하는 현상을 관찰했고, Chetty 외(2020)는 흑인 미국인이 백인에 비해 상향 이동률은 낮고 하향 이동률은 높다는 구조적 불평등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소득이나 교육 수준만으로 사회이동성을 분석할 수 없으며, 분석 대상인 개인에게 내재한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회이동의 양상 및 내적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사회 이동성 연구에서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Friedman과 Laurison(2024)은 직업 영역에서 상향 이동을 이룬 여성과 일부 소수 민족 출신의 개인들이 직장에서 이중의 불이익을 경험하며, 이는 단순한 통계적 이동성과는 다른 현실의 복잡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이동성 분석에 교차성 관점을 도입하려는 선구적 연구들이 최근에 등장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교차성 기

반 사회이동성 연구는 여전히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계급, 성별, 인종, 출신국가, 장애 등의 교차 작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양적 연구와 함께 사회적 공간에서 교차적 경험의 구체적 과정과 인식을 조명하는 질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Eyles et al., 2022).

나. 교차적 제약 구조의 작동

사회이동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자원의 유무, 부모세대의 직업 지위, 교육 수준 등을 중심으로 계급 고착 및 재생산의 일반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적 접근은 젠더, 인종, 출신국가, 장애 등 소수자 정체성이 계급횡단 혹은 상향 이동 과정에서 어떻게 가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특히 교차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정체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차별 요인이 아니라, 저소득 혹은 빈곤이라는 계급적 정체성과 상호 교차하며 상향 이동에의 구조적 장벽을 더욱 공고히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 혹은 가족에게 내재한 소수자 정체성은 계급 고착 및 재생산의 일반 메커니즘 외에, 특수하고 구조화된 제약 메커니즘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사회이동성의 순환 구조에서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개인 및 가구의 경우, 상향 이동의 기회는 구조적으로 제한받는 반면, 하향 이동 또는 유지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이중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나아가 소수자성의 교차성은 앞서 정식화했던 계급재생산의 표준적 경로인 ‘사회적 자본 → 교육 → 고용 및 직업 → 소득과 자산형성 → 사회적 자본’의 각 단계에서 소수자성이 어떻게 계급재생산을 한층 더 고착시키는지를 보여준다.

1) 사회적 관계 및 자본: 배제와 약화된 네트워크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가구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서 구조적 제약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여성 가구주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유배우 가구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기 쉽고, 이민자 가구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제도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통합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 물리적 접근성 결여 및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및 자본에 있어서의 배제와 약화된 네트워크는 이들로 하여금 고용 정보, 교육 기회, 경제적 지원에 접근할 가능성을 현저히 제약한다.

2) 교육: 기회의 격차와 학업 성취의 제약

교육은 사회이동성의 핵심 경로로 간주되나, 소수자 가구의 자녀는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전통적으로 교육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이민자 가구의 자녀는 언어 장벽과 부모의 낮은 학력,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또한 장애 아동은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의 부족과 통합적 교육 환경의 불충분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들 소수자가 경험하는 교육 기회의 격차와 학업 성취의 제약은 이들의 고소득 직업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

3) 고용 및 직업: 구조적 차별과 노동시장 내 제약

노동시장은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경로이지만, 여성은 여전히 '유리천장'과 임금 격차에 직면하며, 이민자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나 비공식 노동 부문에 집중되는 등 소수자성으로 인한 구조적 억압

이 발생하는 곳이다. 장애인 역시 직장 내 편의 제공 부족과 차별적 고용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용과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매우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장벽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상향 이동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4) 소득과 자산 형성: 누적된 불평등의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이동성 경로에서 소수자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 사회자본 형성, 교육 및 고용 단계에서 누적된 차별은 최종적으로 소득의 불균등으로 귀결된다. 소수자 가구는 불안정 노동과 낮은 임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자본의 결핍으로 부수적인 소득활동 기회를 얻기 어려우며,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치료비·돌봄 부담 등의 추가비용 지출로 인해 경제적 자본 축적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선행과정에서 누적된 불평등은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5) 피드백 구조: 다시 사회적 자본의 약화로

결국, 교육·고용·소득 단계에서 겪은 제약은 다시 사회적 관계/자본의 취약성으로 귀결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상위 계층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워지며, 반복되는 차별 경험은 자존감 저하, 사회적 배제, 지역 커뮤니티 내 고립 등을 낳는다. 이러한 피드백 구조는 소수자 가구의 계급 고착과 하향 이동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수자성의 가중적 계급 고착화 논의는 기존의 계급 고착 연구에 교차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가구의 사회이동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시론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소수자성의 교차적 상호작용이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차성 관점을 반영한 사회이동의 단계적/순환적 경로를 정식화하고, 방법론적 보완을 통해 젠더, 인종/민족,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과 계급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 교차하며 사회적 재생산을 구성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기존 통계를 통해 본 사회이동성 진단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3장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2부에서 다룬 분야별 사회이동성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해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차원에서 최근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한 최근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가데이터처의 소득이동통계 분석결과를 통해 소득이동의 최근 변화를 살펴본다.

1. 사회조사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이동성 인식

사회이동 신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기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반영한다. 즉, 현 사회제도 안에서 자녀가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노력하여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느낀다. 즉 개인의 사회적 우려와 인식은 사회적 제도와 민주적 변화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Borgonovi & Pokropek, 2025). 그러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60.6%가 노력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회이동 연구는 주로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지만, 계층지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동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해식 외, 2021).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사회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한국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고 있다.²⁾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의 최근 2년(2021년 대비 2023년) 응답 값의 변화와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응답 값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장·단기적인 이동성 인식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계층의식에 대한 최근 응답의 변화를 보면 2021년 응답 값과 비교할 때 2023년 전체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높게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응답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또는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각 61.6%, 3.0%로 응답하였다. 이는 2년 전(2021년) 응답 값과 비교할 때 각각 2.7%p, 0.3%p 증가한 수치로, 2023년 기준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4%로 2021년 응답 값 대비 3.0%p 감소하였다. 한편 성별과

2)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는 1977년 시작되어 매년 조사가 진행되어온 오랜 조사로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잘 담고 있는 실태조사이다. 조사내용으로는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10개 조사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여, 짝수년에는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을, 홀수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2025. 12. 9. 인출
(https://mods.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04002).

객관적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인식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023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하’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 중에서는 절반 이하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과 소득 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으로 본인세대 내 및 자녀세대의 계층 이동에 관한 인식의 응답 결과를 살펴본다. 2021년 대비 2023년의 응답 값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본인세대의 계층 상승 인식은 높아졌으나 자식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응답률은 2023년 기준 26.4%로 2년 전(2021년)보다 1.2%p 증가하였다. ‘자식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2023년 기준 29.1%로 2년 전(2021년)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개인의 세대 내 이동성에 관한 전망은 2021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이나 자녀세대, 즉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서는 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이동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있양상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응답한 경우 본인세대뿐만 아니라 자식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1〉 계층의식(2021→2023년)

(단위: %)

	계	상			중			하		
			상상	상하		중상	중하		상	하
2021년	100	2.7	0.6	2.1	58.8	21.7	37.2	38.5	23.4	15.1
2023년	100	3.0	0.7	2.3	61.6	23.3	38.3	35.4	21.8	13.6
남자	100	3.5	0.8	2.7	61.9	24.2	37.7	34.6	21.0	13.6
여자	100	2.5	0.6	1.9	61.2	22.3	38.9	36.3	22.6	13.7
100만 원 미만*	100	1.0	0.3	0.7	25.9	6.7	20.1	72.1	29.5	42.6
100~200만 원 미만	100	1.0	0.3	0.7	42.4	11.5	31.0	56.5	32.2	24.4
200~300만 원 미만	100	1.3	0.4	0.9	53.2	14.0	39.2	45.5	30.4	15.1
300~400만 원 미만	100	1.2	0.1	1.1	65.3	19.3	46.0	33.5	23.5	9.9
400~500만 원 미만	100	2.5	0.3	2.2	69.7	23.7	46.0	27.7	19.3	8.5
500~600만 원 미만	100	2.5	0.6	1.9	73.3	29.8	43.5	24.2	17.0	7.2
600만 원 이상	100	7.5	1.9	5.7	77.2	40.8	36.4	15.3	10.5	4.8

주: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의식에 관한 응답은 2023년 응답 값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임. * 소득은 가구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 2021년,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2〉 본인세대 계층이동(2021→2023년)

(단위: %)

	계	높다			낮다			모르겠다
			매우	비교적		비교적	매우	
2021년	100.0	25.2	2.3	23.0	60.6	41.1	19.4	14.2
2023년	100.0	26.4	2.1	24.3	59.6	42.0	17.6	14.0
상 층	100.0	57.7	11.0	46.6	37.0	27.4	9.6	5.4
중 층	100.0	31.6	2.1	29.4	57.6	45.7	11.9	10.8
하 층	100.0	14.8	1.4	13.4	64.9	36.8	28.1	20.3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 2021년,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3〉 자식세대 계층이동(2021→2023년)

(단위: %)

	계	높다			낮다			모르겠다
			매우	비교적		비교적	매우	
2021년	100.0	29.3	3.4	25.9	53.8	36.4	17.4	16.9
2023년	100.0	29.1	2.9	26.2	54.0	37.4	16.6	17.0
상 층	100.0	46.8	10.6	36.2	45.9	32.0	13.9	7.3
중 층	100.0	33.2	3.1	30.2	53.3	40.0	13.3	13.5
하 층	100.0	20.4	1.9	18.5	55.8	33.4	22.4	23.7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 2021년,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다음으로는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응답 중 세대 간 이동성 및 세대 내 이동성의 인식에 대한 응답 값을 2006년부터 분석하여 인식의 변화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대 내 사회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높으나, 주목할 점은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세대 내 계층이동보다는 자녀 세대에서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나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이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세대 간 이동 가능성에 대한 학력 차이를 보면 대졸 이상 학력층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높은 학력 수준이 자녀세대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이러한 인식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관측할 수 있다.

〈표 2-4〉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2006~2023년)

(단위: %)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39.9	48.4	41.7	39.9	31.0	30.6	29.4	30.3	30.3
성별	남성	41.1	49.7	43.0	40.8	32.3	31.6	30.2	30.9	30.9
	여성	35.0	43.4	37.5	37.1	27.2	27.8	27.1	28.6	29.2
연령별	30세 미만	35.3	44.0	40.1	40.3	31.3	30.3	30.0	27.3	31.3
	30~39세	41.0	48.0	38.4	35.9	26.7	26.2	24.8	25.6	24.8
	40~49세	39.6	49.9	40.4	38.8	30.0	27.6	28.0	30.3	29.4
	50~59세	39.0	49.3	42.4	41.4	31.3	32.1	28.9	31.6	30.4
	60세 이상	41.2	47.1	44.9	41.8	33.5	33.8	32.6	32.0	32.9
교육 수준	초졸 이하	35.3	40.8	39.2	36.5	26.5	31.8	29.0	24.7	26.6
	중졸	36.9	42.4	39.8	40.8	30.7	30.0	30.1	31.7	29.1
	고졸	38.6	47.0	39.9	38.6	31.6	30.5	27.6	30.2	30.6
	대졸 이상	45.4	55.4	45.3	42.6	32.6	30.4	30.9	31.7	31.4

주: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도별 자료.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응답 중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산출

〈표 2-5〉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2006~2023년)

(단위: %)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27.5	35.7	28.8	28.2	21.8	23.1	23.1	25.5	27.2
성별	남성	28.5	37.0	29.6	29.3	22.8	24.2	23.8	26.6	28.1
	여성	23.8	31.0	26.1	24.7	19.1	20.1	21.3	22.6	25.0
연령별	30세 미만	31.9	43.5	31.1	34.9	28.0	26.0	27.7	27.0	33.5
	30~39세	27.0	36.3	25.7	27.2	20.1	20.7	21.6	24.5	25.8
	40~49세	25.7	35.6	26.7	26.7	19.3	22.6	22.7	25.5	26.0
	50~59세	26.5	35.8	29.4	26.6	21.3	22.6	21.9	27.1	26.2
	60세 이상	30.4	33.2	31.9	29.8	23.8	24.6	23.9	24.6	27.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23.4	27.0	25.3	23.0	18.7	20.2	19.8	19.0	22.0
	중졸	22.7	27.3	25.6	24.8	20.4	21.4	21.3	22.6	22.7
	고졸	24.3	32.1	25.6	25.4	20.4	21.0	20.1	22.9	24.6
	대졸 이상	36.2	46.4	34.6	34.7	25.2	26.6	27.4	30.3	31.5

주: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도별 자료. 세대 내 사회이동가능성 응답 중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산출

2.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본 사회이동성 인식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소득·자산배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보는지 혹은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인식하는지는 복지 확대(혹은 축소)에 관한 복지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회이동성 중 하향 이동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의 경우 조사기간이 19년에 이르며, 조사 대상 가구는 7,281가구로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이다.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고 있기에, 사회계층 구조·소득분배·빈곤 원인 인식 등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는 ‘아동-복지인식-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인식이나 태도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복지인식’을 다룬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도의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표 2-6〉은 분석 대상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35세 미만)이 15.14%, 장년층(35~49세)이 24.65%, 중고령층(50~64세)이 25.74%, 노년층(65세 이상)이 34.48%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은 17.48%, 중위소득 50~75% 미만인 차상위층이 16.28%, 중위소득 75~150% 미만인 중간 계층이 42.06%, 중위소득 150% 이상인 상위층이 24.18%였다. 지역은 수도권이 38.24%, 비수도권이 6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분석 대상에 대한 기초통계량

	구분	사례수 (%)
연령	청년층(15~34세)	1,988 (15.14)
	장년층(35~49세)	3,237 (24.65)
	중고령층(50~64세)	3,381 (25.74)
	노년층(65세 이상)	4,528 (34.48)
소득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2,378 (17.48)
	중위소득 50~75%	2,214 (16.28)
	중위소득 75~150%	5,721 (42.06)
	중위소득 150% 이상	3,289 (24.18)
지역	수도권	5,202 (38.24)
	비수도권	8,400 (61.7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원자료. 저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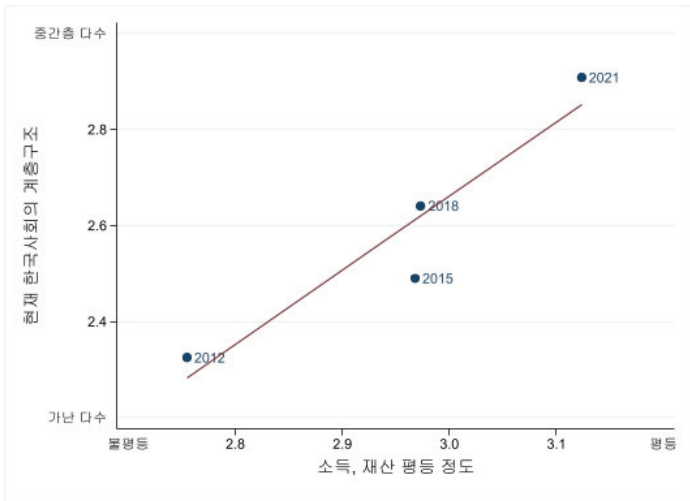
〈표 2-7〉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분석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크게 사회계층 구조 인식과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계층 구조 인식에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 미래의 바람직한 계층구조, 그리고 소득·재산의 평등 정도가 포함된다.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식)은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으로 나뉜다.

〈표 2-7〉 분석 변수 및 요인 분류

구분	항목	요인 분류
사회계층 구조 인식	현재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 소득·재산의 평등 정도	- -
복지인식 (빈곤의 원인 인식)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개인 요인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사회 구조적 요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원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2-1〕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소득·재산 평등 정도 인식



주: 1) 현재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1=중간층 없음; 2=가난 다수; 3=가난 소수, 부자 소수; 4=중간층 다수; 5=부자 다수.

2) 소득, 재산 평등 정도 1=매우 불평등하다; 2=불평등하다; 3=보통; 4=약간 평등하다; 5=평등하다; 6=매우 평등하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그림 2-1]은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 인식’과 ‘소득·재산 평등 정도 인식’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조사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각 조사연도에서 두 변수의 평균 응답 값을 도식화하면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즉 과거 응답 값과 비교하여 현재 응답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소득 및 재산의 분배가 더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두 변수의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를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계층구조 또한 가난한 사람이 다수인 사회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 소득·재산 평등 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2.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불평등하다고 보는 인식이 강했으며 계층구조 인식은 평균 2.3 수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다수인 사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소득·재산 평등 정도의 평균값이 3.1로 높아져 불평등 인식은 다소 완화되었고 계층구조 인식은 평균 2.9 수준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소수인 사회라는 응답이 많아졌다. 요약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재산 정도가 평등해지고 중간층의 존재가 강화된 사회”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식(2012~2021년)



주: 복지 인식에 대한 문항 중 각 연도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의 평균값을 비교함.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그림 2-2]는 2012~2021년까지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으로 나누어 응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 요인이 사회적 구조 요인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사회적 구조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크게 낮아지고, 개인 요인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요인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8〉 연도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항목	2012	2015	2018	2021	합계
개인 요인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 (음주, 도박 등)	3.33	3.26	3.33	3.40	3.36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29	3.19	3.20	3.26	3.24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20	3.21	3.19	3.25	3.22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3.11	3.11	3.11	3.22	3.14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64	2.69	2.65	2.75	2.69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69	2.74	2.62	2.67	2.68
사회적 구조 요인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16	3.23	3.14	3.12	3.16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07	3.17	3.04	3.04	3.08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82	2.92	2.84	2.81	2.84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76	2.76	2.84	2.81	2.79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2.80	2.75	2.77	2.81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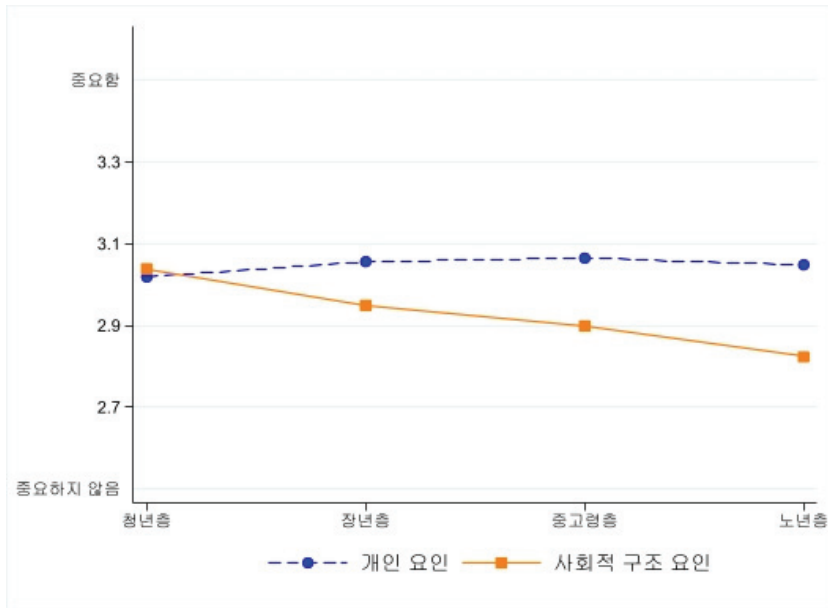
주: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표 2-8〉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개인 요인의 응답 값 평균은 2.68~3.36로 나타났으며, 개인 요인에서는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이나 학력수준의 미흡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회적 구조 요인의 응답 값 평균은 2.78~3.16으로 개인 요인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았다. 사회적 구조 요인에서는 노동시장(일자리, 임금)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지난 10년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른 추세의 변화는 없었으며, 개인적 책임감과 노동시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개인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령, 소득계층, 지역별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시점별 변화보다는 집단 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는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체 기간 응답 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 간 인식 격차를 비교하였다.

[그림 2-3] 연령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주: 1) 한국복지패널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간 응답 값의 평균을 제시함.

2) 복지인식에 관한 문항 중 연령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3) 연령은 35세 미만은 청년층, 35~49세를 장년층, 50~64세를 중고령층,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그림 2-3]은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은 빈곤 원인에 대하여 개인 요인보다 사회적 구조 요인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청년층은 개인적인 노력이나 책임감보다 노동시장의 구조나 교육기회와 같은 사회적 구조 문제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의 원인을 개인 요인으로 응답한 값은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회적 구조 요인으로 응답한 값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노년층에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해 개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는 빈곤의 원인에 관한 응답 항목을 연령별로 제시한 것이다. 개인 요인에 대한 인식은 전 연령층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구조 요인에서는 노동시장 관련 항목에서 연령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청년층일수록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등 노동시장 관련 요인을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연령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항목	청년층	장년층	중고령층	노년층
개인 요인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 (음주, 도박 등)	3.30	3.36	3.35	3.32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20	3.24	3.26	3.25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15	3.24	3.25	3.19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3.10	3.14	3.17	3.17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66	2.68	2.70	2.72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71	2.68	2.67	2.65
사회적 구조 요인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32	3.20	3.11	2.97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22	3.08	3.05	2.97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94	2.87	2.81	2.75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89	2.84	2.75	2.64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2.82	2.75	2.78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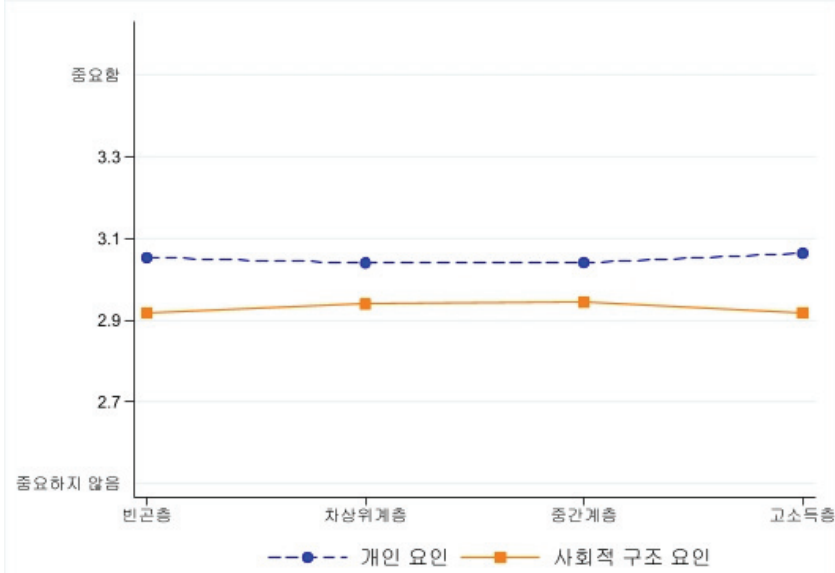
주: 1) 한국복지패널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간 응답 값의 평균을 제시함.

2) 복지인식에 관한 문항 중 연령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3) 연령은 35세 미만을 청년층, 35~49세를 장년층, 50~64세를 중고령층,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그림 2-4] 소득계층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주: 1) 한국복지패널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간 응답값의 평균을 제시함.

2) 복지 인식에 관한 문항 중 소득계층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3)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75%는 차상위계층, 75~150%는 중간계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정의하였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그림 2-4]는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소득계층별(빈곤층, 차상위계층, 중간계층, 고소득층)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개인 요인의 평균 점수가 사회적 구조 요인보다 높아 빈곤을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층과 고소득층에서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의 차이가 차상위계층과 중간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즉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적 구조 요인과 개인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0〉 소득계층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항목	빈곤층	차상위계층	중간계층	고소득층
개인 요인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 (음주, 도박 등)	3.33	3.28	3.33	3.36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17	3.18	3.23	3.27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18	3.19	3.21	3.24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3.19	3.18	3.13	3.14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73	2.70	2.69	2.67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72	2.72	2.65	2.69
사회구조적 요인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03	3.11	3.18	3.17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04	3.08	3.09	3.08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80	2.87	2.85	2.83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80	2.83	2.83	2.73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2.91	2.81	2.77	2.77

주: 1) 한국복지패널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간 응답 값의 평균을 제시함.

2) 복지인식에 관한 문항 중 소득계층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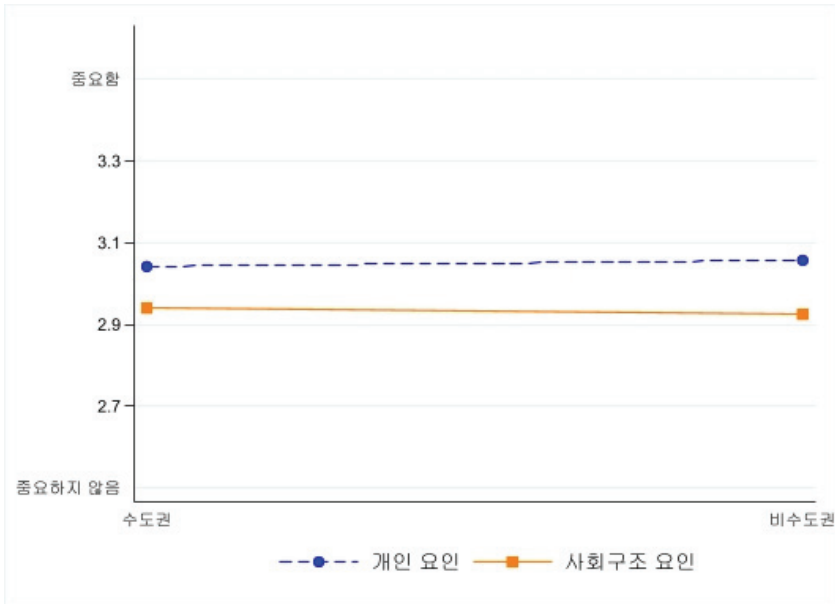
3)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75%는 차상위계층, 75~150%는 중간계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정의하였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표 2-10〉은 빈곤의 원인에 관한 항목을 소득계층별로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과 마찬가지로 복지 태도에 관한 항목 간 우선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개인 요인에서는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사회적 구조 요인에서는 노동시장 관련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항목은 빈곤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적인 책

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사회적 구조 요인의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과 같은 항목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빈곤의 원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지역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주: 1) 한국복지패널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간 응답 값의 평균을 제시함.

2) 복지인식에 관한 문항 중 지역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되며, 비수도권은 그 외 광역시 및 도 지역으로 구성하였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 원자료. 저자분석

[그림 2-5]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개인 요인을 사회적 구조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역 간 인식의 차이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지역별 복지인식(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개인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개인 요인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 (음주, 도박 등)	3.33	3.34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22	3.26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19	3.24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3.14	3.14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67	2.70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70	2.66
사회적 구조 요인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17	3.15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08	3.08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86	2.83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80	2.79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2.79	2.78

주: 1) 한국복지패널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간 응답 값의 평균을 제시함.

2) 복지인식에 관한 문항 중 지역별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되며, 비수도권은 그 외 광역시 및 도 지역으로 구성하였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2013, 2016, 2019, 2022년)원자료, 저자분석

〈표 2-11〉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 항목을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개인 요인을 사회적 구조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 간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거주 지역보다는 연령이나 소득수준 등 개인적 특성이 빈곤 발생 원인을 다르게 인식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소절에서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계층 구조에 관한 인식과 빈곤의 원인에 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계층구조 인식’과 ‘소득·재산 평등 정도 인식’ 두 변수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통해 “소득·재산 정도가 평등해지고 중간층의 존재가 강화된 사회”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바라봄에 있어 개인 요인이 사회적 구조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노년층은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반면, 청년층은 노동시장 구조나 교육기회 등 사회적 구조 요인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의 복지 역할에 대한 태도 역시 다르게 형성되었다. 소득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을수록, 즉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개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요인을 더욱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 간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지역보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우려와 인식은 사회제도 및 복지정책에 관한 지지 그리고 사회이동성에 대한 신념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사회계층 구조와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할 때, 불운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3. 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통계를 통한 사회이동성

최근 사회이동성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정확한 수치 기록, 즉 통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기존 횡단면 통계로는 미시적 이동성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통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응답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한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하여 2024년 12월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표 2-12〉 소득이동통계 개요

통계명	소득이동통계(Income mobility statistics)
통계종류	일반통계(통계법 제18조 1항), 가공통계
작성대상	(개인) 인구가구등록센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가구 (소득) 개인별 국세청 소득
모집단	매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일반가구 가구원
표본설계	▶ 층화계통추출(전 국민의 20% 수준) ▶ 원표본가구(2017년 기준 전국민의 20%)의 모든 가구원을 연도별로 추적연계
표본규모	▶ 전 국민의 20% 수준 ※ ('17년)1,029만 명 → ('18년)1,094만 명 → ('19년)1,123만 명 → ('20년)1,148만 명 → ('21년)1,157만 명 → ('22년)1,162만 명
작성기준	▶ 국세청 과세자료 ¹⁾ 기반의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 ²⁾ 을 대상으로 작성 ▶ 소득의 이동성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비교되는 두 시점 모두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
작성항목	성·연령대별, 시도별 소득분위 이동비율, 소득금액 변화 비율

주: 1) 소득이동통계에서의 소득은 개인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의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명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결과로 비과세·미신고 소득은 포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2) 근로 및 사업소득: 세금 또는 공적부조 등의 정부 재분배(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출처: “2017~2020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4.12.18.)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보도자료.

소득이동통계는 ‘다출처’, ‘대규모’, ‘패널’ 형태의 통계로 기존 거시수준의 통계를 넘어 개인 단위의 미시적 종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와 협업하여 소득이동통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소득이동통계 기초자료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정책 관점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이번 보고서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가. 소득이동통계 공표 결과(2017~2022년)³⁾

1) 상대적 소득이동성

2022년 소득(근로·사업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이동한 사람은 34.9%, 분위가 유지된 사람은 65.1%였으며, 상향 이동한(17.6%) 사람이 하향 이동한(17.4%) 사람보다 많았다. 소득이동성은 2020년 증가 이후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022년 상향 이동(17.6%)은 비슷, 하향 이동(17.4%)은 0.1%p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13〉 소득이동성 추이(2017~2022년)

(단위: %)

시기	유지	소득이동(A+B)	상향이동(A)	하향이동(B)
'17→'18년	64.2	35.8	18.1	17.7
'18→'19년	64.5	35.5	18.0	17.5
'19→'20년	64.2	35.8	18.2	17.6
'20→'21년	65.0	35.0	17.6	17.4
'21→'22년	65.1	34.9	17.6	17.4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2024),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3)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022년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살펴보면, 2분위(50.1%)와 3분위(45.3%)에서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이동한 사람이 많아,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의 경우 상향 이동(28.8%)한 사람이 하향 이동(21.3%)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3분위의 경우 상향 이동(18.0%)한 사람이 하향 이동(27.2%)한 사람보다 적었다. 5분위의 86.0%와 1분위의 69.1%는 소득분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소득분위별 이동비율(2021→2022년)

							(단위: %)		
'22년 '21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상향	유지	하향
1분위	69.1	21.2	7.1	2.1	0.5	100.0	30.9	69.1	-
2분위	21.3	49.9	20.7	7.1	1.1	100.0	28.8	49.9	21.3
3분위	6.5	20.7	54.7	15.8	2.3	100.0	18.0	54.7	27.2
4분위	2.3	6.6	15.3	65.6	10.2	100.0	10.2	65.6	24.2
5분위	0.8	1.5	2.2	9.5	86.0	100.0	-	86.0	1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7.6	65.1	17.4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2024),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2022년 소득이동성은 남자(34.0%)보다 여자(36.0%)가, 노년층(25.7%)보다 청년층(41.0%)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은 상향 이동비율(23.0%)이 하향 이동비율(18.0%)보다 높았고,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상향 이동이 하향 이동보다 낮았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전후로 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20년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소득 상향 이동비율은 증가, 노년층은 감소하였으며, 하향 이동비율은 청년층 증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65세 이상 여자의 상향 이동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1.1%p)하였다.

〈표 2-15〉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이동비율(2017~2022년)

(단위: %)

구분	기준연도	남자			여자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소득 이동 (A+B)	'17→'18년	39.9	31.8	31.2	42.4	34.6	19.4
	'18→'19년	39.6	31.6	30.8	42.3	34.0	20.0
	'19→'20년	39.9	31.9	29.8	43.0	34.6	20.1
	'20→'21년	39.2	31.4	30.3	42.2	33.7	20.7
	'21→'22년	39.5	31.0	30.0	42.6	33.8	20.7
상향 이동 (A)	'17→'18년	22.9	13.9	11.2	23.6	16.8	7.7
	'18→'19년	22.9	14.1	11.3	23.5	16.4	8.7
	'19→'20년	23.1	14.6	11.4	23.7	16.8	7.6
	'20→'21년	22.6	14.3	11.3	23.4	15.8	8.0
	'21→'22년	22.9	14.3	11.7	23.1	15.9	8.1
하향 이동 (B)	'17→'18년	16.9	17.9	20.1	18.9	17.8	11.7
	'18→'19년	16.7	17.6	19.5	18.8	17.5	11.4
	'19→'20년	16.8	17.3	18.3	19.3	17.8	12.5
	'20→'21년	16.6	17.1	19.0	18.8	17.9	12.7
	'21→'22년	16.6	16.6	18.4	19.5	17.9	12.6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2024),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2) 절대적 소득이동성

2022년 소득금액이 상승한 사람은 64.4%, 하락한 사람은 32.9%, 동일한 사람은 2.7%였다. 구간별로는 10% 미만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22.0%로 가장 많았다. 소득 변동이 크게 나타났던 2020년 소득이 상승한 사람의 구성비는 감소(62.1%→58.0%), 하락한 사람의 구성비는 증가(35.6%→39.6%)하였다. 다만, 소득이 10% 미만 상승한 사람의 구성비는 2020년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6〉 개인 소득금액 변화에 따른 인구구성비(2017~2022년)

(단위: %)

구분	'17→'18년	'18→'19년	'19→'20년	'20→'21년	'21→'22년
상승	63.0	62.1	58.0	62.8	64.4
- 10% 미만	19.9	20.7	21.1	22.0	22.0
- 10% 이상~50% 미만	21.2	19.9	17.0	19.6	20.6
- 50% 이상	21.8	21.4	19.9	21.3	21.8
하락	34.8	35.6	39.6	34.6	32.9
- 10% 미만	8.9	9.5	10.7	9.4	8.8
- 10% 이상~50% 미만	14.7	14.9	16.2	14.1	13.7
- 50% 이상	11.2	11.2	12.7	11.1	10.5
동일	2.1	2.3	2.4	2.6	2.7

출처: 국가데이터청(구 통계청)(2024),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3) 소득 1분위 지속성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한 사람은 68.7%,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31.3%였다.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해당 분위를 탈출하는 비율은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17→'18년 : -32.3%p ⇨ '21→'22년 : -4.6%p). 즉, 1분위에 오래 머물수록 해당 분위를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1분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여자(35.0%)가 남자(26.1%)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이 가장 낮고, 중장년층(38.6%), 노년층(80.6%) 순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표 2-17〉 2017년 소득 1분위 지속기간별 비율(2017→2022년)

(단위: %)

구분		1년 (2017년)	2년 (2018년)	3년 (2019년)	4년 (2020년)	5년 (2021년)	6년 (2022년)
전체	15세 이상	100.0	67.7	52.2	42.4	35.9	31.3
	15~39세	100.0	60.5	40.9	28.8	20.6	15.2
	40~64세	100.0	70.9	57.5	48.7	43.0	38.6
	65세 이상	100.0	90.2	86.2	83.5	81.9	80.6
남자	15세 이상	100.0	62.6	46.0	36.1	30.1	26.1
	15~39세	100.0	55.4	34.5	22.5	15.2	10.9
	40~64세	100.0	67.3	54.2	45.8	40.6	36.6
	65세 이상	100.0	85.5	80.2	76.7	74.6	73.0
여자	15세 이상	100.0	71.4	56.6	46.9	40.0	35.0
	15~39세	100.0	64.8	46.2	34.1	25.2	18.9
	40~64세	100.0	73.1	59.6	50.5	44.4	39.8
	65세 이상	100.0	93.1	89.8	87.7	86.5	85.3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2024),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나. 소득이동통계 추가 분석

1) 개인소득 기준 소득이동성

2024년 공표된 소득이동통계에서는 연령대를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번 추가 분석에서는 기존 연령대를 청년층(15~34세), 장년층(35~49세), 중고령층(5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이는 개인 생애주기의 주요 전환 시점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함으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결혼·출산, 장년층은 사회적 지위 달성, 중고령층은 은퇴, 노년층은 사회활동 감소와 각각 밀접하게 연결된다.

〈표 2-18〉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이동비율(2021→2022년)

(단위: %)

구분	청년층 (15~34세)		장년층 (35~49세)		중고령층 (5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A+B)	42.5	43.9	30.0	35.1	32.4	33.8	30.0	20.7
상향 이동 (A)	25.6	24.3	14.7	17.4	14.5	15.3	11.7	8.1
하향 이동 (B)	16.8	19.6	15.2	17.7	17.9	18.5	18.4	12.6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21,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성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은 반면, 노년층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상향 이동 비율이 높으나, 장년층에 접어들면서 하향 이동 비율이 상향 이동을 상회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하향 이동 간 격차가 확대된다. 성별로는 청년·장년·중고령층에서 여자의 이동성이 높으나, 노년층에서는 남자가 더 높은 이동성을 보인다.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층은 이동성이 가장 활발하면서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상향 이동 비율은 남자(25.6%)가 여자(24.3%)보다 높고, 하향 이동 비율은 여자(19.6%)가 남자(16.8%)보다 높다. 이는 20~30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성별 불평등,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육아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이 시기 여성의 높은 하향 이동성은 이후 생애주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년층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다소 완화된다. 여자(35.1%)의 상·하향 이동성이 남자(30.0%)보다 모두 높은데, 이는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난 여자의 하향 이동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남자의 경우, 상향(14.7%)과 하향(15.2%) 이동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상향·하향 간 격차도 크지 않은 비교적 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장년

층 남자가 소득이동성이 작은 소득 5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중고령층에서는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장년층과 비교했을 때 상향 이동은 줄고, 하향 이동은 늘어난다. 특히 여자의 하향 이동성 증가보다 남자의 하향 이동성이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이어 노년층에 이르면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이동성이 가장 낮다. 다만 남자는 하향 이동성이(18.4%) 높게 나타나면서, 중고령층과의 전체 이동성 격차는 여자에 비해 작은 편이다. 여자는 상향과 하향 이동성 모두 경직되는 가운데, 특히 상향 이동성(8.1%)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위에 살펴본 연령대별 이동성과 함께 소득분위 유지비율과 소득분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청년층에서 남자는 4분위 유지비율(18.8%)이, 여자는 1분위 유지비율(15.8%)이 가장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장년층에서도 이어지는데, 남자의 5분위 유지비율이 35.8%로 여자 역시 5분위 유지비율(15.2%)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2-19〉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유지비율(2021→2022년)

(단위: %)

구분	청년층 (15~34세)		장년층 (35~49세)		중고령층 (5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분위	11.5	15.8	4.7	13.5	7.9	17.0	28.1	53.3
2분위	7.6	9.1	6.2	10.6	9.4	15.4	13.7	16.2
3분위	8.5	12.3	6.5	13.6	9.3	17.2	15.5	7.0
4분위	18.8	13.4	17.0	12.0	13.1	8.6	7.0	1.6
5분위	11.1	5.4	35.8	15.2	27.9	8.0	5.7	1.2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21,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중고령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장년층과 유사한 구조가 지속되지만, 상위 분위(4, 5분위) 유지비율은 낮아지고, 하위 분위(1~3분위) 유지비율은 높아진다. 남자의 경우 여전히 5분위 유지비율이 가장 높지만 장년층보다 낮으며, 여자는 3분위(17.2%)와 1분위(17.0%) 유지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시기부터 여자는 상위분위보다 하위분위 유지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노년층은 남녀 모두 1분위 유지비율이 높으며, 특히 여자의 1분위 유지비율이 53.3%로 남자(28.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노년층 여성은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이동성이 낮게 나타난다.

〈표 2-20〉의 소득분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각 연령층에 대한 소득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청년층 남자는 상대적으로 4분위에 많이 분포하는 반면, 청년층 여자는 1~3분위에 많이 분포한다. 특히, 5분위에 분포하는 청년층 여자는 7.5% 수준이다. 장년층의 경우에는 남자가 4~5분위에 집중되어(각각 25.2%, 40.3%)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층에서는 여성의 1~3분위 집중이 많아지고, 노년층은 남녀 모두 1~2분위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표 2-20〉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구성비(2022년)

(단위: %)

구분	청년층 (15~34세)		장년층 (35~49세)		중고령층 (5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분위	17.3	23.7	8.4	20.4	12.9	25.0	35.7	61.0
2분위	18.5	22.9	12.6	21.4	17.6	27.3	24.0	24.9
3분위	19.9	24.9	13.5	22.8	17.6	26.0	22.9	10.0
4분위	29.1	20.9	25.2	17.8	20.8	12.6	10.6	2.6
5분위	15.1	7.5	40.3	17.7	31.1	9.1	6.9	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21~2022년 모두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21,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앞선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연령대별 소득이동성, 유지비율, 소득분위 구성비에서 구조적 취약계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성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청년층은 가장 활발한 이동성을 보이지만, 이 시기의 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하향 이동을 경험한다. 반면 이동성이 가장 낮은 노년층에서는 특히 여자의 이동성이 크게 경직된다. 또한 하위분위 집중도가 매우 높고 하위분위 유지비율도 높은 고착화 양상을 보인다.

소득이동성이 낮은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사회는 향후 소득이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기부터 시작된 성별 격차가 저소득 분위의 경직성으로 인해 노년 빈곤까지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시, 이번 분석으로 드러난 취약계층을 위한 중점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균등화 소득 기준 소득이동성

균등화 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 단위의 특성을 개인 단위로 환산한 소득 개념⁴⁾이다. 개인소득이 경제주체의 노동시장에서 ‘소득 창출 능력’을 보여준다면, 균등화 소득은 가구 단위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기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을, 실제 생활수준과 빈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균등화 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개인소득이 낮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으로 생활이 보전되어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빈곤 진입 및 탈출 등 사회정책과 관련한 분석에는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가구 단위로 합산한 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준 소득.

〈표 2-21〉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이동분포(2021→2022년)

(단위: %)

'21년 \ '22년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75%	중위소득 75~150%	중위소득 150% 이상	합계	상향	유지	하향
중위소득 50% 미만	23.5	3.0	2.4	0.5	29.5	14.2	72.0	13.8
중위소득 50~75%	2.7	3.8	3.3	0.4	10.2			
중위소득 75~150%	2.4	2.9	18.9	4.6	28.7			
중위소득 150% 이상	0.8	0.5	4.5	25.9	31.6			
합계	29.4	10.2	29.1	31.4	100.0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21,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개인소득의 이동성은 동일한 5분위 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반면, 균등화 소득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개인소득이 근로 및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과 달리, 균등화 소득은 가구 내 경제생활과의 관련성이 더 큰 시장소득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층이 이동한 사람은 28.0%, 계층이 유지된 사람은 72.0%였다. 계층이 이동한 사람 중 상향 이동은 14.2%, 하향 이동은 13.8%로, 상향 이동이 하향 이동보다 0.4%p 높게 나타났다. 〈표 2-21〉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계층별 인구구성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빈곤층은 29.4%, 중위소득의 50~75% 미만의 차상위층이 10.2%, 중위소득의 75~150% 미만의 중간계층이 29.1%,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위층이 31.4%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시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였으나, 소득이동통

5) 근로 및 사업소득에 재산(이자, 배당, 임대, 사적연금소득)소득이 포함된 소득임. 행정자료의 한계로 사적이전소득은 미반영됨.

계 분석 결과는 29.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종단 연계자료의 특성상 두 시점 간 연계되지 않은 대상이 제외되는 점, 둘째, 과세자료의 과소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한계 때문이다. 특히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과소·미신고는 빈곤층을 과대 추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다만 이러한 과소·미신고는 매년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소득계층 간 이동성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향이 줄어들어 분석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2-22〉의 계층별 이동비율을 보면, 빈곤층과 상위층은 각각 79.7%, 81.8%가 계층을 유지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차상위층은 37.1%만이 계층을 유지하고, 나머지 62.9%는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계층별 소득이동성 분석 시에는 빈곤 진입·탈출률뿐만 아니라 차상위층의 이동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분석 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과 빈곤층 간 이동비율, 그리고 계층유지·이동비율 등이다. 해당 지표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2〉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이동비율(2021→2022년)

(단위: %)

'22년 '21년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75%	중위소득 75~150%	중위소득 150% 이상	합계	상향	유지	하향
중위소득 50% 미만	79.7	10.2	8.2	1.8	100.0	20.3	79.7	0.0
중위소득 50~75%	26.9	37.1	32.2	3.8	100.0	36.1	37.1	26.9
중위소득 75~150%	8.3	10.2	65.6	16.0	100.0	16.0	65.6	18.5
중위소득 150% 이상	2.4	1.5	14.3	81.8	100.0	0.0	81.8	18.2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21,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전년도 빈곤층 가운데 당해 연도에 빈곤을 탈출한 비율(빈곤탈출률)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년도 비빈곤층 가운데 당해 연도에 빈곤층으로 새로 진입한 비율(빈곤진입률)은 2020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빈곤층의 고착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로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0년 빈곤 진입률의 증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인구가 빈곤층으로 유입되었음을 보여 준다.

빈곤층과 차상위층 간 이동을 보면,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9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2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빈곤탈출률이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의 이동은 늘었지만 그 이상 계층으로의 이동은 줄었음을 의미한다.

차상위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한 비율은 2020년에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차상위층의 28.0%가 빈곤층으로 하락해 2019년(27.0%) 대비 1.0%p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26.9%로 2021년(28.0%)보다 1.2%p 줄어들었다.

〈표 2-23〉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비율(2017~2022년)

(단위: %)

기준연도	빈곤층 ↔ 비빈곤층		빈곤층 ↔ 차상위층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차상위 이동률	차상위→빈곤 이동률
'17→'18년	21.6	9.0	10.5	27.9
'18→'19년	21.7	8.8	10.8	27.0
'19→'20년	21.2	9.4	10.4	28.0
'20→'21년	20.7	9.0	10.1	28.0
'21→'22년	20.3	8.3	10.2	26.9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21년과 '22년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세분해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률이 줄어 들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의 경우 9.1%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빈곤으로의 진입은 1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소득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노년층의 경우 언제든 쉽게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차상위에서 빈곤층으로의 이동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24〉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비율(2021년→2022년)

(단위: %)

구분	빈곤층 ↔ 비빈곤층		빈곤층 ↔ 차상위층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차상위 이동률	차상위→빈곤 이동률
청년층(15~34세)	34.0	7.9	14.8	24.4
장년층(35~49세)	25.2	6.4	12.9	25.5
중고령층(50~64세)	22.3	8.7	11.5	27.2
노년층(65세 이상)	9.1	16.7	5.0	33.0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21,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세분해 보면,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탈출률은 여성이 더 낮고, 빈곤진입률은 여성이 더 높았으며, 차상위로의 이동 역시 여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표 2-25〉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비율(2021년→2022년):성별 구분
(단위: %)

구분	빈곤층 ↔ 비빈곤층				빈곤층 ↔ 차상위층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차상위 이동률		차상위→빈곤 이동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21.3	19.4	7.9	8.7	10.7	9.7	26.7	27.0
청년층 (15~34세)	34.2	33.8	7.8	8.0	14.9	14.8	24.4	24.4
장년층 (35~49세)	25.6	24.8	6.2	6.6	13.0	12.8	25.7	25.2
중고령층 (50~64세)	22.9	21.7	7.8	9.6	11.8	11.3	26.8	27.6
노년층 (65세 이상)	9.6	8.7	16.2	17.2	5.5	4.6	32.5	33.5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21,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계층 간 유지·이동비율을 살펴보면, 상향 이동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다만 2020년에는 중간계층의 상향 이동이 증가했고, 2022년에는 차상위층의 상향 이동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하향 이동비율은 차상위층에서 2020년 증가, 2022년 감소가 두드러진다. 즉, 2020년에는 중간계층의 상향 이동이 늘어난 반면 차상위층의 빈곤층 하락이 증가하였다. 차상위층은 2022년 상향 이동비율 증가, 하향 이동비율 감소로 추세가 변화되었다.

〈표 2-26〉 소득계층별 소득이동성(2017~2022년)

(단위: %)

구분		'17→'18년	'18→'19년	'19→'20년	'20→'21년	'21→'22년
상향 이동	중위소득 50% 미만	21.6	21.7	21.2	20.7	20.3
	중위소득 50~75% 미만	37.8	37.6	37.0	36.0	36.1
	중위소득 75~150% 미만	16.5	16.0	17.4	16.7	16.0
	중위소득 150% 이상	-	-	-	-	-
하향 이동	중위소득 50% 미만	-	-	-	-	-
	중위소득 50~75% 미만	27.9	27.0	28.0	28.0	26.9
	중위소득 75~150% 미만	20.3	19.6	19.7	19.3	18.5
	중위소득 150% 이상	18.1	18.6	18.5	18.1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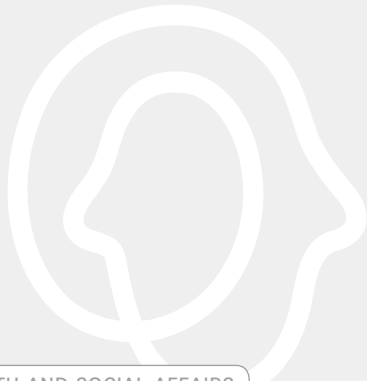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소득이동통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빈곤층의 약 80%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매년 일정 비율의 인구가 빈곤층으로 유입되거나 탈출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층 분석에는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특정 시점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태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빈곤 진입을 예방하고 탈출을 촉진하는 동태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1절 조사 개요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및 미래 사회에 대한 위험의 양상 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설계는 아래 표와 같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본은 아래 표와 같이 비례배분 방식을 통해 확률통계 기반하에 추출하였으며, 지역은 17개 광역을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에서 6월까지 한 달간이다.

〈표 3-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3,000명
표본할당	주민등록인구통계(2025년 3월) 기준 모집단 비례배분 적용(성/연령/지역별)
조사방법	17개 시도의 읍, 면, 동 단위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해당 읍, 면, 동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조사일시	2025년 5월 19일 ~ 2025년 6월 20일

조사표는 2025년 1월부터 연구진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조사표를 통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표에 수록된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개인 및 가구특성, 소득분배 인식, 사회이동성 인식, 이동성 관련 항목 및 사회이동성에 대한 개인사, 사회관계 및 정서적 요인, 가구경제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의 조사표 전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조사 내용

구분	세부 항목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 가구주와의 관계 • 자녀 여부(미성년, 대학생), 혼인상태 • 경제활동 참여상태,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 현 거주지, 거주유형 및 점유형태 • 주관적 건강상태 등
사회 및 소득분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 희망 정도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상태 • 각 분야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 등
사회이동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인식 •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 각 분야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별 중요도 •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별 중요도 등
사회이동성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기 자녀 지원 방법에 대한 신념/태도 • 자녀 교육 관련 인식 등
사회이동: 개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속한 경제적 계층(현재, 15세 무렵) • 부모님 관련 사항(이별 경험, 교육수준, 실직경험 등) • 상속/증여 경험 및 금액 등
사회관계 및 정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하루 연락하는 인원수 및 연락방법(가족/친인척, 지인/친구) • 본인이 도움받을 수 있는 집단, 도움받고 싶은 집단 • 지난 1주일간 느낌 감정, 현재 행복상태 등
가구경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현황(총생활비, 주거비,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등) • 소득현황(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 자산 및 부채 현황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어지는 2절에서는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의 기초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개별 문항별 인구학적 특성을 구분하여 응답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응답 결과의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문항 중 주요하게 살펴볼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인식조사 결과의 주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이동성 인식 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제2절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하단의 표는 사회이동성 국민인식조사 대상 응답자 3,000명에 관한 특성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2025년 3월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자인 표본이 국민 전체의 응답 값을 반영하도록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하단의 표는 이를 반영한 인구학적 특성별 조사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3-3〉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000)	100.0
가구원 수	1명	(283)	9.4
	2명	(856)	28.5
	3명	(968)	32.3
	4명	(837)	27.9
	5명 이상	(56)	1.9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000)	100.0
연령대	20~34세	(821)	24.0
	35~49세	(824)	27.5
	50~64세	(985)	32.8
	65세 이상	(470)	15.7
교육 수준 (학력)	초등학교 이하	(49)	1.6
	중학교	(165)	5.5
	고등학교	(1,073)	35.8
	대학교(전문대 포함)	(1,692)	56.4
	대학원 이상	(21)	0.7
혼인 상태	기혼	(2,227)	74.2
	이혼·별거	(77)	2.6
	사별	(79)	2.6
	미혼	(617)	20.6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84)	39.5
	임시직 임금근로자	(185)	6.2
	일용직 임금근로자	(46)	1.5
	(고용원이 있는)고용주	(100)	3.3
	(고용원이 없는)고용주	(370)	12.3
	무급가족종사자	(36)	1.2
	실업자	(44)	1.5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1,035)	34.5
고용 형태	정규직	(1,146)	81.0
	비정규직	(269)	19.0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51.7
	호남권	(319)	10.6
	충청권	(319)	10.6
	부울경	(441)	14.7
	대경권	(369)	12.3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000)	100.0
집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74.4
	전세	(584)	19.5
	보증부월세	(159)	5.3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16)	0.5
	기타(무상포함)	(9)	0.3
이념적 성격	진보	(895)	29.8
	중도	(1,082)	36.1
	보수	(1,023)	34.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응답을 포함하였다. <표 3-4>는 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연령의 응답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좋다’ 혹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대다수가 건강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좋다’ 혹은 ‘매우 좋다’로 인식하는 비율이 45.7%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연령별 응답 결과

(단위: %)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	좋다	매우 좋다
전체 연령	0.2	5.0	18.6	56.8	19.4
20대	0	0.4	3.3	39.3	57.0
30대	0	1.0	6.1	61.9	31.0
40대	0	1.5	9.7	72.7	16.1
50대	0.1	3.2	21.4	68.5	6.8
60대 이상	0.5	14.4	39.4	41.9	3.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5〉은 건강이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1순위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였으며, 2순위는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이다. 반면, 40대를 제외하고는 응답한 연령이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관리 어려움’의 이유가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5〉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연령별 응답 결과

(단위: %)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만성질환이 있어서	53.2	50.0	20.0	22.2	68.1	54.2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25.6	0	20.0	55.6	18.1	25.4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3.9	0	0	11.1	4.6	3.4
최근 큰 병이나 부상을 경험해서	3.9	50.0	20.0	0	4.6	2.5
수면장애나 피로감이 심해서	2.6	0	40.0	0	0	1.7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인해	2.6	0	0	0	4.6	2.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관리 어려움	0.6	0	0	11.1	0	0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7.6	0	0	0	0	1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2. 사회 및 소득분배 인식

하단의 표는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1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신뢰 정도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구간 중 보통(중간 3개 구간)은 50.5%이며, 믿을 수 있다(상위 4개 구간) 응답률은 45.2%로 전체 응답자의 95.7%를 차지한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보

통(중간 3개 응답)’은 47.3%, ‘믿을 수 있다(상위 4개 응답)’는 50.3%로 전체의 97.6%를 차지한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보통 혹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6〉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국민인식

(단위: %)

구분		믿을 수 있다	보통	믿을 수 없다	χ^2	평균	F
〈전 체〉		45.2	50.5	4.3		6.21	
성별	남성	43.0	51.9	5.1	9.14*	6.14	7.65**
	여성	47.5	49.1	3.5		6.29	
연령대	20~34세	43.1	51.7	5.1	3.44	6.15	0.89
	35~49세	46.5	49.8	3.8		6.23	
	50~64세	45.9	50.2	4.0		6.26	
	65세 이상	44.9	50.6	4.5		6.1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2	53.2	3.6	1.24	6.10	0.95
	고등학교 졸업	46.1	49.5	4.4		6.24	
	대학교 이상	45.0	50.8	4.3		6.2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40.4	52.6	7.1	45.15***	5.88	25.06***
	보통	33.4	61.2	5.4		5.89	
	좋음	48.5	47.8	3.8		6.31	
이념적 성격	진보	44.4	52.1	3.6	5.06	6.20	0.25
	중도	45.4	50.7	3.9		6.24	
	보수	45.9	48.9	5.3		6.20	
주관적 계층	하층	37.8	52.5	9.7	215.23***	5.76	143.14***
	중층	38.2	57.5	4.3		6.03	
	상층	66.1	32.9	0.9		6.91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7〉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국민인식

(단위: %)

구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χ^2	평균	F
〈전 체〉		50.3	47.3	2.4		6.37	
성별	남성	49.3	48.1	2.6	1.40	6.33	3.26
	여성	51.4	46.4	2.2		6.42	
연령대	20~34세	48.0	49.5	2.5	3.25	6.34	0.34
	35~49세	50.9	47.0	2.2		6.41	
	50~64세	51.0	46.8	2.2		6.37	
	65세 이상	51.7	45.3	3.0		6.3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0.0	45.5	4.5	4.77	6.24	2.21
	고등학교 졸업	50.0	47.7	2.4		6.34	
	대학교 이상	50.6	47.2	2.2		6.4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43.0	53.2	3.9	38.93***	6.17	23.01***
	보통	39.9	56.6	3.6		6.05	
	좋음	53.4	44.6	2.0		6.46	
이념적 성격	진보	54.0	44.0	2.0	14.83**	6.47	3.9*
	중도	47.9	50.4	1.8		6.35	
	보수	49.8	46.8	3.4		6.31	
주관적 계층	하층	37.2	55.1	7.8	233.24***	5.89	117.58***
	중층	45.0	53.3	1.7		6.24	
	상층	70.7	28.5	0.8		6.96	

주: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인구학적 특성별로 우리 사회의 믿을 수 있는 정도와 미래 희망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이념적 성격, 주관적 계층 등에 따른 우리 사회의 신뢰도와 희망 전망에 대한 응답한 결과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두 문항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성은 주관적 계층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상태에 관해 5년 전, 현재, 향후 5년 후를 질문한 응답 결과로 불평등 정도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불평등’의 경우 전체적으로 5년 전(2020년) 소득불평등 상태에 관한 질문에서 ‘매우 불평등’ 혹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6.8%이며 현재(2025년)에는 해당 응답률이 44.2%로 증가한다. 즉, 5년 전보다 현재의 소득불평등이 더 커졌다고 인지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자산불평등’의 응답에서도 이 비율이 40.6%(5년 전, 2020년)에서 49%(현재, 2025년)로 증가하여 자산불평등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현재 더 불평등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현재(2020년) 대비 5년 후(2030년)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에 관한 예측에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불평등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평등할 것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득불평등’의 경우 현재와 5년 후 소득불평등 응답을 비교할 때 ‘매우 불평등’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8%(현재)에서 11.3%(5년 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산불평등’의 경우 7.1%(현재)에서 14.5%(5년 후)로 응답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동시에 ‘평등하다’는 응답 비율도 ‘소득불평등’의 경우 11.6%(현재)에서 22%(5년 후)로 증가하며, 자산불평등의 경우 9.2%(현재)에서 20.5%(5년 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응답 결과를 볼 때 소득불평등보다는 자산불평등이 더 불평등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전체적으로 ‘매우 불평등’과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득보다는 자산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소득배분과 자산배분이 과거(5년 전)보다 현재에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는 양상이며, 미래(5년 후)에는 양 극

단, 즉 매우 불평등하거나 혹은 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양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보다는 자산분배가 더 불평등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상태의 응답 결과

(단위: %)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소득불평등	5년 전(2020년)	1.8	35.0	50.4	12.8	0.0
	현재(2025년)	5.8	38.4	44.2	11.6	0.0
	5년 후(2030년)	11.3	30.5	35.6	22.0	0.6
자산불평등	5년 전(2020년)	2.5	38.1	48.4	10.9	0.0
	현재(2025년)	7.1	41.9	41.8	9.2	0.0
	5년 후(2030년)	14.5	31.2	33.1	20.5	0.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하단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5년 전, 현재, 5년 후의 상태에 대해 질문한 각 문항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계층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분배와 자산분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5년 전(2020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

(단위: %)

구분		평등하다	보통	불평등하다	χ^2
〈전 체〉		12.8	50.4	36.8	
성별	남성	11.8	49.8	38.4	4.33
	여성	13.7	51.1	35.2	
연령대	20~34세	11.5	48.4	40.1	6.28
	35~49세	14.0	49.5	36.5	
	50~64세	12.9	51.9	35.2	
	65세 이상	12.3	52.1	35.5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14.4	50.9	34.7	1.22
	고등학교 졸업	12.7	51.1	36.2	
	대학교 이상	12.6	50.0	37.4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12.8	53.9	33.3	4.42
	보통	10.4	51.2	38.4	
	좋음	13.3	50.0	36.6	
이념적 성격	진보	12.3	47.8	39.9	7.19
	중도	12.1	51.4	36.5	
	보수	13.9	51.7	34.4	
주관적 계층	하층	3.5	34.1	62.4	277.37***
	중층	10.8	51.7	37.5	
	상층	23.1	57.4	19.6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0〉 현재(2025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

(단위: %)

구분		평등하다	보통	불평등하다	χ^2
〈전 체〉		11.6	44.2	44.1	
성별	남성	11	44.1	44.9	1.57
	여성	12.3	44.4	43.3	
연령대	20~34세	11.0	43.6	45.5	3.22
	35~49세	11.4	46.2	42.4	
	50~64세	12.4	42.7	44.9	
	65세 이상	11.5	44.9	43.6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13.1	47.3	39.6	10.00*
	고등학교 졸업	12.8	40.8	46.5	
	대학교 이상	10.7	46.0	43.3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6.4	41.0	52.6	10.29*
	보통	9.7	45.1	45.2	
	좋음	12.5	44.3	43.3	
이념적 성격	진보	10.7	44.0	45.3	12.68*
	중도	11.4	47.9	40.8	
	보수	12.7	40.6	46.7	
주관적 계층	하층	1.5	22.9	75.6	309.67***
	중층	10.8	45.5	43.7	
	상층	19.7	54.2	26.1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1〉 5년 후(2030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

(단위: %)

구분		평등하다	보통	불평등하다	χ^2
〈전 체〉		22.6	35.6	41.9	
성별	남성	22.5	34.0	43.6	4.37
	여성	22.6	37.2	40.1	
연령대	20~34세	25.0	31.6	43.4	15.75*
	35~49세	21.0	40.7	38.4	
	50~64세	22.3	34.8	42.8	
	65세 이상	22.1	34.3	43.6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2	37.4	41.4	5.62
	고등학교 졸업	21.1	34.4	44.5	
	대학교 이상	23.6	36.1	40.3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20.5	32.1	47.4	9.72*
	보통	18.3	37.3	44.3	
	좋음	23.7	35.4	40.9	
이념적 성격	진보	23.0	36.9	40.1	12.34*
	중도	23.1	37.6	39.3	
	보수	21.6	32.3	46.1	
주관적 계층	하층	8.9	22.5	68.7	210.26***
	중층	21.9	37.7	40.5	
	상층	32.6	38.6	28.9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2〉 5년 전(2020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상태

(단위: %)

구분		평등하다	보통	불평등하다	χ^2
〈전 체〉		11.0	48.4	40.6	
성별	남성	10.2	48.2	41.6	2.42
	여성	11.8	48.7	39.6	
연령대	20~34세	11.1	43.6	45.4	15.81*
	35~49세	12.4	47.0	40.7	
	50~64세	10.1	51.4	38.6	
	65세 이상	10.2	52.3	37.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3	49.1	39.6	0.99
	고등학교 졸업	10.4	49.4	40.2	
	대학교 이상	11.3	47.8	41.0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9.0	50.6	40.4	9.73*
	보통	7.5	50.8	41.7	
	좋음	11.9	47.7	40.4	
이념적 성격	진보	11.3	45.5	43.2	6.36
	중도	10.6	48.5	40.9	
	보수	11.1	50.9	38.0	
주관적 계층	하층	4.5	30.7	64.8	273.19***
	중층	8.7	48.6	42.7	
	상층	20.2	58.8	21.0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3〉 현재(2025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상태

		(단위: %)			
구분		평등하다	보통	불평등하다	χ^2
〈전 체〉		9.3	41.8	48.9	
성별	남성	9.2	40.8	50.0	1.48
	여성	9.3	42.8	47.8	
연령대	20~34세	9.4	38.8	51.7	4.79
	35~49세	9.3	42.8	47.8	
	50~64세	9.0	43.7	57.3	
	65세 이상	9.4	40.6	50.0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11.3	44.1	44.6	4.75
	고등학교 졸업	8.8	40.0	51.2	
	대학교 이상	9.3	42.6	48.1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6.4	43.0	50.6	6.98
	보통	7.4	40.2	52.4	
	좋음	9.9	42.1	48.0	
이념적 성격	진보	9.1	40.9	50.1	8.65
	중도	8.4	45.0	46.6	
	보수	10.4	39.2	50.4	
주관적 계층	하층	1.7	23.5	74.7	253.8581***
	중층	8.2	41.5	50.3	
	상층	16.4	53.5	30.1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4〉 5년 후(2030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상태

(단위: %)

구분		평등하다	보통	불평등하다	χ^2
〈전 체〉		21.2	33.1	45.6	
성별	남성	21.6	31.2	47.2	5.37
	여성	20.8	35.1	44.1	
연령대	20~34세	21.1	31.9	47.0	4.96
	35~49세	22.0	35.6	42.5	
	50~64세	20.9	32.1	47.0	
	65세 이상	20.9	33.0	46.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18.5	37.8	43.7	6.27
	고등학교 졸업	20.0	32.1	47.9	
	대학교 이상	22.4	33.2	44.5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18.6	28.9	52.6	10.60*
	보통	17.4	36.6	46.0	
	좋음	22.3	32.6	45.1	
이념적 성격	진보	21.3	34.6	44.0	11.82*
	중도	22.8	34.2	43.0	
	보수	19.5	30.7	49.9	
주관적 계층	하층	16.5	22.0	71.5	216.06***
	중층	20.1	35.2	44.7	
	상층	32.8	35.2	32.0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하단의 표는 [그림 3-1]의 예시로 제시된 5개의 국가 유형 중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와 더불어 어떠한 부의 점유율을 가진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함으로써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소득배분 상태와 이상적 배분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이 그림은 World Inequality Database에서 추출한 국가들의 분위별 세후 소득의 실제 점유율을 보여 준다. 설문 질문지에서는 국가명은 제시하지 않았으나⁶⁾ 국가1은 멕시코

로 5분위(소득 최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72.2%)을 차지하는 가장 불균형한 소득분배를 가진 국가이며 국가5로 갈수록 분위별 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국가5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가 균등한 비중의 소득을 점유하는 완전균등 상태의 국가를 가정하고 있다. 설문문항에서 국가명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가2는 미국, 국가3은 우리나라, 국가4는 스웨덴의 실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5는 완전히 균등한 가상의 국가를 상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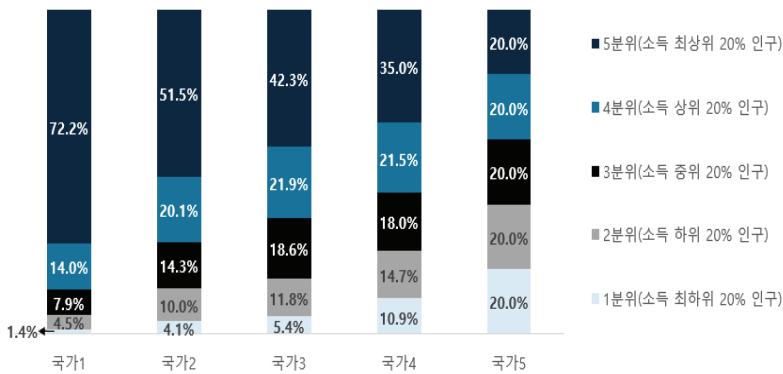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현재 소득분배와 유사한 국가에 대한 응답으로 국가2는 19.3%, 국가3은 31.0%, 국가4는 32.2%로 전체 응답의 82.5%를 차지하며, 이상적인 국가에 관한 응답률도 국가2는 19.6%, 국가3은 30.8%, 국가4는 30.6%로 전체 81.0%로 현재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를 선택한 국가의 응답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다수가 한국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균등하게 배분된 상태는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현재의 한국의 분배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 즉 모든 소득분위가 균등하게 소득을 점유하는 상태가 반드시 이상적이라고 - 인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에 가까운 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1.0%가 국가3(우리나라)을 선택했고, 우리보다 균등한 분배 상태인 국가4(스웨덴)(32.2%)와 국가5(완전균등)(9.8%)를 선택한 비율이 42.0%에 달했고, 우리나라보다 불균등한 국가1(멕시코)(7.7%)와 국가2(미국)(19.3%)를 선택한 비율은 27.0%에 그쳤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실제보다 균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이상적인 소득분배 상태로 국가3(우리나

6) 설문응답 문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가명(예를 들면 미국, 스웨덴)을 제시하는 경우 응답자가 해당 국가의 부의 분배율 외의 다른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 국가명은 제외하고 선택지(예를 들면 국가1, 국가2)를 제시하였다.

라)을 꼽은 비율은 30.8%이고, 국가4(스웨덴)나 국가5(완전균등)를 꼽은 비율은 41.8%, 그리고 국가1(멕시코)이나 국가2(미국)를 꼽은 비율은 27.3%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는 미국보다는 평등하지만 스웨덴보다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이상적인 분배 상태로 우리나라와 스웨덴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부터 약간 불평등 혹은 약간 평등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현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와 이상적 분배 상태 질문의 국가 예시



주: 설문문항에서 실제 국가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분위 점유율 예시는 실제 국가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1은 멕시코, 국가2는 미국, 국가3은 한국, 국가4는 스웨덴, 국가5는 완전 균등한 가상국가를 상정한 것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7)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p.5

〈표 3-15〉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

구분		국가1	국가2	국가3	국가4	국가5	(단위: %) χ^2
〈전 체〉		7.7	19.3	31.0	32.2	9.8	
성별	남성	7.6	19.4	30.9	32.5	9.6	0.32
	여성	7.8	19.1	31.2	31.9	10.0	
연령대	20~34세	7.4	22.9	29.8	30.7	9.3	9.85
	35~49세	7.8	18.9	30.8	32.8	9.7	
	50~64세	8.2	18.0	31.3	32.3	10.3	
	65세 이상	7.0	17.0	32.8	33.4	9.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5	18.9	36.5	31.5	8.6	11.13
	고등학교 졸업	8.6	18.8	29.9	31.5	11.3	
	대학교 이상	7.5	19.6	31.1	32.8	9.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6.4	18.0	33.3	31.4	10.9	5.99
	보통	7.4	20.5	27.8	32.9	11.5	
	좋음	7.9	19.1	31.7	32.1	9.3	
이념적 성격	진보	6.7	19.9	28.6	32.6	12.2	14.60
	중도	7.6	18.7	31.3	33.1	9.3	
	보수	8.7	19.4	32.8	30.9	8.2	
주관적 계층	하층	18.1	19.7	17.5	28.7	16.0	171.33***
	중층	5.9	21.8	31.2	31.6	9.5	
	상층	5.6	13.1	38.9	35.7	6.7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6〉 우리나라의 이상적 소득분배 상태

(단위: %)

구분		국가1	국가2	국가3	국가4	국가5	χ^2
〈전 체〉		7.7	19.6	30.8	30.6	11.2	
성별	남성	8.2	19.0	30.4	30.6	11.9	2.80
	여성	7.3	20.3	31.2	30.7	10.5	
연령대	20~34세	8.2	18.2	28.6	33.7	11.4	15.67
	35~49세	6.7	22.2	30.6	30.7	9.8	
	50~64세	8.6	19.2	32.3	28.5	11.4	
	65세 이상	7.0	18.1	31.5	30.2	1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	22.1	29.7	26.6	13.5	10.90
	고등학교 졸업	8.8	17.7	29.9	31.7	11.9	
	대학교 이상	7.0	20.5	31.5	30.5	10.5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4.5	21.2	32.1	29.5	12.8	13.38
	보통	8.3	19.2	26.0	32.7	13.8	
	좋음	7.8	19.6	31.9	30.2	10.5	
이념적 성격	진보	8.3	19.8	31.5	29.4	11.1	10.02
	중도	6.6	20.1	29.3	31.2	12.9	
	보수	8.5	19.0	31.8	31.1	9.7	
주관적 계층	하층	9.9	19.2	32.6	26.6	11.7	10.61
	중층	7.2	19.0	31.5	31.2	11.1	
	상층	7.7	21.1	28.1	31.8	11.3	

주: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7〉은 빈곤층, 실업자,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질문함으로써 분야별 정부 정책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본 응답 결과이다. 먼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 완화에 관한 정부 책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정부의 실업자 지원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41.1%로 가장 높기는 하나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는 응답률도 38.2%로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 책임’에 있어서는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는 의견

이 41.8%로 가장 높으며, ‘반대한다’는 응답률도 29.1%, ‘동의한다’는 응답률도 21.6%로 나타난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비중이 높으나 특정 대상, 즉 실업자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소 줄어들며, 특히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 대상자에 비해 - 더 미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7〉 정부 지원에 관한 동의 정도의 응답 결과

(단위: %)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1	8.9	24.9	54.5	10.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1.1	13.9	38.2	41.0	5.7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4.6	29.1	41.8	21.6	2.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18〉은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해 사회 전체와 각 분야별로 질문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7.9%이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는 응답률도 각각 25.9%, 24.2%로 대체적으로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극단적인 인식보다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교육받을 기회’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 보통(25.3%), 공정(58.8%), 매우 공정(6.9%)을 합산한 비율 - 전체 91.0%로 상당히 높으며, ‘복지혜택의 기회’에 대해서도

이 비율이 85.6%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일자리 얻을 기회(76.1%)’, ‘경제적 지위 상승(67.8%)’, ‘자유로운 기업활동(79.9%)’,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73.1%)’, ‘대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61.3%)’로 상대적으로 공정하다는 인식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혜택이나 교육 기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정하게 배분되었다는 인식의 비중이 높으나 일자리 배분 방식이나 기업 간 거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강한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3-18〉 사회 전체 및 분야별 공정성에 관한 응답 결과

(단위: %)

	매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사회 전체	1.3	25.9	47.9	24.2	0.7
교육받을 기회	0.8	8.1	25.3	58.8	6.9
일자리 얻을 기회(채용·승진 등)	1.7	22.1	46.2	27.3	2.6
경제적 지위 상승기회	3.5	28.7	47.5	19.0	1.3
자유로운 기업활동 기회	1.8	18.3	47.2	30.7	2.0
복지혜택 기회	0.6	13.9	40.8	40.4	4.4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	2.3	24.6	51.1	21.1	0.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4.2	34.5	46.2	14.8	0.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3. 사회이동성 인식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떤가 설문을 통해 보면,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 보통이 59.2%, 부정적 견해가 15.4%로 조사되었다. 사회이동성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국민은 사회이동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구원수 기준으로는 1인 가구에 비해 다인가구에서, 그리고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보다는 34세 이하 청년층이 소폭이지만 사회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고령층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경험한 만큼,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반면, 청년층의 경우 소폭이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일 경우, 특징적으로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부산·울산·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이동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수도권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나 전세에 비해 월세 및 기타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이념적으로는 진보가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

〈표 3-19〉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활발하다	보통	활발하지 않다
〈전 체〉		(3,000)	25.4	59.2	15.4
성별	남성	(1,520)	24.5	60.3	15.2
	여성	(1,480)	26.4	58.0	15.7
가구원수	1명	(283)	24.7	52.7	22.6
	2명	(856)	24.5	59.3	16.1
	3명	(968)	25.4	60.2	14.4
	4명 이상	(893)	26.4	59.9	13.7
연령대	20~34세	(721)	26.2	56.7	17.1
	35~49세	(824)	25.4	59.1	15.5
	50~64세	(985)	25.2	60.3	14.5
	65세 이상	(470)	24.7	60.6	14.7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22.4	62.2	15.4
	고등학교	(1,073)	22.4	60.7	17.0
	대학교 이상	(1,713)	27.7	57.9	14.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근로자	(1,184)	24.5	59.3	16.2
	임시·일용직근로자	(231)	22.1	59.3	18.6
	고용주·자영업자	(506)	24.9	62.9	12.3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27.3	57.3	15.4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20.8	61.1	18.1
	호남권	(319)	21.0	72.4	6.6
	충청권	(319)	26.3	56.4	17.2
	부울경	(441)	47.8	44.0	8.2
	대경권	(369)	20.9	60.2	19.0
집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25.6	59.7	14.7
	전세	(584)	26.5	57.2	16.3
	월세 및 기타	(184)	19.0	59.2	21.7
이념적 성격	진보	(895)	22.5	59.1	18.4
	중도	(1,082)	26.4	59.5	14.0
	보수	(1,023)	26.9	58.8	14.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그렇다면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표를 통해 보면, 1순위를 기준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영향”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보아도 63.1%로 다른 사유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등의 현상이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17.3%(1순위)와 38.7%(1+2순위)가 지적하고 있어 역시 오랜 기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 등 간 노동시장 문제가 사회이동성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3-20〉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3.4	63.1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7.3	38.7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3.6	27.6
사회적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6	26.6
경제성장 둔화로 전반적인 기회가 부족해서	9.1	22.7
여성, 청년, 이주민, 소수자 등이 소득, 자산, 일할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3.7	10.2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형평성이 낮기 때문에	1.3	5.0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제도 등 공공정책이 부족해서	0.9	3.9
기타	0.2	0.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그렇다면 개인이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을까. 아래 설문을 보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42.5%로 나타나 앞에서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로 청년, 대학교 이상, 충청 및 부울경 지역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에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수적 성향에 비해서 여전히 사회이동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표 3-21〉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단위: %)

구분		사례수	높음	보통	낮음
〈전 체〉		(3,000)	42.5	50.7	6.8
성별	남성	(1,520)	42.3	50.8	6.9
	여성	(1,480)	42.6	50.7	6.7
가구원수	1명	(283)	40.6	49.1	10.2
	2명	(856)	40.7	52.7	6.7
	3명	(968)	45.1	48.3	6.5
	4명 이상	(893)	41.9	52.0	6.2
연령대	20~34세	(721)	43.6	49.7	6.8
	35~49세	(824)	43.3	49.2	7.5
	50~64세	(985)	41.9	52.1	6.0
	65세 이상	(470)	40.4	52.3	7.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43.5	49.1	7.5
	고등학교	(1,073)	40.4	52.4	7.3
	대학교 이상	(1,713)	43.7	49.9	6.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근로자	(1,184)	42.3	51.1	6.6
	임사·일용직근로자	(231)	40.7	48.5	10.8
	고용주·자영업자	(506)	42.3	51.8	5.9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43.1	50.3	6.6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41.0	50.5	8.5
	호남권	(319)	34.2	64.9	0.9
	충청권	(319)	49.2	46.7	4.1
	부울경	(441)	48.5	46.0	5.4
	대경권	(369)	42.8	48.5	8.7
집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42.9	50.7	6.4
	전세	(584)	43.3	49.1	7.5
	월세 및 기타	(184)	34.2	56.0	9.8
이념적 성격	진보	(895)	40.9	50.6	8.5
	중도	(1,082)	42.3	52.4	5.3
	보수	(1,023)	44.0	49.1	6.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68.0%가 그렇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는 0.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독거가구, 청년층, 대학교 이상, 수도권 및 자가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표 3-22〉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주는 영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영향을 주었음	보통	영향 주지 않음
〈전 체〉		(3,000)	68.0	31.3	0.7
성별	남성	(1,520)	66.8	32.6	0.6
	여성	(1,480)	69.3	29.9	0.9
가구원수	1명	(283)	73.1	26.1	0.7
	2명	(856)	67.4	31.5	1.1
	3명	(968)	68.9	30.6	0.5
	4명 이상	(893)	66.0	33.4	0.7
연령대	20~34세	(721)	73.9	25.4	0.7
	35~49세	(824)	64.7	35.1	0.2
	50~64세	(985)	68.3	30.9	0.8
	65세 이상	(470)	64.0	34.5	1.5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55.6	42.1	2.3
	고등학교	(1,073)	68.9	30.6	0.6
	대학교 이상	(1,713)	69.0	30.4	0.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근로자	(1,184)	67.3	32.3	0.4
	임사·일용직근로자	(231)	64.9	32.5	2.6
	고용주자영업자	(506)	67.6	32.0	0.4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69.6	29.6	0.8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71.6	28.1	0.3
	호남권	(319)	70.5	29.2	0.3
	충청권	(319)	51.7	48.0	0.3
	부울경	(441)	69.2	29.0	1.8
	대경권	(369)	63.4	34.7	1.9
집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68.0	31.3	0.7
	전세	(584)	68.2	31.2	0.7
	월세 및 기타	(184)	67.4	31.5	1.1
이념적 성격	진보	(895)	70.3	29.1	0.7
	중도	(1,082)	66.6	32.7	0.6
	보수	(1,023)	67.4	31.7	0.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47.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본인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경향도 46.5%로 나타나 많은 국민이 사회이동성이 세대 간 이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 대학교 이상, 수도권과 부울경,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경우 “영향을 주었다”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3〉 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친 영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영향을 주었음	보통	영향 주지 않음
〈전 체〉		(3,000)	47.1	49.1	3.8
성별	남성	(1,520)	48.0	48.4	3.6
	여성	(1,480)	46.1	49.9	4.1
가구원수	1명	(283)	47.3	44.5	8.1
	2명	(856)	47.3	47.5	5.1
	3명	(968)	47.8	49.8	2.4
	4명 이상	(893)	45.9	51.3	2.8
연령대	20~34세	(721)	49.0	49.0	2.1
	35~49세	(824)	48.2	49.3	2.6
	50~64세	(985)	45.5	50.0	4.6
	65세 이상	(470)	45.5	47.2	7.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44.9	44.4	10.8
	고등학교	(1,073)	45.2	50.4	4.4
	대학교 이상	(1,713)	48.5	48.9	2.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근로자	(1,184)	49.1	48.6	2.4
	임사·일용직근로자	(231)	43.3	52.0	4.8
	고용주·자영업자	(506)	50.0	45.9	4.2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44.3	50.6	5.1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46.6	50.3	3.1
	호남권	(319)	31.7	58.0	10.3
	충청권	(319)	46.4	51.7	1.9
	부울경	(441)	58.7	37.4	3.9
	대경권	(369)	49.1	48.0	3.0
집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48.6	47.6	3.8
	전세	(584)	42.3	54.5	3.3
	월세 및 기타	(184)	44.0	50.0	6.0
이념적 성격	진보	(895)	49.2	46.8	4.0
	중도	(1,082)	42.7	53.4	3.9
	보수	(1,023)	49.9	46.5	3.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24〉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친 영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영향을 주었음	보통	영향 주지 않음
〈전 체〉		(3,000)	46.5	51.6	1.9
성별	남성	(1,520)	46.5	51.6	1.9
	여성	(1,480)	46.6	51.6	1.8
가구원수	1명	(283)	41.0	54.1	4.9
	2명	(856)	47.0	50.5	2.6
	3명	(968)	46.8	52.4	0.8
	4명 이상	(893)	47.6	51.1	1.3
연령대	20~34세	(721)	47.3	51.9	0.8
	35~49세	(824)	48.7	50.4	1.0
	50~64세	(985)	45.5	51.8	2.7
	65세 이상	(470)	43.8	53.0	3.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40.2	53.7	6.1
	고등학교	(1,073)	45.7	51.9	2.4
	대학교 이상	(1,713)	47.9	51.1	1.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근로자	(1,184)	48.4	50.7	0.9
	임사·일용직근로자	(231)	43.7	52.0	4.3
	고용주·자영업자	(506)	49.4	49.2	1.4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43.7	53.7	2.6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48.1	50.9	1.0
	호남권	(319)	32.9	60.8	6.3
	충청권	(319)	36.7	63.0	0.3
	부울경	(441)	58.7	38.5	2.7
	대경권	(369)	45.8	52.3	1.9
집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47.8	50.3	1.9
	전세	(584)	43.0	55.8	1.2
	월세 및 기타	(184)	41.9	54.4	3.8
이념적 성격	진보	(895)	48.7	50.3	1.0
	중도	(1,082)	44.5	53.0	2.5
	보수	(1,023)	46.8	51.2	2.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은 Silverman et al.(2024)이 고안한 7점 척도로 구성된 사회이동성에 관한 5가지 문항⁷⁾에 대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최저 1점, 최대 7점). 먼저, 전체적인 점수는 중위 점수인 4점에 조금 못 미치는 3.9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념과 주관적 계층별로는 상당히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념별로는 중도, 보수, 진보의 순으로 높았으며, 주관적 계층별로는 상층, 중층, 하층의 순으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하층(3.27)에서 전체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25〉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 성별, 연령별, 이념적 성격, 주관적 계층 (단위: 점)

구분		강함	보통	약함	χ^2	평균	F
〈전 체〉		23.8	32.1	44.1		3.90	
성별	남성	25.2	29.3	45.6	4.37	3.89	0.12
	여성	22.4	35.1	42.5		3.90	
연령대	20~34세	23.7	27.2	49.1	8.2489	3.86	1.53
	35~49세	23.3	35.1	41.6		3.90	
	50~64세	22.4	32.6	45.1		3.90	
	65세 이상	27.8	34.1	38.2		3.96	
이념적 성격	진보	22.1	26.0	52.0	14.8381**	3.82	7.66***
	중도	26.6	33.3	40.1		3.96	
	보수	22.3	36.2	41.4		3.90	
주관적 계층	하층	6.0	10.7	83.3	201.204***	3.27	204.54***
	중층	24.8	40.0	35.1		3.96	
	상층	36.9	33.2	29.9		4.13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7) ①사람들이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②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다, ③부자로 태어나면 가난 해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역코딩), ④가난하게 태어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역코딩), ⑤오늘날 사회계층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각각의 통계표는 부록 참조.

(소득분위별 이동성) 사회 전체를 소득에 따라 5개 그룹(5분위)으로 나눈 후, 각각 5분위, 3분위, 1분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소득 집단에 속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최상층인 5분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5분위에 머물 것이라는 응답이 53.9%, 최하층인 1분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4분위 이하로 떨어질 확률(하향 이동)은 46.1%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계층인 3분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3분위에 머물 확률은 48.8%로 나타났고, 4,5분위로 상향할 확률은 28.2%, 1,2분위로 하향할 확률은 23.1%로 각각 나타났다. 중간계층에서는 상향할 확률이 하향할 확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하층인 1분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1분위에 머물 확률은 37.7%이고, 최상층인 5분위로 이동할 확률은 3.6%로 나타났다. 2분위 이상으로 상향 이동할 확률은 62.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최상층이 하향 이동할 가능성보다 최하층이 상향 이동할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6〉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 소득분위별

(단위: 점)

태어날 때	성인이 되었을 때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합
5분위(최상)	53.9	23.3	13.8	5.9	3.0	100.0
3분위(중)	7.1	21.1	48.8	16.5	6.6	100.0
1분위(최하)	3.6	8.5	21.8	28.4	37.7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국민들은 사회분야별로 나타나는 사회이동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보면 사회이동성이 높다고 보는 분야는 교육을 통한 이동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여성의 사회이동성과 고용 및 일자리 이동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취약계층 사회이동성은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소득 및 자산 이동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표 3-27〉 분야별 사회이동성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소득이동성	1.6	34.3	45.0	19.0	0.1
자산 이동성	7.1	37.6	35.2	18.8	1.3
교육을 통한 이동성	1.2	7.3	37.1	50.1	4.3
고용 및 일자리 이동성	1.8	23.9	46.0	26.7	1.7
여성의 사회이동성	1.1	19.2	47.7	30.2	1.8
취약계층 사회이동성	5.3	41.1	42.7	10.2	0.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아래 표는 각 분야별 사회이동성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소득이동성이 낮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복지 격차의 확대,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36.4%)가 꼽혔다. 다음으로 재벌 및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21.9%), 노동시장 불안정성 심화(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 이동성이 낮은 이유로는 부모 등으로부터의 상속 증여(31.7%)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28.4%), 청년세대의 자산격차 확대에 따른 미래 희망 부족(16.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이 낮은 이유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원 차이(34.9%)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다음으로 대학서열화 등 고등교육 격차 확대(28.2%),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 부족(16.9%), 고등교육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의 불일치(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및 일자리의 이동성이 낮은 이유로는 고용형태, 직종, 성, 학력수준별 근로조건과 임금격차 지속(35.1%)이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근로조건 격차(20.9%), 불공정 채용 관행(13.8%), 노동위기층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이동성이 낮은 이유로는 노동시장의 여성 차별(23.1%)이 가장 주요하게 꼽혔고, 다음으로 위기 여성의 재기를 위한 생계·일자리 지원 부족(21.1%), 일하는 여성 지원 제도 부족(19.0%), 가족 내 여성의 성역할 규범(18.0%) 등이 꼽혔다.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이 낮은 이유로는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미비(25.2%)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다음으로 사회이동 노력을 위한 적정생활 미보장(20.0%), 진로·취업에서 공정한 기회 미보장(19.0%),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분야별 사회이동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소속이동성	노동시장 임금·복지격 차 확대	재별,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적 확대	자영업·불안 정 고용증 증가	취약계층 등의 좋은 일자리에 참여 기회 배제	빈곤·위기계 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	(단위: 점)
자산 이동성	36.4	21.9	14.7	9.7	9.5	5.7	1.6	조세제도 미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의 증가	수도권 및 특정 지역 중심의 부동산 상승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미래 희망 부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취약계층, 청년 등의 자산(형성)지 원제도 부족	정부의 감세	신규(가상) 자산 등에 대한 규제 미비	이유 없음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	31.7	28.4	16.4	15.1	3.8	2.8	1.8	0.1
	사교육비 지원 차이	수도권 및 대학서열화	저소득·취약 계층 가구 자녀 등에 대한 공적 지원 부족	기술·직무 불일치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 교육정책	기타	이유 없음	
고용 및 일자리 이동성	34.9	28.2	16.9	12.9	5.9	0.8	0.4	
	근로조건, 임금· 복지 격차 지속	재별·대기업 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격차 지속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지 않아서	노동위기에 대한 정부 지원 미비	기술발달에 따른 좋은 일자리에 축소	능력과 욕구에 부합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부재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인적·사회적 네트웍 부족
	35.1	20.9	13.8	8.1	7.5	7.3	6.4	0.9

여성 사회이동성	기업의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	위기여성 재기를 위한 생계, 일자리 지원 부족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부족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규범	미래변화 대응 여성 맞춤형 지원체계 부족	사회적 성차별	-	-
	23.1	21.1	19	18	14.3	4.4	-	-
취약계층 사회이동성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부족·부재	사회이동 노력을 위한 적정생활 미보장	진로·취업에 서 공정한 기회 미부여	사회보장제도 의존현상이 높아져서	사회적 인식, 배제·차별 등	이유 없음	기타	
	25.2	20	19	17.5	17.5	0.7	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국민이 인식하기에 자신의 노력을 통해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유사한 수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89.1%)”, “취업이나 채용의 공정성(88.0%)”을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항목에 비해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 강화(64.9%)”, “취약계층에게 기회 균등 및 우선 기회 부여(72.7%)”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75.0%(다소높음과 매우높음의 합))”, “소득 및 자산격차 지속(74.3%)”, “저출산 및 고령화(74.1%)”를 비슷한 수준에서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성차별 및 젠더 문제(48.7%)”,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변화(53.6%)”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3-29〉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

(단위: %)

구분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고소득고자산의 세금을 늘리는 것	74.9	23.1	2.1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	64.9	31.6	3.4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등)로 인한 격차를 줄이는 것	80.9	18.4	0.7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기회 강화하는 것	83.0	16.1	0.9
대학입시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83.8	15.7	0.5
취업이나 채용 시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88.0	11.8	0.2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89.1	10.6	0.3
취약계층에게 기회균등 및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	72.7	25.1	2.2
공공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차이를 줄이는 것	81.6	17.5	0.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 3-30〉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양극화 현상	0.0	2.8	22.2	64.4	10.6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0.0	4.2	21.7	45.3	28.8
디지털 전환과 노동환경 변화	0.0	3.5	30.0	50.4	16.1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변화	0.3	7.8	38.2	42.1	11.5
소득 및 재산(부동산 등) 격차 지속	0.2	2.3	23.2	55.6	18.7
사회전반적인 성차별·젠더 문제 지속	0.5	8.6	42.2	42.6	6.1
증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종합부동산, 상속·증여세 등)	0.4	3.4	36.2	53.2	6.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아래 표는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방안별 중요도를 보여준다. 11점 척도(0~10점)로 측정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들의 점수가 약 7.4점에서 8.0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척도별로 보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 항목은 ‘기업 채용의 공정성 확대’(7.95점),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강화’(7.88점), ‘주택가격 격차 완화’(7.87점)로 일자리 진입, 교육, 주거의 격차 해소가 사회이동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꼽힌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순위로 꼽힌 항목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지역균형), 생활비 부담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새로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7.42점), ‘빈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7.53점)로 나타났다.

〈표 3-31〉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평균점수
빈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79.0	19.7	1.3	7.53
특정지역 주택가격 상승 억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한 주택가격 격차 완화	85.8	13.5	0.7	7.87
누진소득세, 상속증여 등에 대한 세율 확대	81.5	16.9	1.6	7.68
비정규직, 여성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83.6	15.3	1.1	7.76
기업(공공 및 민간) 등 일자리 채용과정에서 공정채용 원칙 적용 및 확대	87.4	12.4	0.3	7.95
중견,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자녀 양육교육, 주거비, 모기지원 등 생활서비스 부담 완화	84.7	15.0	0.4	7.82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강화	84.8	14.6	0.6	7.88
지역(국립)대학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	83.2	16.2	0.6	7.76
지역간 서비스격차(의료, 교육, 교통, 문화예술 등)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강화	84.5	15.0	0.6	7.81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77.9	19.8	2.3	7.42
미래 사회 변화 속 소외배제 계층 발굴 및 사회정책 지원	83.4	16.3	0.3	7.6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이 같은 결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자리, 교육, 주거 등에서의 기회구조를 확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노동 시장, 지역 등과 관련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수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구조적인 격차(불평등)를 축소하는 것이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사회이동성 관련 인식

사회이동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체제방어(system defence),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meritocratic beliefs), 집단기반 지배(group-based dominance), 평등주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등으로 구성되는 문항들과 상위계층 부모들의 기회독식(opportunity hoarding) 행위와 그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는 문항들로 구성했다.

후자는 미국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상위계층 부모의 기회독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Silvermann et al.(2024)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모들의 이 같은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상위계층의 기회독식 행위는 이들의 하향 이동 가능성을 낮추는(glass floor, 유리바닥) 동시에 하위계층의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glass ceiling, 유리천장)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이동성 인식과 관련해 함의를 지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하였다.

5. 사회이동: 개인사

다음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와 15세 무렵(아동기) 시절의 경제적 계층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본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동성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해 0부터 10까지 보기항목을 두고, 숫자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상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0,1은 하층, 2,3은 중하층, 4,5,6은 중간층, 7,8은 중상층, 9,10은 상층으로 보았으며, 아래 분석에서는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의 5개 범주를 활용하였다.

〈표 3-32〉 경제적 생활상태의 보기 문항의 5개 범주 계층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의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저자가 5개 범주로 구분

먼저 세부적인 분석에 앞서 현재의 경제적 생활상태에 기반한 소득계층 인식을 살펴보면, 현재 본인이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10명 중 7명은 중간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18.3%는 중간보다 조금 낮은 중하층, 8.2%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중상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소득계층 인식에 대한 특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대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하층 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교 이하 집단의 경우 중하층 이하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7.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인식하는 소득계층에 차이를 보였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중하층 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4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3-33〉 현재의 경제적 생활상태에 기반한 소득계층 인식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평균	F
〈전 체〉		1.6	18.3	71.8	8.2	0.1		2.87	
성별	남성	1.4	18.0	72.2	8.4	0.1	1.20	2.88	0.73
	여성	1.8	18.6	71.4	8.1	0.1		2.86	
연령대	20~34세	0.8	18.5	71.0	9.7	0.0	55.50***	2.90	8.40***
	35~49세	0.9	17.6	74.4	6.9	0.2		2.88	
	50~64세	1.3	16.5	73.6	8.6	0.0		2.90	
	65세 이상	4.7	23.0	64.9	7.5	0.0		2.7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2	30.6	55.0	7.2	0.0	132.20***	2.62	43.03***
	고등학교 졸업	2.6	22.1	67.3	8.0	0.0		2.81	
	대학교 이상	0.2	14.3	76.8	8.5	0.1		2.94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6.4	38.5	44.9	10.3	0.0	119.51***	2.59	39.03***
	보통	3.6	22.3	68.9	5.2	0.0		2.76	
	좋음	0.8	15.9	74.4	8.8	0.1		2.92	
이념적 성격	진보	0.7	17.9	73.1	8.3	0.1	27.06**	2.89	3.81*
	중도	1.4	16.1	75.1	7.3	0.1		2.89	
	보수	2.6	20.9	67.3	9.2	0.0		2.83	
주관적 계층	하층	2.8	26.6	62.6	7.8	0.2	53.97***	2.76	18.8***
	중층	1.6	17.9	73.5	7.0	0.0		2.86	
	상층	0.9	14.0	73.5	11.4	0.1		2.96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러한 현재의 소득계층 인식이 아동기 무렵의 소득계층 인식에서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 경제적 생활상태를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인식과 15세 무렵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를 동일한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즉, 두 문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인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 구조와 계층 간 이동성 실태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와 15세 무렵(아동기) 시절의 경제적 계층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실제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계층이 아닌 인식 기반의 응답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간층에서의 고착 현상이 매우 두드러진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80%가 아동기(15세 시기)와 현재 모두 중간계층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간층 출신 대부분이 성인이 된 후에도 동일 계층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즉,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중간층 내부에 닫혀 있으며, 상층으로 오르거나 하층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계층 이동성은 낮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둘째, 상층으로의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07%에 불과하다. 물론, 이들은 15세 무렵 중하층, 중간층에서 상향 이동한 비율이다. 15세 무렵 경제적 계층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0.07%로 이들은 현재 중간층, 중상층으로 하향 이동했다. 또한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성이 드러난다. 15세 무렵의 경제 상태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약 19% 정도는 현재도 하층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또 절반 이상(56.6%)은 하층 바로 위의 계층인 중하층으로 이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간층까지 상향 이동하였다고 인식한 비율 또한 약 24%로 나타났다. 반면, 중상층 혹은 상층으로 이동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였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계층에서 상층을 유지하거나 상층으로의 진입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해당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층을 오르거나 내리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인이 태어난 계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특히 상층은 매우 좁고 닫혀 있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하층 역시 상향 이동의 기회마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층 간 불평등이 지속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다.

〈표 3-34〉 현재와 아동기(15세 무렵) 경제생활상태 비교

(단위: %)

구분		현재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전체
15세 무렵	하층	0.77	2.30	0.97	0.03	0.00	4.07
	중하층	0.37	11.27	19.13	0.90	0.03	31.70
	중간층	0.47	4.47	48.80	3.03	0.03	56.80
	중상층	0.00	0.23	2.90	4.23	0.00	7.37
	상층	0.00	0.00	0.03	0.03	0.00	0.07
	전체	1.60	18.27	71.83	8.23	0.07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적 계층이 15세 무렵 아동기의 경제적 계층에 비해 낮아지거나 높아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먼저, 현재 경제적 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낮아진 주된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41.6%가 15세 무렵의 경제적 계층 대비 낮아진 가장 큰 원인으로 ‘개인 역량 부족’을 꼽았다. 즉, 경제적 계층의 하향 이동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조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두 번째로 경제적 계층의 하향 이동 원인으로 부모·조부모세대 대비 ‘일자리 수준의 하락’이 22.0%의 응답을 차지한다. 즉, ‘세대 간 일자리 수준의 변화’가 경제적 계층 하락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로, 경제적 계층이 하향 이동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13.3%는 제조업 쇠퇴, 비정규직 증가 등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좋은 일자리 기회 자체의 축소를 꼽았다. 경제 및 산업 환경 변화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혹은 변화가 경제적 계층 이동에 있어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외에도 친인척, 지인, 민간기관 등 사회적 지원 부재(7.1%), 계층 상승에 대한 기회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5.9%), 경제적 어려움, 불화, 관계 단절 등과 같은 아동기 가정환경의 영향 지속(5.1%),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미흡(2.8%)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도 일부 응답에서 확인된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특징적인 점은 경제적 계층 하향 이동의 원인으로 **‘개인 역량 부족’ 응답 비율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50.0%, 50.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20, 30대의 경우 부모세대 대비 일자리 수준 하락에 대한 체감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즉, 현재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환경이 경제적 계층 이동에서 주요한 요인이자 직접적인 영향임을 알 수 있다. 40대의 경우 개인의 역량 부족이 33.9%, 다음으로 일자리 수준의 하락,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각각 17%의 비율로 경제적 계층 하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50대 또한 개인 역량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부모세대 대비 일자리 수준의 하락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과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응답 비율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경제적 계층 하락의 원인으로 개인의 역량(50.8%) 다음으로 경제·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19.4%)을 꼽았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 계층 하향 이동의 요인으로 **경제·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 주요하게 체감한** 연령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 지원 부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응답한 점이다.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경제적 계층 하락의 주된 원인 혹은 책임을 **개인의 역량 부족과 일자리 질·양의 저하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적 요인은 보조적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개인적인 요인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음과 동시에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체감도는 연령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35〉 현재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낮아진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교육, 기술 등 “나”의 개인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41.6	50.0	33.9	37.3	39.1	50.8
② 직업이나 일자리 수준이 “나”의 부모·조부모보다 낮기 때문에	22.0	33.3	37.3	17.0	19.6	10.5
③ 아동기 가정환경(경제적 어려움, 불화, 관계 단절 등)의 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5.1	0.0	3.4	5.1	6.5	7.5
④ 소득, 주거, 가정 등이 불안정 시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8	0.0	1.7	3.4	4.4	3.0
⑤ 소득, 주거, 가정 등이 불안정 시 주변(친인척, 지인,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서	7.1	4.2	1.7	8.5	13.0	7.5
⑥ 경제·산업 구조 변화(예: 제조업 쇠퇴, 비정규직 증가 등)로 인해 좋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줄어서	13.3	8.3	10.2	17.0	6.5	19.4
⑦ 계층 상승의 기회가 특정 집단(계급, 지역, 젠더 등)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회 구조 때문	5.9	4.2	10.2	10.2	4.4	0.0
⑧ 잘 모르겠음	1.6	0.0	1.7	1.7	2.2	1.5
⑨ 기타	0.8	0.0	0.0	0.0	4.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다음은 반대로 경제적 계층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높아진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나의 교육, 직업 등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가 높았기 때문’(59.4%)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계층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자신의 교육과 직업 성취 등 개인 역량과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적 성공의 책임과 성취를 주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사회 전반에 교육 기회나 일자리 등 계층 상승 경로가 확대되었기 때문’(21.1%)이 꼽힌다. 즉, 교육 기회의 확대, 일자리 변화 등 구조적 여건의 개선이 계층 상승의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아동기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유학, 인적자본 축적 등)이 도움’(9.3%)이 꼽히며, 가족 지원 역시 경제적 계층 상향 이동에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 국가 정책, 사회적 관계망, 정부·공공기관의 직접적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50.9%)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적 노력 및 성취’ 응답 비율이 60%를 상회한다. 특히 30대(65.8%), 40대(60.8%), 50대(60.3%)에서 개인적 요인을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한다. 20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25.5%)과 ‘사회 전반의 계층 상승 경로(교육 기회, 일자리 등) 확대’(14.6%)에 대한 응답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이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구조적 영향도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60대 이상에서는 ‘사회 전반의 계층 상승 경로(교육 기회, 일자리 등) 확대’(23.1%) 비율이 가장 높아, 경제적 지원·사회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경제적 계층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개인의 교육, 직업, 노력 등 자기 역량의 결과로 인식한다. 다만 사회 전반의 계층 상승에 대한 경로 등 기회 확대, 부모의 지원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도 일정 부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모든 연령대에서 자기 책임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청년층일수록 가족·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가 성공의 원인을 주로 개인의 노력 및 성취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며, 소수이긴 하지만 구조적 기회 확대나 가정 배경 역시 계층 상승에 일정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36〉 현재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높아진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나의 교육, 직업 등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가 높았기 때문에	59.4	50.9	65.8	60.8	60.3	58.1
② 아동기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유학, 인적자본 축적 지원 등)이 도움이 되어서	9.3	25.5	8.2	5.4	7.8	9.6
③ 아동기 부모의 사회적 관계(조부모, 부모친구, 부모의 직업 등)의 지원을 받아서	2.0	1.8	1.4	5.4	1.7	1.0
④ 나의 친구, 지인, 선후배 등 사회적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7	0.0	2.7	2.3	2.2	3.6
⑤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3	1.8	2.7	4.6	1.7	1.7
⑥ 사회 전반에 교육 기회나 일자리 등 계층 상승 경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21.1	14.6	13.7	20.8	22.4	23.1
⑦ 정부의 정책(교육, 복지, 고용 등)이 계층 상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	1.9	1.8	2.7	0.0	2.6	2.0
⑧ 잘 모르겠음	1.3	3.6	2.7	0.8	0.9	1.0
⑨ 기타	0.1	0.0	0.0	0.0	0.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현재 경제적 계층이 15세 무렵 아동기에 비해 상승하거나 하강한 사유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 변동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계층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 모두에서 개인 역량에 대한 책임 인식이 매우 강하다.** 계층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주로 자기 교육, 직업, 성취, 노력 등 본인의 역량과 성과를 주된 이유로 꼽는다. 마찬가지로 계층이 하강했다고 응답한 이들 역시 ‘교육, 기술 등 나의 개인 역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답하였다. 즉, ‘성공도 실패도 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둘째, **사회 구조적·환경적 요인 또한 사회계층 이동의 영향 요인으로 일정 부분 인식한다.** 경제적 계층 상향 이동의 경우, 교육 기회, 일자리 등과 같은 ‘사회 전반의 계층 이동 경로 확대’나 사교육, 유학, 인적자본 축적 지원 등과 같은 ‘아동기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요인과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반대로 계층 하향 이동의 경우에는 ‘부모세대 대비 일자리 수준의 하락’이나 ‘경제·산업 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적 이유 또한 계층이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청년층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40~60대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등 연령대별로 사회구조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공적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영향 인식은 계층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 양쪽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계층의 변동에서 개인적 노력이나 가족의 경제적 배경, 사회구조의 영향력은 인식하지만, 정부의 지원, 사회안전망과 같은 국가 정책의 역할에 대한 체감 및 기대는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제적 사회계층 이동과 관련한 인식의 핵심은 개인적 요인(역량과 노력)과 구조적 요인(교육 기회, 일자리 확대, 산업 구조 변화)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서 개인적 요인이 특히 강조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 인식의 뚜렷한 특징이며, 연령층에 따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체감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은 다른 측면에서 어린 시절 경험한 사건이 경제적 계층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헤어짐을 경험한 경우,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보다는 하향 이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포착된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경제적

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현재 상향 이동한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님과 이별 경험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일부 연령대의 경우 이별 경험이 있는 경우 상향 이동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모습도 포착된다. 또한 20대의 경우 현재 경제적 계층이 자리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 이별 경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린 시절 부모님과 이별 경험이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을 제한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하향 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표 3-37〉 어린 시절 부모님과 헤어진 경험(사망, 이혼 등)

(단위: %)

구분		하향 이동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부	예	11.0	0.0	6.8	15.3	8.7	16.4
	아니오	89.0	100.0	93.2	84.8	91.3	83.6
모	예	6.3	0.0	6.8	8.5	6.5	6.0
	아니오	93.7	100.0	93.2	91.5	93.5	94.0
구분		변동 없음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부	예	5.0	3.7	4.8	4.5	3.6	8.1
	아니오	95.0	96.3	95.2	95.5	96.4	91.9
모	예	2.4	3.2	2.9	0.3	1.8	3.6
	아니오	97.6	96.8	97.1	99.8	98.2	96.4
구분		상향 이동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부	예	8.7	0.0	13.7	8.5	9.5	8.6
	아니오	91.3	100.0	86.3	91.5	90.5	91.4
모	예	3.2	3.6	2.7	3.1	3.5	3.0
	아니오	96.9	96.4	97.3	96.9	96.6	97.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다음은 어린 시절 부모님 중 주 소득자의 실직 경험 여부에 따라 경제적 계층 이동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다.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에서보다 하향 이동에서 주 소득자의 실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은 40, 50대 중년층에서 부모님의 실직 경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위의 부모님과 이별 경험에 따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부 연령층, 특히 30대에서는 부모님과 이별 경험, 부모님의 실직 경험은 오히려 상향 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이동의 동기 부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포착된다.

〈표 3-38〉 어린 시절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중 주 소득자)께서 실직한 경험

(단위: %)

구분	하향 이동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험 있음	17.4	8.7	12.5	31.0	20.5	10.0
경험 없음	82.6	91.3	87.5	69.0	79.5	90.0
구분	변동 없음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험 있음	13.8	11.9	17.7	18.4	8.8	12.2
경험 없음	86.2	88.1	82.3	81.6	91.2	87.8
구분	상향 이동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험 있음	15.8	15.1	28.6	19.2	13.8	12.5
경험 없음	84.2	84.9	71.4	80.8	86.2	87.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어린 시절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이 경제적 계층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인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님과 이별 경험, 주 소득자의 실직 경험 등 부정적인 경험이 경제적 위험으로 작용하여 성인이 된 이후 경제적 계층이 하향 이동할 가능성을 높이기

도 하지만, 반면, 상향 이동의 동기부여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조사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계층의 상하이동 원인으로 개인적인 요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일까. 이번 조사를 통해 약 23.1%의 국민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에서 상속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사회적 인식상 상속을 흔히 청년층의 출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보아 상속 자산은 부모가 고령화되면서 중장년층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상속 및 증여받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에도 하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은 24.6%로, 상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 19.7%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9〉 부모, 조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χ^2
〈전 체〉		23.1	76.9	
성별	남성	25.3	74.7	8.12**
	여성	20.9	79.1	
연령대	20~34세	8.9	91.1	124.43***
	35~49세	23.3	76.7	
	50~64세	28.7	71.3	
	65세 이상	32.8	6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6	64.4	43.0***
	고등학교 졸업	26.9	73.2	
	대학교 이상	19.2	80.9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32.7	67.3	28.90***
	보통	29.8	70.2	
	좋음	20.8	79.2	
이념적 성격	진보	21.0	79.0	18.27***
	중도	20.5	79.5	
	보수	27.7	72.3	
주관적 계층	하층	24.6	75.4	6.75*
	중층	24.2	75.8	
	상층	19.7	80.3	

주: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떠한 형태로든 상속과 증여가 수증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도움의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도움 정도의 인식을 비교해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상속 및 증여받은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40〉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제적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도움 안 된다	보통	도움 된다	χ^2
〈전 체〉		0.9	8.4	90.8	
성별	남성	1.0	8.1	90.9	0.40
	여성	0.7	8.7	90.6	
연령대	20~34세	1.6	3.1	95.3	22.66**
	35~49세	0.0	3.1	96.9	
	50~64세	1.1	9.2	89.8	
	65세 이상	1.3	15.6	83.1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1.3	20.3	78.5	22.81***
	고등학교 졸업	0.7	9.8	89.5	
	대학교 이상	0.9	4.3	94.8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0.0	21.6	78.4	23.41***
	보통	1.2	13.3	85.5	
	좋음	0.8	5.3	93.9	
이념적 성격	진보	0.5	4.3	95.2	22.77***
	중도	0.5	4.5	95.1	
	보수	1.4	14.1	84.5	
주관적 계층	하층	0.0	9.7	90.4	4.66
	중층	0.7	7.5	91.8	
	상층	2.0	10.0	88.0	

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6. 사회관계 및 정서적 요인

사회적 관계도 개인의 네트워크(Putnam, 1995), 사회자본(Bourdieu, 1985) 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세대 간 혹은 세대 내 사회적 이동성을 규정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방식, 네트워크를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평일 하루 동안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친인척의 수를 물었을 때, 절반 이상(56.9%)의 사람들이 1~2명과 접촉한다고 답했다. 설문문항에서는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동거 여부와 같은 단서를 달지 않았다. 따라서, 1인 가구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1~2명이 가족과 접촉할 가능성은 있었다. 하루 3~4명의 가족·친인척과 접촉한다는 비율이 37.0%였고, 접촉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표 3-41〉 평일 하루 동안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친인척 혹은 친구·지인의 수 비율

(단위: 명, %)

	사례수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가족·친인척	(3,000)	1.7	56.9	37.0	4.3	0.1
친구·지인	(3,000)	3.3	37.5	38.8	18.2	2.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접촉 대상을 친구·지인으로 바꾸어서 물었다. 친구·지인의 경우, 하루에 3~4명을 만난다는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2명(37.5%), 5~9명(18.2%), 없다(3.3%) 순이었다.

다음으로 가족·친인척 및 친구·지인과 접촉하는 방식을 나누어 물었다. 가족·친인척의 경우, 대면이라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50.7%). 다음이 전화 및 영상통화(29.5%)였다. 친구·지인의 경우에는 접촉 방식이 달랐다. 문자나 메신저가 가장 일반적인 접촉 형태(50.7%)였고, 다음이 전화 및 영상통화(26.6%)였다. 대면 방식의 소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19.6%였다.

이러한 일상적인 접촉이 쌓이면서 개인은 주변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나아가 풍성한 네트워크는 다수의 접촉을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른바 인맥,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이름으로 개

인을 둘러싼 복잡한 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문항이 있다. 개인이 세 가지 유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 ①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②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③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묻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의 유형을 나누어 물어보는 문항이다.

〈표 3-42〉 가족·친인척 및 친구·지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주된 방식

(단위: 명, %)

	사례수	대면	전화, 영상통화	문자,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가족·친인척	(2,948)	50.7	29.5	19.6	0.1
친구·지인	(2,902)	19.6	26.6	50.7	3.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먼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를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의 수는 평균 2.2명이었다.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24세에서 평균 2.1명이었고, 중년기인 30~44세 시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완만하게 수가 줄어 70~74세 시기에 1.9명이었다. 경제활동 참여형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3명으로,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1.7명과 차이가 났다.

개인적 네트워크의 편차는 지역에서 도드라졌다. 수도권 거주자가 2.1명이라고 응답한 반면, 충청권에서는 2.8명으로 평균이 높았다. 특히 충청북도(3.2명), 세종(3.0명)과 대전(2.7명)에서 네트워크가 강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비율도 주목해서 보았다. 전체 평균은 3.6%로 상대적으로 소수가 주변 네트워크의 부재를 설명했다. 이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1인 가구(11.7%), 70~74세(8.5%), 중졸(9.7%)과 대학원 이상(9.2%), 혼인상태가 이혼 및

별거(16.9%), 일용직 임금근로자(10.9%), 인천(12.7%),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10.9%) 등이었다.

또 다른 유형의 어려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은 목돈이 필요할 때보다는 평균이 2.5로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아 20대에서 60대까지 2.4~2.6명 정도를 오갔다. 학력별로도 일정한 경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졸 집단이 2.6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대학원 이상 고학력 집단에서 2.2명으로 중학교 학력(2.2명)과 함께 네트워크가 좁았다. 상용직(2.6명)과 일용직(1.9명)의 차이는 ‘목돈이 필요할 때’와 유사했다.

어려움의 마지막 유형인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수가 3.0명으로, 세 가지 어려움 유형 가운데서 평균이 가장 높았다.

개인의 네트워크는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지위(Socioeconomic status), 즉 고용상 지위나 학력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사회이동성의 측면에서 개인이 ① 지금과 ② 과거 본인이 15세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계층에 따른 네트워크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11개 계층을 제시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위 및 상위 10%에 속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1명과 0명이었다.

반면, 가장 중앙에 속한다는 응답자는 1,043명(34.77%)이었다. 응답자의 분포를 고려해서 하위 ①~③집단(6%, 하층), ④~⑤집단(37.80%, 중하층), ⑥집단(34.77%, 중층), ⑦~⑧집단(20.30%, 중상층), ⑨~⑪집단(1.14%, 상층)로 나누었다. 과거 본인이 속한 집단도 이런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의 수를 살펴보았다.

〈표 3-43〉 응답자의 15세 당시 및 현재 기준 주관적 계층 집단별 ‘큰돈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의 수’

(단위: 명, %)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응답자 15세 기준	1.89	2.10	2.22	2.57	2.17
	(15.73)	(39.03)	(27.40)	(16.47)	(1.37)
현재 기준	1.49	2.09	2.21	2.48	2.32
	(6.00)	(37.80)	(34.77)	(20.30)	(1.1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먼저, 응답자가 15세 당시 과거의 주관적 계층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하층에서 중상층으로 이동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89명에서 2.57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상층에서는 평균이 2.17로 감소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기준’ 계층별 양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층에서 1.49명이었던 평균은 중상층에서 2.48명까지 상승했다가, 상층에서 2.32명으로 줄었다.

상층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보면,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스스로 상층에 속한 집단의 수가 매우 적었던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이 상층에 속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4명(1.14%)으로 소수였다. 둘째, 최상층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다른 양상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대졸 학력까지는 고학력이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경향이 보이지만, 대학원 이상으로 가면 네트워크는 다시 좁아졌다. 참고로, 응답자 15세 당시와 현재 기준의 계층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11점 척도를 기준으로 본 두 변수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56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0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및 자산불평등 인식 추이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평등 심화와 완화에 대한 상반된 기대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은 소득에 비해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소득보다 자산이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과 향후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정책에서 소득보다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 격차 완화(노동시장 구조개선)와 함께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상속제도 개혁,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현실적인 소득분배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는 실제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보다 균등한 분포를 가진 스웨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상적인 분배 상태로는 우리나라의 상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보다 균등한 상태로 인식하는 한편, 실제 우리나라와 같이 조금 더 불평등한 상태를 이상적인 분배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연령대와 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청년층은 스웨덴형 분배 상태를 보다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은 이보다 조금 더 불균등한 상태를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층은 불평등에 대한 체감 수준이 높은 반면, 상층은 현실과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분배 상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평등은 비현실적이고, 현 상태의 적절한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온건한 분배 정의관이 확인됨에 따라 적극적인 불

평등 완화보다 중산층을 유지하고,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보장하고, 성과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령대별, 사회계층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정성 인식은 보통(47.9%), 공정하지 않다(25.9%), 공정하다(24.2%)로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교육기회와 복지혜택은 비교적 공정하지만 일자리 기회, 경제적 기회상승, 대기업-중소기업 거래에 있어서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추상화하면, 출발선의 기회는 비교적 공정하나 결과에 이르는 경로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인식은 소득격차 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빈곤층 지원과 같은 직접적 복지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인 지지를 보인다. 이는 교육과 취업기회 확대와 같은 기회제공형을 공정의 기준으로 두는 반면, 현금지원과 같은 결과보정형에는 능력주의적 신념이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이동성의 평균 점수는 5.3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세대 내 상향 이동성(6.08점)은 이보다 더 높게 인식되고, 세대 간 이동성의 부모 영향(7.01점)이 크다고 응답함으로써 세대 간 이동성은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계층별로는 상층일수록 이동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하층은 활발하지 않다는 응답이 보다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이념별로는 보수는 낙관적으로, 진보는 비관적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배경(출신)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공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주요 이유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격차, 인맥 영향, 성장둔화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이동성 부족의 원인으로 개인의 노력

부족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한다 할 수 있다.

소득분위 이동성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최상층은 절반 이상(53.9%)이 태어난 소득계층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간층은 절반 정도가 유지(48.8%)하고, 상향(28.2%)이 하향(23.1%)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층은 37.7%가 유지하고, 62.3%가 상향 이동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은 불안하거나 균형적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하층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상층의 견고함과 하층의 희망이 공존하며, 중간층은 비교적 불안정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하층의 상향 기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고용-자산형성의 경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층의 이동성 둔화 또는 불안정은 청년층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간층 청년들의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기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이나 자산격차와 같은 경제구조적 요인을 사회이동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기술, 환경,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책으로는 공정채용, 사교육비 부담 완화, 주택가격 격차 완화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는 공정한 기회 보장과 구조적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교육, 주거, 노동시장, 조세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이동성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기회평등, 자기책임 인식, 능력주의(엘리트주의), 평등주의, 성과 공정성, 공공정책 공정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결과는 노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능력주의적 공정성 인식이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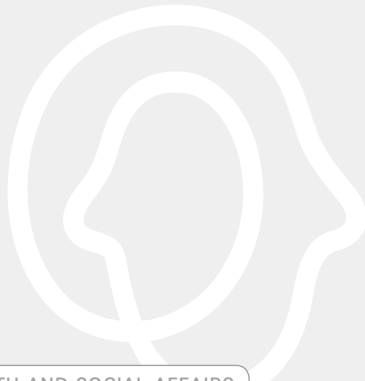
한편, 실제 성과에 대한 보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관련되는 기회독식 행위(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의향)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제적 투자를 통한 기회확보(사교육, 컨설팅)에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제도적 부정행위(허위, 대리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는 합법적인 경쟁은 허용하지만 부정한 특권은 거부하는 성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상층일수록 경제적 투자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해 계층별 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재분배적 교육정책에 대해 일반 복지보다 더 큰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기회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부유층의 더 큰 부담(누진적 조세구조), 저소득층 기회보장(적극적 우대정책), 지역 간 교육투자 균등화의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사 영역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모세대보다 상향 이동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청년층은 유지 혹은 하향 이동했다는 응답이 많아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응답자의 현재 계층도 높게 나타나고,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경험은 낮은 계층인식과 강한 상향 이동 욕구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약 35~40% 정도가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이 있는데, 상층일수록 그 금액이 현저히 높아 자산 이전이 계층 재생산의 핵심적 통로로 작동한다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상층일수록 잘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이동에 필요한 사회적 자

본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 배경, 자산이전,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이동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회균등, 자산불평등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적 함의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사회이동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 국민인식조사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영역과 대상을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이동성에 대한 개념과 사회이동 현상 파악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 사회이동성은 개인, 가구 혹은 집단의 지위나 계층이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적 인식 속에서 사회이동은 주로 상향, 즉 계층이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이동은 하향, 즉 계층이나 지위가 낮아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이동에 있어 주요한 논점은 세대 내와 세대 간 이동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도 각 연구주제별로 세대 내와 세대 간 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사회이동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부모세대 혹은 조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이전인 세대 간 이전이 주요한 사회이동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산, 교육, 사회적 관계, 장애 등 이번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서 세대 간 이동이 사회이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장애인, 젠더 측면에서는 세대 내 요인이 역시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배론적 관점에서 빈곤, 불평등, 양극화와 더불어 사회이동성은 주요한 측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전체에서 보면 빈곤은 빈곤선(poverty line) 미만 혹은 이하의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자원이 균등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최근에는 양극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자원이 분배됨에 있어 양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양 극단으로 치우친 자원으로 인해 상호 간 심화되는 격차 역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 양극화 및 격차 현상은 일견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사회이동이 활발하고,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불평등, 양극화 등에 대한 불안과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연구결과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이동이 개인이나 가구 혹은 집단의 노력에 의하기보다는 부모, 조부모 등의 기존의 지위나 계층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만큼, 계층 이동이 저하될 경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이동성이 감소되면서 세대 간 영향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불평등과 양극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존의 사회이동성 연구가 주로 소득과 교육 등을 통한 사회이동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진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여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진단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사회이동성 역시 하나의 요소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부동·재생산 메커니즘과 이

행·계급·횡단 메커니즘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각 영역 혹은 분야는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교차적으로 작용하며 사회이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먼저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더해 새롭게 국가데이터처가 발생한 소득이동통계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5분위 기준 분석에서 계층을 중위소득 방식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소득이동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젠더를 기반으로 사회이동성을 분석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출생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남녀 간에 분명한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임금으로 높아질수록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여성이 가지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임금패널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 측면에서도 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일수록 빈곤진입률이 높아지고 탈출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고령일수록 빈곤진입률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성일수록 젠더 간 사회이동성 격차로 인해 더 쉽게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빈곤과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노후빈곤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소득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에 있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교육부문이다.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이번 연구에서도 교육이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분석에서와 같이 부모세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세대의 교육수준이 달

라지고 있었으며, 서로 간에 일부 상관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을 통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출과 이를 통한 소득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차기 연구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소득을 넘어 자녀의 노동시장 진출과 소득 및 자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간 조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득이동통계를 통해 전통적인 소득을 통한 사회이동 현상을 분석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자산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실제 소득분배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중간계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소득수준도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괴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산 이동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으로 인한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가 더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고착화되고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수준도 높았으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모의 자산이 높으면 자녀의 자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차이가 국민으로 하여금 소득보다는 자산의 양극화 현상, 세대 간 이전에 따른 대물림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었다.

새롭게 주목할 점은 소득 및 자산의 대물림 현상과 더불어 부모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즉 네트워크 역시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부모의 사회자본과 네트워크가 클수록 자녀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고자 할 때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이동성 진단을 위해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영역별로 분석하였지만, 한국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분석도 시행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노인과 같이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알려져 있으며,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된 경우 소득의 하향 이동이 두드러지며, 장애인의 자산 이동성이 상향보다는 하향 이동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다. 또한 부모의 장애 여부가 자녀의 사회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 부모를 둔 가정의 자녀세대의 상향 이동이 높았는데, 이는 장애 부모가 낮은 분위에 있어 자녀의 노력과 그 결과에 따라 상향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이번 연구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3차 년도 연구 중 1차 년도 연구이다. 올해 연구는 제1절 주요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사회이동에 대한 진단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얻은 함의는 두 가지로 첫째, 각 분야별 분석결과와 한국의 사회이동성이 세대 내는 물론 세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영역이 아닌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과정에서 세대 내 및 세대 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무엇보다 세대 간 이전이 사회이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출발점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연령, 성별, 지역 등) 부모나 조부모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이들의 영향이 자녀세대의 향후 자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한국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적 실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이동성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통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점은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와 다르게 사회이동 역시 하나의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통해 사회이동이 활발해지거나 고착화되게 된다. 교육, 사회적 자본, 노동시장, 소득 및 재산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존재하며, 이는 하나의 개별 부처가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정책 관련 부처 등이 다루고 있는 사회이동과 분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조정실에 조정 및 평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이동과 분배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말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개선과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었으며, 관련 소속도 국무총리실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은 사회이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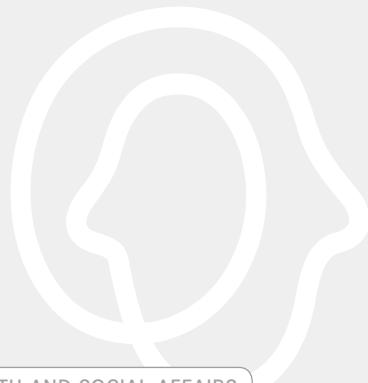
소득분배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조정 및 평가 기능에 더해 통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필요가 있다. 사회이동에 대한 통계 발전 측면에서 현재 소득이동통계는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향후 사회이동과 소득분배 통계 간 연계 차원에서 소득조사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자산 및 지역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이동과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 속에서 분명한 정책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사회이동 및 소득분배 통계 간 연계와 발전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나 조부모 등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인한 불평등을 국가가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세대의 자원 역시 부모세대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층이나 지위에 따른 부모나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발 시점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진에서는 “(가칭)사회적 자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 개념은 여러 연구에서 제안한 바가 있는 기본자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태어나서(0세) 일정 연령(25세, 청년)까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부여하고(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 이를 교육,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자칫 자산투입 이후 일시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세부터 15세(중학교)까지 1/3을 16세부터 20세(고등학교 및 대학초기)까지 1/3을 21~24세까지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재원에 대해서는 25세 이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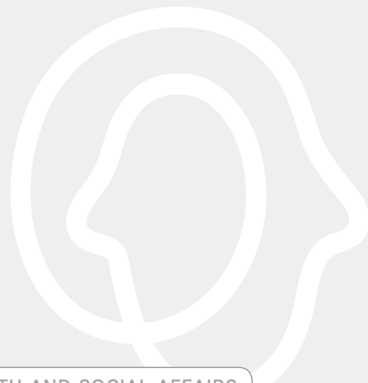
제2부

한국 사회 분야 사회이동성 진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자산 이동성 진단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이론적 논의
- 제3절 분석결과
- 제4절 시사점

제5장 자산 이동성 진단

제1절 문제제기

영국의 사회이동성위원회(Social Mobility Commission, SMC)⁸⁾는 사회이동성을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과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간 연결고리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이동성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불평등과 사회이동성은 모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두 현상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하지 않고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이동성을 개선하지 않고도 ‘상위’와 ‘하위’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불평등을 줄이지 않고도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다. 즉, ‘하위’에서 ‘상위’로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지만, 두 계층 사이의 격차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불평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지만, 사회이동성 역시 한 개인이 장애물을 직면하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잘 벗어날 수 있는지 개인의 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MC, 2022, pp.4-5). 또한, 사회이동성은 일정 특정 계층(소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 모든 사람의 기회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SMC, 2022, p.14). 인생의 시작점에 주어진 물적, 인

8) 2010년 the Life Chances Act 2010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인 법정 기관(의회 법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2016년 복지 개혁 및 노동법(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에 따라 이 위원회는 이전에 사회 이동성 및 아동 빈곤 위원회(Social Mobility and Child Poverty Commission)라고 불렸던 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Social Mobility Commission 홈페이지, n.d., <https://socialmobility.independent-commission.uk/>).

적 자본이 기회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MC, 2022, p.14). 즉, 개인이 성장한 장소나 가족 상황과 같은 배경에 의한 결과가 아닌 개인의 잠재력, 개인적 선택과 노력이 한 개인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점에서 사회이동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MC, 2022, p.14).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이동성을 대부분 직업과 교육, 소득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 왔다(Glass, 1954; Goldthorpe et al., 1987; Heath & Li, 2023). 직업은 소득, 고용조건 및 안정성, 실업 위험, 건강 및 웰빙을 포함하여 다양하고도 중요한 삶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직업을 결정하는 데 교육의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기존(혹은 부모)의 소득과 부(wealth)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과 미국 등에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 비중에서 사립학교 학생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하나의 예로 생각할 수 있겠다(Phoebe, 2023; Henderson et al., 2020; Clark, 2024, p.11. 재인용).

또한 소득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이동성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Corak, 2013). 이러한 관계에 대해 미국 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회의 전 의장인 앨런 크루거는 한 연설에서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을 언급한 바 있다(Alan, 2012).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가로축에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세로축은 세대 간 소득 탄력성(Intergenerational Earnings Elasticity, IEE), 즉 사회이동성을 두고 비교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사회이동성과 강하게 연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평등의 개념은 ‘기회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Iversen et al., 2021, p.15). 동 개념은 개인 간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 상황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 상황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측면이며(Roemer, 2004), Becker와

Tomes(1979)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개인적 상황은 부모의 배경이 된다. 이처럼 부모의 소득, 교육,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들이다. SES는 계층적 사회구조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소득, 교육, 직업의 차원이 SES의 전체성을 나타내기에 완벽하지 않은 점에 이들 차원과 함께 부(wealth)의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도 한다(Hällsten & Thaning, 2022). 자산은 활동적인 노동 없이도 소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Hällsten & Thaning, 2022, p.1534), 이를 Mill(1885[1848])은 “in one’s sleep(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을 창출한다는 표현으로 자산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교육, 직업, 소득은 모두 노동시장 경력의 한 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진입의 위치를 결정하고, 직업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순위를 측정하며, 소득은 경제적 수익을 요약한다(Hällsten & Thaning, 2022, p.1534). 그러나 부는 반드시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주로 많은 부 혹은 자산은 세대 간 이전(Adermon et al., 2018; Boserup et al., 2018)을 통해 발생하거나 투자 수익으로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산을 배제하게 되면 세대 간 불평등을 과소평가 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예컨대 소득, 직업,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비교하여 자산은 개인의 노력과 노동시장에서 더욱 분리되어 있어 세대를 거쳐 더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의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Hällsten & Thaning, 2022, p.1534).

소득이 일정 기간 동안 형성되는 흐름의 개념으로 유량(flow)에 속한다면 자산은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 즉 저장(stock)의 개념으로 보통은 이해할 수 있다. 자산은 개인이나 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셈이다. 소득에 비해 유동성이 낮거나 적을 수 있지

만 소유자에게는 물질적인 안정을 제공한다(Clark, 2024, p.11).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소득’에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은 소득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Berman과 Milanovic(2023)는 자본과 임금소득을 모두 풍부하게 누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일성을 나타내는 homo와 부와 재산을 나타내는 ploutos를 합쳐서 ‘호모플리티아(homoplouti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Berman & Milanovic, 2023). 더욱이 부유층의 자녀가 더 많이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모의 소득과 자산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면 사회적 경직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산(wealth)은 세대를 거쳐 지속되며, 특히 상위 계층에서 소득보다 더 강하게 지속되는 점에서 계층 이동에서 더욱 논의될 필요가 있다(Fagereng et al., 2021).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산 이동성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소득 및 자산 이동성의 개념과 측정 방법

사회이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상향 혹은 하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미래 삶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Huband-Thompson, 2024, p.10). 이동성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생애주기 내 지원 변화, 즉 한 개인이나 가구의 시간에 따른 소득(또는 자산)이 변화하는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과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위가 변화하는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으로 구분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동성의 측정에 따라 절대적 이동성과 상대적 이동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Huband-Thompson, 2024, p.11). 사회적 이동성은 두 계층 간의 세대 간 이동 경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Hertel, 2017, p.14), 이를 **절대적 이동성(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 이동성(relative mobility)**의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Erikson & Goldthorpe, 1992; Hertel, 2017, p.14). 첫 번째 관점은 이동 경로를 직접 관찰, 기술, 설명하는 절대 이동성의 관점이다. 보통의 사회이동성에 대해 논의되는 현상이 개인에 의해 직접 인식되고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동경험에 대해 언급되는 점에서 절대 이동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적 수준 비교, 혹은 같은 연령대에 부모의 소득보다 높다는 절대적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SMC, 2023, p.38). 두 번째 관점으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세대 간 이동 경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일부 계층이 경험하는 이동 경로를 다른 계층의 경험 경로와 비교하는 관계적 관점에서 상대 이동성을 설명하기도 한다(Hertel, 2017, p.14). 이는 한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사회 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층 간 이동성을 비교할 수 있다. 즉, 절대적 이동성은 부모와 다른 결과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고려하는 반면, 상대적 이동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사람들의 이동과 같은 다른 시작점을 고려한다(SMC, 2023, p.38). 이 두 관점은 서로 다른 평등 개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절대적 이동성은 세대 간 조건 불평등에 대해 논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상대적 이동성은 세대 간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Hertel, 2017, p.14).

이처럼 자산 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한 개인(가구)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즉 세대 내

의 이동성을 볼 것인지, 부모와 자녀, 즉 세대 간 이동성을 볼 것인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세대 내 이동성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한 개인 혹은 가구의 자산 분위 이동이 발생하는지, 절대 금액의 증가율 분석을 통해 절대적 이동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분위이동, 증가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패널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는 경우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 또는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로 대체하여 분석 가능하다(Iversen et al., 2021). 세대 간 분석은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소득 또는 자산 수준 변화를 분석하거나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소득 또는 자산 지위(분위)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측정 가능하다. 주요 지표로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GE)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지표는 부모-자녀 소득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회귀분석($\log(\text{자녀소득}) = \alpha + \beta \log(\text{부모소득}) + \varepsilon$)을 통해 계수(β)를 추정하여 세대 간 이동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Blanden et al., 2005). 이때 β 는 0(=완전한 이동성)에서 1(=완전한 비이동성)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산 탄력성은 0.28(Conley & Glauber, 2008), 0.32(Charles & Hurst, 2003), 0.4(Pfeffer & Killewald, 2015, 2018)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고영우 외, 2024, pp.17-18). 또한 백분위 변동성(transition matrix)을 통해 세대 간의 상대적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계층 변화율을 추적하기 위해, 소득 백분위 변동을 행렬로 두고 이동률을 분석하는 방식이다(Blanden et al., 2005).

이러한 지표들은 부모와 자녀의 연결된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분석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소득에 비해 이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 단기간 축적이 어려운 점에서 세대 간 이동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세대 내, 세대 간 자산 이동성에 대해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산 탄력성, 백분위 변동성 등의 지표는 하나의 값을 통해 이동성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의 관점보다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특히 자산 이동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특성별·시점별 분위이동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이동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2. 활용자료 및 분석개요

세대 내 및 세대 간 자산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이하 ‘복지패널’)’ 자료이다. 본 조사자료는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지역적으로는 제주도까지,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까지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하는 등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다(이태진 외, 2024, p.16). 최초 원표본 7,072가구로 시작한 복지패널은 패널노후화, 표본탈락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2년, 2022년 두 차례 표본추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이태진 외, 2024, p.23), 가장 최근 공개된 19차(소득기준 2023년) 자료 기준 조사대상 가구는 7,821가구이다(이태진 외, 2024, p.24).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경제활동상태 등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 일반사항과 함께 생활비,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상태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분석의 경우 개인의 특성과 함께 소득과 자산의 분위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혹은 가구별에 따른 변수가 필요하며, 세대 내 및 세대 간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패널 형태의 자료가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분석에서는 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의 특성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분위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론 소득과 자산 등의 분위는 가구 기준의 소득

과 자산을 활용하여 균등화한 후 분위를 특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위를 가구원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위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1~19차까지 모두 조사된 케이스만 남겨 균형패널을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서 주요하게 활용된 특성변수는 연령, 성별, 지역, 소득계층 변수로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두 가지 범주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정책 기준의 대상이 되는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이며, 다른 하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전자의 경우에서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경우 만 15~29세를,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34세를, 지자체별 조례법에서는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등 연령의 기준이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만 19~34세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만 35~49세를 중년, 만 50~64세를 장년,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후자에서 언급한 구분 기준인 ‘세대’ 개념은 역동적인 사회변화의 과정 속에서 생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Mannheim, 1927/1997; 함인희, 2013, p.50)으로 동일한 역사적 상황 혹은 시대를 함께 경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세대 구분에는 학자에 따라 다소간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세대는 생애주기별로 역사적 경험 차이로 인해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함인희, 2007, p.250; 여유진 외, 2015, p.33). 이 외에도 민주화세대는 386세대 혹은 X세대, 정보화세대는 디지털 세대 혹은 N세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함인희, 2013, p.53),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세 개 세대의 코호트 외에 소위 “세대의 획을 긋는 사건”(generational event) 등을 공유하는 세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예컨대 IMF라는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경험한 IMF세대와 이후 스마트폰,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등 스마트 기술에 노출되어 있는 스마트세대를 추가하여 세대에 따른 자산 이동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세대(1945~1960년생), 민주화세대(1961~1970년생), X세대(1971~1980년생), IMF세대(1981~1990년생), 스마트세대(1991~2000년생) 5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5-1〉 분석 대상 세대구분 및 연령구분

세대구분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태어난 연도	45~60년생	61~70년생	71~80년생	81~90년생	91~00년생
1차 조사 시점연령	45~60세	35~44세	25~34세	15~24세	5~14세
연령구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태어난 연도	81~90년생	71~80년생	61~70년생	45~60년생	
1차 조사 시점연령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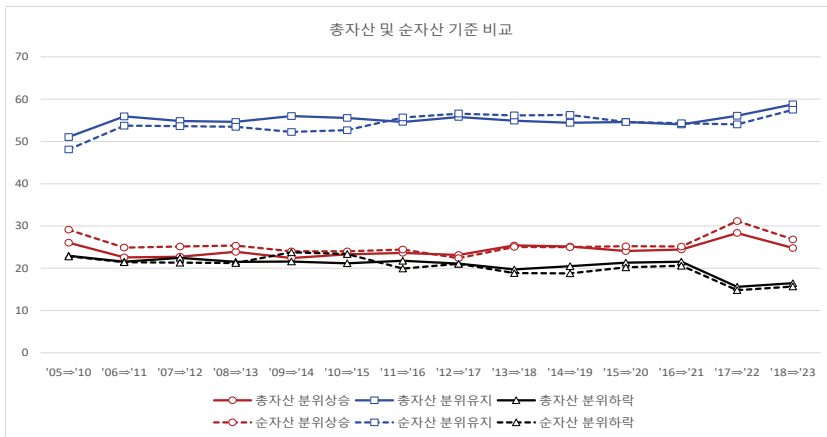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지역 변수는 서울과 광역시, 기타 시·군 3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득은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자산의 경우 총자산⁹⁾ 기준 5분위로 구분하였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조사되는 점에서 개인의 소득과 자산이 아닌 가구 기준의 소득과 자산을 균등화하여 분위를 구분하였다. 즉, 가구 기준의 소득과 자산 분위가 해당 가구에 동등하게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연령, 경제활동상태 등 특성에 따른 이동성 분석을 위해 개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산의 경우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과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활용 가능하며, 활용 지표 선정 전 두 자산을

9) 총자산 및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 비교 시 비슷한 경향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향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준으로 전체 대상 자산분위 이동 분포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경향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 특성에 따른 비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산 이동성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하나의 기준인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5-1] 총자산과 순자산의 분위 이동 분포 비교(5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특성에 따라 자산 이동성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이동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성의 주기는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5년 주기 분석을 통해 단기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10년 주기 기준 분석으로 장기적인 경향, 실질적인 계층 변화가 발생했는지, 즉 구조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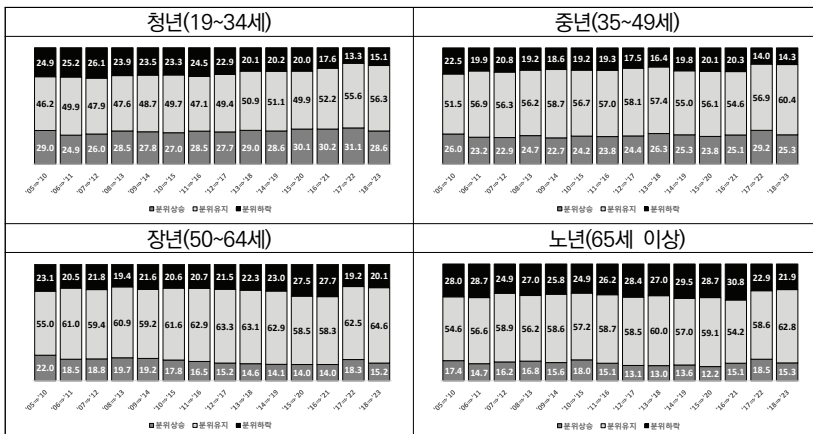
제3절 분석결과

1. 자산 이동성의 진단

가. 세대 내 자산 이동성

앞서 정리한 특성에 따라 세대 내 자산 분위 이동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9~34세)은 자산분위 이동성이 높아 하위에서 상위로 이동하는 비율(분위 상승)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 폭이 큰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년(35~49세)과 장년(50~64세)으로 갈수록 자산 분위의 유지 비율이 증가하고, 이동성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노년층(65세 이상)은 은퇴와 같은 이유로 소득과 자산이 감소해 자산 분위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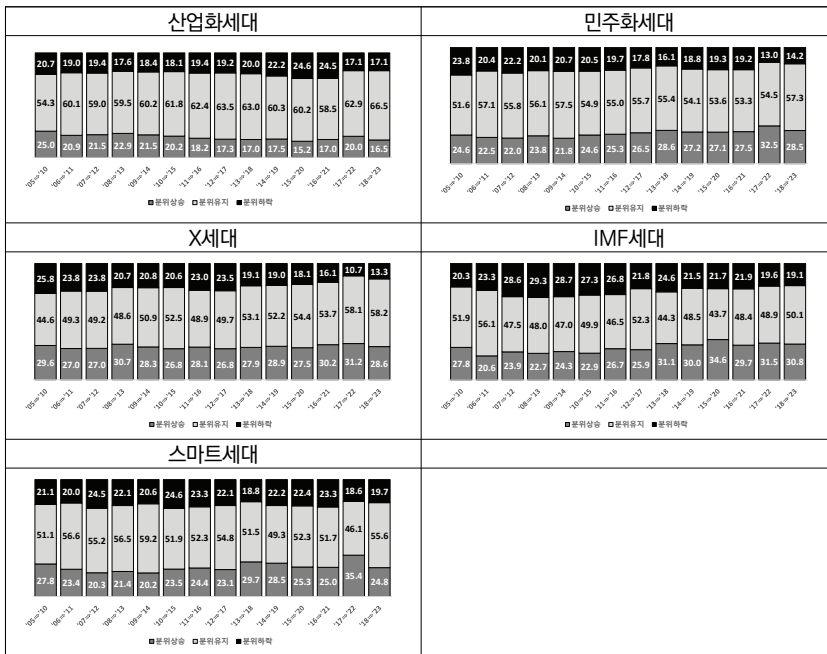
[그림 5-2] 연령대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세대별로 보면, 산업화세대에서 X세대까지는 자산 분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상향 이동이나 하향 이동 모두 제한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IMF세대와 스마트세대 등 최근 세대로 올수록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이동성이 다소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자산 분위 이동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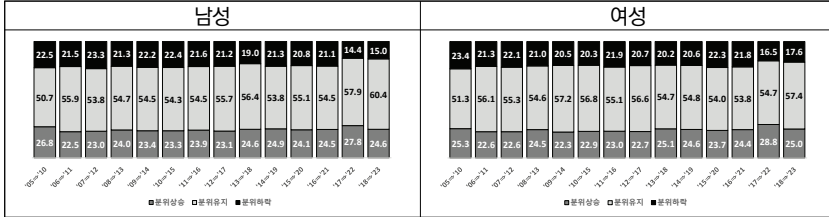
[그림 5-3] 세대구분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자산 분위의 유지나 상승 비율이 미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산 분위 하락 비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결혼, 출산, 경력 단절 등 여러 구조적 제약에 의해 경제활동 지속이나 자산 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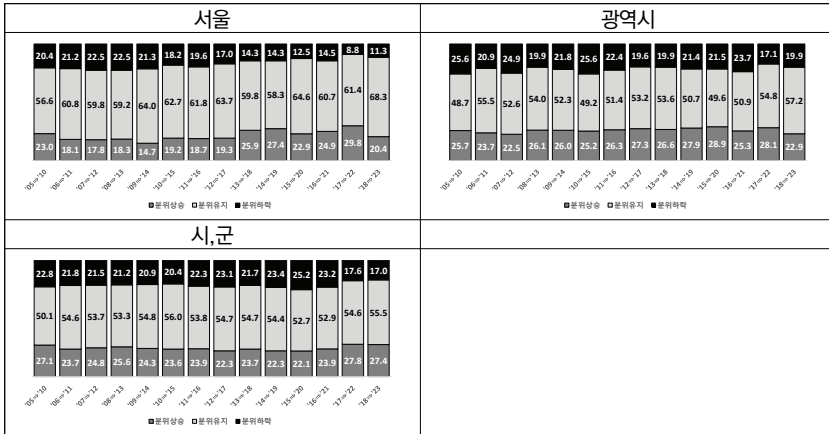
[그림 5-4] 성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지역적으로는 서울 거주자의 자산 분위 상승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광역시, 그다음은 시·군 순으로 자산 분위 상승 비율이 서서히 낮아진다. 또한 자산 분위가 하락한 비율은 서울에 비해 광역시, 시, 군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자산 축적 기회와 지역 간 경제 환경의 격차가 자산 이동성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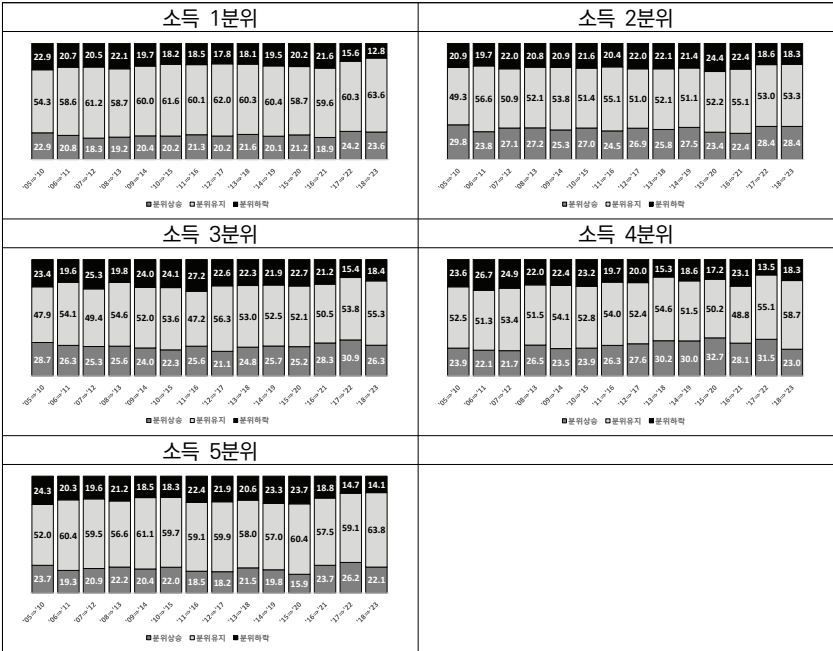
[그림 5-5] 지역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및 소득 5분위,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자산 분위가 상향 이동하는 비율이 소득 중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소득의 양 극층에서 자산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며, 소득 중간계층에서 오히려 자산 분위 이동이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 대물림 현상이 자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5-6] 소득계층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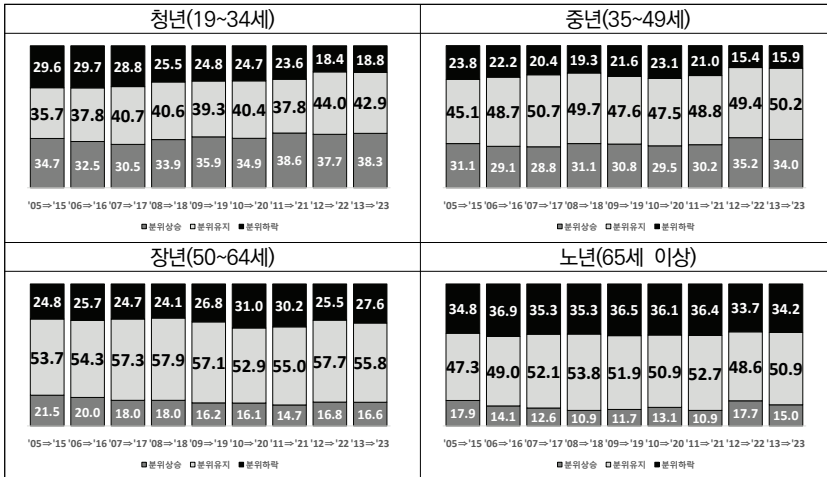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연령대별로 10년 주기를 기준으로 자산 분위 이동을 살펴보면, 청년층(19~34세)은 5년 주기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다. 5년 주기에서는 동일 분위 유지 경향이 강했으나, 10년 주기에서는 상향·하향 모

두 이동 비중이 뚜렷이 증가한다. 중년(35~49세)과 장년층(50~64세)에서는 여전히 자산 분위 유지 비율이 높지만, 장기간 동안에는 **상향 또는 하락한 집단, 즉 자산 분위가 이동한 비중이 5년보다 커진다**. 노년층(65세 이상)은 5년 주기에서도 분위 하락이 주요 현상이었는데, 10년 기준에서는 하락 비율이 훨씬 현저해지며, 은퇴 등 생애주기 변화의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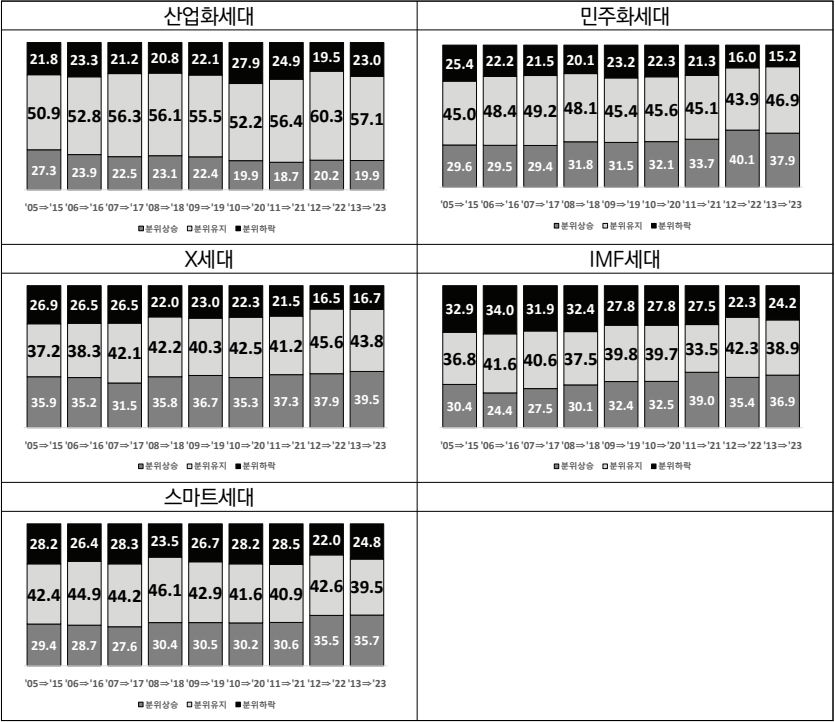
[그림 5-7] 연령대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세대별로 보면 5년 주기에서는 산업화세대~X세대까지는 자산 분위 유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IMF·스마트세대에서만 다소 약간의 이동성이 드러났다. 10년 주기에서는 IMF세대, 스마트세대 등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분위의 **상향·하향 이동 모두에서 현저히 증가한다**. 세대 내부 이동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극적인 계층 변동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비교적 고착된 세대별 자산 구조가 유지되는 것 역시 양 주기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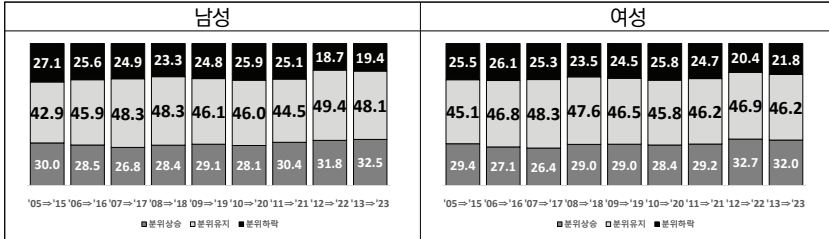
[그림 5-8] 세대구분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 주기에서는 남성이 자산 분위 유지·상승, 여성은 하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주기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 보인다. 특히 여성의 하락 분위 경험이 10년 관측에서 더 증가하고, 남성 역시 하락과 상승 모두 경험 비율이 늘어난다. 이로써 성별 자산 이동성 격차가 단기에 비해 장기적으로도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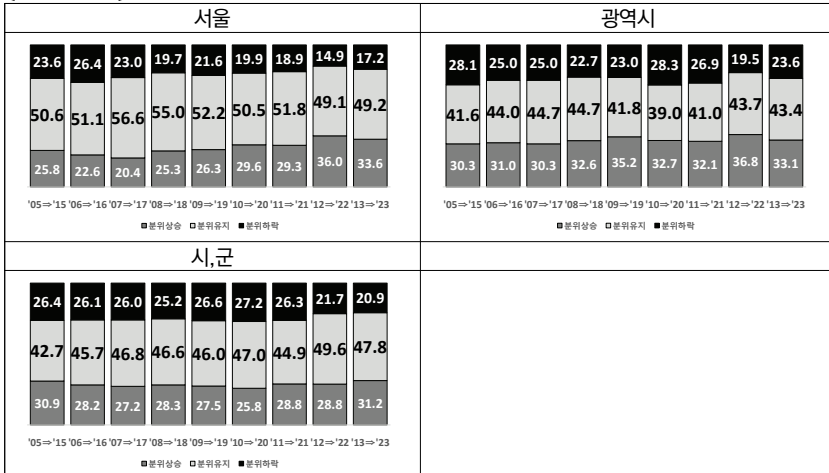
[그림 5-9] 성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지역별로 자산 분위 이동을 보면, 5년 주기와 동일하게 서울은 상향 이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10년 주기에서는 서울의 자산 분위 상승 혹은 유지 비율이 더욱 커지면서 지역 내 자산의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시·군 지역으로 갈수록 여전히 자산 분위 상승 기회가 줄고, 하락 위험이 크다는 구조 자체는 5년 주기와 일치한다. 장기간일수록 지역 간 자산 이동성 격차와 서울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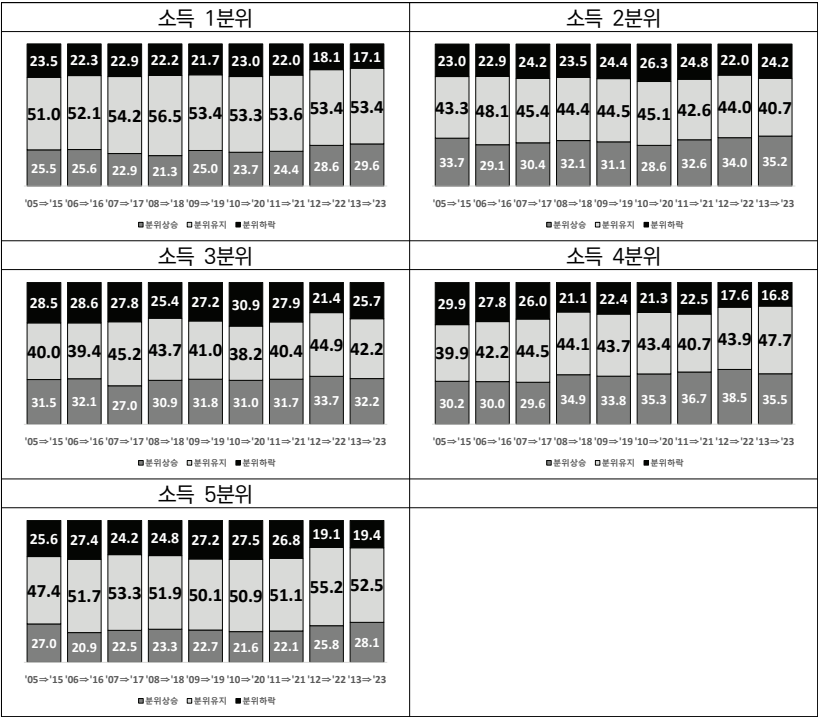
[그림 5-10] 지역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소득계층별로 보면 5년 주기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의 분위 정체, 상위 소득계층의 유지·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10년 주기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하위 소득집단은 장기간에도 자산 상향 이동이 극히 희박하고, 상위 소득집단은 오히려 자산 유지·상승 비율이 높아져 계층 대물림·양극화 구조가 강화된다. 주기가 길어질수록 이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커지긴 하지만, 구조적인 계층 고착과 대물림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고해지는 특징이 더욱 부각된다.

[그림 5-11] 소득계층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종합하면, 10년 주기 분석은 5년 주기에서 관찰된 계층 이동성의 한계, 정체성, 대물림 구조를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면서, 시간의 누적 효과로 인해 자산 이동성의 크기와 격차, 지역·계층·세대별 양극화가 더욱 크게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 세대 간 자산 이동성

다음에서는 세대 간 자산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분가가구를 대상으로 분가 전의 부모세대와 분가한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변화를 살펴 보았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비교했을 때, 자산 분위가 유지되는 경우나 상승하는 경우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적으로 약 65% 정도가 자산 분위 하락을 경험하는데,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립한 경우에도 하락 경향이 더 강하다. 이는 결혼과 직장으로 인한 분가가구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자산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세대 간 자산의 상향 이동이 극히 한정적임을 알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표 5-2〉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

(단위: %)

		〈분가가구 전체〉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세대 자산 분위	1분위	12.1	2.0	0.9	0.5	0.2
	2분위	11.2	4.4	2.0	1.2	0.2
	3분위	9.8	5.4	4.5	0.9	0.5
	4분위	8.2	5.0	3.8	1.8	1.4
	5분위	6.3	5.3	5.6	4.9	2.4
분위 하락		분위 유지			분위 상승	
65.4		25.1			9.6	

〈결혼, 직장으로 인한 분가가구〉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세대 자산 분위	1분위	9.9	1.4	1.1	0.2	0.0
	2분위	10.9	3.7	2.1	1.1	0.0
	3분위	8.3	5.6	4.5	0.9	0.5
	4분위	9.7	6.0	4.1	1.8	1.5
	5분위	7.2	5.7	6.7	5.6	1.6
분위 하락		분위 유지		분위 상승		
69.8		21.5		8.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앞에서 부모세대의 자산 분위에 따른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를 비교해 보았다면, 다음에서는 부모세대의 소득 분위에 따른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아래 표에서 위의 표는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부모세대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부모세대의 소득 분위가 높을 때 자녀세대 자산의 고분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즉, 부모세대의 소득 분위에 따라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래 표에서 부모세대의 각 소득 분위를 100%로 보았을 때,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부모세대의 소득 1분위의 경우 자녀세대의 약 90% 정도가 자산 1,2분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산 1,2분위 분포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반대로 소득 상위 분위의 부모세대의 자녀세대에서 자산 고분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부모세대 중 소득 5분위의 자녀세대 중 약 25%가 자산 4,5분위에 분포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즉, 소득계층이 자산계층으로 이동하는 혹은 전이되는 구조가 본 분석 결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5-3〉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

(단위: %)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세대 소득분위	1분위	8.2	1.3	0.8	0.3	0.2
	2분위	11.1	3.7	2.5	0.7	0.6
	3분위	11.0	3.0	3.0	1.0	0.4
	4분위	9.2	7.5	4.3	2.4	1.3
	5분위	8.0	6.6	6.2	4.7	2.2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세대 소득분위	1분위	76.4	11.9	7.1	3.1	1.6
	2분위	60.1	19.9	13.3	3.7	3.0
	3분위	60.0	16.2	16.2	5.6	2.0
	4분위	37.3	30.2	17.5	9.9	5.1
	5분위	28.9	23.9	22.3	16.8	8.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사회이동성 마지막으로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학력, 직업, 소득, 자산 관련 변수들 간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직업 분류의 경우 숫자가 낮은 보기문항¹⁰⁾에서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와**

10) 설문문항 내 직종의 보기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비해당, 2. 국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전문가, 4. 기술공 및 준전문가, 5. 사무종사자, 6. 서비스종사자, 7. 판매종사자, 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9.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1. 단순노무 종사자, 12. 직업군인, 13. 주부, 14. 무직, 15. 기타.

자녀의 학력과 직업 간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정도의 차이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영향력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직업 혹은 일자리의 세대 간 이동성에서 더욱 심층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단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직업 분야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세대 간 학력과 직업 변수들은 일정 부분 이전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소득·자산 관련 변수에서 부모가구의 시장소득과 자녀가구의 시장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부모가구의 자산 분위와 자녀가구의 자산 분위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부모의 자산 순위가 높으면 자녀의 자산 순위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구의 총자산 분위와 자녀가구의 총자산 분위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자산도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은 부모가구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총자산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위 역시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녀의 학력 또한 자녀가구의 소득 및 자산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그 값은 부모 변수들에 비해 다소 낮거나 약한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학력, 직업, 소득, 자산 관련 변수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특히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물림 현상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학력과 직업 역시 세대 간 유사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4〉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부의 학력	자녀의 학력	부의 직업	자녀의 직업	부모가구의 시장소득 분위	자녀가구의 시장소득 분위	부모가구의 가처분소득 분위	자녀가구의 가처분소득 분위	부모가구의 총자산 분위	자녀가구의 총자산 분위
부의 학력	1.0000	0.3131 상관관계	-0.4461 상관관계	-0.2742 상관관계	0.2684 상관관계	0.1845 상관관계	0.2591 상관관계	0.1458 상관관계	0.2789 상관관계	0.0673 상관관계
자녀의 학력	0.3131 상관관계	1.0000	-0.0933 상관관계	-0.4361 상관관계	0.2273 상관관계	0.3536 상관관계	0.2392 상관관계	0.3087 상관관계	0.2512 상관관계	0.0909 상관관계
부의 직업			1.0000	0.1609 상관관계	-0.1412 상관관계	-0.0972 상관관계	-0.1368 상관관계	-0.0823 상관관계	-0.2024 상관관계	-0.0470 상관관계
자녀의 직업	-0.2742 상관관계	-0.4361 상관관계	0.1609 상관관계	1.0000	-0.1880 상관관계	-0.2299 상관관계	-0.1866 상관관계	-0.2042 상관관계	-0.2273 상관관계	-0.1531 상관관계
부모가구의 시장소득 분위					1.0000	0.3929 상관관계	0.9282 상관관계	0.3860 상관관계	0.4930 상관관계	0.3066 상관관계
자녀가구의 시장소득 분위	0.1845 상관관계	0.3536 상관관계	-0.0972 상관관계	-0.2299 상관관계	0.3929 상관관계	1.0000	0.3874 상관관계	0.9447 상관관계	0.3567 상관관계	0.4289 상관관계
부모가구의 가처분소득 분위							1.0000	0.3874 상관관계	0.4801 상관관계	0.3114 상관관계
자녀가구의 가처분소득 분위	0.1458 상관관계	0.3087 상관관계	-0.0823 상관관계	-0.2042 상관관계	0.3860 상관관계	0.9447 상관관계	0.3874 상관관계	1.0000	0.3514 상관관계	0.4224 상관관계
부모가구의 총자산 분위									1.0000	0.3659 상관관계
자녀가구의 총자산 분위	0.0673 상관관계	0.0909 상관관계	-0.0470 상관관계	-0.1531 상관관계	0.3066 상관관계	0.4289 상관관계	0.3114 상관관계	0.4224 상관관계	0.3659 상관관계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006~2024)’, 원자료 분석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자산 이동성에 대해 특성에 따른 세대 내 이동성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기준으로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 내 자산 이동성의 경우 5년 주기와 10년 주기를 분석해보았는데, **10년 주기 분석은 5년 주기에서 관찰된 계층 이동성의 한계, 정체성, 대물림 구조를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면서, 시간의 누적 효과로 인해 자산 이동성의 크기와 격차, 지역·계층·세대별 양극화가 더욱 크게 드러났다.** 주기가 길어질수록 이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커지긴 하지만, 구조적인 계층 고착과 대물림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고해지는 특징이 더욱 부각되기도 하였다. 세부적으로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및 소득 5분위,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자산 분위가 상향 이동하는 비율이 소득 중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의 양 극층에서 자산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며, 소득 중간계층에서 오히려 자산의 분위 이동이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 대물림 현상이 자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 자산 이동성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청년층(19~34세)은 자산 분위 이동성이 높아 하위에서 상위로 혹은 반대로 크게 이동하는 비율이 두드러졌으며, 중년(35~49세)과 장년(50~64세)으로 갈수록 자산 분위의 유지 비율이 증가하고, 이동성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년층(65세 이상)은 은퇴와 같은 이유로 소득과 자산이 감소해 자산 분위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자산 분위의 유지나 상승 비율이 미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산 분위 하락 비율이 두드**

러지는 등 경제활동 지속이나 자산 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듯이 **서울 거주자의 자산 분위 상승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광역시, 그다음은 시·군 순으로 자산 분위 상승 비율이 서서히 낮아진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자산 축적 기회와 지역 간 경제 환경의 격차가 자산 이동성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분가가구를 대상으로 분가 전의 부모세대와 분가한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자산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비교했을 때, 자산 분위가 유지되는 경우나 상승하는 경우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약 65% 정도가 자산 분위 하락을 경험하는데,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립한 경우에도 하락 경향이 더 강하다. 이는 **세대 간 자산의 상향 이동이 극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부모의 소득분위에 따라 자녀의 자산 분위가 거의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1~3분위) 부모 자녀는 대다수 자산 분위도 하위권에 머물고, 반대로 상위 소득층 부모 자녀는 자산 분위의 유지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즉, **소득계층이 자산계층으로 대물림되는 구조가 사회 전반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및 자녀세대의 학력, 직업, 소득, 자산 관련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력과 직업 변수들은 세대 간에 일정 부분 대물림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소득·자산 관련 변수에서 부모가구의 시장소득과 자녀가구의 시장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가구의 자산 분위와 자녀가구의 자산 분위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자산도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종합적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학력, 직업, 소득, 자산 관련 변수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나며, 특히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물림 현상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학력과 직업 역시 세대 간 유사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자산 이동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진단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산 이동성의 경우 단기적인 이동성의 결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혹은 실질적인 계층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연령별 세대 내 자산 이동성에 대해 분석해보면,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취업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 자산을 축적하여 상향 이동하더라도 결혼, 출산, 주거 마련 등의 비용으로 자산축적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자산 기반이 약한 계층에서는 상향 이동에서 하향 이동으로의 반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단기적 상향 이동이 일시적인 '변동'일 수 있는 점에서 실제로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계층의 상향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추적 분석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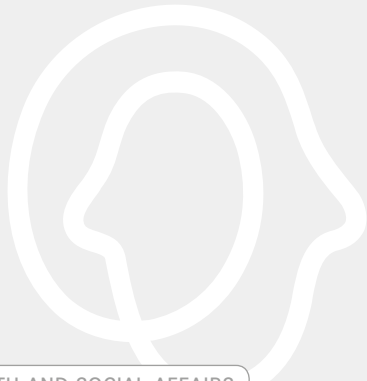
둘째, 부모세대의 자산이 자녀세대의 자산으로 이전되면서 자산 이동성은 세대 간 세습화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세대의 소득 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산 분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점에서 본인의 '노력의 기회'보다 '출발선 위치의 차이'가 이동성을 결정짓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여 자산 분위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자산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상속, 증여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산축적, 자산형성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산 이동성의 약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사회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자산’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득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증가한다면 소득의 단기적인 상향 이동을 피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산은 단순한 수입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금융자산 등 누적 자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세습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은 공부를 통한 직업의 선택, 창업 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지는 반면, 자산은 부모세대로부터의 초기 지원 유무에서 결정되는 출발선 자체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사회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자산의 특성상 단순한 ‘수입’이 아닌 ‘기반’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자산 이동성의 저하는 소득이동성의 저하보다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 고용, 주거 등 통합적이고 국가적인 구조적 개입 차원의 정책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본 분석을 통해 자산 계층 간 분위 이동을 살펴봄으로써 상대적 위치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실질적인 자산 수준의 개선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소득의 경우 절대적 기준이 되는 정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이 존재하는 점에서 소득계층의 절대적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자산의 경우 기준이 되는 수준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자산구조 특성상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산의 구성 항목별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면 자산 격차의 원천을 좀 더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혹은 제도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 시에는 정책, 제도환경에 대한 영향 요인을 함께 파악한다면 풍부한 해석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

노동(일자리) 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제2절 개념적 검토와 주요 선행연구

제3절 일자리 이동 관련 현황 및 추이 검토

제4절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형태 중심으로

제5절 주요 결과 및 함의

제6장 노동(일자리) 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사회이동성은 다층적이며 다차원적 구조를 가진 복합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량적 접근을 위해서는 개념적 정의를 통한 논리적 체계화 및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 관련 정의를 살펴보면, 앞서 제2장에서 제시되었듯이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 혹은 계층이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사회이동성이 “계급, 직업, 소득과 부로 구분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위계 내에서 이뤄지는 이동”(정해식, 2020, p.36)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동이 개인의 생애 안에서 이뤄지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 또는 그 이상에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해식, 2020, p.36). 이러한 사회이동성은 교육, 직업, 소득 등의 이동성과 상호 인과성을 가지는데, 직업 부문은 노동 부문에 속한 영역이며, 교육과 소득이동성 역시 노동 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노동 부문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생애주기별 일자리 상향 이동 가능성의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일자리 및 소득격차의 고착화 등이 사회이동성의 저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¹¹⁾

11)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노동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의 주요 저하 요인으로서 생애주기별 일자리 상향 이동의 약화의 요인으로 청년의 경우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중년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동 등 일자리 상향 이동 기회 제약, 중고령층의 경우 저임금 및 저숙련 일자리로의 재취업으로 인한 일자리 및 소득 하향 이동을 꼽았음.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청년기에 형성된 일자리로 인한 소득격차의 고착화 역시 사회

노동 측면의 사회이동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 가능하다. 먼저 노동 또는 일자리를 사회이동성의 결정요인으로 파악하여, 사회이동성을 독립변수 측면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는 고용 또는 일자리의 특성 또는 변화가 해당 대상의 계층이 달라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노동(일자리) 자체의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자 특성별 또는 기업특성별 이동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자리 또는 직업 이동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노동 측면의 사회이동성은 노동(일자리)의 사회적 계층 변화 또는 관련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면과 노동(일자리) 자체의 변화 또는 이동과 이것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노동(일자리) 자체의 이동성 및 세대 내 이동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앞서 언급된 세대 간 이동성의 경우, 관련 변수(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수준 관련 변수 등)의 추이 및 관련 변수가 노동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 및 소득격차의 고착화로 인해 사회이동성을 저해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하에서 노동의 이동은 그 자체로도 노동시장의 역동성과 이를 통한 계층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존재하다.¹²⁾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일자리 등 노동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 이동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일자리)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그 영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을 제시함에 있어 부모의

이동성의 저하 요인으로 꼽음(관계부처 합동, 2024, pp.3-4).

1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불평등, 청년층 실업 증가 등의 노동시장 비효율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축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이태, 안준홍, 2023).

교육 또는 경제 수준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사회이동성 측면의 특성 또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노동 측면의 이동성은 주로 절대적 이동성을 바탕으로 분석하되,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상대적 이동성(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고용형태 관련 지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개념적 검토와 주요 선행연구

1. 개념적 검토

사회이동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이동을 의미하며, 세대 간 또는 개인의 생애 동안의 소득, 교육, 직업(occupation) 등의 변화로 측정된다. 노동 이동 또는 노동 이동성(Labour mobility)은 노동자의 직종 간·기업 간·산업 간 또는 지역 간 이동현상을 의미한다.¹³⁾ 노동 이동(labor mobility)은 협의의 범위로는 어느 특정한 일자리에의 입직 또는 이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직은 사직, 퇴직, 전직 등을 포괄하며, 광의의 범위로 노동 이동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진입, 퇴출 등을 말한다(김혜연, 2000; 정병석 외, 2011, p.197에서 재인용). 노동 이동의 형태는 지역 간·산업 간 또는 직종 간 노동자의 이동으로 구분되기도 하며(김혜연, 2000), 또한 노동 이동은 노동력 상태 간 이동만이 아니라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직장이동을 포함한다(이병희, 2005). 또한 Long & Ferrie(2006, p.1)에 따르면 노동 이동성은 물리적

13)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6652&cid=40942&categoryId=31846>에서 2025. 7. 31. 인출.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이동성과 직업적 이동성을 아우르는 근로자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리적 이동성은 단거리 및 장거리 이동, 자발적 이주 및 강제 이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또한 직업적 이동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직업군 내의 이동인 수평적 이동과 한 직업에서 더 좋거나 나쁜 직업으로 이동하는 수직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이동성이 노동시장 내에서 개인의 일자리 이동, 직종 또는 지리적 위치 변화 그리고 고용형태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노동 이동성은 주로 노동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노동력의 적응성과 관련된 경제 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편, 직업 이동성(occupational mobility)은 사회적 이동성과 노동 이동성 모두의 구성요소로서, 개인이나 세대 간에 경험하는 직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직업 이동성은 개인경력 발전, 교육수준, 노동시장 변화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관계부처 합동, 2024, p.2). 이러한 직업 이동성은 고용형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 이동성(occupational mobility)보다는 주로 일자리 이동성(job mobility)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이동성(job mobility)은 근로자가 직장, 고용주 또는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는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기간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는 ‘취업자’와는 구별”된다.¹⁴⁾ 그러므로 일자리 이동(job mobility)은 이러한 근로자의 고용위치 변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고용주가 바뀌는 직장 이동이 포함된다(정병석 외, 2011, p.197). 일

14)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통계별 질문(2021-04-26 게시).

<https://mods.go.kr/statDesc.es?mid=a10501010000>에서 2025. 12. 9. 인출.

자리 이동은 계급이동(class mobility), 산업이동(industrial mobility), 직업이동(occupational mobility), 경력이동(career mobility), 근로 이동(work mobility) 등 다양한 이동을 포함하는 복합적 속성을 지닌다. 또한 노동 이동은 여러 제도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이동 형태는 분절적 형태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신광영, 2004; 정병석 외, 2011, pp.197-198에서 재인용). 앞서 노동 이동은 고용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의 이동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에서도 노동 이동은 일자리 이동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 이동 또는 일자리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이동에는 임금근로자 고용형태의 변화가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규직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¹⁵⁾

비정규직은 근로형태가 한시적근로자 또는 시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 근로자인 임금근로자를 말한다.¹⁶⁾ 앞서 언급된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

15)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홈페이지. 정규직(근로자) [Regular worker]
https://mods.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16에서 2025. 12. 9. 인출.

16)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홈페이지. 비정규직(근로자) [Non-regular workers]
https://mods.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087에서 2025. 12. 9. 인출.

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¹⁸⁾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한국노동연구원, 2024, p.89)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중략...또한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p.8). 비전형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한국노동연구원, 2024, pp.222-223) 등이 있으며, 비전형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간접고용에 해당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p.8)

한국의 비정규직 분류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근거하여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24, p.222). 한편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먼저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종사상 지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으로 상용직(1년 이상 혹은 무기 계약), 임시직(1개월~1년 미만),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외에 동일 처우의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 구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고용계약기간으로는 ‘상용직’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내 규범, 퇴직금 및 상여금, 부가급여 등을 수령함에 있어 차별적 대우가 없는

17) 국가지표체계. 한시적근로자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30>에서 2025. 8. 20. 인출.

18)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홈페이지. 비정규직(근로자) [Non-regular workers]

https://mods.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087에서 2025. 12. 9. 인출.

지를 판단(동일 처우)하여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한국노동연구원, 2024, pp.222-223)

2. 주요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이동성의 저하 요인을 노동 및 일자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역동성·잠재성장률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생애주기별 일자리 상향 이동 사다리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일자리·소득 격차 고착화 등이 언급되었는데(관계부처 합동, 2024, p.1), 이러한 노동 측면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요 연구들에 있어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과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애와 정영순(2015)의 연구는 임금근로 상태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향 이동(좋은 않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 현황과 이러한 이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해당 개념은 객관적 정의가 쉽지 않아서, 일자리가 갖는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의하는 추세이다. 즉 고용에 대한 안정성 측면과 사회보험 적용 여부, 기업의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 공통적으로 임금수준을 좋은 일자리의 기본적 요소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에서 정의한 저임금 기준인 월평균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기도 한다(김영애, 정영순, 2015, pp. 39-40). 그리고 중위임금 50%를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도 한다(최옥금, 2015; 김영애, 정영순, 2015, p.40에서 재인용). 방하남과 이상호(2006, p.94)도 일자리 이동성에 있어 좋은 일자리는 그 정의가 학자 및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성과 보상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김정규와 김교성(2019)의 연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탕으로

일자리 이동 여부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상태 변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1980년대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발전과 1990년대 비정규직 양산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신자유주의, 산업구조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다층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심화되었다(황수경, 2003; 신광영, 2018; 김정규, 김교성, 2019, p.202에서 재인용).

이중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직장 이동형태와 노동 이동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임찬영(2015)은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직장 이동형태의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위 연구는 직무의 숙련수준에 따라 1차 및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기업규모를 적용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노동시장을 가정한 후 대상집단의 노동시장 간 전환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이태와 안준홍(2023)은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노동 이동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위 연구는 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 이동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노동시장 유형 간 특성 및 노동 이동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노동시장 유형 간의 근로 여건을 비교한 후 4가지 유형 간 노동 이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해 봄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노동시장 유형으로 옮겨가는 일자리 상향 이동 가능성을 분석하여 상향 이동에 따른 근로 여건의 개선과 상향 이동 가능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호연과 양재진(2017)에 따르면, 한국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매우 고착되어 있으며, 1차 노동시장의 협소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과 같은 상향 이동이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

고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고착화된 이중구조는 노동시장 간 근로 여건의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특히 임금수준의 격차를 통해 소득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OECD(2013)에서도 한국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OECD, 2013; 이태, 안준홍, 2023, p.42에서 재인용)

제3절 일자리 이동 관련 현황 및 추이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이동성(job mobility)은 근로자의 직장, 고용주, 지역 간 이동을 포괄하며, 종사상 지위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변화도 포함된다. 이러한 일자리 이동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일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적 역동성이 큰 사회의 경우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며, 고용형태의 변화도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이러한 동태적 특성이 과거에 비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제적 역동성 제고와 이를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노동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적인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역동성이 큰 사회일수록 사회이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자리 이동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이동성을 노동시장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자리 이동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의 ‘일자리이동통계’ 결과를 활용하였다. 해당 통계는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30종을 활용하여 작성한 종단면 가공자료로서(통계청, 2025, ‘일러두기’),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고용 및 미래 일자리 지원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며, 2020년 통계작성 승인 후 매년 통계가 공표되고 있다.¹⁹⁾ KOSIS에서 2017년부터의 통계자료 결과표를 활용할 수 있어, 2017년부터 최신 자료인 2023년까지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는 일자리이동통계 주요 지표들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통계는 등록 및 미등록 취업자에 대한 통계를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본 절에서는 유형별로 세부적인 항목과 관련 특성을 제시해주는 등록취업자를 중심으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등록취업자통계는 진입자와 유지자 그리고 이동자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등록취업자 종류별(진입자, 유지자, 이동자) 기준 및 비교 시점의 주된 일자리 간 이동과 진입 그리고 미등록자²⁰⁾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 일자리이동통계 지표의 정의

작성지표		해설
등록취업자	진입자	비교년도(t-1)에는 미등록 상태였으나 기준년도(t) 주된 일자리에 등록된 사람
	유지자	비교년도(t-1)와 기준년도(t)에 걸쳐 주된 일자리가 동일 기업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
	이동자	비교년도(t-1)와 기준년도(t) 간에 이직 등의 사유로 기준년도(t)의 주된 일자리가 비교년도(t-1)와 달라진 경우
미등록자		비교년도(t-1)의 주된 일자리가 기업체 소멸, 사업축소 등으로 기준년도(t) 일자리에 미등록된 사람
비율지표		진입, 유지, 이동 지표들에 대한 비율로 분모에는 등록취업자수(진입자+유지자+이동자)를 사용 * 100.0(%)=진입률+유지율+이동률, 미등록률='-'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5).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

19) 국가데이터처. 통계설명자료서비스: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da?statsConfmNo=101091&kosisYn=Y>에서 2025. 10. 30. 인출.

20) 미등록자는 제도권 밖 취업, 비경제활동, 실업상태로 이동자를 모두 포함(국가데이터처, 2025).

아래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등록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등록자의 경우 일정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그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유지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다. 유지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진입자는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이동자의 경우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등록취업자 및 미등록자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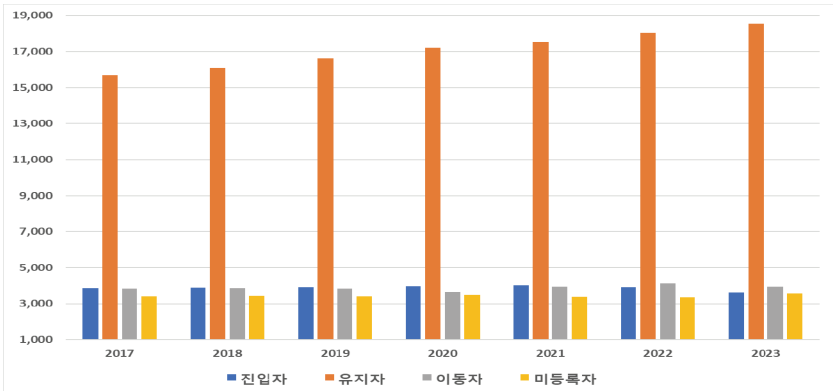
(단위: 천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등록취업자	23,379	23,837	24,358	24,832	25,490	26,057	26,145
진입자	3,857	3,892	3,912	3,967	4,026	3,911	3,646
유지자	15,680	16,085	16,612	17,204	17,531	18,027	18,548
이동자	3,842	3,860	3,834	3,661	3,932	4,120	3,951
미등록자	3,404	3,434	3,391	3,493	3,368	3,344	3,558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6-1〕 등록취업자 및 미등록자 현황 및 추이

(단위: 천명)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아래에 제시된 진입률과 유지율 그리고 이동률은 각각 전체 등록취업자 중에서 진입자와 유지자 그리고 이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먼저 유지율부터 살펴보면, 유지자로 파악한 경우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율로 파악할 경우 2020년까지 그 비율이 증가하다 소폭 하락한 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률과 이동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최근 이동률이 진입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지율은 증가하고 진입률은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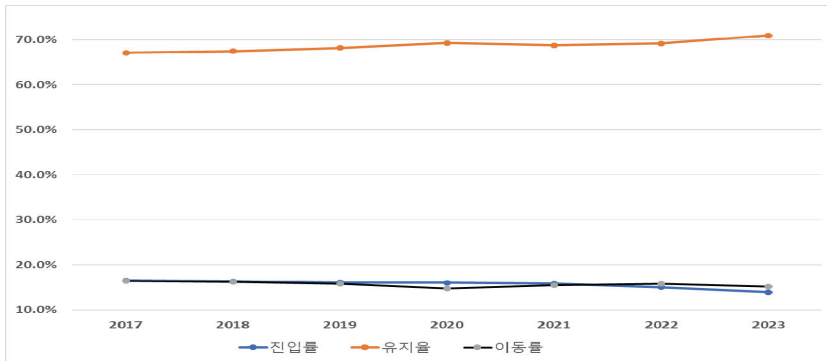
〈표 6-3〉 등록취업자의 진입률, 유지율, 이동률 현황과 추이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진입률	16.5	16.3	16.1	16.0	15.8	15.0	13.9
유지율	67.1	67.5	68.2	69.3	68.8	69.2	70.9
이동률	16.4	16.2	15.7	14.7	15.4	15.8	15.1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아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6-2〕 등록취업자의 진입률, 유지율, 이동률 현황과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아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한편 종사상 지위 간 이동자 비율을 임금근로일자리와 비임금근로일자리의 진입과 유지 그리고 이동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표 6-4〉 종사상 지위별(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진입률, 유지율, 이동률 현황과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금근로	총계(A)	19,483	19,876	20,387	20,725	21,241	21,654	21,726
	진입률	17.1	16.8	16.6	16.3	16.4	15.3	14.5
	유지율	64.4	64.9	65.8	67.3	66.4	67.0	68.5
	이동률	18.5	18.2	17.6	16.4	17.2	17.7	17.0
비임금근로	총계(B)	3,896	3,961	3,971	4,107	4,249	4,403	4,419
	진입률	13.3	13.8	13.2	14.3	12.8	13.4	11.1
	유지율	80.6	80.2	80.5	79.5	80.8	79.9	82.9
	이동률	6.1	6.0	6.3	6.2	6.5	6.7	6.0
B/A		20.0	19.9	19.5	19.8	20.0	20.3	20.3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임금근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의 경우도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임금근로와 임금근로의 상대적 비율로 살펴보면, 임금근로 대비 비임금근로의 비율은 2019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로자가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²²⁾ 임금근로 대비 비임금근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취업자수

21) 여기서 ‘임금근로일자리’는 “기업(사업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대가로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하며, ‘비임금근로일자리’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나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한다.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ata?statsConfmNo=101091&kosisYn=Y>에서 2025. 10. 30. 인출.

에서 임금근로자수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의 경우 진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지율은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증가하였다. 한편 이동률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 근로에서 진입률과 이동률은 감소하고 유지율은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전반적인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의 경우 비임금근로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역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진입률의 경우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지율은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진입률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유지율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으며, 진입률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체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15년 25.9%, 2020년 24.2%, 24년 22.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누리집표 국가발전지표 비임금근로자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3>에서 2025.12.10.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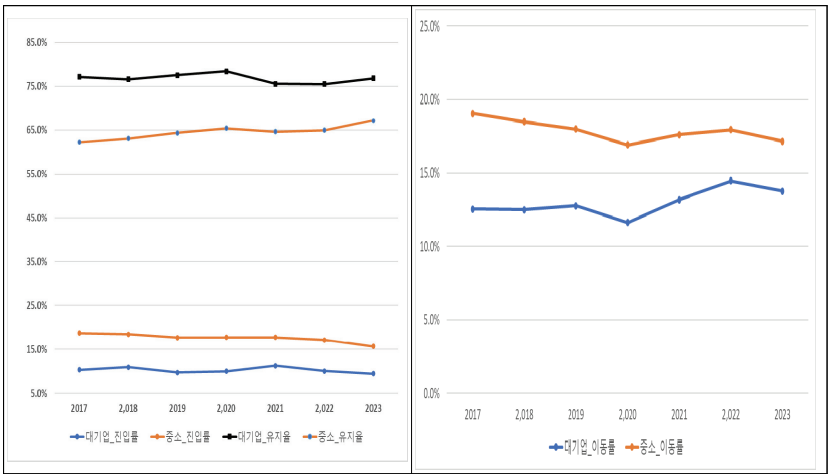
〈표 6-5〉 기업규모별 진입률, 유지율, 이동률 현황과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기업	진입률	10.3	10.9	9.7	10.0	11.2	10.0	9.4
	유지율	77.1	76.6	77.5	78.4	75.5	75.5	76.8
	이동률	12.6	12.5	12.8	11.6	13.2	14.5	13.8
중소기업	진입률	18.7	18.4	17.7	17.7	17.7	17.1	15.7
	유지율	62.2	63.1	64.4	65.4	64.6	64.9	67.2
	이동률	19.1	18.5	18.0	16.9	17.6	17.9	17.2
비영리기업	진입률	13.8	13.7	15.9	15.3	13.5	12.6	12.4
	유지율	75.6	74.8	73.0	73.9	75.8	76.9	77.4
	이동률	10.6	11.5	11.1	10.7	10.7	10.5	10.2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6-3〕 기업규모별 진입률, 유지율, 이동률 현황과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한편 일자리 이동을 통한 임금수준의 변화, 즉 임금근로자가 일자리 이동을 통해 전년 대비 올해 임금수준이 높아졌는지를 검토해 보면, 임금 측면의 일자리 상향 이동에 대한 현황 및 추이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일자리 이동 근로자의 60.7%는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 상승 이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계열 차원에서 살펴보면, 대상자 전체의 경우 임금 상향 이동의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성별로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등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최근의 자료인 2023년의 전년 대비 임금 상향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그 비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 이하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연령대보다 임금 상향 이동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간 일자리 상향 이동 현황 및 추이: 성별, 연령별

(단위: %)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전 체	62.2	67.5	59.2	62.5	65.1	60.7
남자	59.7	65.1	57.9	61.6	64.2	59.3
여자	65.7	70.7	61.0	63.6	66.4	62.6
15~29세	65.9	72.5	64.1	68.5	70.0	64.7
30~39세	61.7	68.5	62.3	66.7	68.5	63.0
40~49세	60.8	66.3	59.0	62.0	64.7	60.4
50~59세	60.4	64.4	55.5	58.0	61.1	57.4
60세 이상	62.1	63.6	51.7	53.5	59.1	57.5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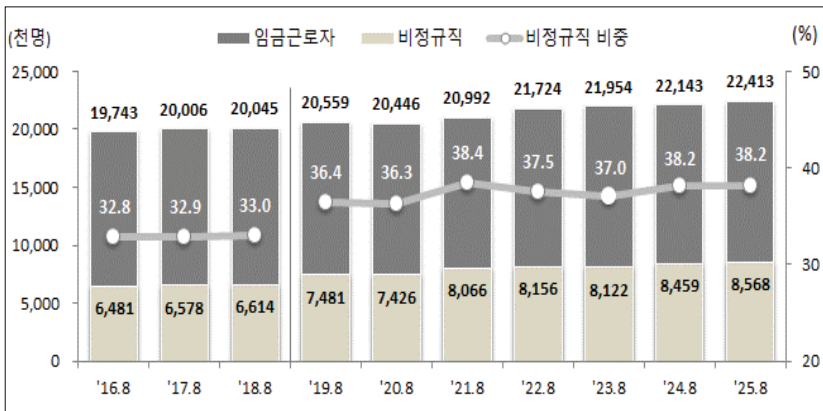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²³⁾ 고용형태는 일자리 및 소

2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정규직은 평균 27,703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평균 18,404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는 66.4%인 것으로 나타남(누리집표, e-나라지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8에서 2025. 10. 31. 인출).

특이동성과 이를 통한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임금근로자가 다소 감소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²⁴⁾ 정규직은 일정 추이를 보이지 않고 규모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경우 2020년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한시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4]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정규직 규모(비중)



주: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규모로 인해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p.27

24)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표 6-7〉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각 연도 8월 기준)

(단위: 천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정규직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8,568
한시직	4,785	4,608	5,171	5,348	5,259	5,628	5,848
시간제	3,156	3,252	3,512	3,687	3,873	4,256	4,229
비전형	2,045	2,073	2,278	2,131	1,957	1,903	1,834

주: 유형 간 중복인원으로 인해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 합계는 불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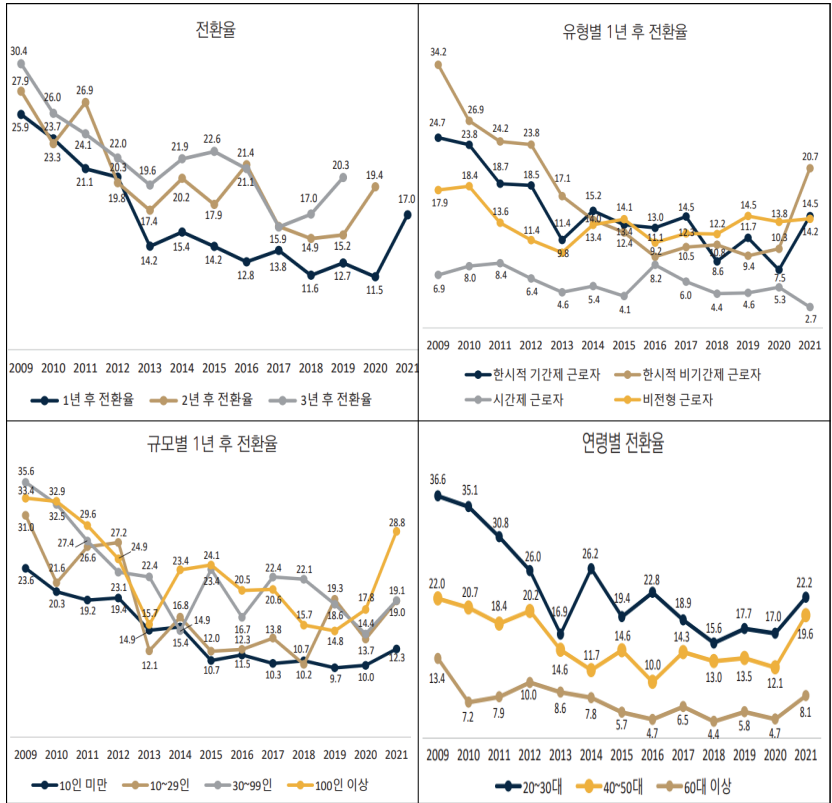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p.27

하지만, 이러한 고용 및 근로형태의 추이는 전체적인 규모의 변화만 파악하여 노동 이동과 관련된 노동시장 여건과 전반적인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고용형태의 전환을 통한 노동 이동성 측면의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이동통계에서도 근로자 특성별(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등) 일자리 이동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 또는 한국복지패널 등과 같이 노동(일자리) 이동에 대한 변수를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형태별 일자리 이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모와 특성을 파악한 이지은(2023)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 먼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을 1~3년 전환율로 각각 살펴보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후, 1년 후 전환율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1년 후 전환율은 2020년 11.5%에서 2021년 17%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유형별 전환율을 살펴보면, 한시적 근로자 집단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비전형근로자의 경우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일정 수준을 유지하

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5] 정규직 전환율: 기간별, 유형별, 규모별, 연령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25차(200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출처: 이지은(202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KLI PANEL Brief. pp.5~6에서 발췌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전환율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로 교차하는 등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1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전

환율이 다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연령별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면, 20~30대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30대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40~50대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두 연령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사회보장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특히 사회이동성 관련 변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일자리) 이동 관련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다음과 실시하였다.

제4절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형태 중심으로

1. 일자리 이동 추이 및 특성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일자리 이동을 고용형태 측면에서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전기($t-1$)기에 비정규직인 근로자 수 대비 $t-1$ 기에는 비정규직이었다가 t 기에 정규직이 되는 근로자수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유지율은 전기($t-1$)기에 비정규직인 근로자수 대비 $t-1$ 기에는 비정규직이었다가 t 기에도 비정규직인 근로자수로 구할 수 있다.

〈표 6-8〉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고용형태 변화

(단위: %)

구분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기타	Total
2011년	19.29	60.77	19.93	100.0
2012년	15.98	65.30	18.72	100.0
2013년	20.27	58.67	21.06	100.0
2014년	20.27	59.53	20.20	100.0
2015년	13.15	68.79	18.06	100.0
2016년	19.94	64.31	15.75	100.0
2017년	14.76	68.45	16.79	100.0
2018년	18.26	64.76	16.98	100.0
2019년	15.70	67.88	16.42	100.0
2020년	18.41	60.42	21.17	100.0
2021년	14.31	70.32	15.37	100.0
2022년	17.26	65.93	16.81	100.0
2023년	13.50	71.17	15.33	100.0

주: 기타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한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산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은 등락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기($t-1$)기에 비정규직인 근로자가 t 기에도 비정규직인 경우를 의미하는 비정규직 유지율도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추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고착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6-9〉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고용형태 변화

(단위: %)

구분	정규직→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기타	Total
2011년	79.89	13.05	7.06	100.00
2012년	83.61	10.38	6.01	100.00
2013년	79.79	13.15	7.06	100.00
2014년	79.22	13.47	7.31	100.00
2015년	80.03	13.09	6.88	100.00
2016년	84.44	10.09	5.47	100.00
2017년	83.31	9.53	7.16	100.00
2018년	83.57	9.41	7.02	100.00
2019년	83.56	11.27	5.17	100.00
2020년	81.59	11.54	6.87	100.00
2021년	82.22	11.02	6.76	100.00
2022년	85.51	10.07	4.42	100.00
2023년	81.73	11.43	6.8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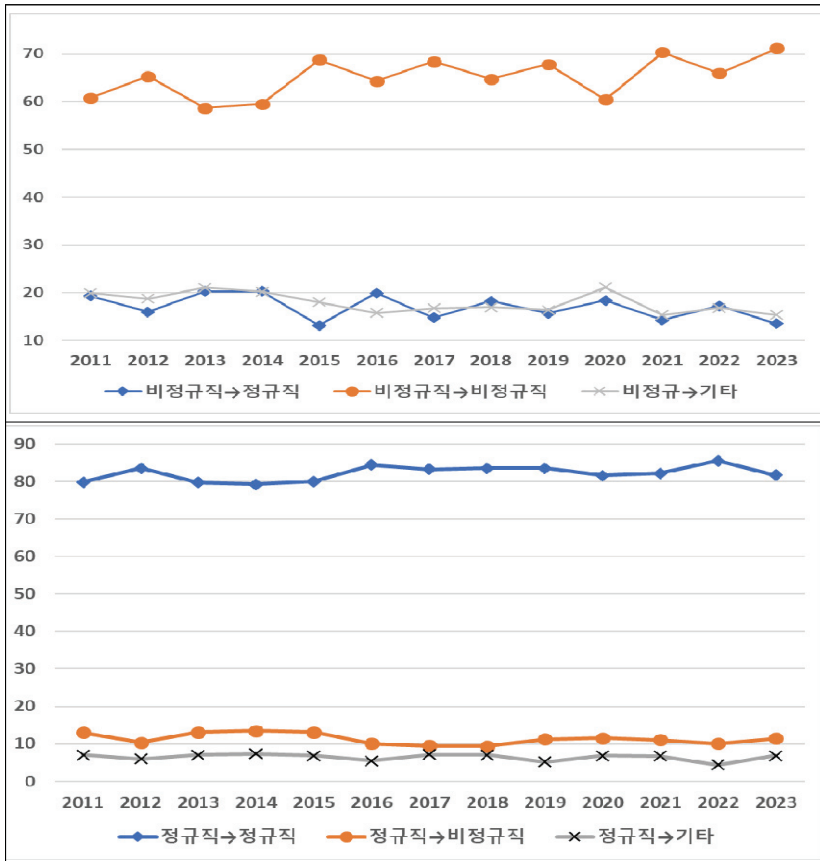
주: 기타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한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산출

정규직의 고용형태 유지와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대 초반과 2020년대 초반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다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소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년도 비정규직 집단의 고용형태 변화 폭이 전년도 정규직 집단의 변화 폭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규직 집단이 비정규직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형태 구조가 상당 부문 고착화된 상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6-6]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일자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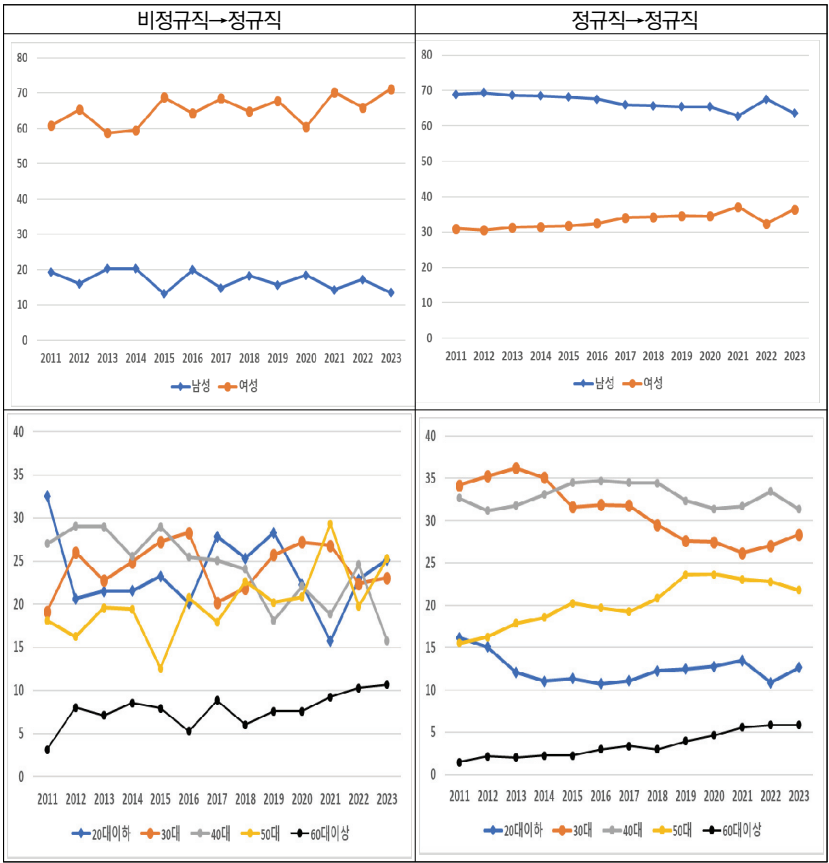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집단의 성별 구성과 그 추이를 살펴 보면, 여성의 구성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여성의 구성 비율 추이와 다르게 정규직을 유지한 남성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을 유지하는 여성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성 비중이 높은 고용형태 측면의 구조적 특징인 성별 차이에 따른 격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집단의 연령대별 구성과 그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하 연령별 집단의 등락이 정규직 유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집단의 비중은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규직을 유지한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30대와 20대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은퇴 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과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20대의 경우는 등락이 발생하고 있어 뚜렷한 추세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체로 두 집단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고용형태 측면에서 이들이 안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수립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6-7]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와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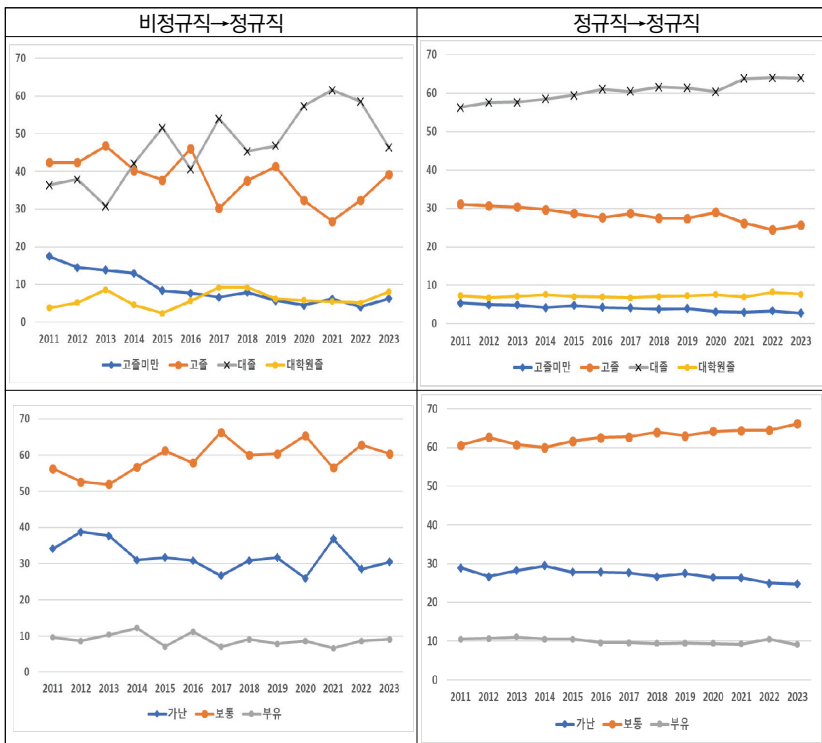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집단의 학력수준 현황과 추이를 살펴 보면, 초기에는 고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가 점차 대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의 경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 졸업의 경우도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의 경우 대학 졸업 비중이 큰 격차로 가장 높으며, 고졸의 경우 두 번째로 그 비중이 높으나 점차 그 비

중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한편,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대학원 졸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며, 고졸 미만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학력의 경우에서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 추이에서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 경우 고졸과 대졸의 추이에서 등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에 비해 정규직 유지자들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림 6-8]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와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학력, 아동기의 주관적 경제상태 분포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 아동기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집단과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서 유사한 분포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집단의 경우 해당 응답에 대한 추이에 있어 등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동기 때 경제적 수준이 가난한 것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에서 부유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난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상향 이동 추이를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파악하였다. 일자리의 상향 이동은 $t-1$ 기에 임금근로자이면서 t 기에도 임금근로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앞서 살펴본 이태와 안준홍(2023)의 일자리 상향 이동과 같이 분류할 경우, 아래 표에 진하게 표기한 집단이 그 대상이 된다. 일자리 상향 이동에 해당되는 조합은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 집단에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정규직 유지 집단에서는 중소기업 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일자리 상향 이동에 해당된다.

〈표 6-10〉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기업규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중소기업→대기업	중소→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대기업	Total
2011년	5.43	85.07	5.02	4.48	100.00
2012년	7.65	74.52	5.65	12.18	100.00
2013년	5.55	80.32	6.83	7.30	100.00
2014년	9.45	72.42	6.83	11.30	100.00
2015년	8.94	76.04	5.03	9.99	100.00
2016년	4.31	83.02	3.87	8.80	100.00
2017년	11.82	75.51	3.27	9.39	100.00
2018년	9.22	70.20	7.12	13.46	100.00
2019년	11.71	70.48	5.19	12.63	100.00
2020년	8.60	70.86	4.35	16.19	100.00
2021년	9.81	72.22	2.23	15.74	100.00
2022년	6.94	73.94	3.20	15.92	100.00
2023년	6.06	73.59	3.58	16.78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6-11〉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기업규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중소기업→대기업	중소→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대기업	Total
2011년	5.63	53.91	5.08	35.38	100.00
2012년	5.88	54.70	4.84	34.58	100.00
2013년	5.96	53.16	5.64	35.24	100.00
2014년	5.59	54.61	7.74	32.07	100.00
2015년	4.87	56.82	7.36	30.95	100.00
2016년	6.89	57.22	3.90	32.00	100.00
2017년	4.28	59.12	5.07	31.53	100.00
2018년	5.89	57.84	5.13	31.14	100.00
2019년	6.23	56.02	4.96	32.79	100.00
2020년	6.46	53.29	6.45	33.80	100.00
2021년	5.59	53.73	7.07	33.61	100.00
2022년	5.62	53.88	6.11	34.39	100.00
2023년	6.46	54.25	5.60	33.6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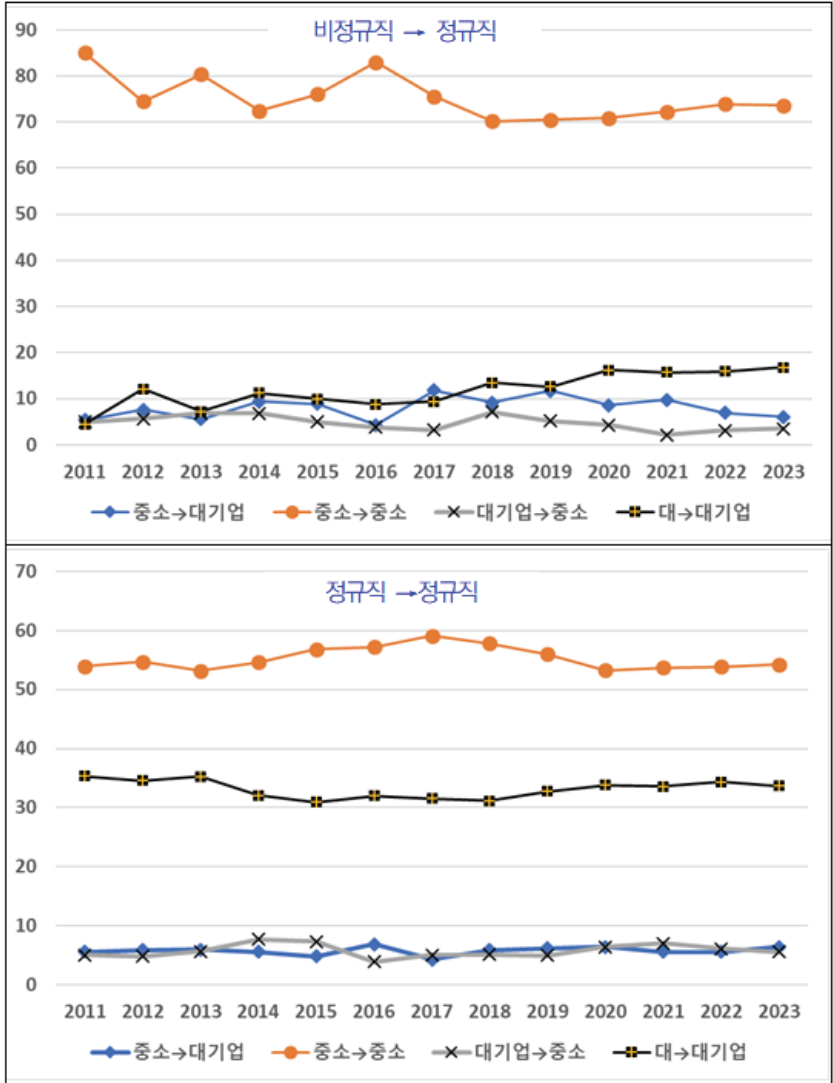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 집단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추이를 보였다.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중소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인 경우보다 그 비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 ‘중소기업→대기업’으로의 이동은 일자리 상향 이동에 해당된다. 이 집단은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근소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정규직 유지 집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은 중소기업 유지 집단이며, 해당 집단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 유지 집단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집단에 비해 집단 내 구성 집단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9]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와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기업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0~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2. 일자리 이동 결정요인 분석: 비정규직→정규직

일자리 이동에 있어 일자리 상향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로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의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항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이항 선택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실시하는데, 본 연구는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여부(1:전환, 0:비전환)의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패널 로짓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면서 아래와 같은 패널 모형으로 가정할 때 오차항 e_{it} 가 정규분포가 아닌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패널 로짓 모형이 된다.²⁵⁾

$$y_{it} = 1, \quad y^*_{it} > 0 \text{인 경우}$$

$$y_{it} = 0, \quad y^*_{it} \leq 0 \text{인 경우}$$

$$y^*_{it} = \alpha_i + \beta X_{it} + e_{it}$$

패널 로짓 모형에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인과관계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 중에서 시간 불변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1로 변수 값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25) 패널 로짓 모형에 대해서는 ‘민인식·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p.253-254, p.251’을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P(y_{it} = 1) = \exp(\beta X_{it} + \alpha_i) / 1 + (\exp \beta X_{it} + \alpha_i)$$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복지패널에는 부모 학력에 대한 변수가 있어 세대 간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아동기(1~17세)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도 있어 부모의 경제력을 파악을 통해 이러한 특성들이 자녀들의 노동 이동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의 첫 직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 부모의 학력과 재산이 대상자의 첫 직장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 종속 또는 성과변수는 고용형태의 변화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t-1기에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t기에 정규직이 될 확률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 특성 부문과 가구 특성 부문 그리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사회이동성 관련 정보 그리고 모형의 추정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직종, 연도, 산업 변수에 대한 터미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에는 응답자의 성별(남성=1)과 연령, 교육수준, 장애 여부(장애 있음=1)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수들은 대부분 시간 불변의 변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패널 로짓 모형에서 확률효과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가구 관련 특성으로는 가구주 여부와 배우자 여부를 적용하였는데 가구주인 경우와 배우자 있는 경우 각각 1의 변수 값을 적용하였다.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있어 직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근속기간을 꼽을 수 있는데 해당 변수는 근속연수를 적용하였다. 한편, 대기업 여부는 응답자의 직장(사업장)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대기업으로, 300명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회이동성 관련 변수로 과거(아동기)의 주관적 경제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적용하였다.

〈표 6-12〉 18차 자료(3~17차와 동일)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고용관계	근로시간 형태	근로계약 유무	근로지속 가능성	구분
직접고용 (=1)	전일제 (=2)	무기계약 (=2)	지속가능 (=1)	정규직
			지속불가능 (=2)	비정규직
		유기계약 (=1)	지속가능 (=1)	
			지속불가능 (=2)	
	시간제 (=1)	-	-	
간접고용 (=2)	-	-	-	
특수고용 (=3)	-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한국복지패널 18차 연도 유저가이드. p.38

종속변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복지패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기준은 위의 표와 같다. 로짓 모형에서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t-1기에 비정규직인 근로자가 t기에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되고 정규직이 되면 1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표 6-13〉 비정규직→정규직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그 내용

종속 변수	고용형태 변화		‘비정규직→정규직’ = 1, ‘그 외’ = 0
독립 변수	개인 특성	성별	남성 = 1, 여성 = 0
		연령	연령 = 태어난 연도 - 응답연도
		교육수준	고졸 미만 = 1, 고졸 = 2, 대졸 = 3, 대학원 졸업 = 4
		장애 여부	장애 있음 = 1, 장애 없음 = 0
	가구 특성	가구주 여부	가구주 = 1, 그 외 = 0.
		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 = 1, 배우자 없음 = 0
	사업장 관련	근속기간	근속기간
		대기업 여부	대기업 = 1(300인 이상 사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함), 중소기업 = 0
	사회 이동성 관련	과거의 주관적 경제수준	가난 = 1, 보통 = 2, 부유 = 3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미만 = 1, 고졸 = 2, 대졸 = 3, 대학원 졸업 = 4
	직종 더미		표준산업 분류 8차 재분류
	연도 더미		2008~2023년
	산업 더미		표준직업 분류 5차 재분류

출처: 저자 작성

아래 표는 비정규직→정규직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주로 개인 및 가구 특성과 사업장 관련 변수들을 활용한 기본모형의 결과로, 대부분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령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본인 학력의 경우 고졸 미만 대비 다른 학력 수준들은 고졸 미만과 비교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인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인 경우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비정규직→정규직 결정요인 분석: 패널 로짓 적용

종속변수(비정규직-정규직: 1)			모형1(기본)		모형2		모형3	
설명변수			Coef	s.e	Coef	s.e	Coef	s.e
개인 특성	성별	성별	0.472 ***	0.073	0.444 ***	0.069	0.496 ***	0.070
	연령	연령	-0.085 ***	0.003	-0.043 ***	0.003	-0.039 ***	0.003
	교육 수준 (고졸미만 기준)	고졸	0.161 *	0.084	0.313 ***	0.078	0.278 ***	0.075
		대졸	0.720 ***	0.095	0.698 ***	0.094	0.733 ***	0.093
		대학원졸	0.554 ***	0.164	0.497 ***	0.159	0.586 ***	0.157
		장애 여부	-0.357 **	0.140	-0.287 **	0.124	-0.286 **	0.124
가구 특성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619 ***	0.073	0.319 ***	0.067	0.304 ***	0.065
	배우자 여부 (유배우 =1)		0.627 ***	0.062	0.371 ***	0.057	0.313 ***	0.056
사업장 관련	근속기간		0.005 ***	0.000	0.003 ***	0.000	0.003 ***	0.000
	대기업 여부 (대기업 =1)		0.684 ***	0.066	0.388 ***	0.065	0.389 ***	0.066
사회 이동성 관련	과거 경제수준 (가난기준)	보통	0.225 ***	0.063	0.159 ***	0.056	0.159 ***	0.055
		부유	0.049	0.107	-0.053	0.094	-0.041	0.092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미만 기준)	고졸	-	-	-	-	-0.015	0.064
		대졸	-	-	-	-	-0.316	0.225
		대학원졸	-	-	-	-	-0.084	0.110
직종 더미			-	-	적용	-	적용	
연도 더미			-	-	적용	-	적용	
산업 더미			-	-	-	-	적용	
상수항			1.169 ***	0.167	1.459 ***	0.203	1.004 ***	0.314

주: * p < 0.1, ** p < 0.05, *** p < 0.01.

출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모형2는 모형1에 직종과 연도 더미 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한 모형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변수들의 부호 방향도 모형1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1에 직종 더미,

연도 더미 그리고 산업 더미 변수를 추가로 적용하고, 여기에 아버지의 교육수준까지 고려한 모형이다. 가장 확대된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모형2와 마찬가지로 모형1과 유사한 부호의 방향성을 보인다. 다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이동과 관련한 변수로 과거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가난’하다고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경제수준, 즉 부모의 경제수준이 현재 응답자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유’하더라고 응답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즉 직업 상향 이동에 있어서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2차 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정책적으로도 근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또는 강화하고 관련 제도 도입과 확대를 기업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경제적 수준이 미래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고용형태는 소득이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이동성의 사다리 유지 및 그 기능의 제고 차원에서 소득수준 유지 및 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삼중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부문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보장 정책 강화로 인해 소득이동성이 최소한 약화되지 않고 미래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체계의 개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5절 주요 결과 및 함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일자리이동통계’ 결과를 통해 노동 이동성 관련 현황과 추이를 살펴본 결과 등록취업자의 경우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지율은 증가하고 진입률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는 비임금근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임금근로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의 경우 진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지율은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노동(일자리) 이동에 대한 역동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측면에서 2020년 이후 정규직 규모는 등락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한시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 추이에 대한 관찰은 임금근로 관련 노동시장 여건과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사회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 차원에서 노동(일자리) 이동 관련 현황 추이를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패널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먼저 동태적 추이를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다소 증가되었다. 한편,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은 등락은 있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규직 집단이 비정규직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용형태 구조가 상당 부분 고착화된 상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 측면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성 비중이 높은 고용형태 측면의 구조적 특징인 성별 차이에 따른 격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집단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정규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30대와 20대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은퇴 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의 증가가, 60대 이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과 정규직 유지 비율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 아동기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가난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 집단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중은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 ‘중소기업→대기업’ 이동 집단은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근소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일자리 이동에 있어 일자리 상향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로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의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연령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의 경우 고졸 미만 대비 다른 학력 수준들은 고졸 미만과 비교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인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인 경우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동 관련 변수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아동기)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가난’하다고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즉 직업 상향 이동에 있어서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2차 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근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또는 강화하고 이를 기업에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의 경제적 수준이 미래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고용형태는 소득이동 및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 차원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이동성 제고로 인한 계층 사다리 유지 및 그 기능의 제고 차원에서 소득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삼중전환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소득이동성이 최소한 약화되지 않고 미래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보장 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7장

교육 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이동성과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분석개요 및 방법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결론

제 7 장 교육 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사회이동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고등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세대 간 불평등 또한 가속되는 추세이다.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유연성은 개인의 성공과 더불어 국가의 성장잠재력으로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계층 이동이 적은 사회는 인적자본이 낭비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회 부족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동기를 저하시키거나 노력의 감소에 영향을 주어 사회 전반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사회이동성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중등단계 학업 성취와 대학 진학 및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1). 즉,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인 요인으로 학교 선택, 사교육, 고등교육의 제공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교육이 사회이동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OECD에서 실시한 2018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출세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는 데 41%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다른 국가의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김준형, 2018). 또한 세대 간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결혼, 교육, 취업, 소득이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각 요인별 실증분석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정책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 3차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으로 이어지는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사회이동성과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자료 및 변수를 기술하였다. 3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앞에서 소개한 이론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2. 연구문제 및 문제제기

본 연구는 교육에 의한 사회이동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가. 현재 교육정책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교육정책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나. 세대 간 교육 수준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특성과 상관성을 분석하여 변화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사회이동성과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이동성은 사회통합의 요소로서 개인이 속한 사회 및 개인에 대한 안녕을 보장할 수 있으며, 상향 이동에 대한 전망으로 사회의 개방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소득이동성과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지위이동성을 지표로 설정하여 많은 연구에서 사회이동성을 다루었다. 상향 이동의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배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김희삼, 2015; 김희삼, 2017; 안병훈, 2022; 정우탁, 1997).

교육이 투입된다는 것은 배경보다 아동의 능력을 통한 사회이동성이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세 무렵 아이의 인지능력 발달을 분석하였을 때 아이의 지능이나 천부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인지능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이가 자라는 배경이 인지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이 투입된다면 저소득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가진 천부적 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희삼, 2015, p.2).

교육은 기회의 균등을 통한 사회적 이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정우탁, 1997, p.158; 한준, 2016, p.67). 저소득층의 자녀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상향 이동을 꾀할 수 있기에 교육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겨져 왔다(김진영, 김성태, 2013, p.62). 특히, 한국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명문대나 고시 합격을 통해 출세하는 사례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표현하거나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는 사회구성원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김희삼, 2017, p.310). 공교육이 보편화되는 흐름이나 고등교육의 확대는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을 통해 사회이동성 기회를 제고하는 시도로 여겨진다.

교육 이동성은 관점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대 내 교육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면 학업성취 이동성이나 교육생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전자는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향상 또는 하락을 측정한 것이다. 후자는 투입 대비 산출된 학업성취도로 나타낼 수 있다. 투입으로는 가정배경이나 사교육 참여 여부 등의 개인 특성이 제안된다(김현철, 이철원, 2013). 현대 사회에서 교육과 사회이동성은 강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교육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력이나 학업수준의 이동을 분석하거나(손현, 2020, p.42),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군,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의 고등학교 유형(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희삼, 2017, p.319).

한편, 교육은 사회이동성이 오히려 사회 계층의 공고화를 만들어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도록 변질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쉽게 공교

육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공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경험에 대한 접근까지 균질하게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장래에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사례가 사회에 만연할수록 보편적인 공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은 축소되고, 사교육과 같은 정규 교육 이외의 교육 경험에 따라 사회이동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 이외의 교육에 대한 접근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 직업, 학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회이동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은 계층의 대물림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김진영, 김성태, 2013, p.62; 김희삼, 2015, p.5).

사회이동성에 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향 이동에 대한 자유경쟁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이 돕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원주, 2013, p.2).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계층의 상향 이동은 부모세대의 배경에 좌우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Boudon, 1973; 여유진, 2008, p.55에서 재인용),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확대한다면, 전반적인 직업적 역량이 향상되어 사회는 점진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종래에는 사회가 계층으로 분화된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격차가 당연시될 것으로 여겨졌다(여유진, 2008, p.55).

Blau와 Duncan(1967)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학교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며 기능론적 시각을 지지하였다(Blau & Duncan, 1967; 여유진, 2008, p.56에서 재인용). Sewell과

Hauser(1975)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해 70% 정도는 교육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나머지 비중은 학교교육과 직업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Sewell & Hauser, 1975; 김병성, 1985, p.28에서 재인용). 이렇듯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기능론에 기반한 낙관주의적 시각이다(여유진, 2019, p.62). 교육기회의 평등이 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국가의 정책은 교육체계의 확대와 복지 강화를 추구하여 교육을 통한 상향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 기능론적 시각이다(여유진, 2008, p.56).

두 번째로는 갈등론적 관점으로 불리며, 교육과 같은 사회 제도는 지배 계급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이동이 나타나기보다 기존의 사회 질서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기회는 불평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교육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이동성의 증가나 사회평등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서원주, 2013, p.3). 기능주의가 꿈꾸는 이상적인 능력사회로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실력 형성에는 사교육이나 부모의 역량에 따른 전략적 개입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하류층 학생이 교육 경쟁에서 밀려 상향 이동의 기회가 점점 축소되고, 그 결과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김준형, 2018, p.3).

Raftery와 Hout(1993)은 ‘MMI(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개념을, Lucas(2001)는 ‘EMI(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들 이론은 상류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계층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하여 갈등론적 시각을 지지한다(박병영 외, 2010,

pp.34-37). MMI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가 자기세대 혹은 그 이상의 교육적 지위를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자원을 총동원하여 자녀의 교육적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류층의 목표 달성은 다른 계층이 교육 체계를 통해 어떤 교육의 기회를 얻는 것을 제한하진 않지만, 이미 다 정해진 상위의 교육적 지위에 중·하류층은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는 상류층이 목표를 최대치로 충족시킨다면, 중·하류층도 높은 교육적 지위를 성취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므로 교육 시설의 확충이나 고등교육의 확대와 같은 접근은 중·하류층의 상향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Hout, 2006, p.238).

EMI는 MMI가 설명하지 못하였던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면밀하게 보완함으로써, 고등교육의 확대가 서서히 교육기회의 평등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제기한다(Lucas, 2001). EMI에서는 유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적 우위를 이용하여 계열이나 학교를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하류층의 선택이 제한되도록 만들어 사회적 불평등이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양적인 차별과 질적인 차별을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회적 배경은 교육 수준의 이수가 보편적이지 않은 단계에서는 누가 해당 교육 수준을 이수할지를 결정하는 양적 차별로, 교육 수준의 이수가 거의 보편화된 단계에서는 그 수준 내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질적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기득권 층의 자녀는 그들의 사회적 배경을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박병영 외, 2010, pp.36-37; 여유진, 2008, p.57; Lucas, 2001, pp.1680-1681).

제3절 분석개요 및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의 관련성과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년패널 2021(YP2021) 3차 자료에서 수집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변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특히, 청년패널 2021(YP2021) 자료는 1차 년도를 기준으로 자식세대 응답자의 연령 분포가 만 19세부터 28세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비교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자료처리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차 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식세대 응답자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수준의 세대 간 상관성 및 이동성 진단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세대의 최종학력에 대한 문항에 결측으로 나타난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최종학력 문항이 존재하며, 두 문항 모두에서 결측이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례를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총 5,606쌍의 부모와 자식세대 쌍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교육 수준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 간 연관성을 탐색할 수 있는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넘어 각 범주 간의 구체적인 연관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유사성과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부모세대 내 소득 수준의 경우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문항에 응답한 응답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응답 범주는 ‘1: 100만 원 미만’~‘8: 1,000만 원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자식세대 내 소득 수준의 경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에 관계없이 월평균 급여(수입)를 소득 수준으로 계산하였다. 동시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에 따른 월평균 급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소득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표 7-1>은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7-1> 원자료에서의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분포

	부모세대		자식세대	
	빈도	(%)	빈도	(%)
100만 원 미만	20	(0.4%)	501	(8.9%)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88	(1.6%)	603	(10.8%)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444	(7.9%)	2,913	(52.0%)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1,000	(17.8%)	1,200	(21.4%)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1,601	(28.6%)	227	(4.0%)
5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1,736	(31.0%)	118	(2.1%)
7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584	(10.4%)	20	(0.4%)
1,000만 원 이상	133	(2.4%)	24	(0.4%)
전체	5,606	(100.0%)	5,606	(100.0%)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다음으로, 부모세대 내 교육 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중 더 높은 수준의 최종학력을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자녀세대 내 교육 수준은 주관적으로 응답한 최종학력을 활용하였으며, <표 7-2>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각각에 대하여 교육 수준의 응답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표 7-2> 원자료에서의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부모세대		자식세대	
	빈도	(%)	빈도	(%)
고졸 미만	93	(1.7)	18	(0.3)
고졸	2677	(47.8)	1940	(34.6)
전문대졸	747	(13.3)	1106	(19.7)
대졸	2015	(35.9)	2474	(44.1)
석사학위 이상	74	(1.3)	68	(1.2)
전체	5,606	(100.0%)	5,606	(100.0%)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년패널 2021 3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교육정책이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의 순서형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 간 구조적 연계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이 소득이동성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와 교육 기회의 격차가 소득불평등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자료 전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을 자식세대 응답자에 대한 단일 변수로 통합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응답을 비교하였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 중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최종학력을 해당 사례에 대한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이고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대졸’인 경우 해당 자녀세대 응답자 사례의 부모 교육 수준은 ‘대졸’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을 단일 지표로 구성하고, 자식세대와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특성을 비교하고,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순서형 일치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교육 수준의 이동성을 바탕으로 세대 간 교육 수준의 계승 경향과 교육 불평등 완화 혹은 심화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세대 간 교육 이동성의 방향성과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자료 분석 절차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및 교육 수준 변인의 하위 범주가 지나치게 많으면 세대 간 분포 및 차이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특정 셀 값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하위 범주별 사례 수와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 7-3>과 <표 7-4>는 각각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모두에 대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변인의 응답 범주를 재범주화한 결과이다.

<표 7-3> 소득 수준 변인을 재범주화한 하위 범주

기존 하위 범주	재범주화한 하위 범주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7-4〉 교육 수준 변인을 재범주화한 하위 범주

기존 하위 범주	재범주화한 하위 범주
고졸 미만	고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전문대졸
대졸	대졸 이상
석사학위 이상	

출처: 저자 작성

추가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교육 수준의 관련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응분석은 범주형 변수 간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통계적 기법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된 이후, 각 범주 간 연관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 수행된다. 즉, 단순한 유의성 검정을 넘어, 어떤 범주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대응분석은 열(행) 범주 간의 유사성과 더불어, 행과 열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 가능하여 범주형 변수 간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각 범주의 좌표(coordinates)와 도표상의 원점(origin) 간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행 변수와 열 변수 간의 관계는 두 점 간의 단순 거리보다는, 각 범주의 좌표가 원점으로부터 향하는 방향성과 그 길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원점에서 행과 열 범주가 유사한 방향으로 위치할 경우, 두 범주 간에는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는 독립적인 경우보다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해당 범주 쌍 간의 연관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제4절 분석결과

1. 설정된 변수별 이동성의 진단: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의 상관성

가. 교육 수준과 소득이동성 간의 관계 분석

〈표 7-5〉는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범주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범주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응답 비율이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이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약 73%, 전문대졸인 경우 약 76%, 대졸 이상인 경우 약 72.9%로 나타났으며, ‘7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1%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표 7-5〉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분포

			자식세대				전체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부 모 세 대	고졸 이하	빈도	554	2022	168	26	2770
		(%)	(20.0%)	(73.0%)	(6.1%)	(0.9%)	(100%)
	전문대 졸	빈도	134	568	39	6	747
		(%)	(17.9%)	(76.0%)	(5.2%)	(0.8%)	(100%)
	대졸 이상	빈도	416	1523	138	12	2089
		(%)	(19.9%)	(72.9%)	(6.6%)	(0.6%)	(100%)
전체		빈도	1104	4113	345	44	5606
		(%)	(19.7%)	(73.4%)	(6.2%)	(0.8%)	(100%)

주: 행 기준 비율을 제시하였음.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한편,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양상을 〈표 7-6〉에 제시하였으며,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른 비율은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 범주에 따른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양상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식의 교육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이 ‘200만 원 미만’과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인 집단은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이 ‘4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과 ‘7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의 이동이 어느 정도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6〉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자식세대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부 모 세 대	200만 원 미만	빈도	50	19	39	108
		(%)	(46.3%)	(17.6%)	(36.1%)	(100%)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빈도	583	304	557	1444
		(%)	(40.4%)	(21.1%)	(38.6%)	(100%)
	4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빈도	1126	665	1546	3337
		(%)	(33.7%)	(19.9%)	(46.3%)	(100%)
	700만 원 이상	빈도	199	118	400	717
		(%)	(27.8%)	(16.5%)	(55.8%)	(100%)
전체		빈도	1958	1106	2542	5606
		(%)	(34.9%)	(19.7%)	(45.3%)	(100%)

주: 행 기준 비율을 제시하였음.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7-7〉은 부모세대 및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그리고 세대 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동일 세대 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의 쌍을 비교하였을 때, 두 변인 중 하나 이상에서 동일한 값을 지닌 동률(tie)은 부모세대에서 28.1%, 자녀세대에서 32.2%로 나타났다. 이는 순서형 응답이 특정 범주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분포 특성은 상관계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Goodman-Kruskal gamma 지수는 동률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상관계수로, 이와 같이 동률이 높은 경우 두 변인 간 연관성을 과잉 추정할 가능성을 존재한다. 이에, 동률을 보정하여 계산되는 Kendall's Tau-b를 주요 해석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모두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 약한 순서 일치성을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 세대 내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이 관찰될 수 있으며, 두 변인이 유사한 수준에서 함께 나타나

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연관성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수준에서 관찰된다는 점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관계에는 일관된 경향이 드러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세대 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상관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소득 수준 간 동률은 22.5%,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교육 수준 간 동률은 33.9%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식세대 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소득 수준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 수준은 자녀의 교육 수준과 매우 약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대 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일치 경향성은 보일 수 있으나 그 순서적 관계는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 수준이 반드시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구조 또한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는 한편,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세대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자녀세대의 지표들과 높은 수준의 순서 일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초기 사회·경제적 위치가 자녀세대의 성취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회 확대와 소득 기반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세대 간 이동 경로의 유연성을 제고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7-7〉 동일 세대 및 세대 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상관분석

변수 쌍 항목	Kendall's Tau-b	Gamma	동률(%)
동일 세대 내			
부모 교육 수준 ↔ 부모 소득 수준	0.269***	0.459***	(28.1%)
자식 교육 수준 ↔ 자식 소득 수준	0.225***	0.423***	(32.2%)
세대 간			
부모 교육 수준 ↔ 자식 소득 수준	0.003	0.005	(22.5%)
부모 소득 수준 ↔ 자식 교육 수준	0.097***	0.162***	(33.9%)

주: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나. 교육기회의 격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간 상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의 이동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mers' D 지수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8〉은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간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Somer's D 지수는 0.003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서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으로의 이동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세대의 교육기회 격차가 자식세대의 소득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자원 이전이 자식의 경제적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의 사회·경제적 이동은 단순히 부모의 교육 수준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8〉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간 상관분석

변수 쌍 항목	Kendall's Tau-b	Gamma	Somer's D	동률(%)
부모 교육 수준 ↔ 자식 소득 수준	0.003	0.005	0.003	(22.5%)

주: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2. 설정된 변수별 이동성의 진단: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상관성

〈표 7-9〉는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45.3%, ‘고졸 이하’가 34.9%, ‘전문대졸’이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454.96$, $p<.001$).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 이하’,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응답 비율이 ‘고졸 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자식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교육 자본의 세대 간 이동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대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교육기회의 격차 측면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7-9〉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차이 검정

			자식세대			전체	χ^2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부 모 세 대	고졸 이하	빈도	1,240	632	898	2,770	454.96***
		(%)	(44.8%)	(22.8%)	(32.4%)	(100%)	
	전문대 졸	빈도	218	188	341	747	
		(%)	(29.2%)	(25.2%)	(45.6%)	(100%)	
	대졸 이상	빈도	500	286	1,303	2,089	
		(%)	(23.9%)	(13.7%)	(62.4%)	(100%)	
전체		빈도	1,958	1,106	2,542	5,606	
		(%)	(34.9%)	(19.7%)	(45.3%)	(100%)	

주: 1) 행 기준 비율을 제시하였음.

2)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다음으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교육 수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10〉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 쌍에 대하여 동률은 48.7%로 부모-자식 쌍에 대하여 동일한 응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수준이 특정 범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Goodman-Kruskal gamma 계수는 동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상관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추정을 위해 Kendall's Tau-b를 주 지표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교육 수준의 상관성과 세대 간 이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성에 방향을 부여하는 Somer's D 지수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간에는 약한 수준의 순서적 일치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Kendall's Tau-b 지수가 약 0.25로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해당 자녀의 교육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Somer's D는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서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으로의 이동성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Somer's D 지수가 약 0.24로 나타나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내포하나, 그 영향력 또한 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 수준에 대하여 세대 간 이동성이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한 수준이며, 세대 간 구조적 이동성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10〉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간 상관분석

변수 쌍 항목	Kendall's Tau-b	Gamma	Somer's D	동률(%)
부모 교육 수준 ↔ 자식 교육 수준	0.245***	0.386***	0.238***	(48.7%)

주: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이후,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간 구체적인 연관 구조 및 패턴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11〉과 [그림 7-1]에 제시하였다. 대응분석은 행 좌표와 열 좌표에 대응하는 각각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원점과 데이터 포인트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포인트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야 어떤 범주끼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7-1]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부모와 자식세대가 같은 사분면 상에 위치하여 부모와 자식세대 모두에서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강한 대응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도 같은 사분면 상에 위치하여 강한 대응관계가 존재하며, 부모세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질수록 자식세대도 대졸 이상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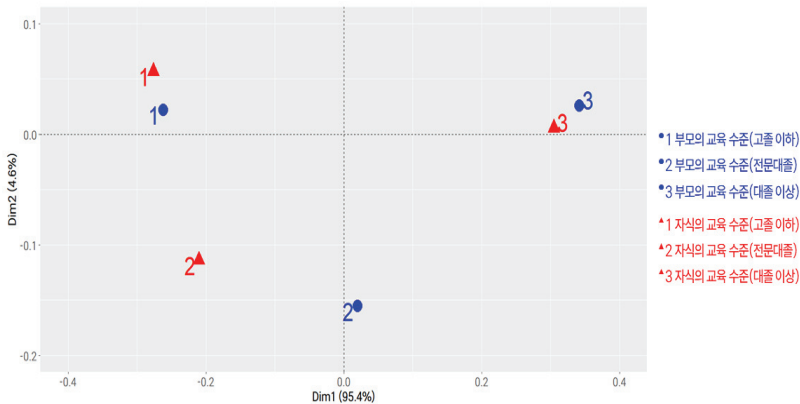
반면,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모두 학력 수준이 ‘전문대졸’인 경우, 원점을 기준으로 부모의 데이터 포인트는 4사분면, 자식의 데이터 포인트는 3사분면에 존재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세대 간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11〉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간 대응분석

	행 좌표(row coordinates)			열 좌표(column coordinates)		
	(공)분산의 양	차원1	차원2	(공)분산의 양	차원1	차원2
고졸 이하 (1)	0.034	-0.943	0.367	0.028	-0.994	0.936
전문대졸 (2)	0.003	0.069	-2.549	0.011	-0.755	-1.870
대졸 이상 (3)	0.044	1.226	0.426	0.042	1.094	0.093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그림 7-1〕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간 대응분석 시각화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7-12〉는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부모세대에서는 ‘고졸 이하’ 집단의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은 37.3%, ‘전문대졸’은 1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2〉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부모세대	
	빈도	(%)
고졸 이하	2,770	(49.4%)
전문대졸	747	(13.3%)
대졸 이상	2,089	(37.3%)
전체	5,606	(100.0%)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또한, 〈표 7-13〉은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를 정리한 것이며,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와 비교하여 다른 분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졸 이상’ 집단이 45.3%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집단이 34.9%, ‘전문대졸’ 집단이 1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3〉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자식세대	
	빈도	(%)
고졸 이하	1,958	(34.9%)
전문대졸	1,106	(19.7%)
대졸 이상	2,542	(45.3%)
전체	5,606	(100.0%)

출처: 청년패널(YP2021) 3차(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제5절 결론

1. 교육에 따른 사회이동성의 결과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 간 교육에 따른 사회이동성의 결과는 일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 교육 수준에 따라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확인되었다.

첫째,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 범주에 따른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분포 양상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식의 교육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부모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 이동이 관찰되었다.

둘째,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내 모두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약한 순서 일치성을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 세대 내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이 관찰될 수 있으며, 두 변인이 유사한 수준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연관성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수준에서 관찰되었으므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 수준이 반드시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간 이동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mers' D 지수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과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 간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교육 수준에서 자식세대의 소득 수준으로의 이동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자원 이전이 자식의 경제적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의 사회·경제적 이동은 단순히 부모의 교육 수준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자식의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자본의 세대 간 이동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대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자식세대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교육기회의 격차 측면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 수준에 대하여 세대 간 이동성이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관련성은 약한 수준이며, 세대 간 구조적 이동성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모세대에서는 ‘고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자식세대에서는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상승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 교육정책의 개혁방향과 사회이동성 증진 방안

교육에 의한 사회이동성 증진은 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전 세대보다 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모세대의 교육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려면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세대의 교육 지원 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소득분위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제도처럼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부모세대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자녀 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내 모두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 약한 순서 일치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교육정책의 개입을 통해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세대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자녀세대의 지표들과 높은 수준의 순서 일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초기 사회·경제적 위치가 자녀세대의 성취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회 확대와 소득 기반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세대 간 이동 경로의 유연성을 제고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자녀세대의 연령별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 사용되었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행정연구원데이터 등을 조사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부모와 자녀세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가구주의 형태로 문항이 설계되어 있어서 가구주의 성별로 부모와 자녀를 유추해야 하는 구조이며, 자녀의 연령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구분 또한 모호하였다. 부모와 자녀 쌍이 확보 가능하더라도 사례수가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둘째,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동시에 수집한 데이터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요인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인데, 변인 중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두 요인이 다 있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의 요인이 자녀가 기억을 회상한 것을 기반으로 한 응답 점수로 수집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셋째,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 변인 유형이 범주형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가 대표적인데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문항이 존재하지만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모두 범주형으로 수집되어 적용 가능한 통계모형이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사회이동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려면 연차별로 동일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 문제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범주형 데이터보다는 수치형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단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다양한 연구 모델을 가정하고 데이터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수치형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같은 직접 간접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사회적 관계 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8장 사회적 관계 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개인 혹은 개인의 부모가 가진 사회적 관계망은 당사자의 사회적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개인의 교육 성취에는 “조부모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김재운, 2009.9.22.)과 같은 가족적 배경이 있다는 씁쓸한 통념을 곱씹어보자. 한 사람의 세속적 성공 배경에는 결국 윗세대의 경제력, 그리고 부모세대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서 정보력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성적 상위권 자녀를 둔 서울 지역 중산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강문정(2017)은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 이행의 핵심적인 고리로 ‘학습 공간으로서의 학부모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또한 질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문정(2017, p88)은 “어떤 학부모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어떤 학습 네트워크를 보유하는가이며, 결국 내가 어떤 학부모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특정한 학부모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은 초등 학부모로서의 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찰은 물론 한국의 특정 지역, 즉 서울에서 다소 극단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사교육과 계급 재생산 관계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어학연수나 사교육과 같은 변수가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작동했다는 실증분석도 다수 제시됐다(김수

혜, 김경근, 2010; 장수명 외, 2016).

2. 사회적 관계의 개념

개인 혹은 개인의 부모가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에 근사한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학계에서 개별적으로 제안됐다. 논의의 맥락도 조금 다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Bourdieu(1985)는 사회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정의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했다(p.248; 정세정 외, 2021, p. 58 재인용). Bourdieu(1985)는 사회자본이 누적된 특정 집단이 이를 대물림하는 과정, 즉 불평등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제시했다.

미국 사회학자들에게 사회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를테면, Coleman(1988)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중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세 가지 형태로 의무와 기대, 정보 경로, 사회 규범을 제시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Putnam(1995, p.67)에게 사회자본은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서,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의미한다. Putnam(1995)은 한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신뢰, 호혜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제시했다.

사회적 이동성의 관점에서 사회자본 개념을 설명하는 시도도 있다. 영국의 Social Mobility Commission(2024, p. 87)은 사회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관계(relationships)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한다”고 정의했다.

사회자본에 관한 이상의 네 가지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의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볼 때, 사회자본의 요소들이 추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utnam(1995)이 논의한 사회자본의 요소 가운데 규범이나 조정과 협력, 신뢰 등의 요소는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규범적인 관계들이 집적됐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자산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ourdieu(1985)와 Coleman(1988)은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또 부모세대가 가진 특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Bourdieu(1985)의 사회자본 개념이 이번 연구에 상대적으로 근접하다.²⁶⁾

이번 글에서도 개인의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관계’ 혹은 ‘네트워크’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Social Mobility Commission(2024)에서도 사회자본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과 ‘관계(relationship)’를 제시했다.

〈표 8-1〉 사회자본의 정의 및 사회적 관계

Bourdieu(1985)	“상호 인식과 인정의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p.248; 정세정 외, 2021, p.58에서 재인용).
Coleman(1988)	사회자본의 세 가지 형태로 의무와 기대, 정보 경로, 사회 규범을 제시
Putnam(1995)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 규범,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를 포함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p. 67)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사회적 연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한다” (p.87)

출처: 필자가 종합

26) 물론, 다른 사회학자들도 사회자본의 대물림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Putnam (2000, p.299)은 “부모의 사회적 자본은 … 재정적 및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언급했다. Coleman(1988) 역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효과가 있다. 자녀 세대의 인적 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지적했다.

3.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에 관한 선행연구

세대 간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선행 국내·외 실증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사회적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그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제한된 관심을 받았다(attracted surprisingly limited interest in the existing literature)”(Brown, McHardy and Taylor, 2014, p. 5).²⁷⁾ 영국의 Social Mobility Commission에서도 사회적 이동을 추동하는 아동·청년기 요인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참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을 꼽았다(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그림 8-1] 참조). 나머지 세 가지는 아동 빈곤 등 아동기 여건, 학교의 질 등을 포함하는 교육기회 및 질, 공석률(vacancy rate) 등 일자리의 기회와 질이다. 영국의 사회이동성위원회는 이렇게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124쪽의 보고서에서 한 쪽만을 사회적 자본 및 연결(social capital and connections)에 할애했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역할은 교육이나 일자리의 역할보다 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더 역동적인 경제와 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p.87)라고만 짧게 언급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요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였만, 그에 대한 근거 제시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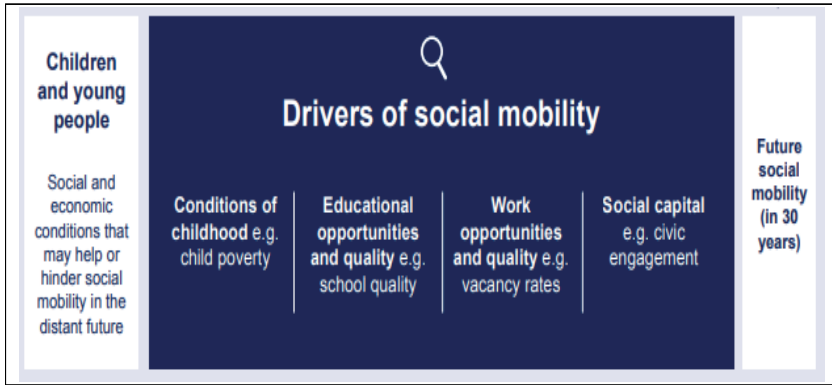
이러한 직관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실제로 희소하다. 관련 연구들을 열췌말로 두루 검색한 결과, 관계망의 대물림에 관한 연구는 세 편 정도만 검색됐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Brown 외(2014)는 이 주제에 관련한 선구적인 연구다. 이들은 영국의 아동발달연구(Child Development

27) 물론, Brown, McHardy and Taylor(2014)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회자본,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은 모두 다른 개념이지만,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관계의 질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Study) 자료와 미국의 소득동태패널조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활용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2007년 소득동태 패널조사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자료가 확보된 1,020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과거 및 현재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현재 자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부모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 스포츠,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범주의 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시간으로 측정됐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참여하는 클럽 수로 측정됐다. 통제변수로는 자녀의 친구 수, 자녀가 소유한 서적 수 외에도 부모의 학력,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도 포함됐다. 결과를 보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친구 수, 부모 학력, 부모 재력(주택 소유 유무)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2007년 기준으로 세 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해 있을 경우, 자녀가 같은 해 세 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했을 확률이 14%p 증가하였다. 영국의 패널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그림 8-1] 영국 사회이동성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회이동성의 동인

(단위: %)



출처: “Drivers of Social Mobility”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p. 19.
<https://socialmobility.independent-commission.uk/app/uploads/2024/09/State-of-the-Nation-2024.pdf>

Okumura & Usui(2010)의 연구는 부모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 자녀의 사회성(sociabilit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NLSY79) 자료를 활용했다. 여기에서 부모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업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DOT)의 직업 특성을 사용하여 부모의 대인 기술을 대리 측정했다. 이러한 대리 측정은 Borghans 외(2008)가 개발한 대인 상호작용의 할당 모델에 근거한다. 즉, 근로자의 행동이 직무 환경과 근로자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그리고 자녀의 교육 수준과 인지 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DOT 대인 기술 변수들 가운데 다수가 자녀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Duncan 외(2005)도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말로 치면 ‘부전자전(父傳子傳)’에 해당하는 제목이다. 이들은 미국의 전국청년종단조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등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17가지 특성의 대물림 양상을 분석했다. 17가지 특성으로는 마리화나 복용 경험, 15세 이전 성경험, 수학 성적, 자존감 등이고, 여기에 학교 동아리 참여 경험도 포함됐다. 이 연구의 초점은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청소년기에 학교 동아리에 참여했다고 답한 경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딸의 청소년기 학교 동아리 참여 승산(odds)이 1.85배 높았다. 다른 통제 변수, 즉 다른 16가지 다른 특성과 행동, 연령, 인종/민족을 포함하면, 승산비(odds ratio)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39로 감소했다.

〈표 8-2〉 사회적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자료	부모의 네트워크	자녀의 네트워크
Brown et al.(2014)	영국 CDS 1981, 1991	부모의 참여 클럽 수 (1981, 1991년 기준)자	자녀의 참여 클럽 수 (1991년 기준)
	미국 PSID 1997, 2007	부모의 참여 클럽 수 및 참여 시간 (1997, 2007년 기준)	자녀의 참여 클럽 수(2007년 기준)
Okumura & Usui(2010)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NLSY79).	부모의 DOT 대인 기술 변수 (미국 노동부의 직업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DOT) 분류 기준)	자녀의 사회성 관련 주관적 응답 참여 클럽 수 (고등학교 때)
Duncan et al. (2005)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1984*, the Children of the NLSY (CNLSY) 1984년 이후	부모의 학교 클럽 참여 경험(1984년 기준)	자녀의 참여 클럽 수(1984년 이후)

주: Duncan et al. (2005)에서 부모의 특성 대부분은 NLSY 1979년 자료를 활용했지만, 학교 클럽 참여 경험은 1984년 자료를 활용함.

출처: 연구진이 종합해서 작성함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있다. 미국에서 자녀의 인적 네트워크를 묻는 항목으로 자주 활용되는 ‘참여 클럽 수’를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클럽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고등학교 문화에서 클럽과 한국의 ‘동아리’가 의미하는 바가 같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Okumura & Usui(2010, p7)가 활용한 NLSY 설문지에서 제시된 클럽은 다음과 같다. “① 스카우트, YMCA, Junior Achievement와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② 사진이나 역사 같은 학교에서 후원하는 취미 또는 주제 관련 동아리, ③ 학생회 또는 학생 자치회, ④ 연감, 학교 신문, 잡지, 안내서 등의 제작진, ⑤ 응원단과 응원 동아리를 포함한 체육 활동, ⑥ 밴드, 연극,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공연 예술, ⑦ 전국 우등생 협회 또는 학업 성취 동아리,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관계 혹은 네트워크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는 흥미롭게도 동물 사회에서도 관찰됐다(Ilany et al., 2021).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연구팀은 27년에 걸쳐 수집된 야생 점박이하이에나 73,767건의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하이에나 사회에서 관계의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속 과정이 자손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자손과 다른 하이에나들 사이의 관계는 최대 6년 동안 어미의 관계와 유사성을 보이며, 이 유사성의 정도는 어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했다. 야생의 동물들도 적대적 혹은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위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계를 상속받음을 확인한 연구였다.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및 대물림에 관한 국내연구는 희소하다. 아직까지 관련 주제가 학계의 주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계의 무관심과는 무관하게도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의 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첫째,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한국에서 가장 낮은 80.5%였다(OECD, 2024). 열 명 가운데 두 명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이 90.4%였고, 한국 다음으로 비율이 낮은 터키의 비율은 84.5%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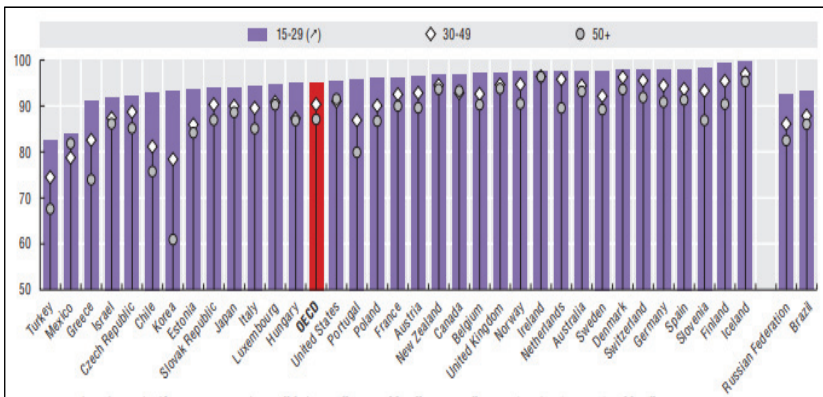
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관계의 질이 낮다고 이해하는 것은 다소 선부른 해석일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90%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고,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80%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열 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지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도움 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 즉 ‘주관적 측면에서의 관계적 취약계층’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세대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크다. OECD (2016)를 보면,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한국의 청년층(15~29세 기준) 가운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93.3%로 OECD 평균(95.2%)에 근접했다(〔그림 8-2〕 참고).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악화해서 50세 이상 집단 가운데 비율이 60.9%로 떨어졌다. 다른 OECD 회원국과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결과에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그림 8-2〕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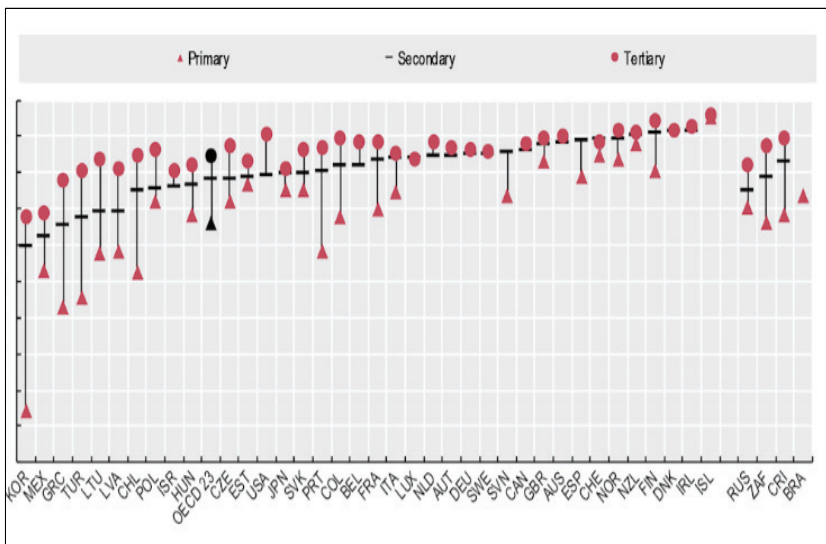


출처: “7.13. Social Support is highest amongst youth. OECD, 2016,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6/10/society-at-a-glance-2016_g1g6c2d1/9789264261488-en.pdf

셋째,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관계의 불평등 수준도 한국에서 높다. OECD(2020)를 보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학력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등 교육만 받은 사람이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 9%p 낮았다. 그 차이가 한국에서는 30%p 가까이 벌어졌다. 반면, 스위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격차가 2%p 미만이었다. [그림 8-3]을 보면, 한국(그림에서 가장 왼쪽)의 차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3]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단위: %)



출처: “How’s Life? 2020” OECD. 2020, Figure 11.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ow-s-life/volume-/issue-_9870c393-en/full-report/component-14.html#chapter-d1e14471

한국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종합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적 취약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연령 혹은 코호트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세대 내 관계의 이동성은 부정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해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 관계의 세대 간 이동성은 경직적일 가능성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겠다.

제2절 분석결과

1. 활용자료 및 분석개요

부모와 자녀세대의 관계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국내 자료는 희소하다. 특히, 미국처럼 시계열이 긴 패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선행연구(Okumura & Usui, 2010; Brown et al., 2014)와 같은 관계의 대물림에 대해 시차를 둔 자료를 활용해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국내 자료 가운데 연구 주제와 근접한 문항을 담은 자료는 사회조사다. 사회조사는 사회적 관계망 및 참여에 관한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사회조사 자료는 2009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현재 부모의 네트워크와 자녀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인 및 분석했다.

자료의 분석에서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다. 미국의 관련 연구를 보면, 부모의 현재 참여 클럽 수를 관계의 대물림 측면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Brown, McHardy, and Taylor, 2014). 현재 자녀의 클럽 참여를 돕다가 부모가 클럽에 참여하는 식으로 역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조사 분석에서는 부모의 네트워크와 자녀의 네트워크를 다른 문항을 활용해서 확인했다. 부모

의 경우에는 흔히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하는 설문인 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통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참고로, 사회조사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가사 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 복지 단체의 활동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p.8)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에는 서구와 같은 클럽 참여에 관한 문항은 없다. 다만, 사회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문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참여 문항을 살펴보았다.²⁸⁾ 첫째, 단체 참여 문항이다. 설문에서는 아홉 개 유형의 단체에 지난 1년 동안 참여 여부를 물었다. 아홉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친목·사교, ② 종교, ③ 취미·스포츠·여가, ④ 시민사회, ⑤ 학술, ⑥ 이익, ⑦ 정치, ⑧ 지역사회, ⑨ 기타 등이다. 그리고, 아홉 개 유형 단체에 참석 여부를 더미변수로 해서 합한 ‘단체 참석’ 변수를 생성했다. 여기에는 별도의 문항인 지난 1년 동안의 ‘기부 여부’도 추가했다. 기부도 하나의 참여 형태로 간주했다. 해당 문항 응답에 관한 기초통계량은 <표 8-3>에서 제시했다. 둘째,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이다. 여기에서도 아홉 가지 유형의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관람 횟수를 설문했다. 전체 관람 횟수를 합한 ‘문화 관람’ 변수도 만들었다.²⁹⁾

28) 청소년 혹은 청년자원봉사 활동도 고려할 수 있었다. 실제로,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3개의 자원봉사 참여 형태에 대한 참여 횟수를 각각 설문했다. 전체 참여 횟수를 합한 변수로 ‘자원봉사’ 변수도 생성해서 실제 분석도 수행했다. 그렇지만, 보고서 집필 단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은 네트워크 참여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교 환경이나 진학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점(이용관, 2015)을 고려했다. 둘째, 자녀의 단체 참석이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이 부모의 사회적 자본과 일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자녀의 자원봉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부모의 경우, 어려움에 처할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로 네트워크를 확인했고, 자녀의 경우 세 가지 참여 유형에 따라 참석 변수를 생성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물론, 두 가지 네트워크의 성격이 다르다.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사회 참여가 누적되면서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그 결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자, 즉 다양한 사회 참여를 네트워크 I로 명명하고, 그에 따라 누적된 지지망을 네트워크 II로 조작적 정의하겠다. 이번 분석에서는 부모의 네트워크 II와 자녀의 네트워크 I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녀의 현재 다양한 유형의 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I이 부모가 인생 경로를 통해 누적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부모가 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녀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이번 분석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뒀다. 즉, 관계 및 네트워크의 대물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이다.

소득의 경우, 사회조사에서는 가구 단위의 소득을 범주로 설문했다. 이럴 경우, 가구규모를 고려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1인 가구의 소득 400만 원이 4인 가구에게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계층의식에 대한 답변 문항을 활용했다. 설문지에서는 ‘귀하의 사회 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에서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의 여섯 범주로 나누어서 설문했지만, 자료에서는 상중하의 세 가지 범주로만 제시됐다.

29) 사회조사에서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항목에서 ‘지난 1년 동안 참여 횟수’를 설문하면서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일부는 0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과정에서는 이들을 모두 0으로 간주했다.

자녀와 부모의 경우, 분석 대상자를 한정했다. 자녀의 경우, 만 13~24세 동거 자녀에 한정해서 동거하는 부모와 본인의 네트워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나이를 이와 같이 한정한 이유가 있다. 먼저 하한을 13세로 둔 이유는 사회조사가 설문 대상을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녀의 연령 상한을 24세로 둔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사회조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25세 이상 청년을 포함할 경우, 해당 연령대에서 부모로부터 가구 분리한 청년은 분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즉, 25세 이상의 자녀는 상당수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참고로, 이원진 외(2022)에 따르면, 25~26세 청년의 74~83%는 정규교육을 완료하였고 65%는 취업하면서, 33% 이상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³⁰⁾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네트워크 정보를 담은 부모와 24세 미만 자녀가 있는 동거 가구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다.

부모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의 부모를 대상자로 모두 포함했다.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녀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부모와 자녀의 참여 및 네트워크 관련 변수를 종합해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면 <표 8-3>과 같이 나타난다.

30)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13~24세 자녀의 수는 3,254명이 추출됐다. 이들은 모두 부모 중에 한 명이 가구주인 가구원이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주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해당 집단은 13~24세 대상 설문문항에 응답하지 않고, 가구주 설문문항에 응답했기 때문이다(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표 8-3〉 부모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와 기초통계

	변수 정의	사례수	평균	분산	최소	최대
자녀의 네트 워크 I	① 단체 참여 (지난 1년 동안 아홉 개 유형의 단체 혹은 기부 참여 여부 더미 변수의 합)	3,254	1.05	1.20	0	8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지난 1년 동안 아홉 개 유형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의 합)	3,254	6.21	8.15	0	105
	③ 자녀의 네트워크 I (위의 ①, ② 변수의 합)	3,254	8.47	9.77	0	106
부의 네트 워크 II	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989	1.71	1.68	0	12
	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989	1.14	1.51	0	15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989	2.19	2.33	0	20
	④ 부의 네트워크 II (위의 ①, ②, ③ 변수의 합)	1,989	5.04	4.59	0	40
모의 네트 워크 II	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2,206	1.73	1.68	0	20
	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2,206	1.15	1.62	0	20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2,206	2.45	2.21	0	20
	④ 모의 네트워크 II (위의 ①, ②, ③ 변수의 합)	2,206	5.34	4.57	0	60

주: 사회조사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 분석결과

먼저,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네트워크 추이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부모의 네트워크 II 변수, 즉 앞서 ①~③ 유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인 수의 합에 따른 비율을 <표 8-4>에 제시했다. 이렇게 부모의 네트워크 II 변수에 따른, 자녀의 ① 단체 참여 및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건수의 차이를 분석했다. 먼저 단체 참여를 보면, [그림 8-4]와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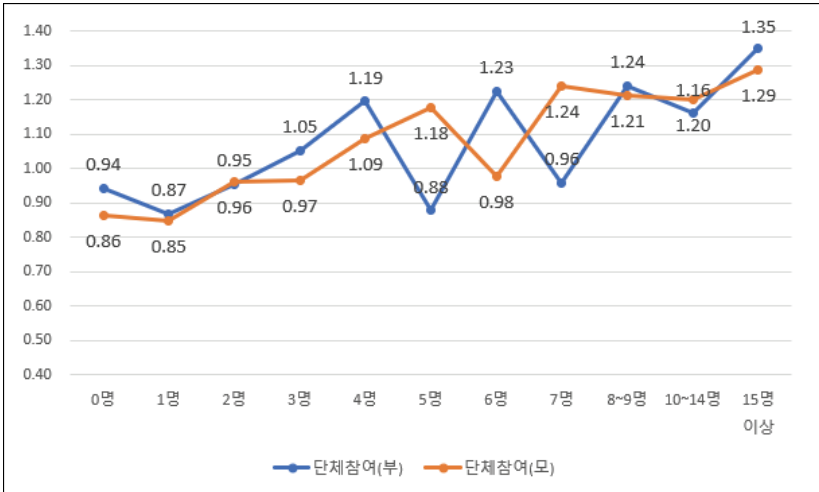
<표 8-4> 부모의 네트워크 분포

아빠의 네트워크 II		엄마의 네트워크 II	
세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줄 사람의 수 ¹⁾	비율 (%)	세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줄 사람의 수	비율
0명	13.41	0명	9.49
1명	5.79	1명	6.43
2명	11.45	2명	9.62
3명	13.36	3명	12.56
4명	9.48	4명	10.51
5명	8.22	5명	9.20
6명	11.16	6명	11.98
7명	6.63	7명	7.16
8~9명	7.83	8~9명	10.50
10~14명	8.77	10~14명	8.73
15명 이상	3.90	15명 이상	3.81

주: 1) <표 8-3>에서 ①~③ 유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인의 수의 합.

2) 사회자료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그림 8-4]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단체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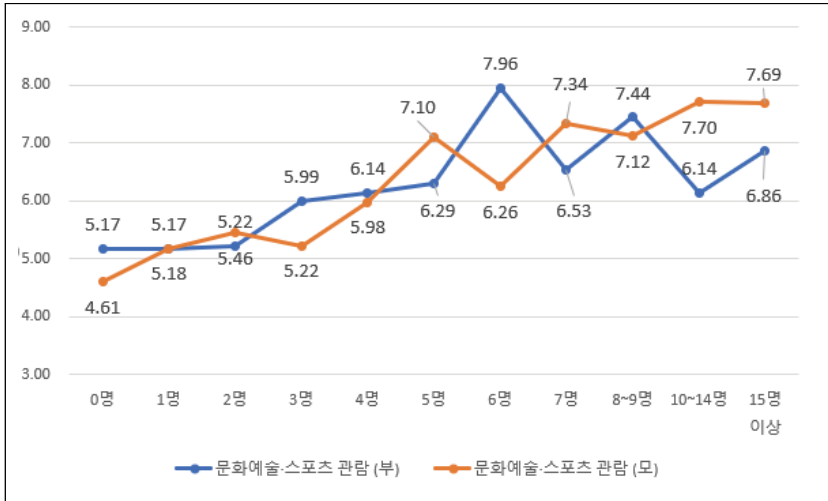


주: 사회자료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먼저,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단체 참여 여부를 보았다. 여기서 단체 참여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아홉 가지 유형의 단체에 참석한 경험을 더미변수로 생성해서 더한 값이다. 아홉 개 유형을 모두 더해도 1.05에 불과했다. 바꾸어 말하면, 1인당 한 개 유형의 단체에는 참석했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학술단체 참여 경험은 8%에 불과했다. 부와 모 모두에게서 이들의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자녀의 단체 참여 유형은 완만히 증가했다. 이런 집단별 단체 참여 유형의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물론, 부모의 네트워크가 4~9명인 영역에서는 평균에서 일관성 없는 증감이 있는 점도 관찰된다. [그림 8-5]는 부모의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자녀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의 추이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도 부와 모 모두에게서 네트워크가 확장할수록 자녀의 관람 횟수는 증가했다. 집단 사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8-5]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주: 사회자료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다음으로, 부와 모의 네트워크 측정 변수 네 가지(① 몸이 아플 때, ② 큰돈이 필요할 때, ③ 우울할 때, ④ ①~③ 변수 값의 합)와 자녀의 네트워크 측정 변수 세 가지(① 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④ ①, ②의 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표 8-5〉와 〈표 8-6〉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면, 부와 모의 모든 네트워크 변수와 자녀의 모든 네트워크 변수 사이들 사이에서 예외 없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현재 단체 참여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경험이 부모의 누적된 사회적 네트워크에 시간을 거슬러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관계망 혹은 네트워크가 현재 자녀의 사회 활동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표 8-5〉 아버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 사이 상관관계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③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② 의 합)
부의 네트워크 II	① 몸이 아플 때	0.079 (0.000)	0.054 (0.004)	0.064 (0.001)
	② 큰 돈이 필요할 때	0.059 (0.002)	0.047 (0.012)	0.054 (0.004)
	③ 우울할 때	0.056 (0.003)	0.051 (0.007)	0.057 (0.002)
	④ 부의 네트워크 II (①~③ 변수 값의 합)	0.077 (0.000)	0.061 (0.001)	0.070 (0.000)

주: 사회자료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표 8-6〉 엄마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 사이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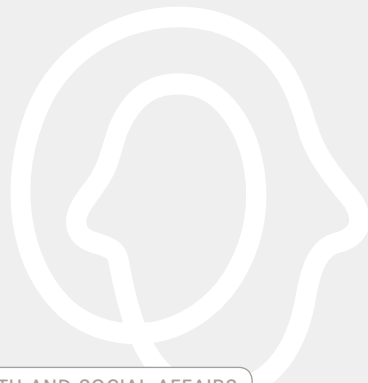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③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② 의 합)
모의 네트워크 II	① 몸이 아플 때	0.066 (0.000)	0.077 (0.000)	0.084 (0.000)
	② 큰 돈이 필요할 때	0.079 (0.000)	0.053 (0.003)	0.062 (0.001)
	③ 우울할 때	0.083 (0.000)	0.060 (0.001)	0.070 (0.000)
	④ 모의 네트워크 II (①~③ 변수 값의 합)	0.093 (0.000)	0.076 (0.000)	0.087 (0.000)

주: 사회자료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녀의 사회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관련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서 희소했다. 소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자녀의 사회 활동, 특히 학교에서의 클럽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세대 간 전이성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다. 경제적 자본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도 세대를 넘어 이동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로 측정된 사회적 관계망(네트워크 II)과 자녀의 단체 참여 및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경험(네트워크 I)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의 관계망이 클수록 자녀의 사회 참여 및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도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대물림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은 OECD 국가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과 학력에 따라 관계의 양극화가 극심한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제9장

장애인의 사회이동성 진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세대 내 이동

제4절 분석 결과: 세대 간 이동

제5절 소결

제9장 장애인의 사회이동성 진단

제1절 들어가며

1. 문제제기

이 장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사회이동성 분석의 틀을 고수하면서도, 장애(손상)를 가졌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사회이동성의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의 사회이동 현황에 장애라는 제3의 요인을 고려하여 어떠한 다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이동을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대별할 때, 장애인의 세대 내 사회이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성 현황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성 현황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장애인의 세대 내 이동에는 개인의 생애기간 동안 발생한 후천적 장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이동에서는 장애라는 특성을 부모세대에게서 관찰할 것인지, 자녀세대에서 관찰할 것인지로 구분하여 양쪽을 공히 살펴볼 필요 또한 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한 장애(손상), 그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건강상태가 세대 간에 어떻게 대물림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의 세대 간 이동성의 기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다.

장애인의 사회이동성 진단을 위해 상기 언급한 분석의 차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본다. 첫 번째, 세대 내 이동성의 차원에서는 장애인 개

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이동성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생애 과정에서 장애 발생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이동의 급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데이터에서 장애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 선천적 장애를 포함 - 기존 장애인의 사회이동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의 직업 지위는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열악하다. 그리고 생애 과정에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2차 조건³¹⁾으로 인해 소득과 직업 지위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의 세대 내 이동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는, 개인이 후천적 장애를 입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소득 및 직업 지위의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 발생(disability onset)이 야기하는 경제적 취약성 증대 및 빈곤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세대 내 이동은 급격한 하방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장애를 고려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장애인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사회이동성, 다른 하나는 부모세대와 장애인 자녀세대 간 사회이동성이다.

우선 부모세대의 장애 여부에 따라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비장애인이 겪지 않는 불리함에 노출됨으로써 자녀세대의 계층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검증하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31) 화이트넥(Whiteneck, 2006)은 장애로 인해 또 다른 질병과 손상, 기능제한, 중복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장애에 의한 2차 조건(secondary conditions)이라 정의한 바 있다.

부모세대와 장애인 자녀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고찰하는 작업은 자녀세대 장애인의 계층적 지위가 부모세대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부모세대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완화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자녀의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부모세대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손상)나 열악한 건강상태의 세대 간 대물림은 건강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장애와 사회이동성의 기저에 작용하는 주요한 차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건강 혹은 장애 발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장애(손상)를 갖는다는 것은 확실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실증하는 여러 연구의 이론적·실무적 전통에 기반하여 부모세대의 장애 여부와 자녀세대의 장애 여부 관계, 혹은 부모세대의 장애 여부에 따른 자녀세대의 건강상태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상기 언급한 세대 내 이동성의 두 가지 차원, 세대 간 이동성의 두 가지 차원, 장애(손상)의 대물림까지 모두 다섯 가지 차원에서 장애인의 사회이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세대 간 이동성과 세대 내 이동성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실증 연구의 역사를 감안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장애인의 사회이동성 연구는 장애의 부정적 효과, 특히 부모의 장애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에 주목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Jajtner(2020)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장애의 부정적 효과(부모의 장애)를 PSID 표본 중 1959~1984년 출생자 중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자녀 3,687명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장애의 부정적 효과는 소득 하위층, 여성, 비 히스패닉 백인 가정에서 더욱 크며,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이러한 영향이 완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라 할 수 있는 Jajtner et al.(2023)에서는 부모의 장애(work-limiting disability)가 자녀의 경제적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의 정책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는데, 이 정책이 장애로 인한 자녀의 이동성 감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가 초기에 장애 보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동성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Chatzitheochari et al.(2022)는 장애와 사회계층이 결합하면 초기 성인기의 사회이동성이 심각하게 제한됨을 실증하고, 사회계층 불평등과 장애로 인한 이중 불이익(double disadvantage) 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를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부모의 사회계층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비록 적은 연구를 제한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장애와 세대 간 이동성을 연구함에 있어, 이들 연구 또한 부모의 장애, 자녀의 장애, 그리고 부모세대와 사회계층과 부모 혹은 자녀 본인의 장애를 함께 고려하는 틀을 고민하면서 분석의 초점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공통점으로는 당시 부모세대의 시점 정보와 현재 자녀세대의 시점 정보를 결합하여 비교적 단순한 OLS 회귀분석 혹은 기술통계를 수행하고, 경제적 성취의 주요한 지표인 소득은 백분위 값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Jajtner(2020)의 연구는 장기간의 시계열을 지닌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경우 대규모의 행정데이터(Jajtner et al., 2023) 혹은 대형 코호트 조사(Chatzitheochari et al., 2022)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상당히 적은 표본을 이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이 장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장애인의 세대 내 사회이동성 연구는 최근 연도의 국내 연구를 참조할 수 있었다. 임금근로장애인의 소득이동을 연구한 조윤화와 서동명(2024)은 한국장애인고용패널조사 1~5차(2007~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를 지속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의 순위 이동과 양적 이동을 살펴보았다. 상대적 소득이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상하위 계층 간 역이동은 제한적이었다는 점, 소득분위의 이행은 인접 분위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어 이동이 고착화되었으며, 중산층 이하 집단의 분위이동은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성민(2010)은 한국노동패널의 장애인 가구주 221명(가구)을 대상으로, 비장애인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계급 분포, 계급 이동, 빈곤화 경로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가구주는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아 빈곤 위험이 큰 계층에 분포하였다는 점, 계급의 상향 이동이 제한적이면서도 하향 이동이 두드러졌다는 점, 장애인 가구는 계급 고착과 하향 이동으로 빈곤 탈출이 어렵다는 점을 주된 연구 결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차원 중 하나인 장애 발생과 세대 내 이동은 Collischon et al.(2025)를 참고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장애 발생(disability onset)이 노동시장 성과(고용, 임금 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독일 연방고용청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2005~2013년 사이에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 148,660명과 비장애 대조군 624,439건을 선별하여 매칭하였다. 그 결과, 장애 발생 1년 후 고용률은

10.3%p 감소, 5년 후 16.3%p 감소하였고, 연소득(annual earnings)은 장애 발생 5년 후 약 41%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중증장애, 고령 장애인, 저숙련 근로자 집단에서 노동시장 성과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제2절 연구방법

1. 자료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19차 가구 및 가구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05~2023년이다. 선행연구에서 마주한 한계도 이 연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장애를 가진 표본 수가 이용가능한 장기간의 패널 자료에서는 적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이동성 분석을 수행할 때, 특정 시점(예: 2005년과 2023년의 비교)을 설정하지 않고, 자녀의 독립 전후 시간 갭을 설정하고, 자녀세대를 기준으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는 Jaitner(2020)의 표본 구성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의 초기 성인기를 설정하여 그와 동거 혹은 비동거 중인 부모를 매칭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자녀세대는 30세 이상을 성인기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부모세대는 연령의 상한을 두지 않고 관찰이 가능한 패널의 가장 초기 시점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자녀세대의 미성년 시점과 성인기 시점의 간격은 7~18년이 존재하도록 설정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가 23세 이하인 경우에 측정된다.

2. 변수 정의와 측정

한편, 미등록 장애(보훈처 등록 장애 포함)도 장애로 정의하였다. 이는 제한된 장애인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녀세대와 부모 세대의 장애 현황을 사전 분석하여 결정한 것이다. 데이터에서 자녀세대의 연령대에서는 미등록 장애로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부모세대의 연령대에서는 미등록 장애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 상 법정 등록 장애가 아니라 실질적 장애라는 조건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소득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균등화, 소득분위는 가구 데이터의 분포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가구원 개인에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교육 수준과 종사상 지위는 유효 표본 확보를 위해 범주의 수를 최소화하였다.

3. 분석 방법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가중값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장의 모든 분석에서 가중값은 자녀세대의 정보가 측정된 시점의 가중값을 적용하였다. 다만, 세대 간 이동성 분석에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시점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분석 개체는 서로 다른 연도의 가중값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연도별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가중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세대 간 이동성 분석에서는 가중값을 적용하지 않았다. 전체 표본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매칭되는 경우만으로 표본 수를 상당히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전 분석한 결과 가중값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제3절 분석 결과: 세대 내 이동

1. 중고령기 소득분위 이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가. 가처분소득

2007년 당시 비장애인이었던 40~64세 코호트의 상향 이동은 36.7%, 유지는 30.2%, 하향 이동은 33.1%로 나타났다. 상향 및 하향 이동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 변화가 양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다.

〈표 9-1〉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3.4	2.0	2.1	1.2	1.1	9.7
	2	3.4	5.3	4.8	5.3	2.4	21.2
	3	2.2	5.2	4.6	5.2	4.6	21.7
	4	1.4	3.9	4.9	5.2	8.1	23.5
	5	0.6	2.9	3.5	5.1	11.8	23.9
Total		11.0	19.2	19.8	22.0	28.0	100.0

주: n= 2,647.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2007년 당시 장애인이었던 표본의 경우, 상향 이동은 36.4%로 유사하였고, 유지 비율이 36.6%, 하향 이동은 27.0%로 나타났다. 이동의 방향성만 본다면 하향 이행은 적었지만, 56~80세 이르러 위치한 소득분위의 위치는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하다.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25.2%, 29.7%를 차지하며, 5분위는 14.8%에 그친다. 또한 상향 이동이 비장애인과 유사하고 하향 이동 비율이 적은 것은 40~64세 당시의 소득분위 자체가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으로, 당시 1분위가 30.9%, 2분위가 32.9%를 차지하였다.

〈표 9-2〉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장애인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14.8	7.5	6.6	0.3	1.6	30.9
	2	7.5	10.6	8.4	2.1	4.3	32.9
	3	1.7	6.6	1.6	3.5	1.3	14.7
	4	1.2	2.9	1.8	2.7	0.6	9.3
	5	0.0	2.1	1.8	1.4	6.9	12.2
Total		25.2	29.7	20.2	10.0	14.8	100.0

주: n= 292.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2007년 당시 40~64세였던 코호트가 16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중도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따로 추출하여 소득분위의 이행을 살펴보았다. 소득이동은 이미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경우보다 만성질환이나 사고 등 모종의 이유로 인해 장애(손상)를 입게 된 경우 보다 클 것이다.

중도장애가 발생한 표본에서는 소득분위의 하향 이동이 43.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상향 이동은 18.5%에 그쳤다. 유지 비율은 38.5%였다. 중도장애를 입은 장애인이 56~80세에 이르러 가장 많이 위치한 소득분위는 1분위(31.6%)와 2분위(27.5%)로 59.2%를 차지한다.

〈표 9-3〉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이 중도장애를 입은 경우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9.8	4.1	1.6	0.8	0.0	16.3
	2	16.0	6.0	2.8	2.2	0.7	27.7
	3	2.9	9.0	3.1	0.5	1.8	17.2
	4	2.0	6.8	2.1	11.2	4.0	26.0
	5	1.0	1.6	1.6	0.0	8.5	12.7
Total		31.6	27.5	11.2	14.7	15.0	100.0

주: n= 146.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나. 개인 노동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 소득분위 이행에 비해 개인의 노동소득 분위 이행을 살펴보면, 중고령기 소득이동의 방향성 자체는 하방 이동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40~64세 당시 비장애인이었던 집단도 상향 이동은 15.6%로 상당히 적고, 유지 비율이 42.3%, 하향 이동은 42.0%를 나타낸다. 노동소득은 은퇴가 이루어지는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지와 하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56~80세 시점에는 1분위가 34.0%로 가장 많으며, 상위 5분위는 14.1%에 불과하다.

〈표 9-4〉 노동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15.8	3.5	4.3	0.9	0.6	25.1
	2	0.3	0.1	0.0	0.0	0.0	0.4
	3	6.6	3.3	8.2	2.8	0.9	21.8
	4	5.8	1.6	7.6	8.3	2.6	25.9
	5	5.5	1.5	3.9	6.1	9.9	26.8
Total		34.0	10.0	23.9	18.1	14.1	100.0

주: n= 2,654.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40~64세 당시 장애인인 경우 상향 이동은 16.1%로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유지는 50.4%, 하향 이동은 33.5%로 이동의 방향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56~80세 시점의 1분위 비율이 58.8%에 달하며, 5분위에 속한 비율은 7.3%에 그친다. 수치상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16년 전에 위치한 소득분위가 하위 분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9-5〉 노동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장애인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37.9	3.4	3.4	4.4	0.0	49.0
	2	2.8	0.1	0.1	0.0	0.0	3.0
	3	9.5	1.6	6.0	0.3	0.5	18.0
	4	4.6	3.4	5.0	3.8	4.0	20.8
	5	3.9	0.0	1.8	0.7	2.7	9.2
Total		58.8	8.4	16.3	9.2	7.3	100.0

주: n= 294.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16년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한 집단은 세 집단 중 가장 불리한 이동 구조를 보인다(상향 이동 10.8%, 유지 42.5%, 하향 이동 46.6%). 특히 56~80세가 된 시점에서 1분위에 속한 비율이 48.8%, 2분위까지 포함하면 65.1%로 다수를 차지한다.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하면, 빠른 은퇴를 하거나 노동시장 재진입이 제한되는 등 소득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9-6〉 노동소득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이 중도장애를 입은 경우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22.8	6.4	1.2	0.0	0.0	30.4
	2	3.7	0.3	0.0	0.0	0.0	4.0
	3	8.6	7.9	3.1	0.0	0.0	19.6
	4	8.5	0.8	6.7	6.2	3.3	25.4
	5	5.1	1.0	1.8	2.6	10.2	20.6
Total		48.8	16.3	12.7	8.7	13.5	100.0

주: n= 146.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다. 총자산

비장애인 집단은 상향 이동 34.4%, 유지 45.8%, 하향 이동 19.7%로, 자산의 하향 이동 비율은 낮은 편이다. 자산은 연령에 따라 축적되기에, 노동소득과 달리 하향 이동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9-7〉 총자산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5.8	3.3	2.6	0.9	0.5	13.1
	2	2.2	4.8	3.9	2.9	2.2	15.9
	3	0.8	2.9	5.0	6.2	3.5	18.3
	4	0.2	1.2	5.0	8.1	8.5	23.0
	5	0.5	0.6	1.2	5.1	22.3	29.6
Total		9.4	12.8	17.6	23.2	36.9	100.0

주: n= 2,633.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장애인 집단에서는 소득분위 이행의 상향 비율이 30.9%, 유지는 39.2%, 하향 비율이 30.0%로, 하향 이동이 크게 증가한다. 비장애인의 56~80세 시점에서는 5분위가 36.9%를 차지하였지만, 장애인 표본의 경우, 15.7%에 그쳤고, 1분위의 비율이 29.5%에 달하였다. 장애 경험이 자산 누적에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9-8〉 총자산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장애인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19.6	8.6	0.5	2.7	0.2	31.6
	2	3.2	5.7	5.5	2.1	0.0	16.5
	3	1.2	4.1	3.1	1.9	1.7	12.1
	4	2.7	1.3	7.0	4.6	7.6	23.2
	5	2.9	2.1	1.0	4.6	6.1	16.6
Total		29.5	21.8	17.1	15.9	15.7	100.0

주: n= 289.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중도장애를 경험한 집단은 상향 이동 비율이 19.5%, 유지 비율이 48.2%, 하향 이동 비율이 32.3%로, 상향 이동이 가장 적다. 그러나, 앞선 결과와는 달리, 높은 유지 비율의 상당 부분이 5분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40~64세 당시에 자산 분위도 5분위가 33.1%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 집단이나 장애인 집단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표 9-9〉 총자산 분위 이동: 40~64세 당시 비장애인이 중도장애를 입은 경우

구분		56~80세					Total
		1	2	3	4	5	
40~64세	1	8.3	2.6	1.4	0.7	0.0	13.0
	2	7.7	4.8	2.5	4.0	0.0	19.0
	3	4.0	4.2	4.6	3.7	0.8	17.3
	4	0.1	5.0	2.9	5.7	3.9	17.7
	5	1.0	0.5	0.2	6.6	24.8	33.1
Total		21.2	17.1	11.6	20.7	29.5	100.0

주: n= 146.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2. 장애 발생과 소득 및 자산의 이동

장애인의 사회이동성에는 기존 장애인의 이동성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과 함께, 중도장애를 입게 됨으로 인해 사회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5년, 총 11개 시점에 걸친 가처분소득, 노동소득, 총자산 백분위의 평균 추이와 하위 1분위 소속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때 장애 발생 전과 후의 소득 및 자산의 이동만을 살펴보는 것에 더해 비교 기준으로 65세를 전후한 11개 시점에 대한 값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다. 첫째는 중도장애인의 장애 발생 전-후 변화의 방향성과 크기, 두 번째는 발생 전의 기초선 수준과 발생 후 소득 및 자산 수준을 장애 발생에 필적할 생애 사건인 노년기 진입 전-후의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표 9-10〉 장애 발생 ‘전-후’ 소득 백분위: 65세 ‘전-후’와 비교

구분		t-5	t-4	t-3	t-2	t-1	t	t+1	t+2	t+3	t+4	t+5
장애 발생 전-후	가처분 소득	31.1	31.3	30.6	30.7	31.2	31.5	31.2	30.1	29.0	30.4	30.6
	노동 소득	28.2	25.2	24.1	23.8	21.1	17.7	19.4	19.5	19.5	19.7	20.7
	총 자산	46.3	45.8	44.7	43.6	43.2	42.7	43.7	42.4	43.1	43.3	44.4
65세 전-후	가처분 소득	45.6	44.6	43.4	41.8	40.3	39.5	38.8	37.5	36.0	34.7	33.0
	노동 소득	37.3	35.4	34.2	32.7	31.5	29.9	28.0	27.0	25.8	24.3	23.0
	총 자산	56.5	56.1	56.0	55.9	54.8	54.2	54.3	53.9	53.5	53.4	52.8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표 9-11〉은 장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5년($t-5 \sim t+5$)에 걸쳐, 그리고 비교 기준으로서 65세 시점을 동일 구간으로 설정해, 가처분 소득, 노동소득, 총자산의 하위 1분위 소속 비율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백분위의 평균 추이와는 달리, 하위층 집중 정도의 분포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9-1]의 그래프는 〈표 9-10〉와 〈표 9-11〉의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서술은 그래프를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한다.

〈표 9-11〉 장애 발생 '전-후' 소득 하위 1분위 소속 비율: 65세 '전-후'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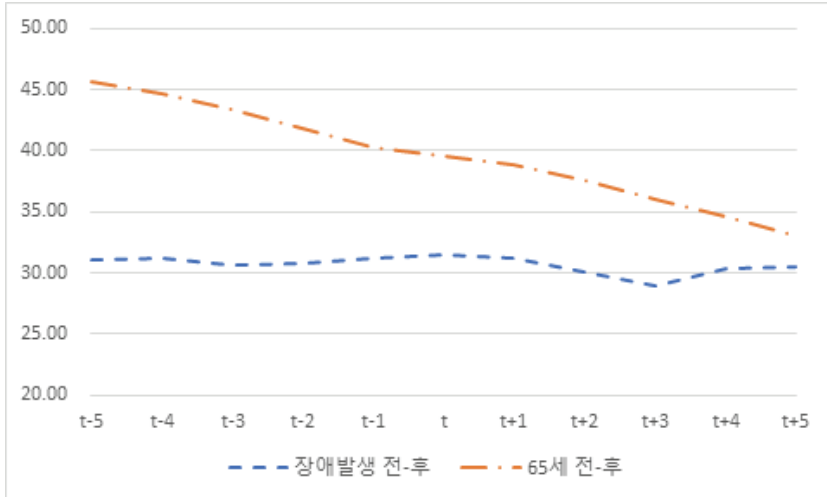
구분		t-5	t-4	t-3	t-2	t-1	t	t+1	t+2	t+3	t+4	t+5
장애 발생 전-후	가처분 소득	43.0	44.8	42.5	44.3	43.1	43.3	43.7	44.2	48.1	43.1	40.9
	노동 소득	49.7	54.7	57.0	56.8	60.5	67.4	63.8	63.7	63.2	63.8	61.1
	총 자산	24.2	24.6	27.2	28.9	28.9	29.8	28.0	30.0	27.9	26.0	28.1
65세 전-후	가처분 소득	22.9	23.1	24.5	27.2	29.2	29.5	29.6	31.3	32.7	34.9	36.6
	노동 소득	38.8	40.7	41.4	43.1	44.2	45.7	48.0	48.9	50.5	51.9	53.2
	총 자산	15.5	16.1	15.9	15.9	15.8	16.7	15.8	16.8	16.8	16.7	16.6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65세 전-후의 경우, 가처분소득 백분위는 $t-5$ 시점에서 45.6으로 시작해 $t+5$ 시점에는 33.0까지 꾸준히 하락하며, 총 12.6백분위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장애 발생 전-후에서는 $t-5$ 의 31.1 → $t+5$ 의 30.6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추이만 보면 이동성 자체는 활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장애 발생 전의 수준, 즉 기초선이 이미 낮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장애 발생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수준의 이동이 하방을 이루거나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9-1] 가치분소득 백분위 변화

(단위: 백분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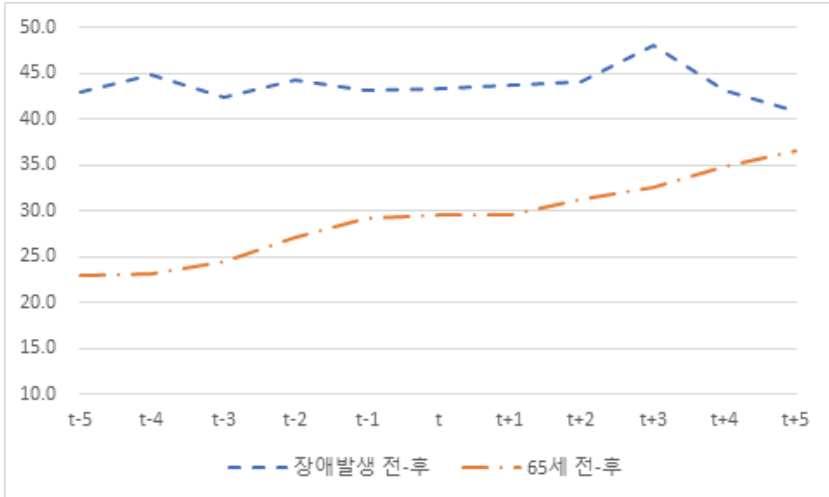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또한, 가치분소득 하위 1분위 소속 비율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찰된다. 65세 전후의 경우, 하위 1분위 소속 비율은 22.9%(t-5) → 36.6%(t+5)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지만, 장애 발생 집단은 t-5 시점에서 이미 43.0%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후에도 t+3 시점에서 48.1%까지 높아지기는 했지만 큰 변화가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65세 전후의 추이보다 변동 폭은 작으나, 기초선의 절대 수준(비율)이 높고 하위 1분위의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하위 계층으로의 고착화 상태가 지속된다.

[그림 9-2] 가처분소득 1분위 소속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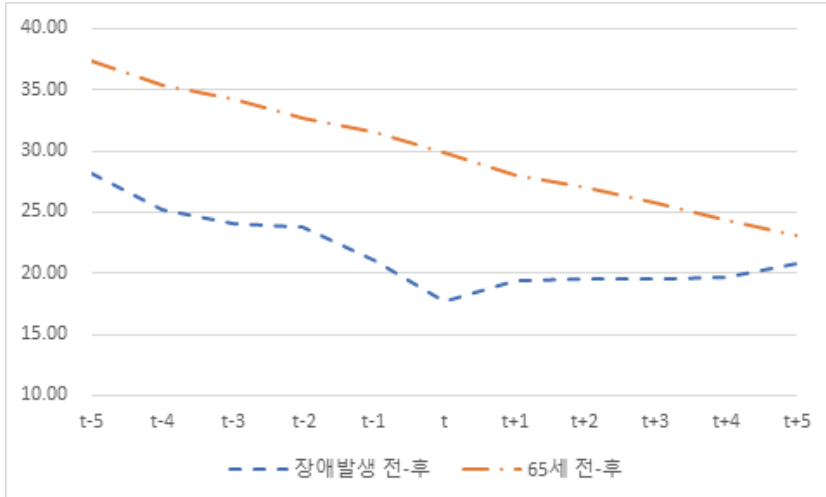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개인 단위로 측정된 노동소득의 경우는 장애 발생 전-후의 이동성과 하방 경향이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65세 전후의 노동소득 백분위는 37.3(t-5) → 23.0(t+5)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은퇴 효과와 노년기 소득 감소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 발생 집단은 t-5 시점부터 28.2분위로 이미 낮은 상태였음에도, 장애 발생 직전인 t-1에는 21.1분위, 발생 시점(t)에는 17.7분위, 그리고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하위 소득분위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 65세 전후 추이는 지속적인 하강을 보인다면, 장애 발생 집단은 기초선 자체가 이미 낮은 상태에서 장애 발생을 기점으로 크게 하강한 뒤, 다시 상승하지 못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9-3] 노동소득 백분위 변화

(단위: 백분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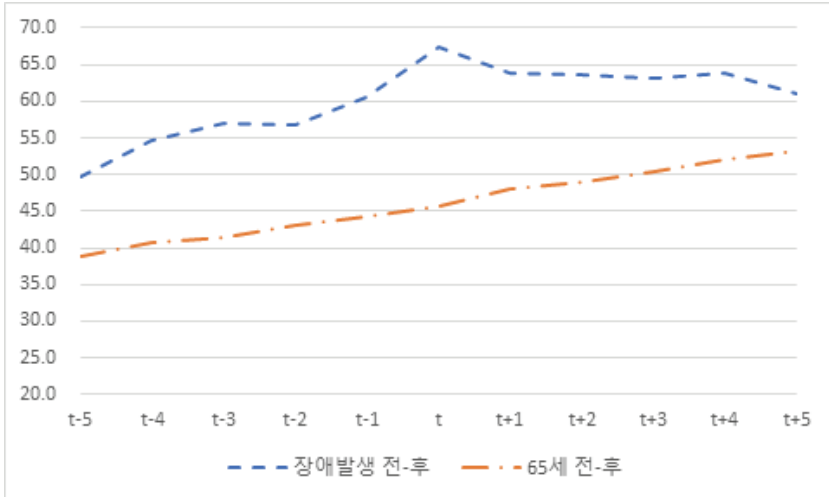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노동소득의 하위 1분위 비율에서는 양 집단 간 대조가 더 뚜렷하며, 장애 발생 집단의 열악한 소득이동의 특징이 나타난다.

65세 전후 집단은 t-5 시점에서 38.8%, 이후 5년간 14.4%p 증가하여 t+5 시점에서 53.2%의 비율을 보인다. 지극히 선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반면, 장애 발생 집단은 t-5 시점의 비율은 49.7%로 60세 인구에 비해 그 수준 자체가 높은 편이었고, 장애 발생 시점(t)에는 67.4%로 매우 크게 증가, 장애 발생 이후에는 60% 수준을 유지한다. 노년 진입 전후 추이에 비해 수준은 약 15%p 높다. 장애인 집단의 추이는 장애 발생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단절적인 소득 하락의 충격과 함께, 노동시장 탈락과 소득 하락의 장기화된 형태를 보인다.

[그림 9-4] 노동소득 1분위 소속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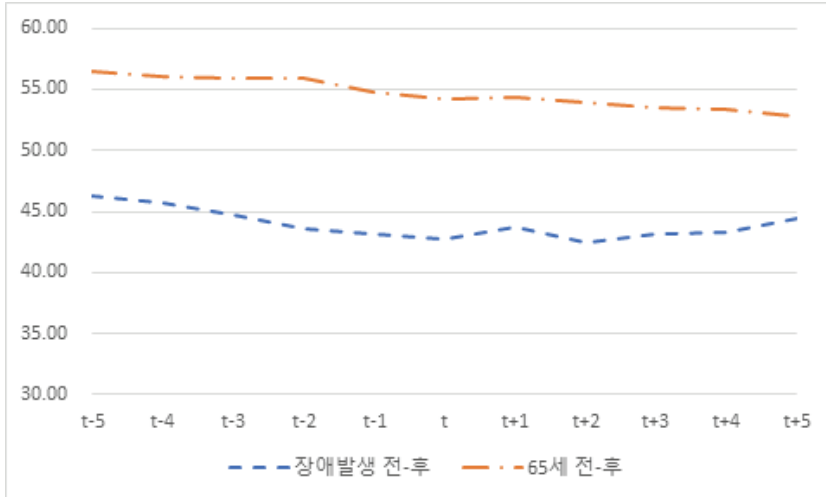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자산 백분위의 추이는 장애 발생 집단과 노년기 진입 집단 모두에게서 지속적인, 그리고 완만한 하강 이동을 보인다. 65세 전후로는 t-5 시점에서 56.5분위 → t+5에서 52.8분위로 선형적으로 감소하며, 장애 발생 집단은 t-5 시점에 46.3분위, 장애 발생 시점에 42.7분위, 장애 발생 이후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t+5 시점에 44.4로 반등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표본의 마모로 인해 수치가 불안정해진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장애 발생 전-후 총자산의 백분위 추이는 발생 전 기초선이 10점 이상 낮았고, 장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양상이다.

[그림 9-5] 총자산 백분위 변화

(단위: 백분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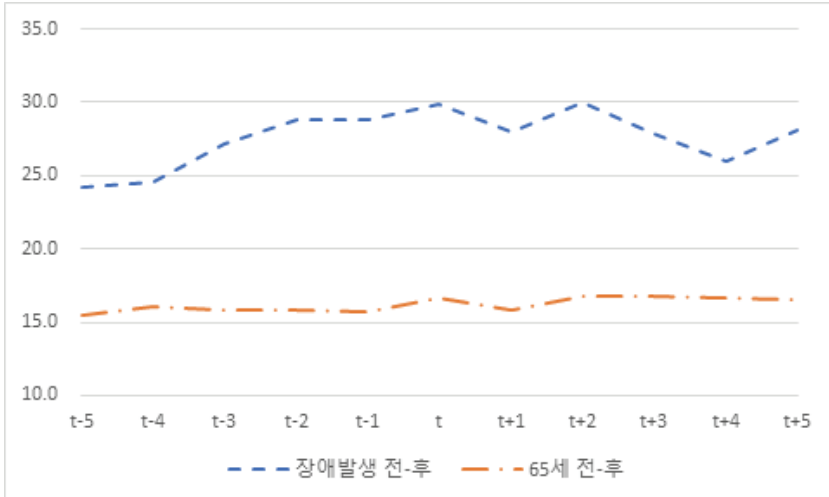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자산 하위 1분위 소속 비율은 65세 전후 집단이 15.5%(t-5) → 16.6%(t+5)로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생애 후반의 축적된 자산의 고정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반면, 장애 발생 전후 추이에서는 t-5 시점에서 2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장애 발생 시점에 29.8%로 높아진 다음, 장애 발생 이후에도 대체로 26~30% 수준을 유지하였다. 장애 발생 이후 급격한 자산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준 자체가 노인 전후 추이에 비해 기본적으로 낮으면서 상승 전환 없이 상대적인 열악함이 지속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9-6] 총자산 1분위 소속 비율 변화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다음의 <표 9-12>는 장애 발생 전후의 실업·비경활 상태와 건강 지표들을 65세 전후의 추이와 비교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장애 발생 전후 추이의 특징은 첫째, 주요 생애사건 전 기초선이 이미 열악하였고, 이동의 방향은 ‘악화’로 요약되며, 생애사건 이후 회복 없이 유지 혹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기초선 자체가 이미 열악하다는 점은 장애의 발생이 단지 한 시점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누적된 건강 등 불평등 구조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기화된 사회경제적 배제의 중첩된 결과임을 암시한다.

특히 건강 관련 지표들은 앞서 살펴본 소득 및 자산의 이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경 요인이자 결과이며, 장애인의 세대 내, 세대 간 이동성을 고찰하고자 할 때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9-12〉 장애 발생 ‘전-후’ 실업·비경활 및 건강상태: 65세 ‘전-후’와 비교

(단위: %, 점)

구분		t-5	t-4	t-3	t-2	t-1	t	t+1	t+2	t+3	t+4	t+5
장애 발생 전-후	실업·비경활	51.8	55.2	55.1	58.1	64.9	67.8	66.2	66.5	66.1	67.3	65.8
	만성 질환	77.1	75.2	73.3	77.4	81.1	84.8	85.3	83.2	81.8	83.7	84.3
	주관적 건강	2.87	2.84	2.75	2.64	2.55	2.43	2.55	2.59	2.58	2.63	2.67
65세 전-후	실업·비경활	37.4	38.5	40.1	41.4	43.3	46.6	48.4	50.0	51.8	53.2	54.9
	만성 질환	63.7	66.6	70.9	71.3	74.6	76.2	78.7	80.6	82.5	83.7	85.0
	주관적 건강	3.24	3.20	3.15	3.12	3.07	3.03	3.00	3.00	2.96	2.96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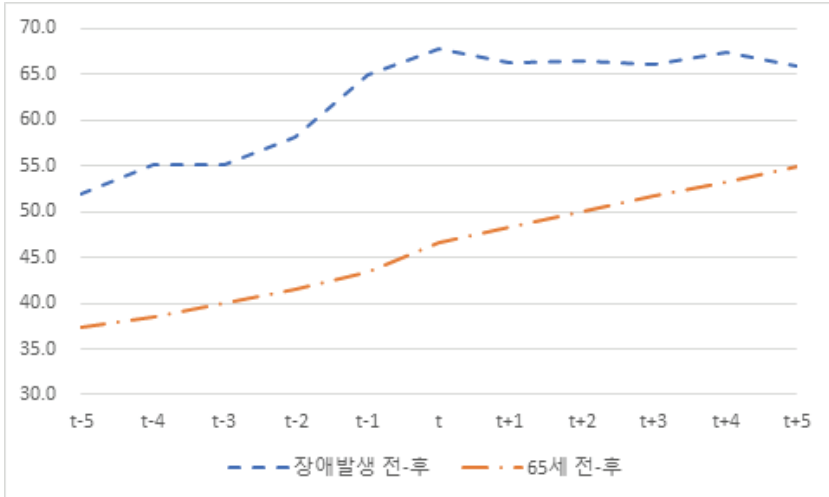
주: 실업·비경활 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은 비율, 주관적 건강은 매우 나쁘다(1)~매우 좋다(5) 평균.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65세 전후 집단의 실업·비경활 상태 비율은 t-5 시점의 37.4%에서 t+5 시점 54.9%에 이르기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약 17.5%p의 상승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주된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은퇴를 반영한다.

반면 장애 발생 전후 집단의 실업·비경활 비율은 t-5 시점에서 이미 51.8%로 높았으며, 장애 발생 시 점(t)에는 67.8%로 상승한 뒤, 이후에도 65% 이상을 유지한다. 출발 시점부터 두 집단 간의 격차가 존재하며, 65세 집단이 일정한 속도로 점진적으로 실업·비경활 상태에 진입한다면, 장애 발생 집단은 이미 실업·비경활 상태에 있었거나 진입한 상태에서 회복 없이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9-7] 실업·비경활 상태 비율 변화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65세 전후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t-5에서 63.7%였으며, 이후 지속 증가해 t+5 시점에는 85.0%에 이른다. 고령화에 따른 일반적인 건강 저하 추이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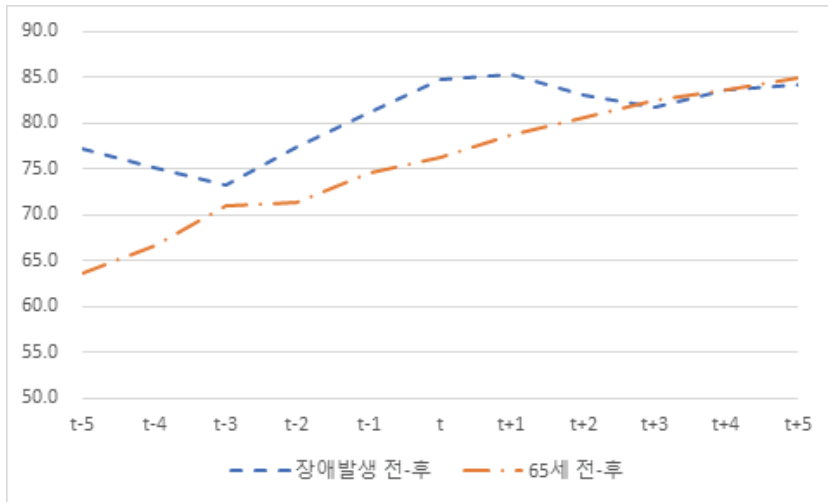
반면 장애 발생 집단은 t-5 시점에서부터 77.1%의 유병률을 보이면서, 장애 발생 시점(t)에 84.8%로 높아진 이후, 장애 발생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이미 취약한 건강상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65세 전후로는 건강상태의 저하가 선형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장애 발생 전후로는 이미 악화된 건강상태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라는 조건(condition) 위에 건강이 회복하지 못하고 열악함이 유지되는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65세 전후의 주관적 건강 점수는 t-5 시점에 3.24(5점 만점)였고, t+5에 2.94였다. 노년기 진입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는 것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반면 장애 발생 전 후로는 t-5에서 2.87이었다가, 장애 발생 시점(t)에는 2.43으로 급격히 내려갔다가, 장애 발생 이후에는 약간 반등하지만 낮아진 점수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9-8]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세대 간 이동

1. 부모-자녀 간 소득,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 이행

가. 부모의 장애 여부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장애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부모의 당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교차표를 구성하여 이행을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 5분위,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여 표를 제시하였다.

이행 교차표를 살펴보기 전에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자녀세대의 소득 백분위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부모세대의 당시 소득 백분위는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55.4분위, 장애를 지닌 경우 42.4분위로 예상한 바와 같이 장애인 부모의 당시 소득 수준은 낮았다. 자녀세대의 소득 백분위 평균은 비장애 부모의 자녀는 69.4분위, 장애 부모의 자녀는 58.9분위로 역시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소득분위는 더 낮았다. 아래의 기술통계 결과는 자녀의 장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부모세대의 장애 여부만으로 비교한 것이다.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라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에 비해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은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자녀세대의 관측 시점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부모의 장애 여부와 무관하다는 가정하에 비교하면, 장애 부모인 경우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 상승이 비장애 부모의 자녀세대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39.2% 상승). 절대적인 자체를 비교한다면 장애인 부모의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

이 낮지만,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이 나아진 정도를 본다면, 장애 부모의 자녀가 더 많이 상향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3〉 소득 백분위 평균 비교

(단위: 백분위 수, %)

구분	부모세대(a)	자녀세대(b)	b-a	(b-a)/a*100
비장애 부모	55.4	69.4	14.1	25.5
장애 부모	42.3	58.9	16.6	39.2
Total	54.0	68.3	14.4	26.6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아래 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7~18년의 시점 간격을 가지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동시에 관측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 가처분소득 분위 이행을 분석한 결과이다. 상단의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한 비율은 55.1%, 동일한 분위에 머문 경우는 25.2%, 하향 이동한 경우는 19.7%로 나타났다.

중단의 표는 부모가 비장애인이었던 경우에 한정된 결과이다. 이 집단에서 자녀세대의 상향 이동은 54.1%, 유지 26.2%, 하향 19.7%로 나타났으며, 전체 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특히 4분위와 5분위의 유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상위 계층의 재생산 경향이 일부 확인된다.

마지막 표는 부모가 장애인이었던 집단으로 한정된 결과이다. 이 집단에서는 상향 이동이 63.4%로 앞선 표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유지 비율이 16.7%, 하향 이동이 19.9%이다. 결과에 의하면 소득분위의 세대 간 이동은 부모가 장애를 지닌 경우에 더 활발하였다.

이는 장애인인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이 낮았다는 점 - 장애가 있는 부모는 소득 1, 2분위에 56.6%가 있었음 - 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초선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상향 이동의 비율이 높았다. 이 절의 첫 번째 표

에서 소득 백분위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착점인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 부모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향 이동이 질적인 의미의 상향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표 9-14〉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5분위)

(단위: %)

	구분		자녀					Total
			1	2	3	4	5	
전체	부모	1	0.8	2.7	2.6	2.5	2.6	11.2
		2	0.7	3.5	6.4	7.5	7.1	25.3
		3	0.5	2.4	3.1	6.8	6.8	19.6
		4	0.3	1.7	4.6	7.2	10.1	23.9
		5	0.2	1.4	2.9	4.9	10.6	20.0
	Total		2.6	11.8	19.6	28.9	37.1	100.0
비장애 부모	부모	1	0.5	2.5	2.1	2.2	2.7	10.1
		2	0.5	3.4	6.3	6.7	7.2	24.2
		3	0.5	2.0	3.3	6.5	6.7	19.1
		4	0.3	1.8	5.1	7.7	11.0	25.8
		5	0.3	1.1	2.9	5.2	11.3	20.8
	Total		2.1	10.8	19.7	28.4	39.0	100.0
장애 부모	부모	1	3.7	4.4	7.1	4.6	1.6	21.3
		2	2.7	4.5	7.2	14.5	6.3	35.3
		3	0.6	6.1	1.1	8.9	6.8	23.5
		4	0.0	1.3	0.4	3.3	2.0	7.0
		5	0.0	4.0	2.8	2.0	4.1	12.9
	Total		7.0	20.3	18.6	33.3	20.9	100.0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전체 집단의 종사상 지위 이동 결과를 보면, 상향 이동은 42.9%, 유지 31.6%, 하향 이동은 25.6%로 나타났다.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 간의 비율 차이가 소득분위의 그것만큼은 크지 않았다.

부모가 비장애인이었던 경우, 자녀 세대의 상향 이동 비율은 42.2%, 유지 31.6%, 하향 이동은 26.2%로 나타나 전체 집단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부모가 ‘정규직+고용주’였던 경우에 자녀도 같은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장애 부모 집단의 경우 상향 이동은 48.3%로 비장애 부모 집단에 비해 높았고, 하향 이동은 20.2%로 낮았다. 소득분위 이행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일견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상향 이동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장애 부모’ 표본에서 부모세대는 ‘실업·비경활’ 및 ‘자영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즉, 자녀의 ‘상향 이동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향 이동 비율이 높다는 결과만으로 장애를 가진 부모와 자녀 간 사회이동이 노동시장의 기회 평등을 실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기 ‘비장애 부모’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고용주’의 비율은 58.7% 대 45.9%, ‘실업·비경활’의 비율은 19.4% 대 26%로, 부모가 장애를 지닌 자녀 세대의 종사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표 9-15〉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종사상 지위 이동

(단위: %)

	구분		자녀				Total
			실업·비경활	자영자	비정규직	정규직/고용주	
전체	부모	실업·비경활	3.3	0.5	2.8	5.1	11.6
		자영자	3.7	1.6	3.6	16.9	25.7
		비정규직	4.1	1.3	5.4	14.1	24.9
		정규직/고용주	8.9	2.2	5.3	21.3	37.8
	Total		20.0	5.6	17.0	57.4	100.0

	구분		자녀				Total
			실업·비경활	자영자	비정규직	정규직/고용주	
비장애 부모	부모	실업·비경활	2.6	0.3	2.2	4.2	9.2
		자영자	3.3	1.2	3.3	17.9	25.7
		비정규직	4.4	1.3	5.5	14.5	25.7
		정규직/고용주	9.1	2.2	5.8	22.2	39.4
	Total		19.4	5.1	16.9	58.7	100.0
장애 부모	부모	실업·비경활	9.5	2.4	7.2	13.0	32.1
		자영자	7.1	4.3	6.4	8.4	26.2
		비정규직	2.0	0.7	4.1	10.9	17.8
		정규직/고용주	7.4	2.3	0.7	13.6	24.0
	Total		26.0	9.7	18.4	45.9	100.0

주: 자영자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교육 수준 이행을 살펴보면 상향 이동이 70.0%, 유지가 28.3%, 하향 이동이 1.8%로 나타나, 교육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향 이동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는 지난 관찰 기간 동안 교육기회의 확대가 일정 수준 실현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비장애 부모’의 경우 자녀세대의 상향 이동은 68.7%, 유지는 29.6%, 하향 이동이 1.8%로, 전체와 유사하였다.

한편 ‘장애 부모’ 표본의 상향 이동 비율은 81.1%로 ‘비장애 부모’ 결과에 비해 매우 높았다. 유지 비율은 17.0%, 하향 비율은 2.0%이다. 교육 영역에서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들이 더 높은 비율로 교육 수준의 상향 이동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장애 부모’는 부모세대에서 초졸 이하 비율이 28.5%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향 이동은 출발점의 수준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이 상향되었기에, 자녀세대는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부모 장애’ 자녀세대의 대학 이상 비율은 74.4%로, ‘비장애 부모’ 자녀세대의 87.5%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고등학교 재학 이상을 포함하면 양 표본 간 차이는 현저히 줄어들지만, 전체 인구의 상향된 교육 수준을 감안한다면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 즉 상향 이동이 이루어진 이후의 이동 결과가 질적으로 어떠한가라는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표 9-16〉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교육 수준 이동

(단위: %)

전체	구분		자녀				Total
			초졸 이하	중학 이하	고등 이하	대학 이상	
	부모	초졸 이하	0.0	0.2	3.3	7.9	11.4
		중학 이하	0.0	0.0	3.6	13.9	17.5
		고등 이하	0.0	0.1	5.0	41.0	46.1
		대학 이상	0.0	0.0	1.7	23.2	24.9
Total		0.0	0.3	13.6	86.1	100.0	
비장애 부모	구분		자녀				Total
			초졸 이하	중학 이하	고등 이하	대학 이상	
	부모	초졸 이하	0.0	0.0	2.6	6.8	9.5
		중학 이하	0.0	0.0	3.1	14.1	17.3
		고등 이하	0.0	0.1	5.0	42.0	47.1
		대학 이상	0.0	0.0	1.7	24.5	26.2
Total		0.0	0.1	12.4	87.5	100.0	
장애 부모	구분		자녀				Total
			초졸 이하	중학 이하	고등 이하	대학 이상	
	부모	초졸 이하	0.0	1.5	9.5	17.5	28.5
		중학 이하	0.0	0.0	7.6	12.4	20.0
		고등 이하	0.0	0.0	5.0	32.5	37.5
		대학 이상	0.0	0.0	2.0	12.0	13.9
Total		0.0	1.5	24.1	74.4	100.0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하의 세대 간 이동 분석 결과에서 주목하는 것은 자녀의 장애 여부이다. 자료에서 매칭한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소득 5분위,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여 교차표로 제시한다.

본격적인 이행 표에 앞서,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소득 백분위 평균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다.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평균 소득 백분위는 50.5, 비장애인인 자녀는 68.9였다. 부모세대 대비 자녀세대의 소득 수준 상승은 비장애 자녀의 경우 26.5%, 장애 자녀에서는 24.6%로 나타났다. 비장애 자녀의 경우 부모세대에 비해 더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는 정도가 장애 자녀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의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부모세대 소득 수준의 적지 않은 차이이다. 부모세대의 장애 여부가 아니라 자녀세대의 장애 여부만을 고려한 결과에서,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세대의 소득 수준이 비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의 발생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들의 많은 논의에 비추어보았을 때 자녀의 장애 여부에 부모의 소득 수준이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더 열악한 경제 상태가 자녀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표 9-17〉 소득 백분위 평균 비교

(단위: 백분위 수, %)

구분	부모세대(a)	자녀세대(b)	b-a	(b-a)/a*100
비장애 자녀	54.5	68.9	14.4	26.5
장애 자녀	40.5	50.5	10.0	24.6
Total	54.0	68.2	14.2	26.4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 가처분소득 분위 이행은 앞서 제시한 <표 9-14>와 동일하기에 해당 표를 참조하면 된다.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에서 상향 이동한 비율은 55.1%, 부모의 소득분위와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는 25.2%, 하향 이동한 비율은 19.7%에 이른다.

‘비장애 자녀’ 표본에서는 상향 이동이 55.1%, 유지는 25.5%, 하향 이동이 19.4%로 전체 표본과 유사하다. 자녀세대의 분위 분포를 보면 상위 5분위 비율이 38.1%로 가장 크고, 하위 1분위는 2.5%이다.

‘장애 자녀’ 표본은 상향 53.9%, 유지 18.8%, 하향 27.3%의 이행률을 보인다. ‘비장애 자녀’의 결과에 비해 하향 이동 비율이 높고 유지 비율은 낮아, 이동성 자체는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장애 자녀’에 비해 ‘비장애 자녀’가 비교적 상향 이동이 조금 더 많으며, 자녀세대의 분위별 분포를 고려하면 이행의 결과 또한 양호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세대의 분위 분포를 보면, ‘장애 자녀’에서는 소득 1~3분위에 63.0%가 분포하며, 5분위는 11.2%에 불과하였다. 반면, 비장애 자녀 집단에서는 5분위 비율이 38.1%에 이른다.

이는 이동의 방향성과 그의 비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녀세대가 도달한 경제적 위치는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서 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행 결과의 ‘질’에서 명백한 격차가 존재한다. 자녀의 장애는 세대 간 소득이동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표 9-18〉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분위 이동(5분위)

(단위: %)

비장애 자녀	구분		자녀					Total
			1	2	3	4	5	
	부모	1	0.8	2.7	2.3	2.3	2.6	10.7
		2	0.6	3.3	6.5	7.4	7.1	25.0
		3	0.6	2.2	2.9	6.7	7.0	19.4
		4	0.3	1.7	4.7	7.5	10.4	24.5
		5	0.2	1.4	2.7	5.0	11.0	20.4
Total		2.5	11.3	19.1	29.0	38.1	100.0	
장애 자녀	구분		자녀					Total
			1	2	3	4	5	
	부모	1	1.2	3.4	12.4	5.9	2.6	25.4
		2	3.2	10.0	2.7	10.4	7.4	33.7
		3	0.0	8.3	7.6	7.9	0.0	23.8
		4	0.0	3.7	3.5	0.0	1.3	8.4
		5	0.0	0.0	7.0	1.6	0.0	8.6
Total		4.4	25.4	33.2	25.9	11.2	100.0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전체 표본에 대한 종사상 지위 이행 표 결과는 앞서 제시한 〈표 9-15〉를 참조하면 된다. 〈표 9-15〉에서는 상향 이동이 42.9%, 유지가 31.6%, 하향 이동이 25.6%로 나타났다.

‘비장애 자녀’ 표본의 세대 간 이동에서 상향 이동률은 43.9%, 유지는 31.1%, 하향 이동은 25.0%로 전체 표본과 유사하였다. 장애가 없는 자녀 세대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고용주’가 5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실업·비경활’은 18.4%였다.

반면, ‘장애 자녀’ 표본의 세대 간 이동에서 상향 이동은 16.7%에 불과하며, 유지는 42.9%, 하향 이동이 40.4%를 차지하였다. 하향 이동 비율이 비장애 자녀에 비해 매우 높고 상향 이동은 제한적이다.

자녀세대의 종사상 지위에서 ‘실업·비경활’이 62.5%로 가장 많으며, ‘정규직+고용주’인 경우는 13.5%이다. 이는 비장애 자녀세대가 노동시

장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것에 비해, 장애를 가진 자녀세대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하게 한다. 세대 간 이동에서 자녀세대 본인의 장애는 부모세대의 장애보다 더욱 영향력이 큰 본질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9-19〉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종사상 지위 이동

(단위: %)

비장애 자녀	구분		자녀				Total
			실업· 비경활	자영자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주	
	부모	실업·비경활	2.3	0.5	2.8	5.1	10.7
		자영자	3.5	1.6	3.4	17.4	25.9
		비정규직	3.8	1.3	5.3	14.6	25.0
정규직/고용주		8.8	2.3	5.3	21.9	38.3	
Total		18.4	5.8	16.8	59.1	100.0	
장애 자녀	구분		자녀				Total
			실업· 비경활	자영자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주	
	부모	실업·비경활	28.2	0.0	1.6	4.5	34.3
		자영자	10.7	0.0	8.5	2.2	21.3
		비정규직	12.7	0.0	7.9	0.0	20.6
		정규직/고용주	10.9	0.0	6.1	6.8	23.8
	Total		62.5	0.0	24.1	13.5	100.0

주: 자영자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전체 표본에 대한 교육 수준의 이행 결과는 〈표 9-16〉와 동일하다. 지난 기간 동안 교육기회의 확장과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관찰된다.

비장애 자녀의 세대 간 교육 수준 이동성은 전체 표본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자녀세대의 대학 이상 비율은 87.9%, 초·중졸 비율은 0%에 가깝다. 이는 비장애 자녀의 경우 부모세대에 비해 상향 평준화된 교육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자녀세대는 부모에 비해 상향 이동이 68.3%, 유지는 11.4%, 하향 이동은 20.3%이다. 하향 이동 비율이 높고 유지 비율도 낮다. 이동성 자체는 활발하고, 이동의 방향성은 비장애 자녀 표본에 비해 좋지 않다. 자녀세대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61.4%, 대학 이상이 38.7%로, 비장애 자녀세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학 이상 도달 비율은 비장애 자녀(87.9%)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자녀세대는 교육 영역에서 상향 이동을 많이 하지 못하였고, 앞선 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부모의 장애보다는 자녀 본인의 장애가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9-20〉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교육 수준 이동

(단위: %)

비장애 부모	구분		자녀				Total
			초졸 이하	중학 이하	고등 이하	대학 이상	
	부모	초졸 이하	0.0	0.0	2.7	8.0	10.6
		중학 이하	0.0	0.0	3.5	14.3	17.7
		고등 이하	0.0	0.1	4.9	41.7	46.7
		대학 이상	0.0	0.0	1.0	24.0	25.0
	Total		0.0	0.1	12.0	87.9	100.0
장애 부모	구분		자녀				Total
			초졸 이하	중학 이하	고등 이하	대학 이상	
	부모	초졸 이하	0.0	5.2	20.2	7.1	32.5
		중학 이하	0.0	0.0	7.2	5.7	12.9
		고등 이하	0.0	0.0	8.5	22.9	31.4
		대학 이상	0.0	0.0	20.3	2.9	23.2
	Total		0.0	5.2	56.2	38.7	100.0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이상 살펴본 부모-자녀 간 소득,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 이행 기초분석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세대가 장애를 가진 경우, 이른바 ‘낮은 출발점’으로 인해 상향 이동의 여지가 매우 크지만, 자녀세대의 ‘도착점’, 즉 자녀세대가 처한 열악

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다음으로, 부모세대의 장애보다 본인의 장애가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종사상 지위와 교육 수준에서 두드러졌다.

지금까지 이행 교차표 분석에 더해 타 변수를 통제하여 장애와 세대 간 이동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장애와 세대 간 이동성의 관계를 검토해본다.

2. 장애와 세대 간 이동성의 관계: 회귀모형을 이용한 검토

이하에서는 자녀의 소득, 자산,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에 대한 부모의 소득, 자산,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의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설명변수 외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자녀 본인의 장애 여부와 부모의 장애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이다. 설명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본인의 장애 혹은 자녀의 장애에 따른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조절되는지를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의 투입과 결과표의 제시는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다. 즉, 상호작용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설명변수인 부모의 소득, 자산,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은 모두 부모세대의 첫 번째 관측 시점의 값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소득, 자산,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은 복지패널에서 관측한 가장 마지막의 값을 이용하였다. 이는 복지패널의 제한된 시계열 정보로부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관측 시점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결과는 자녀 가처분소득 백분위에 대한 부모 가처분소득 백분위의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부모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높았다면, 자녀의 가처분소득 백분위도 높게 나타난다($b=0.173$). 부모의 장애 여부와

자녀 본인의 장애 여부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에, 본인 혹은 부모의 장애 여부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부모 소득과 본인 장애 여부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적 영향을 지니고 있었다($b=-0.245$). 이는 자녀 소득 수준에 대한 부모 소득 수준의 정적 영향력이 본인이 장애를 지니는 경우에 감소한다는, 즉 부모 소득 수준에 대한 본인 장애 여부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에 지면의 한계로 인해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9-21〉 자녀의 가처분소득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소득

구분	가처분소득 백분위		가처분소득 백분위	
	Coef.	se	Coef.	se
만 나이	-0.142	(0.230)	-0.116	(0.229)
여성(ref.남성)	-2.103	(1.537)	-2.164	(1.539)
가구주(ref.가구원)	-11.790***	(1.979)	-11.788***	(1.969)
유배우(ref.무배우)	5.260**	(1.650)	5.229**	(1.646)
가구원 수	0.091	(0.757)	0.128	(0.756)
중소도시(ref.대도시)	-1.122	(1.524)	-1.060	(1.518)
농어촌(ref.대도시)	-0.587	(2.776)	-0.836	(2.768)
자영자(ref.실업·비경활)	9.416**	(3.490)	9.499**	(3.486)
비정규직(ref.실업·비경활)	11.895***	(2.613)	12.058***	(2.596)
정규직(ref.실업·비경활)	22.064***	(2.267)	22.120***	(2.262)
전문대 이상(ref.고졸이하)	4.838*	(2.121)	4.939*	(2.114)
부모의 소득 백분위	0.173***	(0.028)	0.181***	(0.029)
본인의 장애	-1.178	(4.030)	8.952	(6.287)
부모의 장애	-4.149	(2.408)	-4.341	(2.396)
부모 소득×본인 장애			-0.245*	(0.119)
연도 더미	통제		통제	
Constant	45.693***	(8.654)	44.275***	(8.618)
Observations	1,101		1,101	
adj. R2	0.248		0.250	

주: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가구 기준 군집표준오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가처분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된 변수이고, 이 글의 분석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가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 단위의 소득 수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결과는 앞선 모형과 동일한 상태에서 자녀의 노동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부업소득의 합)을 피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앞선 가처분소득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당시 부모세대의 가처분 소득 수준은 자녀의 개인노동소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0.056$). 개인노동소득에서는 본인의 장애 여부 또한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7.502$).

본인 혹은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 소득과 본인의 장애로 생성한 상호작용항의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났다(-0.242). 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개인노동소득 수준이 높아지지만, 본인이 장애를 지니는 경우 부모 소득 수준의 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오른쪽 열는 자녀의 총자산 백분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당시 부모의 소득 수준(백분위)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산 수준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본인의 장애, 그리고 부모의 장애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9-22〉 자녀의 노동소득 수준 및 자산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소득

구분	노동소득 백분위		노동소득 백분위		총자산 백분위	
	Coef.	se	Coef.	se	Coef.	se
만 나이	0.240	(0.183)	0.267	(0.182)	0.703**	(0.245)
여성(ref.남성)	-5.403***	(1.207)	-5.463***	(1.205)	-5.288**	(1.827)
가구주(ref.가구원)	6.302***	(1.576)	6.304***	(1.564)	-18.405***	(2.323)
유배우(ref.무배우)	0.980	(1.365)	0.949	(1.365)	3.318	(1.864)
가구원 수	-0.659	(0.563)	-0.624	(0.563)	1.614	(0.898)
중소도시(ref.대도시)	0.354	(1.275)	0.416	(1.270)	-2.225	(1.679)
농어촌(ref.대도시)	-2.033	(2.132)	-2.278	(2.151)	-3.243	(3.164)
자영자(ref.실업·비경활)	38.143***	(4.113)	38.225***	(4.104)	3.571	(3.649)
비정규직(ref.실업·비경활)	47.105***	(2.183)	47.266***	(2.161)	-5.718*	(2.761)
정규직(ref.실업·비경활)	58.761***	(2.078)	58.816***	(2.070)	7.563***	(2.247)
전문대 이상(ref.고졸이하)	2.099	(1.700)	2.198	(1.692)	13.727***	(2.133)
부모의 소득 백분위	0.056*	(0.024)	0.063**	(0.024)	0.219***	(0.035)
본인의 장애	-7.502*	(3.314)	2.506	(6.072)	0.037	(4.206)
부모의 장애	-0.348	(1.904)	-0.538	(1.892)	-2.810	(2.540)
부모 소득×본인 장애			-0.242*	(0.105)		
연도 더미	통제		통제		통제	
Constant	14.406*	(7.139)	13.006	(7.107)	2.336	(10.119)
Observations	1,101		1,101		1,101	
adj. R2	0.699		0.701		0.279	

주: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가구 기준 군집표준오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이하에서는 부모의 총자산 수준에 따른 자녀세대의 가처분소득과 자산 수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다. 부모의 총자산 백분위는 자녀세대에 이르러 자녀의 가처분소득($b=0.139$)과 총자산 수준($b=0.350$)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총자산 수준은 부모의 경제력(소득, 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자녀 본인 혹은 부모의 장애 여부에 의해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녀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부모의 장애 여부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5.300$).

〈표 9-23〉 자녀의 가처분소득과 자산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자산

구분	가처분소득 백분위		총자산 백분위	
	Coef.	se	Coef.	se
만 나이	-0.225	(0.233)	0.476*	(0.232)
여성(ref.남성)	-0.837	(1.561)	-3.331*	(1.615)
가구주(ref.가구원)	-11.253***	(1.994)	-17.627***	(2.264)
유배우(ref.무배우)	4.923**	(1.673)	3.034	(1.832)
가구원 수	0.204	(0.792)	1.501	(0.870)
중소도시(ref.대도시)	-0.831	(1.556)	-2.208	(1.565)
농어촌(ref.대도시)	-0.843	(2.907)	-3.064	(2.757)
자영자(ref.실업·비경활)	8.854**	(3.309)	1.897	(3.167)
비정규직(ref.실업·비경활)	10.856***	(2.589)	-6.441*	(2.510)
정규직(ref.실업·비경활)	20.983***	(2.264)	5.857**	(2.007)
전문대 이상(ref.고졸이하)	4.882*	(2.138)	10.650***	(2.028)
부모의 자산 백분위	0.139***	(0.028)	0.350***	(0.030)
본인의 장애	-0.925	(3.918)	1.056	(3.634)
부모의 장애	-5.300*	(2.399)	-2.240	(2.311)
연도 더미	통제		통제	
Constant	51.103***	(8.502)	6.739	(9.032)
Observations	1,089		1,089	
adj. R2	0.234		0.370	

주: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가구 기준 군집표준오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부모의 자산 수준과 자녀의 노동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당시 자산 백분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67$). 또한 본인의 장애에 따른 주효과도 가처분소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b=-7.222$).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노동소득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대한 본인의 장애에 따른 조절효과도 결과에서 도출되었다. 부모 자산 수준과 본인 장애 여부의 상호작용항이 부적 영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노동소득을 높이는 정적 영향이 자녀 본인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24〉 자녀의 노동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 자산

구분	노동소득 백분위		노동소득 백분위	
	Coef.	se	Coef.	se
만 나이	0.182	(0.185)	0.209	(0.184)
여성(ref.남성)	-5.093***	(1.217)	-5.230***	(1.220)
가구주(ref.가구원)	6.541***	(1.580)	6.418***	(1.560)
유배우(ref.무배우)	1.234	(1.360)	1.237	(1.361)
가구원 수	-0.663	(0.564)	-0.663	(0.564)
중소도시(ref.대도시)	0.634	(1.283)	0.609	(1.281)
농어촌(ref.대도시)	-1.713	(2.147)	-1.729	(2.154)
자영자(ref.실업·비경활)	37.949***	(4.021)	38.014***	(4.006)
비정규직(ref.실업·비경활)	47.047***	(2.185)	47.267***	(2.165)
정규직(ref.실업·비경활)	58.578***	(2.093)	58.646***	(2.086)
전문대 이상(ref.고졸이하)	1.679	(1.725)	1.650	(1.722)
부모의 자산 백분위	0.067**	(0.022)	0.074**	(0.023)
본인의 장애	-7.222*	(3.304)	-0.813	(4.903)
부모의 장애	-0.245	(1.850)	-0.473	(1.832)
부모 자산×본인 장애			-0.178*	(0.087)
연도 더미	통제		통제	
Constant	16.104*	(7.106)	15.059*	(7.123)
Observations	1,089		1,089	
adj. R2	0.690		0.691	

주: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가구 기준 군집표준오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3. 손상과 건강의 대물림

이하에서는 부모의 장애 및 건강상태가 자녀의 장애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앞선 회귀모형과 제 변인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자녀의 장애 여부, 만성질환 유병 여부,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상태의 지표로서 외래 이용 횟수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관찰한 부모세대의 장애 여부와 자녀세대의 장애 비율, 주관적 건강 평균 점수, 만성질환 유병률, 연간 외래이용

횟수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의 장애 비율이 15.8%로 매우 높고, 부모가 비장애인인 자녀의 장애 비율은 2.3%에 그쳤다. 전체 자녀세대 표본의 장애 비율은 3.7%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 비율은 약 5%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른 자녀세대의 장애 비율 차이는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1에서 5의 값을 갖는다. 더 높은 값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세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모가 장애를 지닌 경우 3.81점, 부모가 비장애인인 경우 4.04점을 기록하여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세대가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연간 외래이용 횟수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부모가 장애를 지닌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은 18.7%로 부모가 비장애인인 자녀세대의 16.2%를 상회한다. 연간 외래이용 횟수 또한 전체 자녀세대의 평균 횟수는 5.85회, 부모가 비장애인인 자녀세대는 5.6회로 나타난 반면,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세대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8.94회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장애 및 건강과 관련된 제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로, 부모의 장애가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장애와 건강상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령 등 인구사회적 속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만성질환 유병은 장애를 가진 경우 더 많고, 건강상태나 의료 이용은 만성질환 유병과 본인의 장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하에서는 관련 변인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통해 부모의 장애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본다.

〈표 9-25〉 부모의 장애와 자녀의 장애 및 건강

(단위: %, 점, 회)

구분		자녀의 장애 및 건강			
		장애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유병	연간 외래 이용
부모의 장애	비장애	2.3	4.04	16.2	5.60
	장애	15.8	3.81	18.7	8.04
Total		3.7	4.02	16.4	5.85

주: n=1,104.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다음의 결과는 자녀의 장애 여부, 그리고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이다. 왼쪽 열에 제시한 자녀의 장애 여부에 대한 회귀모형에서 부모의 장애 여부는 매우 큰 정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부모가 장애가 있으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승산이 약 12.5배 크다. 앞선 기술통계의 결과가 다른 주요 변인을 통제했음에도 유효하여, 장애의 세대 간 전이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세대의 만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부모 장애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주요한 영향 요인이라 밝혀져 있는 연령, 소득의 영향이 나타난 가운데, 본인의 장애 여부가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이차조건이 작용함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부모의 장애 여부가 만성질환과 같은 진단된 객관적 건강상태에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26〉 자녀 장애 및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부모 장애의 영향

구분	자녀의 장애		만성질환 유병	
	exp(b)	s.e	exp(b)	s.e
만 나이	1.206**	(0.071)	1.074*	(0.031)
여성(ref. 남성)	0.454	(0.208)	1.190	(0.269)
가구주(ref. 가구원)	0.425	(0.261)	0.930	(0.276)
유배우(ref. 무배우)	0.269	(0.191)	0.470**	(0.120)
가구원 수	0.836	(0.249)	1.005	(0.111)
중소도시(ref. 대도시)	1.266	(0.607)	1.017	(0.227)
농어촌(ref. 대도시)	1.255	(0.775)	1.243	(0.411)
로그 가치분소득	1.424	(0.498)	0.542*	(0.133)
자영자(ref. 실업·비경활)	omitted	-	2.033	(0.908)
비정규직(ref. 실업·비경활)	0.359	(0.188)	1.225	(0.377)
정규직(ref. 실업·비경활)	0.067***	(0.044)	1.298	(0.361)
전문대 이상(ref. 고졸이하)	0.128***	(0.056)	0.972	(0.266)
본인의 장애			5.515***	(2.396)
부모의 장애	12.494***	(5.472)	0.717	(0.244)
연도 더미	통제		통제	
Constant	0.000**	(0.000)	5.213	(12.406)
Observations	917		1,094	
chi2	108.4		65.65	
Pseudo R2	0.416		0.0811	

주: 1)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가구 기준 군집표준오차.

2) 자영자 범주의 경우 완전 예측(케이스 없음)으로 인해 자녀의 장애 모형에서 제외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다음 두 개의 회귀분석 결과는 자녀세대가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일 년 동안 이용한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당연히 만성질환 유병 여부와 본인의 장애가 부정 영향을 갖고 있었지만($b=-0.444$, $b=-0.476$), 부모의 장애 또한 자녀의 주관적 건강에 부정 영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b=-0.150$).

자녀의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결과에서도 만성질환 유병은 강한 정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b=1.342$), 그를 통제하였음에도 부모의 장애는 자녀의 외래이용 횟수에 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b=0.267$).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장애 여부는 자녀세대의 장애와 건강상태에 강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장애가 다음 세대의 장애와 건강에 대물림되는 장애와 건강의 세대 간 이전을 이번 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표 9-27〉 자녀 건강과 의료 이용에 대한 부모 장애의 영향

구분	주관적 건강		외래이용 횟수	
	b	s.e	b	s.e
만 나이	0.003	(0.006)	-0.001	(0.010)
여성(ref.남성)	-0.101*	(0.050)	0.305***	(0.071)
가구주(ref.가구원)	-0.012	(0.058)	0.069	(0.092)
유배우(ref.무배우)	0.036	(0.050)	0.155	(0.079)
가구원 수	-0.010	(0.020)	-0.041	(0.036)
중소도시(ref.대도시)	0.075	(0.044)	-0.066	(0.069)
농어촌(ref.대도시)	-0.057	(0.081)	0.035	(0.124)
로그 가치분소득	0.076	(0.059)	0.058	(0.059)
자영자(ref.실업·비경활)	0.223*	(0.093)	-0.237	(0.122)
비정규직(ref.실업·비경활)	0.132	(0.070)	-0.233*	(0.103)
정규직(ref.실업·비경활)	0.136*	(0.059)	-0.082	(0.089)
전문대 이상(ref.고졸이하)	0.052	(0.060)	-0.062	(0.093)
만성질환 유병	-0.444***	(0.073)	1.342***	(0.075)
본인의 장애	-0.476**	(0.153)	-0.067	(0.151)
부모의 장애	-0.150*	(0.067)	0.267**	(0.100)
연도 더미	통제		통제	
Constant	3.213***	(0.531)	0.793	(0.620)
Observations	1,104		1,104	
adj. R2	0.158		0.285	

주: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가구 기준 군집표준오차.

출처: 한국복지패널 1~19차 원자료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이동성 진단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에서 본인 및 부모의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세대 내 이동에서는 기존 장애인의 사회이동에 더해, 중도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인의 장애 발생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였고, 세대 간 이동에서는 부모의 장애 여부와 자녀 본인의 장애 여부에 따라 분석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장애인 사회이동성 연구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보다 다양한 차원을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장애인의 세대 내 이동 현황 결과를 정리하면, 소득분위의 세대 내 이동은 비장애인에 비해 하향 이동 경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유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은 이미 낮은 소득분위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기존의 낮은 소득 수준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관찰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분위의 하방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산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산분위의 하향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생애 기간 동안 자산 축적의 여지가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함을 드러냈다.

장애 발생 전-후와 노년기(65세) 진입 전-후를 비교하여 장애 발생과 세대 내 이동을 살펴본 결과에서, 개인의 노동소득 수준은 장애 발생 전-후에 매우 단절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실업·비경활 상태로의 진입, 만성질환 유병, 주관적 건강상태가 장애 발생 직전 시점부터 크게 변동되는 모습을 보였고, 장애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의 가처분소득과 자산 수준에서는 장애 발생 전-후의 단절적인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장애 발생 전부터 이미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의 중고령자에 비해 수준 자체가 큰 차이로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

다. 장애 발생을 경험한 집단은 이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장애와 세대 간 사회이동성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라 자녀의 사회경제적 즉, 지위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만, 소득 5분위,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의 이행 결과를 보면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상향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미 낮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자녀세대에 이르러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부모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활발한 사회이동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에, 더 많은 상향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세대 간 이동 현황은 자녀 본인의 장애는 세대 간 이동의 하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진 자녀세대는 그렇지 않은 자녀세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으며, 이는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 수준, 자산 수준이 자녀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 본인의 장애 여부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의 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대한 자녀 본인의 장애 여부는 부모의 영향을 조절함과 동시에 그 자체의 주효과 역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문제의식이었던 손상(장애)과 건강상태의 대물림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의 장애 여부는 자녀세대의 장애와 건강상태에 강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의 장애가 다음 세대의 장애와 건강에 대물림되는 세대 간 이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반면, 자녀세대의 만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부모 장애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본인의 장애 여부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이차조건이 작용함을 의미하는 결과였다.



제10장

성별 사회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3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연구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 10 장 성별 사회이동성 진단

제1절 서론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의 논의는 특정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 혹은 개인의 생애 내에서도 대물림되거나 고착화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주로 사회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온 연구 주제이다. 사회이동성은 ‘이동성’이라는 용어가 담지하듯이 부모-자녀세대 혹은 개인의 생애주기에서의 ‘시계열’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Roemer, 1998, Cholli & Durlauf, 2022).

사회이동성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사회이동성의 현상을 밝히고자 한 1세대 연구를 거쳐 사회이동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2세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사회이동성의 추이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이민자(비이민자)와 같은 집단 간 사회이동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3세대 연구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Nguyen et al., 2005; DiPrete, 2020). 사회적 이동성이 개인들의 중장기적 기회구조를 설명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집단 간 사회이동성의 차이는 법적으로 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 각 집단이 가진 중장기적인 기회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이동성 논의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사회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경제적 지표가 축적되어야 하며, 특히 세대 간 이동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경제활동 시기를 포괄하는 자료가 축적되어야 사회이동성을 실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에서는 실제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자료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 2000년대 이후이다. 사회이동성은 주로 소득이나 직업지위와 같은 경제적 변수로 측정되기 때문에 국내의 사회이동성 초기 연구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여성에 주목하여 성별 간 사회이동성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은 부족하다.

기존의 사회이동성 논의에서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된 비판은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측정하는 것은 이에 배제된 여성 집단의 사회이동성 행태를 보여줄 수 없으며 여성의 사회이동성을 평가하는데 편향(bias)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Glenn et al., 1974; Hout, 1988; Wong & Hauser, 1992; Wong, 1995). 한국은 익히 알려진 대로 성별 간 고용률 격차가 크며 특히 임신과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중반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별 구분 없이 세대 간 혹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측정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 집단의 사회이동성을 보여주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34개국 중에서 가장 큰 최하위에 속하는데 이러한 횡단면 지표가 나타내는 바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 사회이동성 궤적의 이질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성별의 사회이동성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주목하며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논의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회정책적 함의 - 직업훈련 제도, 일가정양립제도, 노동시장 정책 등 -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

대 내 이동의 성별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 간 이동의 성별 격차 메커니즘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료를 결합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고려했다. 제3절의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임금이동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출생 코호트별로 연령별 임금추이를 살펴보고 30세를 기준으로 임금값을 5분위로 구분한 뒤 이후 연령에서 각 분위별 평균임금 추이 분석을 통해 분위유지율을 살펴볼 것이다.

하단의 2절에서는 이론적 논의로 기존의 사회이동성 연구에서 세대 내 이동 중 성별 간 차이를 다룬 국내 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정의와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제5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세대 내 이동성 연구 중 성별 차이를 주목한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관련 연구들은 사회이동성이라는 용어로 명명되지 않더라도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생애주기나 시계열적 관점에서 고찰한 여러 문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이동성 관련 통계결과를 통해서도 주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 관련 연구들은 성별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보다는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 중 하나로 성별을 다루며, 성별은 노동소득 궤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윤정열과 홍기석(2012)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한국('98~'0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관해 분석한 초기 연구로, 개인의 근로소득 결정요인을 초기 조건(학력, 성별, 연령 등)과 후기 조건(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요인이 어떻게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초기 조건 중 '성별'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낮추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초기 조건(학력, 성별, 연령 등)에 의한 소득 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동성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로그) 월평균 소득으로 한국 청년의 세대 내 사회이동 유형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남재욱(2020)의 연구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 청년들의 생애 내 소득 궤적은 크게 네 가지 유형 - 낮은 정체형, 낮은 증가형, 중간 증가형, 높은 급증형 - 으로 도출되는데 여성일수록, 부모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첫 직장에서 종사상 지위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불리한 이행 패턴(낮은 정체형, 낮은 증가형 등)을 보임으로써 '성별'은 생애주기 소득 궤적의 차이를 보이는 주요 변인임을 밝힌다.

최근 소득이동성에 관한 통계자료인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간 사회이동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의 사회이동성 비율은 36.0%, 남성은 34.0%로 여성의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본 통계수치에서 여성의 사회이동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 전체적으로 남성들의 경우 전체의 소득분위에서 고소득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경우 - 더 높은 소득분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은 출산 육아기의 경력 단절 경험, 서비스업 등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종에 근무함으로써 하

위 소득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소득이동이 있더라도 하위 분위로 이동하는 하향 이동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성별 간 소득이동을 볼 때에는 단순히 이동성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origin)와 함께 어느 분위로 이동하는지(destination), 즉 상향 이동인지 하향 이동인지를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선 연구들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전체를 살펴본 것이며 하단에서는 집단 내, 즉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내에서의 이질성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본다. 함선유(2020)는 자녀출산 및 양육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의 경우 임금상승(부성프리미엄), 여성의 경우 임금하락(모성패널티)이라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는 하나,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내에서도 이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부와 모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부모 됨’의 사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21차 자료를 이용하여 무조건 분위회귀분석을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내에서 1~9분위로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자녀수에 따른 임금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남성 여성 모두 ‘부모 됨’은 임금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추이와는 다르게 성별 집단 내에서의 임금 추이는 임금분위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3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1. 사회이동성 개념적 정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일생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이동을 의미하는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① 성별에 따른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고, ② 집단 내, 즉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내에서도 소득분위에 따른 세대 내 이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성별로 특정되는 집단 간 차이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도 초기 소득 수준에 따른 생애 소득 궤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 것이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 이동(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 이동(relative mobility)이라는 개념이 있다.³²⁾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간 세대 내 이동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의 접근을 모두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 1차('98년도)~26차('23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① 출생 코호트별(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 80~89년생)로

32) 절대적 이동(absolute mobility)은 개인의 생애주기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기타 사회적 환경 변화를 통제하지 않고 소득이나 자산 등 변화값 자체를 관측하는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상대적 이동(relative mobility)은 직업 구조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 사회 이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 세대와 다음 세대 혹은 개인의 생애주기 내에서 시기에 따른 상이한 직업구조를 통제한 뒤 출신계급에 따라 특정 계급에 도달하는 상대적 기회 차이를 보여준다. 상대적 이동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거나 혹은 기준이 되는 시점과 도달하는 시점에서의 소득을 모두 분위값으로 구분하여 분위 이동을 보는 방법 등이 있다. 분위값으로 사회이동성을 측정하는 것은 출발 시점과 도달 시점 모두 해당 시점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개인의 지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시점 변화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 등을 통제하는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생애주기상 주된 경제활동 연령대인 25~55세까지의 임금 평균값 추이를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다(절대적 이동성). 이를 통해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성별 임금 차이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지, 여성 집단 내에서도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연령에 따라 임금 증가세가 완만하게 추이하였는지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절대적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의 시계열적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분석은 남성 집단 혹은 여성 집단 내에서의 소득분위에 따른 임금 추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여성 집단 내 고임금 여성들의 패턴은 여성 평균 추이와는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두 번째 분석에서는 ② 남성과 여성 집단 내에서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30세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각 집단에서 임금값을 5분위로 구분하여 이들의 50세까지의 평균 임금값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절대적 이동성). 다음으로는 상대적 이동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③ 30세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임금을 5분위를 나눈 후 이후 연령대에서도 해당 분위가 유지되는지(분위유지율)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상대적 이동의 성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앞선 세 가지 접근법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의 성별 및 연령, 분석시점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분석결과를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다루기 전에 본 연구의 한계를 미리 밝히고자 한다. 본 장에서의 분석결과는 성별 코호트별·임금분위별 임금 추이에 관한 것으로 기술적인(descriptive) 분석에 그치며, 성별 간·성별 내 소득이동성의 차이를 매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힌다. 예를 들어 성별에서도 개인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수준이나, 직업훈련제도, 출산 양육기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가정양립제도나 노동시장 정책 등 사회정책의 변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성별 간 혹은 성별 내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를 포함할 경우 분석의 범위가 매우 방대해질 수 있고 후속연구에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4절 분석결과

본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1차('98년)~ 26차('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금값으로 연령에 따른 이동성을 살펴보고았는데, 분석대상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한 이유는 실질적인 사회정책의 대상이 임금근로자임을 고려하여 이들로 한정하여 소득이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족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예를 들어, 동일임금 동일노동 등)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임금근로자이며 자영업자의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에 대한 논의는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성별 격차와는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금은 실제 노동시간을 반영하기 위해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두 개의 값을 함께 살펴 보며,³³⁾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20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실질임금값으로 분석하였다.

하단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① 출생 코호트별 임금 추이와 ② 분위

33)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조사하고 있으며, 근로 시간으로 주당 정규 근로시간과 주당 초과 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월평균 임금값을 사용하였으며, 시간당 임금은 주당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초과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월평균 임금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별(30세 기준) 임금 추이 ③ 분위별(30세 기준) 분위유지율을 차례로 살펴본다.

1. 성별에 따른 출생 코호트별 평균 임금 추이

첫 번째 분석으로 출생 코호트(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 80~89년생)를 구분하여 생애주기상 주된 경제활동 연령대인 25~55세까지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평균값 추이를 살펴본다. [그림 10-1]에서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그림 10-2]는 ‘시간당 임금’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50세를 기점으로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코호트별 임금 추이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코호트별 연령별 임금 추이는 전체 혹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그래프와 뚜렷하게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상승하는 추이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최근 출생 코호트인 70~79년 출생 코호트와 80~89년 출생 코호트의 연령별 임금 추이를 보면 35세 이전까지는 임금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며 40~45세 이후 정체 혹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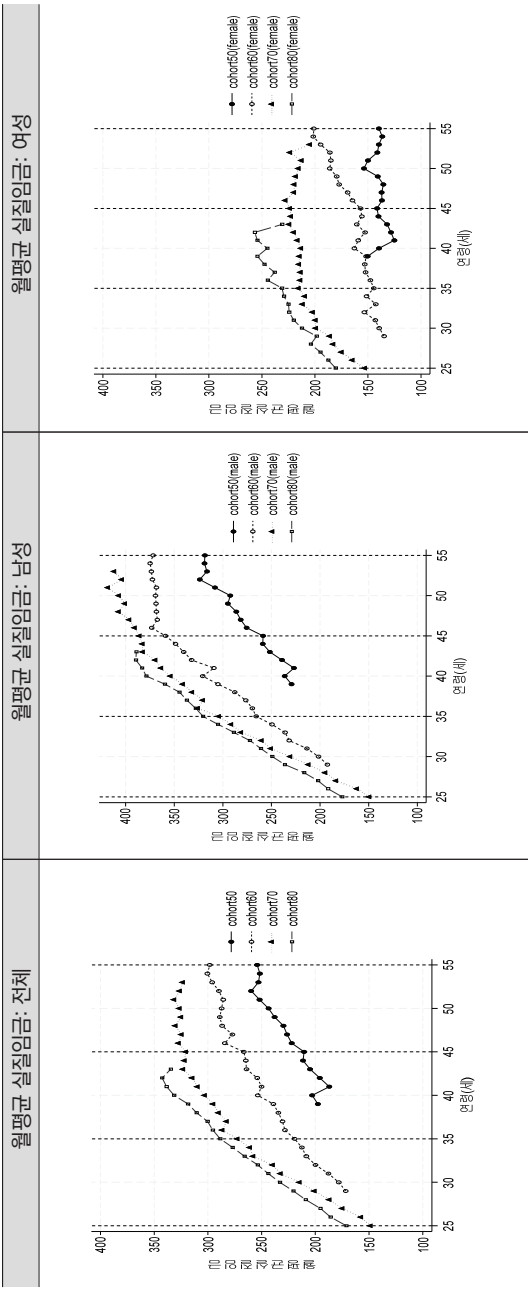
코호트별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 코호트 중 60~69년생 코호트인데, 여성 50~59년 코호트와 다르게 45세 이후의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 집단 내에서 출생시점에 따른 차이를 보이나, 남성 코호트와 비교할 때 남성 60~69년생 코호트와는 다르게 전체 연령

대에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추이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성별 간 차이를 보인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여성 60~69년 코호트에서 45세 이상 연령에서 임금이 상승한 추이는 주목할 만한데 이 시기가 2005년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돌봄일자리가 확대된 시기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돌봄일자리의 확대가 주로 기존의 경력 단절 중년여성들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효과로 이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양상을 보이다가 (주로 저임금으로 정착된) 돌봄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후 여성의 70~79세 코호트에서는 더 이상의 (중장년 여성의) 임금상승 효과가 없는 양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70~79년생 코호트와 80~89년생 코호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추이 - 임금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 - 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출산이나 육아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35세 전후를 기점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역U자 형태의 곡선이 관측된다는 점에서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임금 추이가 달라졌다고 할 만한 패턴은 찾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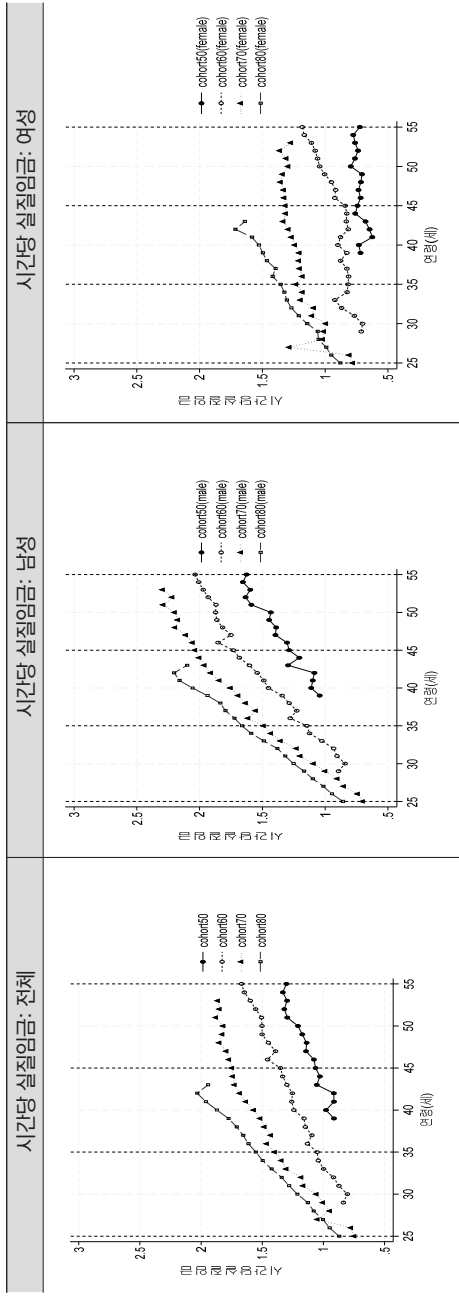
[그림 10-1] 연령별 코호트별 임금 추이(월평균 실질임금): 전체, 남성, 여성
(단위: 만 원)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함. cohort50은 50~59년생, cohort60은 60~69년생, cohort70은 70~79년생, cohort80은 80~89년생을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그림 10-2] 연령별 코호트별 임금 추이(시간당 실질임금): 전체, 남성, 여성

(단위: 만 원)



주: 각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함. cohort50은 50~59년생, cohort60은 60~69년생, cohort70은 70~79년생, cohort80은 80~89년생을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2. 성별에 따른 분위별(30세 기준) 평균 임금 추이

다음으로는 30세 임금을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한 후 이후 연령대(31~50세)에서의 임금 평균값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1998년(1차)에서 2014년(17차)까지 각 연도의 30세인 자³⁴⁾들의 임금값을 추출하여 각 연도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분위로 구분한 값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의 이후 연령(31~50세)에서의 임금 평균값을 구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출생연도로 환산하면 1968년생부터 1984년생의 30세부터 50세까지의 임금값이 분석에 포함된 것인데, 한국노동패널은 현재 시점에서 2023년(26차) 자료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1984년생의 경우 30세에서 40세(11년치)까지의 임금값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그림 10-3]은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5분위별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림 10-4]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5분위별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성별을 구분한 경우 모두 30세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분한 5분위의 임금 추이는 전 생애주기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 월평균 실질임금의 경우 기준 전체와 5분위(임금 상위 20%)의 임금 추이는 다른 분위(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보다 임금 상승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34) 앞선 분석에서는 25세부터 임금 평균값을 살펴보았으며, 본 분석에서도 25세의 임금값을 기준으로 5분위를 구분하여 이들의 평균 임금 추이를 살펴보는 접근법을 택하고자 했다. 그러나 25세를 기준으로 한 경우 생애주기상(초기 청년기) 하위 분위의 소득에 대부분 분포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노동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30세 연령을 기준으로 5분위를 산출하였다. 다만 30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성 집단의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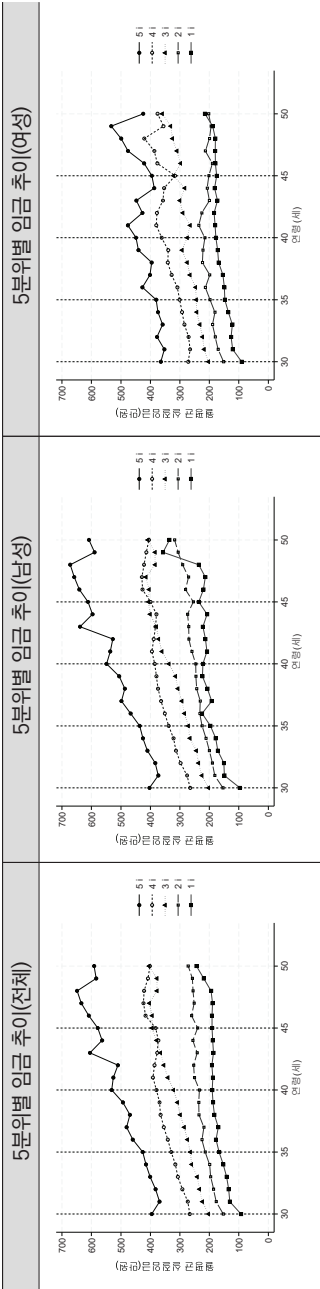
그러나 이를 시간당 실질임금으로 관측한 그래프를 볼 때 하위 분위(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대비 5분위에서 연령에 따른 가파른 임금 상승 추이가 뚜렷이 관측되지는 않는데, 이는 5분위의 월평균 임금이 높은 양상은 다른 분위보다 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한 (월)임금의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와 남성 집단에서의 분위 양상과는 다르게 5분위(임금 상위 20%)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임금 상승 추이가 뚜렷이 관측되지 않으며, 여성 내의 다른 임금분위(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와 유사한 임금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 45세를 전후하여 임금 변동 폭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는 여성 5분위의 임금값 변동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전체, 남성, 여성에서 30세를 기준으로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할 때 이들의 30세 기준 분위별 임금 차이가 이후의 연령에서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여성 집단 내에서도 임금 수준에 따른 임금 추이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여성은 5분위(상위 20%)라고 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남성 5분위와는 차이를 보이며 임금의 변동 폭이 크다는 점에서 고임금 집단에서의 상대적 임금 상승 추이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3] 30세 기준 5분위별 임금 추이(월평균 실질임금): 전체, 남성, 여성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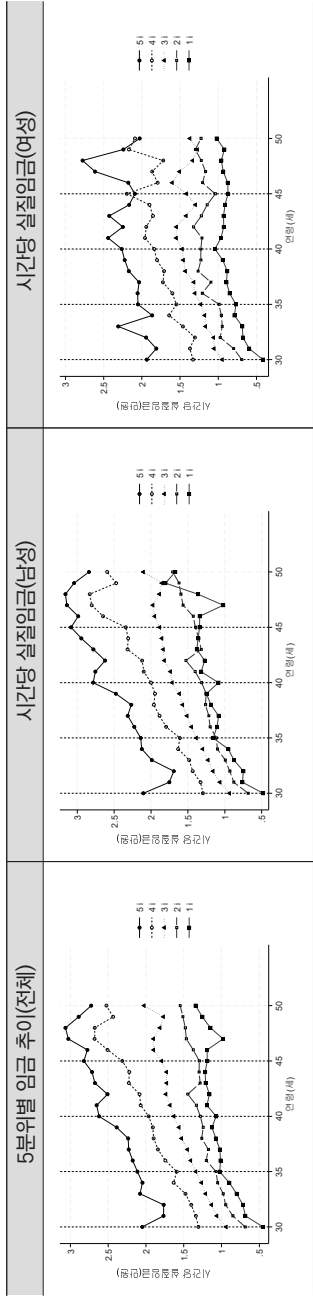


주: 각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을 사용함. 5분위는 30세를 기준으로 전체 임금분포에서 분위를 산출. 30세를 기준으로 1i는 1분위, 2i는 2분위, 3i는 3분위, 4i는 4분위, 5i는 5분위를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그림 10-4] 30세 기준 5분위별 임금 추이(시간당 실질임금): 전체, 남성, 여성

(단위: 만 원)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임금은 소비지불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을 사용함. 5분위는 30세를 기준으로 전체 임금분포에서 분위를 산출. 30세를 기준으로 1i는 1분위, 2i는 2분위, 3i는 3분위, 4i는 4분위, 5i는 5분위를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3. 성별에 따른 분위별(30세 기준) 분위유지율

다음으로 사회이동성의 ‘상대적 이동성’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30세를 기준으로 소득 5분위를 구분하여 31세부터 47세까지의 분위 유지율을 살펴본다. 분위유지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30세의 임금이 당해 연도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한 구간에서 어느 분위에 있는지 5분위로 구분하였으며(기준점), 이후 이들의 31세부터 47세까지 임금이 당해 연도의 어느 임금 분위에 있는지를 가지고 분위유지율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30세에 3분위인 자가 31세에도 3분위를 유지한 경우 분위기를 유지한 것으로 보며(유지=1), 32세에는 4분위로 이동한 경우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이탈=0). 30세의 임금분위를 기준으로 분위유지율(30세 시점 100)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관측을 종료하는 시점까지의 연령을 포괄해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1998년(1차)에서 2006년(9차)에서 30세인 자들의 47세까지의 임금 분위유지율을 추적하였으며, 이를 출생연도로 환산하면 1968년생에서 1976년생의 30세에서 47세의 임금값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다만, 분위유지율 분석이 해당 분위기를 유지했는지만을 보여줄 뿐 이들이 어느 분위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앞서 살펴본 분위별 소득 평균값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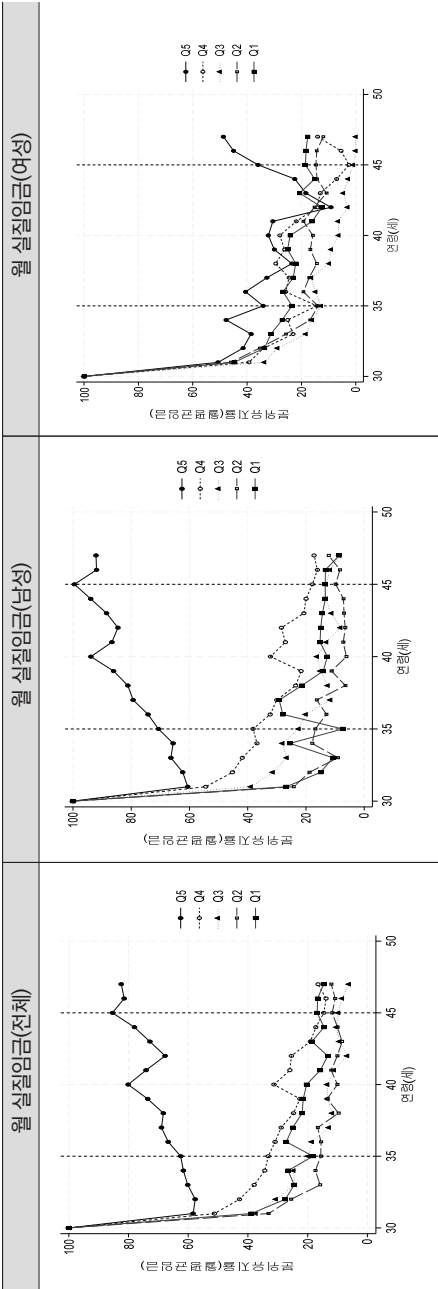
분위유지율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30세를 기준으로 한 5분위(상위 20%)의 분위유지율이 전체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남성의 경우 고임금 집단은 이후 연령에서도 계속해서 고임금 분위기를 유지하는 양상이 관측되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위유지율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남성 임금 수준은 남성의 중장년기 임금에 매우 유의한 변수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의 1, 2, 3, 4분위에서의 분위유지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 이들이 어떤 분위로 이동했는지는 하단의 그래프에서 알 수 없으나 앞선 평균임금 추이를 볼 때 기존의 분위별 임금 양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큰 임금의 변화보다는 주변 분위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30세에서 5분위(상위 20%)라고 하더라도 이후 분위유지율은 남성 5분위와는 다르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앞선 평균임금 추이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때 여성의 경우 고임금 집단 이라도 연령에 따른 임금의 가파른 상승 추이가 관측되지 않으며 이에 여성 집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을 수 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집단 내에서는 고임금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분위유지율의 성별 차이는 월평균 임금을 살펴볼 때 더 명확히 나타나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5] 30세 기준 5분위 기준: 부위유지율(월평균 임금 기준): 전체, 남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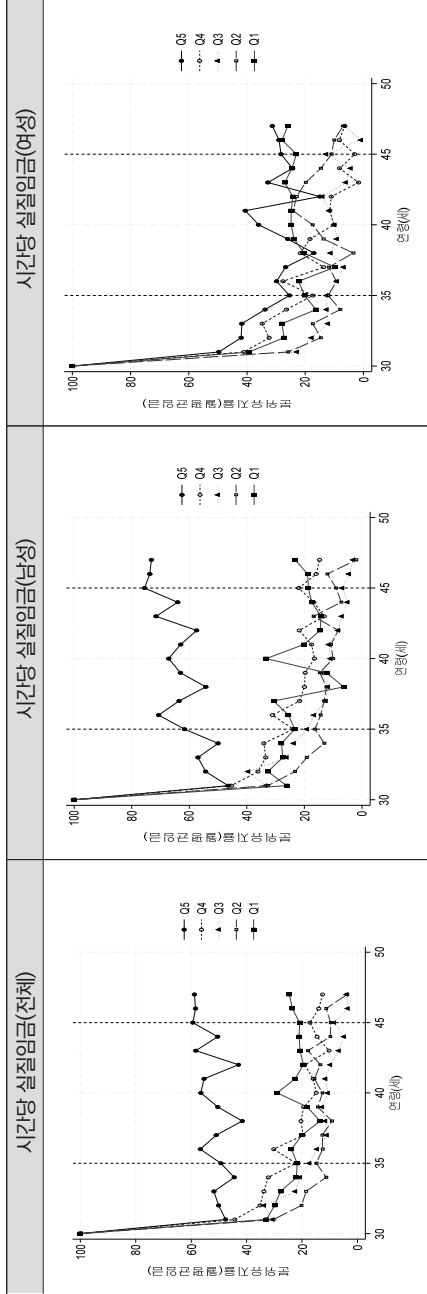
(단위: %)



주: 각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을 사용. Q1은 1분위, Q2는 2분위, Q3는 3분위, Q4는 4분위, Q5는 5분위를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그림 10-6] 30세 기준 5분위 기준: 부위유지율(시간당 임금 기준): 전체, 남성, 여성

(단위: %)



주: 각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을 사용. Q1은 1분위, Q2는 2분위, Q3는 3분위, Q4는 4분위, Q5는 5분위를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제5절 연구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절의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을 구분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균 임금값을 코호트를 구분하여 관측한 경우 최근 출생 코호트(80~89년생)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 추이의 차이가 뚜렷이 관측된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 내에서의 임금분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고임금 집단의 임금 추이는 다른 하위 분위의 임금 상승 추이와 뚜렷이 다르다는 점 - 5분위(상위 20%)의 경우 남녀 상관없이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 - 과 함께 1분위(하위 20%)의 경우 임금값은 계속해서 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저임금자는 계속해서 생애 전체에서 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이며 고임금자는 계속해서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성별 간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분위별 임금 추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30세의 연령에 5분위(상위 20%)이라도 남성 5분위(20%)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이와는 다르게 보다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인다는 점인데, 한국의 고임금 여성이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도 성별 간 생애주기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양상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임금패널티가 여전히 여성에게만 관측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을 기점으로 생기는 고용 중단이 여성의 임금 하락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가족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과 함께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및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사건이 특정 성별에게 고

용단절과 임금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별 직종 분리와 임금 하락에 관해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occupation segregation)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산업군에 따른 종사자의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은 출산 육아기의 고용단절로 인한 임금 격차를 예방한다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직군의 차이와 이로 인한 임금 격차는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산업별·직군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기제 등은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노동시장 취약 계층의 임금 하락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시장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나 사회적 이전 등의 재분배적 정책 기제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못했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시장소득으로 사회이동성을 측정하는 것과 가처분소득으로의 이동성을 측정하여 그 격차를 살펴보는 분석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정책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재분배적 정책이 잘 실현된 국가들의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분배적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본 분석에서는 임금을 관측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충분히 보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연령을 구분할 때 특히 20대 중반 이후부터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본 분석자료에서도 20대 중반 이후 성별 고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편의(Selection bias), 즉 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임금값만을 관측함으로써 고용 상태에 있지 않은 관측되지 않는 임금이 분석자료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는 본 분석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여성과 남성 내에서의 5분위로 구분한 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편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더불어 본 분석에서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구분과 성별 내에서의 초기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만을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의 변수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성별과 소득분위에 따른 생애임금 추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 중에서도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을 추가적으로 구분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 분위별 임금 추이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임금 격차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로 성별로 특정되는 노동시장의 통계적 차별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결혼 여부(혹은 자녀 유무)를 고려하는 경우 분석대상의 사례가 줄어드는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고려하지는 못했다. 추후 분석에서는 본 절에서 살펴본 평균 임금 추이와 같은 기술적 통계를 넘어,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들을 회귀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는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패널자료의 모든 차수를 결합하여 코호트별, 성별 내에서도 임금분위를 구분하여 전체 생애주기를 아울러 임금 추이를 살펴본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강문정. (2017).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 상위권 자녀를 둔 서울 거주 중산층 엄마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학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고영우, 신영민, 이성원, 이지은, 황규성. (2024).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 관계부처합동. (2024).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일자리·교육·자산형성 중심,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년 5월 1일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4).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 보도자료(2024. 12. 18.)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5).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2025. 6. 4.)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서비스**.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101091&kosisYn=Y>에서 2025. 10. 30. 인출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통계별 질문(2021-04-26 게시)**.
<https://mods.go.kr/statDesc.es?mid=a10501010000>에서 2025. 12. 9. 인출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홈페이지. **비정규직(근로자)**.
https://mods.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087에서 2025. 12. 9. 인출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홈페이지. **정규직(근로자)**.
https://mods.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16에서 2025. 12. 9. 인출
-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국가발전지표-사회이동토가능성 인식**.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3>에서 2025. 4. 28. 인출

국가지표체계. **한시적근로자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30>에서
2025. 8. 20.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일자리 이동 통계**, <https://kosis.kr/index/index.do>

김병성. (1985). 교육기회와 사회적 지위이동의 가능성. **한국교육**, 12(1), 23-45.

김수혜, 김경근. (2010). 세대 간 지위이동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사교육 및 어학연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3), 1-26.

김영애, 정영순. (2015). 임금근로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이동 영향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31(2), 37-61.

김재운. (2009.9.22.). **할아버지 재력, 엄마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자녀교육의 키워드?**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145137>

김정규, 김교성. (2019). 일자리 이동 여부에 따른 불안정노동 상태 변화. **한국비교정부학보**, 23(2), 201-229.

김준형. (2018). 부모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OECD 5개 국가의 교육불평등 비교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8(1), 1-34.

김진영, 김성태. (2013).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과제. **응용경제**, 15(2), 61-106.

김태완, 이주미. (2024). **사회이동성 지표 추이 분석**. 기획재정부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발표자료

김현철, 이철원. (2013). 교육생산성 이동성 분석. **생산성연구**, 27(4), 259-278.

김혜연. (2000). 기혼여성의 노동이동 가능성: 노동이동 의사와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9), 143-157.

김희삼.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54), 1-8.

김희삼. (2017). **사회 이동성과 교육 격차: 진단과 처방**.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2), 309-334.

남재욱. (2020). 한국의 세대 내 사회이동 유형과 결정요인, **KRIVET Issue**

- Brief (2020.6.16.)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6652&cid=40942&categoryId=31846>에서 2025. 7. 31. 인출
- 누리지표 국가발전. **비임금근로자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3>에서
2025.10.31. 인출
- 누리지표 e-나라지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8에서 2025. 10. 31. 인출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패넬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 이영민. (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II):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연구보고 RR 2010-2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방하남, 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1), 93-126.
- 서원주. (2013).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영국 교육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현안 CP 2013-01-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손현. (2020).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06).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신광영. (2004). 계급, 성과 일자리 이동. **한국사회학**, 38(1), 25-50.
- 신광영. (2018). 불안정 노동의 시대. **월간 복지동향**, 223, 5-12.
- 안병훈. (202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BS 수능특강과 학자금지원정책이 사회적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교육종합연구**, 20(2), 127-149.
-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의사회 연구**, 28(2), 53-80.
- 여유진. (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61-81.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정열, 홍기석. (2012). 우리나라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5(2), 43-77.
- 이병희. (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노동경제논집**, 28(1), 1-28.
- 이성민. (2010). 장애인 가구의 빈곤화 메커니즘: 편중된 계급분포와 계급의 하강이동: 편중된 계급분포와 계급의 하강이동. **장애의 재해석**, 34-69.
- 이용관. (2015).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보건사회연구**, 35(1), 275-298.
- 이원진, 김기태, 신영규, 임덕영, 함선유, 남운재. (2022).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보장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 안준홍. (2023). 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이동 분석. **노동경제논집**, 46(4), 2023.12. 41-84.
- 이태진, 여유진, 강예은, 남운재, 신재동, 정주성, 송지은, 이원진,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임은정, 김건, 김태형. (2024). **2024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연, 양재진. (2017). 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한국정책학회보**, 26(4), 65-104.
- 임찬영. (2017). 직장이동행태의 시계열적 추이: 이중노동시장 검토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19(6), 3103-3119.
- 장수명, 한치록, 여유진. (2016). 사교육 금지 정책과 계급이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정책**, 23(1), 179-202.
- 정병석, 김동현, 박능후. (2011).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TLM과 고용서비스 포럼 종합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우탁. (1997). 교육과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의 정치적 의미. **교육정치학연구**, 4(1), 157-171.

- 정해식. (2020).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2020.2.)**. 이달의 초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송치호, 백승호. (2021).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실제와 인식의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1), 289-314.
- 조윤희, 서동명. (2024). 임금근로장애인의 소득이동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4(2), 5-3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가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24). **한국노동패널 1~26차연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9차 원자료**
- 한국은행. (2020). **최근 소득분배 개선의 배경과 평가**. 경제분석실.
- 한준. (2016). 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배경. **현상과 인식**, 40(4), 45-74.
- 함선유. (2020).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 자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계층 차이. **보건사회연구**, 40(2), 387-415.
- 함인희. (2007). 세대분화와 세대충돌의 현주소. In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241-272.
- 함인희. (2013). 세대 갈등의 현주소와 세대 통합의 전망.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vol. 2013 iss. 1** 47-69.
- 황수경. (2003). 내부자 노동시장과 외부자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3(3), 49-87.
- Adermon, A., Lindahl, M., & Waldenström, D. (2018). Intergenerational wealth mobility and the role of inheritance: Evidence from multiple generations. *The Economic Journal*, 128(612), F482-F513.
- Alan B. Krueger. (2012).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krueger_cap_speech_final_remarks.pdf

- Becker, G. S., & Tomes, N. (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1153-1189.
- Berger, T., Engzell, P., Eriksson, B., & Molinder, J. (2023). Social Mobility in Sweden before the Welfare State.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83(2), 431-463. <https://doi.org/10.1017/S0022050723000098>
- Berman, Y., & Milanovic, B. (2023). Homoploutia: top labor and capital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1950-202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70(3), 766-784.
- Björklund, A., & Jäntti, M. (1997).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Sweden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7(5), 1009-1018.
- Björklund, A., Jäntti, M., & Lindquist, M. J. (2009). Family background and income during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 Brother correlations in income for Swedish men born 1932-1968.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5), 671-680. <https://doi.org/10.1016/j.jpubeco.2009.02.006>
- Björklund, A., Roine, J., & Waldenström, D. (2012). Intergenerational top income mobility in Sweden: Capitalist dynasties in the land of equal opportun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6(5), 474-484. <https://doi.org/10.1016/j.jpubeco.2012.02.003>
- Blanden, J., Gregg, P., & Machin, S. (2005).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Report supported by the Sutton Trust,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Blau, P., & Duncan, D. C. (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ley.
- Boserup, S. H., Kopczuk, W., & Kreiner, C. T. (2018). Born with a silver spoon? Danish evidence on wealth inequality in childhood. *The*

- Economic Journal*, 128(612), F514-F544.
- Boudon, R. (1973).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 Borghans, L., ter Weel, B., & Weinberg, B. A. (2008). Interpersonal styles and labor market outcom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4), 815-858.
- Borgonovi, F., & Pokropek, A. (2025). Young people's social mobility expectations in an unequal world. *Science*, 388(6747), 599-601.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85). The forms of capital. In J.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NY: Greenwood Press.
- Bourdieu, P., & Passeron, J.-C.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Sage.
- Bratsberg, B., Røed, K., Raaum, O., Naylor, R. A., Jäntti, M., Eriksson, T., & Österbacka, E. (2007). Nonlinearities in inter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Consequence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The Economic Journal*, 117(519), C72-C92.
- Breen, R. and Müller, W. (eds.) (2020) *Education and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een, R. (Ed.). (2004). *Social mobility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Breen, R. (2005a) 'Foundations of a neo-Weberian class analysis', in E.O. Wright (ed) *Approaches to class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50.
- Breen, R. (2005b). Explaining Cross-national Variation in Youth Unemployment: Market and Institutional Factors. *European*

- Sociological Review*, 21(2), 125-134.
<https://doi.org/10.1093/esr/jci008>
- Breen, R. (2010). Educational Expans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20th Century. *Social Forces*, 89(2), 365-388.
<https://doi.org/10.1353/sof.2010.0076>
- Breen, R., & Jonsson, J. O. (2007). Explaining Change in Social Fluidity: Educational Equalization and Educational Expansion in Twentieth-Century Swed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6), 1775-1810.
<https://doi.org/10.1086/508790>
- Breen, R., & Luijkx, R. (2004). *Conclusions*. In R. Breen (Ed.), *Social Mobility in Europe* (p. 0).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0199258457.003.0015>
- Breen, R., Mood, C., & Jonsson, J. O. (2016). How Much Scope for a Mobility Paradox?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Income Mobility in Sweden. *Sociological Science*, 3, 39-60.
<https://doi.org/10.15195/v3.a3>
- Brown, S., McHardy, J., & Taylor, K. (2014).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kills: an analysis of US and UK panel dat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0, 43-54.
- Bukodi, E., & Goldthorpe, J. H. (2019). *Social mobility and education in Britain: Research, politics and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kodi, E., Goldthorpe, J. H., & Kan, M. Y. (2017). The mobility problem in Britain: New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birth cohort data.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8(1), 3-38.
- Bukodi, E., Paskov, M., & Nolan, B. (2020).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Europe: A New Account. *Social Forces*, 98(3), 941-972.
<https://doi.org/10.1093/sf/soz026>
- Charles, K. K., & Hurst, E. (2003). The correlation of wealth across

- gene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6), 1155-1182.
- Chatzitheochari, S., Velthuis, S., Connelly, R. (2022), Childhood disability, social class and social mobility: A neglected relationship.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3(5): 959-966.
- Chetty, R., Hendren, N., Jones, M. R., & Porter, S. R. (2020). Race and economic opportunity in the United States: An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2), 711-783.
- Chetty, R., Hendren N., Kline, P. and Saez, E.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 pages 1553-1623.
- Cholli, N. A., & Durlauf, S. N. (2022). Intergenerational mobi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9760*.
- Clark, T. (2024). *Earning vs Owning: Rescuing Opportunity in the Asset Economy*.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IPPR) Discussion Paper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lischon, M., Hiesinger, K., Pohlen, L. (2025), Disability onset and labor market outcomes. *Socio-Economic Review*, mwaf021. <https://doi.org/10.1093/ser/mwaf021>
- Conley, D., & Glauber, R. (2008). *Wealth mobility and volatility in black and whit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167.
- Day, M. V., & Fiske, S. T. (2017). Movin' on up? How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affect our willingness to defend the system.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3), 267-274.
- Dearden, L., C. Ryan and L. Sibieta. (2011). What Determines Private School Choice? A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ustralian Economic Review*, 44, 308 - 320.
- DiPrete, T. A. (2020). The impact of inequality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46(1), 379-398.
- DiPrete, T. A., & Eirich, G. M. (2006). Cumulative advantage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Dribe, M., Helgertz, J., & van de Putte, B. (2015). Did social mobility increase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 micro-level study of a transforming community in southern Sweden 1828-1968.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1, 25-39.
<https://doi.org/10.1016/j.rssm.2015.04.005>
- Duncan, G. J., Kalil, A., Mayer, S. E., Tepper, R., & Payne, M. R. (2005).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In S. Bowles, H. Gintis, & M. Osborne Groves (Eds.), Unequal chances: Family background and economic success (pp. 23-7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rikson, R., &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 Eurofound. (2017). *Social Mobility in the European Union: Trends, Barrier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ublications Office of the

- European Union.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1845366/social-mobility-in-the-eu/2591097/>
- Eyles, A., Major, L. E., & Machin, S. (2022). *Social mobility – past, present and future: The state of play in social mobility,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Sutton Trust*.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 The Sutton Trust.
<https://www.suttontrust.com/wp-content/uploads/2022/06/Social-Mobility-25-years.pdf>
- Fagereng, A., Mogstad, M., & Rønning, M. (2021). Why do wealthy parents have wealthy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9(3), 703–756.
- Featherman, D. L., Lancaster Jones, F., & Hauser, R. M. (1975). Assumptions of social mobility research in the U.S.: The case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4(4), 329–360.
[https://doi.org/10.1016/0049-089X\(75\)90002-2](https://doi.org/10.1016/0049-089X(75)90002-2)
- Fields, G. S. (2005). *Income mobility*. In A. B. Atkinson &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557–598). Elsevier.
- Friedman, S & Laurison, D. (2024). *계급 천장: 커리어와 인생에 드러온 긴 그림자*. (홍지영 역). 사계절.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 Glass, D.V. (1954). *Social Mobility in Britain (1st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007090>
- Glass, D. V. (Ed.). (1998). *Social mobility in Britain (Vol. 16)*. Taylor & Francis US.
- Glenn, N. D., Ross, A. A., & Tully, J. C. (1974).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females through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3–699.

- Goldthorpe, J. H. (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Press.
- Goldthorpe, J. H., Llewellyn, C., & Payne, C. (1987).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Press.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ällsten, M. (2025). *What we know and do not know about social mobility*. OSF. https://doi.org/10.31235/osf.io/uznr6_v3
- Hällsten, M., & Kolk, M. (2023). *The Shadow of Peasant Past: Seven Generations of Inequality Persistence in Northern Swed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8(6), 1716-1760.
<https://doi.org/10.1086/724835>
- Hällsten, M., & Thaning, M. (2022). Wealth as One of the "Big Four" SES Dimension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Social Forces*, 100(4), 1533-1560. <https://doi.org/10.1093/sf/soab080>
- Hällsten, M., & Yaish, M. (2022).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Mobility and Life Course Economic Trajectories in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8(4), 507-526.
<https://doi.org/10.1093/esr/jcab054>
- Hauser, R. M., & Featherman, D. L. (1977).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Trends and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Heath, A., & Li, Y. (2023). *Social mobility*. John Wiley & Sons.
- Henderson, M., Anders, J., Green, F., & Henseke, G. (2020). Private schooling, subject choice, upper secondary attainment and progression to university. *Oxford Review of Education*, 46(3), 295-312.
- Hertel, F. R. (2017). Social mobility in the 20th century. *Wiesbaden: Springer VS. DOI, 10*, 978-3.

- Hertel, F. R., & Groh-Samberg, O. (2019). The Relation between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39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6), 1099-1133.
<https://doi.org/10.1177/0003122419885094>
- Hertz, T., Jayasundera, T., Piraino, P., Selcuk, S., Smith, N., & Verashchagina, A. (2008). The Inheritance of Educational Inequality: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Fifty-Year Trend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7(2).
<https://doi.org/10.2202/1935-1682.1775>
- Holmlund, H., McNally, S. and Viarengo, M. (2010). Does money matter for school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9(6), pages 1154-1164.
- Hout, M. (1988). More universalism, less structural mobility: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in the 1980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1358-1400.
- Hout, M. (2006).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and essentially maintained inequality: Crossnational comparisons.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s*, 21(2), 237-252.
- Huband-Thompson, B. (2024). *The opportunity effect: how social mobility can help drive business and the economy forward*.
- Ilany, A., Holekamp, K. E., & Akçay, E. (2021). Rank-dependent social inheritance determines social network structure in spotted hyenas. *Science*, 373(6552), 348-352.
- Iversen, V., Krishna, A., & Sen, K. (2021). *Social mo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Concepts, methods, and determinants (p. 512)*. Oxford University Press.
- Jajtner, K.(2020). Work-Limiting Dis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Economic Mobility. *Social Science Quarterly*, 101(5): 2001-2016.
- Jajtner, K., Messel, M., Fletcher, J.(2023). Social Security Disability

- Insurance and intergenerational economic mobility.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41(4): 575-593.
- Jonsson, J. O. (2004). *Equality at a Halt? Social Mobility in Sweden, 1976-99*. In R. Breen (Ed.), *Social Mobility in Europe*(p. 0).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0199258457.003.0009>
- Jonsson, J. O., & Mills, C. (1993). Social Class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A Swedish-English Comparison Part I.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2), 213-247. <https://doi.org/10.2307/591218>
- Kerr, C., Dunlop, J. T., Harbison, F. H., & Myers, C. A. (1960).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Harvard University Press.
- Li, Y., & Heath, A. (2016). Class matters: A study of minority and majority social mobility in Britain, 1982-201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1), 162-200.
- Lipset, S. M., & Zetterberg, H. L.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ng, J., & Ferrie, J. (2006). "Labour Mobility" *Oxford Encyclopedia of Economic History*. <http://www.weinberg.northwestern.edu>.
- Lortie-Forgues, H. and Inglis, M. (2019), Rigorous Large-Scale Educational RCTs Are Often Uninformative: Should We Be Concerned? *Educational Researcher*, 48(3), pages 158-166.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8), 1642-1690.
- Ludvigsson, J. F., Almqvist, C., Bonamy, A.-K. E., Ljung, R., Michaëlsson, K., Neovius, M., Stephansson, O., & Ye, W. (2016). Registers of the Swedish total population and their use in medical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31(2), 125-136.

- <https://doi.org/10.1007/s10654-016-0117-y>
- Lundberg, J., & Waldenström, D. (2018). Wealth Inequality in Sweden: What can we Learn from Capitalized Income Tax Dat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4(3), 517-541. <https://doi.org/10.1111/roiw.12294>
- Mannheim, K. (1927/1997). The Problem of Generations. M. Hardy ed.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22-65.
- Markus, H. R.,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9), 954-969.
- Mill, J. S. (1885[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85.
- Mouffe, C. (2024). *계급항단자들 혹은 비-재생산*. (류희철 역). 그린비. (Original work published 2014)
- Nguyen, A., Haile, G., & Taylor, J. (2005).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a study of 26-year-olds in the USA.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2(4), 544-564.
- Nico M. (2021) Identity and change of a field: A literature analysis of the concept of social mobility, *Social Science Information*, 60(3): pages 457-478.
- OECD. (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 OECD. (2018a).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 OECD. (2018b).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292932-en>
- OECD. (2020). *How's Life? 2020*.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ow-s-life/volume-/issue-_9870c393-en/full-report/component-14.html#chapter-d1e14471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OECD.
- OECD. (2024).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DF_HSL_CWB&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df\[ag\]=OECD.WISE.WDP&df\[vs\]=&pd=2019%2C2024&dq=.8_2%2B7_1%2B7_1_DEP..YOUNG%2B_T._T._T.&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DF_HSL_CWB&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df[ag]=OECD.WISE.WDP&df[vs]=&pd=2019%2C2024&dq=.8_2%2B7_1%2B7_1_DEP..YOUNG%2B_T._T._T.&to[TIME_PERIOD]=false)에서 2024.12.16. 인출.
- OECD. (2025). *To Have and Have Not - How to Bridge the Gap in Opportunities*.
- Okumura, T. and Usui, E. (2010). Do Parents' Social Skills Influence Their Children's Sociability? *IZA Discussion Papers 5324*,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Parsons, T. (1960).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ies*. Free Press.
- Pekkarinen, T, Uusitalo, R. and Pekkala, S. (2009). School Tracking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Evidence from the Finnish Comprehensive School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pages 965-973.
- Pfeffer, F. T. (2008). Persistent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its Institutional Contex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5), 543-565.
<https://doi.org/10.1093/esr/jcn026>
- Pfeffer, F. T., & Killewald, A. (2015). *How rigid is the wealth structure? intergenerational correlations of family wealth*. Populatio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 Pfeffer, F. T., & Killewald, A. (2018). Generations of advantage : Multigenerational correlations in wealth. *Social Forces* 96 (4), 1411-1442.
- Phoebe Kowhai. (2023). *Posho Ranking: These are the universities with the*

- most private school students in 2023*. The Tab.
<https://thetab.com/2023/09/18/these-are-the-universities-with-the-most-private-school-students-2023>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aftery, A. E., & Hout, M.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19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41-62.
- Reay, D. (2017). *Miseducation: Inequality, education and the working classes*. Policy Press.
- Roemer, J. E.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 E. (2004). Equal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going beyo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ition matrices. *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48-57.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Sewell, W. H., & Hauser, R. M.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Silvermana, D.M., Hernandezb, I.A., Schneiderc, M., Ryand, R.M., Kalile, A., Destin, M. (2024). Economic mobility and parents' opportunity hoarding. *Psychological and Cognitive Science*. 121(37). 1-7.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ocial Mobility Commission(SMC). (2022). *State of the Nation 2022: A*

fresh approach to social mobility.

Social Mobility Commission(SMC). (2023). *State of the Nation 2023: People and places.*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State of the Nation 2024.* London: UK Government.

<https://social-mobility.independent-commission.uk/app/uploads/2024/09/State-of-the-Nation-2024.pdf>

Solon, G. (1992).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82(3), 393-408.

Sorokin, P. A. (1927). *Social Mobility.* Harper & Brothers.

van der Weide, R., Lakner, C., Mahler, D. G., Narayan, A., & Gupta, R. (2024). Intergenerational mobility around the world: A new databas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66, 103167. <https://doi.org/10.1016/j.jdeveco.2023.103167>

Vroom, V. H. (1995). *Work and motivation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Jossey-Bass.

Whiteneck, G. (2006). "Conceptual models of disability: past, present, and future". pp.50-66. in M.J Field, A.M. Jette & L. Martin(eds.). *Disability in America: A New Look.*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ong, R. S. K., & Hauser, R. M. (1992). Trends in occupational mobility in Hungary under socialism. *Social science research*, 21(4), 419-444.

Wong, R. S. K. (1995). Socialist stratification and mobility: cross-national and gender differences in Czechoslovakia, Hungary, and Poland. *Social Science Research*, 24(3), 302-328.

Wyness, G., & Murphy, R. (2020). *Universities and under-matching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Zimmerman, D. (1992) Regression toward mediocrity in economic sta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82, pages 409-429.



[부록 1]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	--	--	--	--	--	--	--	--	--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_____의 면접원 _____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주관기관	조사기관	문의처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크린슈머	02-3279-2308

※ 응답자 선정 후 체크해주세요.

응답자 이름 (바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바른생일자)	-
응답자 성별 (선문1)	① 남 ② 여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 조사 종료 후 면접원이 체크해주세요.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	--------------------------------

392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문 A1) 귀하의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정,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가구원 수		
		명

문 A2) 귀하께서는 현재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A3) 귀하께서는 현재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A4)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조사시점 현재 기준)

구분	응답자	범주
문 A4-1)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가구주의 손자녀 ⑧ 기타()
문 A4-2)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문 A4-3) 교육수준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이상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문 A4-4) 혼인상태		① 기혼(배우자 있음) ② 이혼·별거 ③ 사별 ④ 미혼
문 A4-5)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원이 없는고용주 ⑤ 고용원이 없는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단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주 동안 수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말함
문 A4-6) 고용 형태 문 A4-5) ④ ⑤ ⑥ ⑦ ⑧인 경우 제외)		① 정규직 (직접고용/전일제/지속가능 무기근로) ② 비정규직 (직접고용/전일제/지속불가능 무기근로, 지속가능 유기근로, 지속불가능 유기근로), (간접고용), (특수고용)
문 A4-7) 사업장 규모 문 A4-5) ⑦ ⑧인 경우 제외) ※ 본인 포함		① 1명 ② 2~4명 ③ 5~9명 ④ 10~29명 ⑤ 3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명 이상
문 A4-8) 장애 여부		① 해당없음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급) 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준 4~6급) ④ 비등록 장애인(보호처등록 장애인 포함)
문 A4-9) 현재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도

※ 2024년 1년간(2024.1.1 ~ 2024.12.31) 동안 가구의 주거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사 등으로 변화가 있었던 경우, 바뀐 이후를 기준 응답)

A5)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① 단독주택(영양전문단독)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⑤ 오피스텔, 고시원 ⑦ 기타	② 아파트(주상복합) ④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⑥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음막	
A6)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④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 보증부월세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주기로 하는 임대차 형태를 말함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⑤ 기타(무상포함)	
A7)	주 택 (가 격)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월사기)은?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	금액	만원

문 A7)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응답하 경우만

1순위	2순위

ㄴ 문 A7-1) 귀하께서 평소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① 만성질환이 있어서
- ②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요통, 관절통, 두통 등)
- ③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서(걷기, 계단오르기, 집안일 등)
- ④ 최근 큰 병이나 부상을 경험해서
- ⑤ 수면장애나 피로감이 심해서
- ⑥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인해(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
- ⑦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관리 어려움
- ⑧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서
- ⑨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서(나이가 많아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껴서)
- ⑩ 기타()

II. 사회 및 소득분배 인식

문 B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			보통 ----->				>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B2)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B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점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5년 전(2020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5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30년)	①	②	③	④	⑤

문 B4) 귀하는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점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5년 전(2020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5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30년)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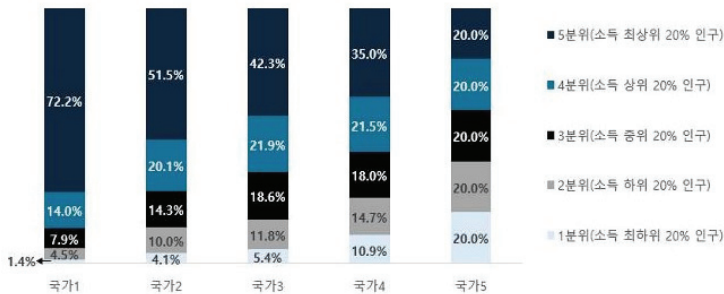
문 B5) 아래 그림은 한 나라의 인구를 소득(세후 소득, 즉 소득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진 후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최상위 20%, 상위 20%, 중위 20%, 하위 20%, 최하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 만약에 국가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5개의 집단에 각 20명씩 있다는 의미이고, 국가 1의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잘 사는 20명이 국가 전체(100명 분) 소득의 72.2%를 소유하고 있고, 가장 가난한 20명은 국가 전체 소득의 1.4%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 B5-1) 아래 제시되어 있는 5개 나라 중에서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소득의 분배 상태)



문 B5-2) 아래 제시되어 있는 5개 나라 중에서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소득의 분배 상태)



문 B6) __님께서서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B7)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각각의 분야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사회 전체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받을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일자리 얻을 기회(채용승진 등)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지위 상승기회	①	②	③	④	⑤
(5) 자유로운 기업활동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복지혜택 기회	①	②	③	④	⑤
(7)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	①	②	③	④	⑤
(8)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①	②	③	④	⑤

III. 사회이동성 인식

※ **사회이동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계층 또는 계층적 위치가 이동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문 C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활발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활발하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C1-1) 문1 ① ~ ③ 으로 응답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②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③ 사회적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④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 ⑤ 경제성장 둔화로 전반적인 기회가 부족해서
- ⑥ 여성, 청년, 이주민, 소수자 등이 소득, 자산, 일할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 ⑦ 소득세, 중임부동산세 등 조세의 형평성이 낮기 때문에
- ⑧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제도 등 공공정책이 부족해서
- ⑨ 기타(

문 C2)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C3)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 주지 않음 <----- 보통 -----> 완전히 영향을 주었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C3-1)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개인적 경험 또는 인식에 기초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영향 주지 않음 <----- 보통 -----> 완전히 영향을 주었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C3-2)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귀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개인적 인식과 전망에 기초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영향 주지 않음 <----- 보통 -----> 완전히 영향을 주었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C4)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 교육 수준, 기타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주장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선택해주세요.

	완전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반대도 동의도 아님	약간 동의	동의	완전 동의
(1) 사람들이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자로 태어나면 가난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난하게 태어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오늘날 사회계층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C5-1) 사회전체를 소득에 따라 다섯 그룹(5분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집단(최상위 20%)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5개 소득 집단 중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총합 100%가 되도록 작성해주세요.

최상위 20% - 가장 부유한 그룹		최상위 20% - 가장 부유한 그룹	
상위 중간 20% - 두 번째로 부유한 그룹		상위 중간 20% - 두 번째로 부유한 그룹	
중간 20% -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룹		중간 20% -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룹	
하위 중간 20% - 네 번째로 부유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룹		하위 중간 20% - 네 번째로 부유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룹	
최하위 20% - 가장 가난한 그룹		최하위 20% - 가장 가난한 그룹	

문 C5-2) 사회전체를 소득에 따라 다섯 그룹(5분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단(최하위 20%)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5개 소득 집단 중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총합 100%가 되도록 작성해주시시오.

최상위 20% - 가장 부유한 그룹
상위 중간 20% - 두 번째로 부유한 그룹
중간 20% -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룹
하위 중간 20% - 네 번째로 부유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룹
최하위 20% - 가장 가난한 그룹



최상위 20% - 가장 부유한 그룹	
상위 중간 20% - 두 번째로 부유한 그룹	
중간 20% -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룹	
하위 중간 20% - 네 번째로 부유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룹	
최하위 20% - 가장 가난한 그룹	

문 C5-3) 사회전체를 소득에 따라 다섯 그룹(5분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 소득분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5개 소득 집단 중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총합 100%가 되도록 작성해주시시오.

최상위 20% - 가장 부유한 그룹
상위 중간 20% - 두 번째로 부유한 그룹
중간 20% -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룹
하위 중간 20% - 네 번째로 부유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룹
최하위 20% - 가장 가난한 그룹



최상위 20% - 가장 부유한 그룹	
상위 중간 20% - 두 번째로 부유한 그룹	
중간 20% -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룹	
하위 중간 20% - 네 번째로 부유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룹	
최하위 20% - 가장 가난한 그룹	

문 C6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사회이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이동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계층 또는 계층적 위치가 이동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기서 좋은 조건이나 환경으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항목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소득 이동성	①	②	③	④	⑤
(2) 자산 이동성 (*부동산, 금융자산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을 통한 이동성 (*고등교육, 대학시절과 등)	①	②	③	④	⑤
(4) 고용 및 일자리 이동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력 등)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의 사회 이동성	①	②	③	④	⑤
(6) 취약계층 사회 이동성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응답한 경우만



문 C6-1) 귀하께서 소득에서 사회이동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적 확대
- ② 노동시장에서 임금복사격차(대중소기업 간, 학력 간, 남녀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확대
- ③ 세별, 전문직(의사, 전문프리랜서, 전문경영인 등) 중심의 사회구조
- ④ 노동시장 조기 퇴직으로 인한 저임금·불안정고용층 증가
- ⑤ 학벌, 대학서열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높은 일자리 참여 기회 배제
- ⑥ 실업, 폐업, 가족해체 등 빈곤·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부재
- ⑦ 조세제도 미비(누진세 악화, 조세채널자 등에 대한 처벌 미비 등)
- ⑧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
- ⑨ 이유 없음
- ⑩ 기타()

문 C6-2) 귀하께서 자산에서 사회이동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한 부모 등으로부터 자녀로의 상속증여 등의 증가
- ② 수도권 및 특정지역 중심의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 ③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미래에 대한 희망 부족
- ④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 ⑤ 정부의 감세(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등)로 인해서
- ⑥ 신규 자산(가상자산 등) 등에 대한 규제 미비
- ⑦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통한 자산축적의 부족
- ⑧ 이유 없음
- ⑨ 기타()

문 C6-3) 귀하께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부모, 조부모 등)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원차이로
- ② 수도권 및 대학서열화 등으로 인한 특정 대학 및 학과 등에서 배제되어
- ③ 고등교육(마이스터고, 대학 등) 과정에서 습득한 교육과 기술이 취업·업무 등과 연결되지 못해서
- ④ 저소득취약계층 가구 자녀 등에 대한 공적지원 부족
- ⑤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 교육정책 변화와 신뢰부족
- ⑥ 이유 없음
- ⑦ 기타()

문 C6-4) 귀하께서 고용 및 일자리분야에서 사회이동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근로환경, 임금·복지 격차의 지속
- ② 정규직·비정규직, 적종 간, 성별, 학력 등 근로조건, 임금·복지 격차 지속
- ③ 기업(공공, 민간 등)의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지 않아서
- ④ AI, 로봇 등의 자동화 확대에 따른 좋은 일자리 축소
- ⑤ 디지털 전환, 비대면,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 ⑥ 능력(학력, 기술), 욕구(임금, 복지) 등에 부합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부족
- ⑦ 실업, 폐업 등 노동위기층을 위한 정부 지원 미비(고용서비스, 생계지원 등)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
- ⑧ 인적(교육, 직업숙련도 등) 및 사회적 네트워크(인맥, 학맥 등)가 부족해서
- ⑨ 이유 없음
- ⑩ 기타()

문 C6-5) 귀하께서 여성의 사회이동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부모부양, 가사·자녀양육(경력단절) 등)과 가부장적 사회 지속
- ② 기업의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 ③ 실업, 폐업 이후 위기여성 재기를 위한 생계, 일자리 지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④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 맞춤형 지원체계(정보제공, 취창업 교육 등)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⑤ 노동시장 참여 중인 여성(적정임, 적정여성 등)을 돕는 자원제도(육아휴직, 가사도우미 등)가 부족해서
- ⑥ 사회적으로 여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 ⑦ 이유 없음
- ⑧ 기타()

문 C6-6) 귀하께서는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취약계층에게 전로취업에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서
- ② 취약계층이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 ③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인식, 배제·차별 등으로 인해
- ④ 취약계층이 사회이동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적정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서
- ⑤ 취약계층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존관심이 높아져서
- ⑥ 이유 없음
- ⑦ 기타()

문 C7) 귀하가 보시기에 성공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iv> <div>전혀 중요하지 않음</div> <div><----- 보통 -----></div> <div>매우 중요함</div> </div>									
(1) 고소득·고자산의 세금을 늘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등)로 인한 격차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기회를 강화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대학입시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취업이나 채용시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취약계층에게 기회균등 및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공공·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C8) 아래 사항이 향후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양극화 현상	①	②	③	④	⑤
(2)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①	②	③	④	⑤
(3) 디지털 전환과 노동환경 변화	①	②	③	④	⑤
(4)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변화	①	②	③	④	⑤
(5) 소득 및 재산(부동산 등) 격차 지속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전반적인 성차별·젠더 문제 지속	①	②	③	④	⑤
(7) 중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종람부동산, 상속 증여세 등)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①	②	③	④	⑤

문 C9)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안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빈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특정지역 주택가격 상승 억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한 주택가격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누진소득세, 상속증여 등에 대한 세율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비정규직, 여성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기업(공공 및 민간) 등 일자리 채용과정에서 공정 채용 원칙 적용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중견,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자녀 양육교육, 주거비, 모기지론 등 생활서비스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지역(국립)대학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지역간 서비스격차(의료, 교육, 교통, 문화예술 등)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새로운 취약계층(고령·은둔, 경제선지능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미래 사회 변화(자출산·고령화,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속 소외배제 계층 발굴 및 사회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V. 사회이동성 관련 항목

문 D1) 귀하께서는 아래 질문에 생각나는대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완전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반대도 동의도 아님	약간 동의	동의	완전 동의
(1)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능력이 우수한 집단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사회 내 모든 집단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결과는 각자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개인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보상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D2)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과 관련된 귀하의 신념이나 태도를 여쭙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에 대해 귀하의 솔직하고 열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와 과거 초·중고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응답)

	완전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반대도 동의도 아님	약간 동의	동의	완전 동의
(1) 자녀의 더 좋은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 이나 학원(과외, 학습지 포함)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임시 전략, 자소서 작성, 면접 대비 등의 상담을 받기 위해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진학에 유리하도록 학교 선생님(담임 또는 교과 담당)과 면담한다(예: 수행평가 점수 조정 요청, 특 점과목 교체 요청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자녀가 수상경력이나 활동을 과장해서 기재하는 것을 묵인한 다(암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자녀가 장학금이나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사회적배려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자녀의 과제나 숙제를 대신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D3) 귀하의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다음 질문에 대해 귀하의 솔직하고 열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모든 응답자).

	완전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반대도 동의도 아님	약간 동의	동의	완전 동의
(1)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보조금과 장학금을 늘리기 위해 부유층 부모에게 더 높은 (대학)등록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대학입학 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사회적배려자 전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나 지자체는 소득이 낮은 지역의 학교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사회이동 : 개인사

문 E1) 현재 귀하는 아래의 경제적 생활 상태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E2) 귀하의 15세 무렵의 가구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의 계층이 아동기에 비해 낮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만

문 E2-1) 현재 귀하의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낮아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 기술 등 “나”의 개인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 ② 직업이나 일자리 수준이 “나”의 부모·조부모보다 낮기 때문에
- ③ 아동기 가정환경(경제적 어려움, 불화, 관계 단절 등)의 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 ④ 소득, 주거, 가정 등이 불안정 시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 ⑤ 소득, 주거, 가정 등이 불안정 시 주변(친인척, 지인,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서
- ⑥ 경제·산업 구조 변화(예: 제조업 쇠퇴, 비정규직 증가 등)로 인해 좋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줄어서
- ⑦ 계층 상승의 기회가 특정 집단(계급, 지역, 젠더 등)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회 구조 때문
- ⑧ 잘 모르겠음
- ⑨ 기타()

“현재의 계층이 아동기에 비해 높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만

문 E2-2) 현재 귀하의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높아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나의 교육, 직업 등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가 높았기 때문에
- ② 아동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사교육, 유학, 인적자본 축적 지원 등)이 도움이 되어서
- ③ 아동기 부모의 사회적 관계(조부모, 부모친구, 부모의 직업 등)의 지원을 받아서
- ④ 나의 친구, 지인, 선후배 등 사회적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 ⑤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 ⑥ 사회 전반에 교육 기회나 일자리 등 계층 상승 경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 ⑦ 정부의 정책(교육, 복지, 고용 등)이 계층 상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
- ⑧ 잘 모르겠음
- ⑨ 기타()

문 E3) 귀하가 15세 무렵에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광역시(인천 제외) ③ 중소도시(기타 시도) ④ 농어촌(읍면지역) ⑤ 외국

문 E4) 귀하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헤어진 경험(사망, 이혼 등)이 있습니까?

부		모	
---	--	---	--

- ① 예 ② 아니오

문 E5)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부		모	
---	--	---	--

- ① 무학 ④ 고등학교졸 ⑦ 모름
 ② 초등학교졸 ⑤ 대학(전문대)졸
 ③ 중학교졸 ⑥ 대학원졸

문 E6) 귀하의 어린 시절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중 주소독자)께서 실천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문 E7) 귀하 부모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		모	
---	--	---	--

(참고) 오픈으로 응답받고, 추후 분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분류

- ① 비해당 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②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⑩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③ 전문가 ⑪ 단순 노동 종사자
 ④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⑫ 직업군인
 ⑤ 사무종사자 ⑬ 주부
 ⑥ 서비스 종사자 ⑭ 무직
 ⑦ 판매 종사자 ⑮ 기타(적은 것 : _____)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⑯ 모름

문 E8) 15세 무렵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중 주소독자)의 직업과 직장에서의 직위가 다음 중 어느 정도에 해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시 회상이 어려우실 줄 알지만, 사회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문항입니다. 꼭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해당 없음
(1) 경제적 보상(임금 또는 수입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2) 전문성(국가공인자격증 여부, 업무처리를 위한 숙련수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회적 위상(위세(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①	②	③	④	⑤	⑥
(4) 일의 자율성(본인 업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독립적 오피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조직통제권(관련 업무의 지시권한, 조직의 관리 권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문 E9) 귀하는 사회,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조부모,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친인척, 지인, 직장내 동료 등)의 도움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문 E10) 귀하 부모님은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		모	
---	--	---	--

- ① 해당없음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③ 비등락 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문 E11)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는 부모나 조부모(기타 친인척 포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 받은 것만 기재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목돈을 지원받으셨으면 '있다' 에 체크해 주세요

※ 상속 및 증여는 살아계셨을 당시 또는 돌아가시고 난후 받은 결혼 및 사업자금, 기타 현물 및 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 Part로 이동

문 E11-1) 지금까지 상속증여 받은 총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가 됩니까?(단, 현물로 받았을 경우 금액으로 환산해 주십시오)

금액	2,000	200	24	18	22	20	만원
----	-------	-----	----	----	----	----	----

문 E11-2) 상속증여는 가구내 혹은 가구외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 ① 조부모 ② 부모 ③ 배우자의 조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기타 친인척

문 E11-3)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께서 받은 상속이나 증여는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이 됨	매우 큰 도움이 됨
①	②	③	④	⑤

VI. 사회관계 및 정서적 요인

문 F1) 귀하는 일반적으로 평일 하루에 몇 명의 가족·친인척과 만나거나 연락 하십니까?

-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명 이상

문 F1-1) (F1의 ②~⑤ 응답자만) 가족·친인척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나거나 연락 하십니까?

- ① 대면 ② 전화, 영상통화 ③ 문자,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④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⑤ 이메일, 우편 ⑥ 기타()

문 F2) 귀하는 일반적으로 평일 하루에 몇 명의 친구·지인과 만나거나 연락 하십니까?

-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명 이상

문 F2-1) (F2의 ②~⑤ 응답자만) 친구·지인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나거나 연락 하십니까?

- ① 대면 ② 전화, 영상통화 ③ 문자,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④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⑤ 이메일, 우편 ⑥ 기타()

문 F3) 다음 귀하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집단과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어디입니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희망)이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가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을 나누어서 F3-2 과 F3-3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의 수	집단	F3-2 도움 가능 (복수 응답)	F3-3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 명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2)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 명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 명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410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문 F4)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꼈습니까?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애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애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애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애 5일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잘랐다(잠을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쉴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F5) 귀하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Cantril ladder)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가장의 행복한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행복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조사일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행복 상태	10	
	9	
	8	
	7	
	6	
	보통	5
		4
		3
		2
	최악의 행복 상태	1
0		

문 F6) 귀하께서 0~4점 사이(최선이 아닌 상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족,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 ② 건강하지 못해서
- ③ 원하는 것에 비해 소득·지출·자산 등이 부족해서
- ④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
- ⑤ 이유 없음
- ⑥ 기타()

VII. 가구경제상황

< 유의사항 >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 모두의 지출(가구합계 금액)을 포함합니다.
 ※ 생활비 : 가정생활만을 위한 비용이며, 경상지출(매년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따라서 사업소득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친인척 이웃 공과금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각종 현물(정해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냉난방용품 등)도 **현물**으로 **합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할부 구매의 경우 **2024년 지출한 할부금 총액+12월 기입합니다.** 예) 2024년 12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면 자동차가격에 할부 개월을 나눈 월 5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어도, 2024년에 비용이 발생하면 기입합니다.
 ※ **업종은 반드시 V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한월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에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H1	총 생활비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총생활비는? ※ 총생활비 = 식료품비+주거비+관수도비+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의료·신체·보건·의료비+교육·문화·여가·교통비+보험비+통신비+기타생활지출+비상지출 ※ 저금, 저축성보험료, 게 부문 금액 등 자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담금, 월부, 위상 발원 등(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개략한 월세액을 기입 ※ 전체 차임 경우 1년 차임이나 차임 내는 경우 월평균 차임액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관리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장비 등 이 중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기능식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의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2024년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낸 세금 포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 가족 모두 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납세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할정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생명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연합계	만원
H2	주거비 (주택구입비 제외)	문 3-1 세 문 3-2 거 리 비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개략한 월세액을 기입 ※ 전체 차임 경우 1년 차임이나 차임 내는 경우 월평균 차임액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관리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장비 등 이 중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기능식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의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2024년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낸 세금 포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 가족 모두 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납세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할정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생명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연합계	만원
H3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개략한 월세액을 기입 ※ 전체 차임 경우 1년 차임이나 차임 내는 경우 월평균 차임액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관리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장비 등 이 중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기능식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의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2024년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낸 세금 포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 가족 모두 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납세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할정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생명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연합계	만원	

※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없음 0

H4	시 장 소 득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얻은 시장소득(근로소득(기타 근로소득 포함)+사업소득(순소득(매출액-비용)+재산소득) 소득액? - 근로소득 : 상용, 임시일을 근로자 등. - 재산소득 : 이자, 배당금,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 12를 하고, 일시금은 일 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될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소득을 파악하여 공 무원이면서 농·수산물 또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입하여 합산	합계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연합계	만원
H5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료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나 자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함	연간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연합계	만원
H5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사내복지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의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연합계	만원
H6	공적이전소득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정부(주민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형태와 연간 금액?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고요보험 및 산재보험, 장애관련 수당, 근로장려세제, 아동수당 등 ※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 12를 하고, 일시금은 일 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합계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연합계	만원

412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H7	기 타 소 득	2024년 1년(2024.1.1 ~ 2024.12.31)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금액은? ※ 학자금의 경우 목적으로 받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 상용 또는 임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 중여상속, 경조금, 보상금(사고보상금, 이혼판결금, 손해배상금 등), 사고 및 질병 보상금, 퇴직금, 사회보험 급여 등 기타소득 일련, 보상의 보합, 해부금, 동산(부동산) 매각익, 기타 (배당금, 임대소득, 상환금, 기타) 등이 포함됨	연간							만원
----	---------	---	----	--	--	--	--	--	--	----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됩니다))

H8	총자산	2024.12.31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집합 재산 총자산은? ※ 총자산=소유및경유부동산+금융자산+가상자산+기타재산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46) 주택(가정)에서 파악하므로 여기서는 제외 ※ 소유 부동산: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외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가계)·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토지(매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 집합 부동산: 기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기타(전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기계물건, 비닐하우스 시설, 양식장 등) ※ 금융자산: 예금(정액예금, 정기예금 등),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가치식) ④ 타 기 전 부은 것은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한함 ※ 기타재산: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자동차 번호 값, 선박, 어업권, 굴삭기, 프크래인 등 건설장비,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이 포함됨 ※ 가구원 전부 파악								만원
H9	총부채	2024.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금액은 얼마입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외상, 미리 탄 것 등) ※ 가구원 명의기준 부채 모두 파악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만원

문 H10) 귀하의 이념적 성격은 다음 중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대체로 진보적	중도적	대체로 보수적	매우 보수적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스웨덴 사회이동 연구의 현황과 함의

제1절 서론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은 한 사회에 속한 개인 혹은 집단이 사회의 계층 구조 내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지위의 이동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세대 간 사회이동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과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 불평등의 핵심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꾸준히 주목을 받아 왔다(Breen, 2004). 예컨대, Corak(2013)의 연구에 바탕을 둔, 사회이동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득 이동성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은 2012년 당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lan Krueger에 의해 널리 알려지면서 폭 넓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이동성이 감소하면서 사회 계층 간 차이가 대물림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심화는, 사회 갈등의 심화는 물론, 인적 자본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해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OECD, 2018b).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국의 사회이동 패턴을 비교하고, 사회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사회이동 제고를 모색하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Eurofound, 2017; OECD, 2018a).

그동안 꾸준히 사회이동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유럽에서도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럽 생활 및 노동 조건 향상 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found)에서 유럽 연합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이동성의 변동과 현황을 비교하고, 사회이동성을 제약하는 원인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Eurofound, 2017). 해당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개별 국가들이 서로 다른 탈규제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고, 여러 차례의 거시경제적 충격에 직면하면서 국가별 사회이동 양상이 다변화되었음에 주목했다(Eurofound, 2017).

본 글은 유럽 국가 가운데 스웨덴의 사회이동성 변화 양상과 관련 연구 동향에 주목한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의 전형으로(Esping-Andersen, 1990) 국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회이동성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나라이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스웨덴이 교육기회 확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경제 성장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상향적 사회이동성을 달성한 국가로 평가했다(Jonsson & Mills, 1993). 국가별 비교 실증 연구에서도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높은 수준의 직업 이동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다(Breen, 2004). 그러나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20세기 중반과는 달리, 스웨덴의 사회이동성 증가가 20세기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에는 정체되었고(Jonsson, 2004), 더욱이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이전보다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감소했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Eurofound, 2017). 또한 잘 알려진 것처럼 스웨덴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부(wealth)의 분포는 훨씬 불균등하며(Lundberg & Waldenström, 2018), 부의 세대 간 이동성은 소득이나 직업의 세대 간 이동성과 상이한 패턴을 보이기에 독립적인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Hällsten & Thaning, 2022).

스웨덴의 사례는 사회이동성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 수집을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사회이동 연구의 상당수는 전 국민 등록 인구 자료(Swedish Total Population Register)를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실증 연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물이다. 스웨덴의 사례는 양질의 자료 인프라 구축이 사회이동 연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사회이동 연구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회이동의 다양한 측면과 이와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스웨덴의 사회이동성 현황과 그 변화 추이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선행 연구들이 주목해 온 스웨덴의 높은 사회이동성의 원인을 고찰한다. 또한 스웨덴의 전 국민 등록 인구 자료 활용이 사회이동성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과 그 한계를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스웨덴 사례가 한국의 사회이동성 연구 및 사회이동성 제고 정책 구상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제2절 사회이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사회이동의 다양한 측면

사회이동은 사회이동의 방향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이동은 사회적 계층 혹은 지위의 변화 여부에 따라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이동은 사회적 계층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회이동을 의미하며 수평적 이동은 사회적 계층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이동, 예컨대 지위가 유사한 직업 간 이동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존 문헌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는 수직적 사회이동에 주목했다. 둘째로, 사회이동은 이동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세대 내 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과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세대 내 이동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반면 세대 내 이동은 부모와 자녀세대(2세대) 혹은 그 이상의(3세대 이상)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부분 선행 연구는 세대 간 사회이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혹은 기회의 불평등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세대 간 사회이동에 주목했으며, 이 글 역시 스웨덴의 세대 간 사회이동 선행연구에 주목한다. 셋째로, 절대적 사회이동(absolute social mobility) 혹은 구조적 사회이동(structural social mobility)과 상대적 사회이동(relative social mobility) 혹은 사회적 유동성(social fluidity)의 구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절대적 사회이동은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전반적인 변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반면 상대적 사회이동은 사회적 출신 배경과 현재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계층 출신별 상대적 사회이동을 비교하는 것은 특정 사회 계층 출신으로 태어나는 것의 사회경제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과 직결되므로 이 글에서 살펴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상대적 사회이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20세기 이전의 역사적 사회이동 변화를 다룬 일부 문헌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동성 간의 연관성 때문에 절대적 사회이동에 주목하기도 한다.

2. 사회이동의 측정

대부분의 사회이동 관련 선행연구는 교육, 직업, 소득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주목했다. 소득이동성은 소득이 연속 변수이며, 측정하기 쉽고 구매력 혹은 경제적 웰빙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에게 선호되었다(Björklund & Jäntti, 1997). 반면 직업 이동성을 선호하는 입장은, 소득은 생애주기 내에서 변동성이 더욱 크지만, 직업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직업적 지위는 개인의 생활 기회(life chances)와 사회에 편입된 정도(embeddedness)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Weber적 전통의 사회 계층 혹은 계급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Breen, 2004; Eurofound, 2017). 개인의 교육 수준, 직업과 소득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교육, 직업, 그리고 소득의 이동성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Breen et al., 2016). 따라서 사회이동성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각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을 모두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연구는 부의 이동성이 소득, 교육, 직업 등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과 독립적인 양상을 보이며, 부모세대의 부는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Hällsten & Thaning, 2022). 따라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소득, 교육, 직업, 부의 네 가지 주요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을 모두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적 사회이동성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부의 세대 간 이동성은 부의 측정이 소득, 교육, 직업에 비해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이동성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3. 사회이동 연구의 핵심 이론

사회이동이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은 현상인 만큼, 사회이동의 메커니즘과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이론들도 등장했다. 사회이동의 변화 양상에 관해 20세기 중반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두 가지 이론적 논의는 Parsons(1960)와 Kerr et al.(1960) 등의 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이론(the liberal theory of industrialism) 혹은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과 Featherman, Jones, and Hauser(FJH) 이론이다(Featherman et al., 1975).

근대화 이론의 큰 함의는 산업화가 태생적으로 개별 국가의 사회적, 제도적 구조의 수렴을 추동한다는 것인데, 이를 사회이동과 관련지어 해석하자면,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발전은 절대적인 상향 이동이 늘어났음은 물론, 경제 발전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주의적인 자원 배분(예컨대, 취업 시장에서 사회경제적 출신보다는 개인의 인적 자본에 근거한 채용의 확대)을 촉진해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를 약화했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FJH 이론은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는 국가 간 상대적 사회이동성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산업 사회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기초적 계층화 구조(basic stratification structure)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해

당 이론은 서구 사회에서 산업화 정도가 비슷한 나라들은 비슷한 수준의 절대적 사회이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Lipset Zetterberg 이론(Lipset & Zetterberg, 1959)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een, 2004). FJH 이론과 근대화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근대화 이론은 개별 국가가 산업화를 통해서 사회이동성의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FJH 이론은 지속적인 사회이동성 증가 대신 산업화 국가들 사이에서 유사하게 관찰되는 일정 수준의 사회이동성을 예측하며 사회이동의 차이는 국가별 직업 구조(occupational structure)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이동성 수준의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Eurofound, 2017).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사회이동성 연구는 위의 논의에 기반하면서도, 국가 간 사회이동성의 차이에 좀 더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Erikson과 Goldthorpe(1992)는 서구 여러 국가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회이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FJH 이론이 성립하나, 상대적 사회이동성의 정도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하여 이전 이론 틀과 비교할 때 사회 정책이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좀 더 낙관했다. 한편, Breen(2005b)은 2차 세계 대전부터 1970년대에 걸친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서구 국가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을 목표로 유사한 거시 경제 정책을 펴나간 데 비해,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들이 탈규제와 민영화 등의 중요 이슈에서 서로 다른 정책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청년 실업 등의 거시 경제 지표가 다변화되었음을 지적했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제 침체, 유럽 연합 회원국의 재정 위기, 2020년 이후 COVID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개별 국가가 다르게 대처한 결과 국가별 경제 성장률과 소득

불평등 역시 다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Mascherini & Ledermaier, 2016).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이동 연구가 국가별 사회이동성 비교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흐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Eurofound, 2017; OECD, 2018a).

제3절 스웨덴 사회이동성의 변화

1. 복지국가 도입 이전의 사회이동성 변화

여러 선행연구에서 스웨덴의 높은 사회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불평등도와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 교육기회의 확대 등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스웨덴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Corak, 2013; Erikson & Goldthorpe, 199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스웨덴의 소득불평등도는 훨씬 높았고, 다른 유럽 국가보다 스웨덴의 산업화는 시기적으로 지연되었다(Berger et al., 2023). 과거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복지국가 도입 이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 인구조사 자료가 구축되면서 1880년대 이후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스웨덴 일부 지역에서는 1880년대 이전의 역사적 자료도 디지털화되어 이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다. 예컨대 Dribe와 van de Putte(2015)의 연구는 19세기 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친 산업화 기간에 스웨덴 남부 지역의 상대적 및 절대적 사회이동성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근대화 이

론의 주장대로 산업화로 인해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취득이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위 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산업화 이후 더 많은 상향 이동의 기회를 누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역사적 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른 최신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사회는 복지국가의 출현 전에도 높은 수준의 절대적, 상대적 사회이동성³⁵⁾을 보여주었으며, 높은 경제 성장률과 스웨덴 지역 간 활발한 이주(internal migration)가 이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Berger et al., 2023).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도입 전 스웨덴의 절대적 직업 이동성 수준은 이미 사회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당시의 미국 사회나 다른 유럽 사회의 수준을 웃돌고, 상대적 이동성 역시 20세기 복지 국가 이후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을 웃돈다. 두 연구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산업화와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이 촉발한 구조적 변동이 사회이동성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더불어 Berger et al.(2023)의 연구는 노동 가능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사회이동성 변동에 기여했던 바를 역사적 데이터를 활용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회이동성을 분석할 때도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20세기 이후 스웨덴의 사회이동 변화³⁶⁾

스웨덴은 20세기 중후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사회이동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앞서 서술한 대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혹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으로 다

35) 해당 연구는 사회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 이동성 자료를 활용했다. 따라서 같은 시기의 교육 이동성이나 소득이동성이 직업 이동성과 같은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6) 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Hallsten(2025)에서 정리한 직업, 소득, 교육 이동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참고했다.

른 국가들의 사회이동성 비교 연구에 자주 포함되었고, 학자들도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이 다른 유럽 국가 혹은 고소득 국가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스웨덴 사회이동을 다룬 문헌의 양이 적지 않고, 특히 세대 간 이동성이 직업, 소득, 교육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별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각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서는 직업, 소득, 교육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이 높은 이유를 논의한다.

가장 많은 문헌에서 주목한 스웨덴 사회이동의 측면은 세대 간 직업 이동성이다. 크게 보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스웨덴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직업 이동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Breen & Luijkx, 2004; Erikson & Goldthorpe, 1992). 하지만 2010년대 나온 실증연구의 경우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이 유럽 국가 중 중간 수준으로, 매우 유동적인 사회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Bukodi et al., 2020; Eurofound, 2017). 스웨덴에서 최소한 마지막 사반세기까지는 코호트 대체 효과로 인해 직업 이동성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Breen & Jonsson, 2007), 그 이후 시기에는 이런 흐름이 다른 유럽의 비교군에 비해 정체되었거나, 다소간 역행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이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동성의 경우, Björklund & Jäntti(1997)가 미국과 스웨덴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비교하고, 스웨덴의 소득이동성이 미국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저자들은 소득이동성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소득이동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는 스웨덴의 소득이동성 또한 높은 수준임

을 암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Björklund et al.(2009)는 1932년부터 1968년에 태어난 남성을 대상으로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 소득이동성이 1950년경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1930년대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을 보였고, 교육의 확대가 높은 소득이동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Björklund et al.(2012)는 상위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 집단의 경우 소득이동성이 매우 낮고, 노동소득(earnings)보다 종합적 소득(income)의 이동성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최상위 계층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이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교육 이동성의 경우에는 직업 이동성이나 소득이동성에 비해 관련 선행연구가 적는데,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스웨덴의 교육 이동성이 다른 유럽 국가나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Pfeffer, 2008; van der Weide et al., 2024). 이는 스웨덴에서 일어난 고등교육의 확대와 교육의 평등화가 20세기 중반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스웨덴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교육 수준의 평등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교육 이동성 확대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를 맞이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Jonsson, 2004),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이동성 제고 메커니즘: 교육 확대와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실증연구 대부분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육기회의 확대를 꼽는다(Björklund et al., 2009; Breen, 2010). 교육

기회의 확대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교육의 확대를 경험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사회이동성의 확대로 이어졌다(Breen, 2010). 교육의 확대가 사회이동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Breen & Jonsson, 2007). 첫째로 교육적 평등화(educational equalization)는 교육의 기회가 여러 사회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과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경우, 20세기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장기 집권하는 기간 동안 중등 교육(한국 맥락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과 고등교육 수업료의 폐지와 무상 급식 도입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로, 교육 확대의 구성 효과(compositional effect of educational expansion)는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코호트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해당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 수준 간의 상관성이 약화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원 배분이 촉진되었다.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경제적 배경 사이의 전반적인 상관성이 약화, 즉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증가 일어났다. 이는 교육 확대 직접적으로 교육적 평등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상대적 사회이동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누진적인 소득세제,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등의 정책 역시 사회 불평등 완화와 사회이동성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Breen, 2010; Breen & Jonsson, 2007; Hällsten & Yaish, 2022).

〈부표 1-1〉 스웨덴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관련 선행 연구 정리

사회이동의 성격	주요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 요약
역사적 사회 이동성 변화	Berger et al.(2023), Dribe and van de Putte(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이 20세기 이후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기 이전에도 경제 성장 (산업화)과 국내 이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직업 이동성을 보여주었음 - 스웨덴의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사회 이동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음
직업 이동성	Breen and Luijckx(2004), Breen and Jonsson(2007), Bukodi et al.(2020), Erikson and Goldthorpe(1992), Eurofound(2017), Hertel and Groh-Samberg(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중후반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직업 이동성을 보였음 - 이후 스웨덴의 직업 이동성은 일정 수준을 유지(stable)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의 실증연구는 스웨덴의 직업 이동성이 유럽 국가 평균 수준이며, 예전보다 감소하여 덜 유동적인 사회가 되었음을 시사함
소득이동성	Björklund and Jäntti (1997), Björklund et al.(2009) Björklund et al.(2012), Breen et al.(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중후반에는 소득이동성이 높은 미국 같은 사회의 수준을 웃도는 소득이동성 관찰 - 초고소득자 집단의 경우 소득이동성이 다른 소득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노동 소득의 이동성이 다른 소득보다 높은 양상을 보임
교육 이동성	Hertz et al.(2008) Pfeffer(2008), van der Weide et al.(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회이동성 연구보다 선행연구의 수가 적고,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대부분 - 다른 유럽 국가 혹은 고소득 국가와 비교할 때, 스웨덴의 세대 간 교육 이동성은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님
부(자산) 이동성	Hällsten and Thaning (2022), Lundberg and Waldenström(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자산) 관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부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미진함 - 부의 이동성이 직업, 교육, 소득이동성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스웨덴 사회 부의 불평등 역시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연구 필요성이 제기

출처: 본문 내용과 Hällsten (2025) 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제4절 전 국민 등록 인구 데이터 활용과 사회이동성 연구

1. 등록 인구 데이터 활용의 장점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사회이동성 연구의 동향에서 연구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연구자들이 전 국민 등록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해 온 전통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이동성 연구는 자녀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혹은 개인의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 지위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종단 자료의 존재 여부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스웨덴에는 1968년부터 생활수준 조사(Levnadsnivåundersökningen, LNU)가 이루어졌고, 이는 세계에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가장 역사가 깊은 생활수준 패널자료이다. 해당 조사는 사회이동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주요 자료로 현재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패널자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스웨덴과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사회과학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료는 전 국민 등록 인구 자료이다. 이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행정적인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연구 목적으로 연구윤리 심사를 비롯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것으로(Ludvigsson et al., 2016), 해당 자료는 경제학이나 사회학은 물론 공공보건과 의학, 지리학, 인구학 등 대규모 마이크로 레벨 데이터를 요구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등록 인구를 활용한 연구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로, 스웨덴에 해당 연도에 등록한 모든 주민의 자료를 취합할 수 있어 표본 표집 과정에서 대표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대규모 표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수 제약을 덜 받고 고차원적인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다. 둘째로, 일

반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특정 사회 집단(예컨대, 이주민 혹은 이주민 자녀)을 연구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앞서 언급한 LNU 조사의 경우 스웨덴 국외에서 태어난 설문자가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보이며, 2010년에 실시한 국외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 조사 역시 스웨덴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나고, 스웨덴어로 설문 진행이 가능한 외국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등록 인구 자료를 활용하면, 스웨덴에 공식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과 그 후손들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는 이주가 사회이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이점이다. 셋째로, 등록 인구 자료를 통해서 연구자는 특정 개인이 스웨덴에 존재하는 한(즉, 사망이나 전출로 인한 주민 등록 말소를 제외한) 해당 개인을 탈락 없이 장기간 추적할 수 있다. 넷째로, 다세대 등록 자료(multigenerational register)를 토대로 개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반복할 경우 3세대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동성 연구도 가능하다. 예컨대, Hällsten과 Kolk(2023)는 스웨덴 등록 인구 데이터와 역사적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 5세대까지의 사회이동성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발표하였고,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지속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2. 등록 인구 활용의 한계점

등록 인구 자료의 한계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스웨덴 내 부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제한되었다는 점인데(Hällsten & Thaning, 2022), 이는 2007년 이후 부의 상속세가 폐지되면서 자산 등록 자료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었고, 연구자들도 2007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등록 인구 자료의 다른 변수들을 바탕으로 자산 등록 자료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검증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Lundberg & Waldenström, 2018). 다른 한계는 등록 인구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소득, 교육 수준, 직업 등 객관적인 변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으나 가치관, 성격, 의향(intention) 등 주관적인 자료는 수집할 수 없어 답할 수 있는 연구 문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패널자료 혹은 설문자료의 활용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자료들을 등록 인구 자료와 연계시켜서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등록 인구 자료 활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자와 연구자 모두 높은 수준의 연구 윤리 및 보안 의식이 필요하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유지하는 데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등록 인구 자료와 유사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는 물론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도 기존에 행정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2차적 활용(repurposing)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이런 자료를 활용해 사회이동성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제5절 결론: 스웨덴 사회이동성 연구의 함의

지금까지 기존 문헌을 토대로 스웨덴의 사회이동성 변동 양상과 변화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고 스웨덴의 사회이동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며 사회이동 연구가 직면한 방법론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연구들이 한국의 사회이동성 연구 방향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사회 정책에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이동성을 달성하는 데 교육기회의 평등 확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스웨덴은 고등교육 기관의 확대와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하위 계층 출신 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이는 능력주의적 노동시장과 결합해 20세기 중후반 스웨덴의 사회이동성 상승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확대와 사회이동성 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교육기회의 평등 하나만으로 스웨덴의 사회이동성 상승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복지국가로서 실시한 다양한 정책의 결과가 혼합되어 오늘날의 사회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상세한 비교를 위해서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사회 정책 기조를 공유했던 다른 국가들과 스웨덴을 비교하거나, 최근 스웨덴의 사회이동성이 정체된 원인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고소득 국가에서 사회이동성의 정체가 나타나는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Hällsten, 2025).

셋째로, 사회이동성 변화 양상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주목하기보다는, 직업, 교육, 소득과 더불어 부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이런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각 이동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로, 스웨덴에서 역사적 인구총조사 자료나 전 국민 등록 인구 자료 활용을 통해 사회이동성 연구가 약진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이동성 연구에는 적합한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등록 인구 자료와 같은 행정 자료의 2차 활용에도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설문조사나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적은 추가 한계 비용으로 여러 차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투자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록 3] 부표

〈부표 1-2〉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성별 구성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Total
2011년	19.29	60.77	100.0
2012년	15.98	65.30	100.0
2013년	20.27	58.67	100.0
2014년	20.27	59.53	100.0
2015년	13.15	68.79	100.0
2016년	19.94	64.31	100.0
2017년	14.76	68.45	100.0
2018년	18.26	64.76	100.0
2019년	15.70	67.88	100.0
2020년	18.41	60.42	100.0
2021년	14.31	70.32	100.0
2022년	17.26	65.93	100.0
2023년	13.50	71.17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부표 1-3〉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연령대 구성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Total
2011년	32.53	19.18	27.02	18.11	3.17	100.00
2012년	20.63	26.04	29.04	16.25	8.04	100.00
2013년	21.50	22.77	29.01	19.60	7.12	100.00
2014년	21.55	24.90	25.56	19.45	8.54	100.00
2015년	23.24	27.26	29.00	12.57	7.93	100.00
2016년	20.13	28.32	25.48	20.79	5.28	100.00
2017년	27.85	20.23	25.09	17.95	8.87	100.00
2018년	25.34	21.88	24.06	22.66	6.05	100.00
2019년	28.30	25.75	18.11	20.23	7.61	100.00
2020년	22.28	27.22	22.06	20.86	7.58	100.00
2021년	15.73	26.82	18.86	29.35	9.24	100.00
2022년	22.92	22.40	24.61	19.79	10.28	100.00
2023년	25.16	23.09	15.77	25.28	10.69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부표 1-4〉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성별 구성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Total
2011년	68.96	31.04	100.0
2012년	69.37	30.63	100.0
2013년	68.66	31.34	100.0
2014년	68.47	31.53	100.0
2015년	68.19	31.81	100.0
2016년	67.53	32.47	100.0
2017년	65.96	34.04	100.0
2018년	65.73	34.27	100.0
2019년	65.43	34.57	100.0
2020년	65.47	34.53	100.0
2021년	62.83	37.17	100.0
2022년	67.61	32.39	100.0
2023년	63.55	36.45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부표 1-5〉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연령대 구성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Total
2011년	16.17	34.16	32.64	15.53	1.49	100.00
2012년	15.09	35.27	31.19	16.26	2.18	100.00
2013년	12.07	36.23	31.80	17.87	2.04	100.00
2014년	11.03	35.08	33.07	18.57	2.24	100.00
2015년	11.33	31.63	34.48	20.28	2.28	100.00
2016년	10.75	31.87	34.69	19.71	2.98	100.00
2017년	11.07	31.78	34.46	19.28	3.40	100.00
2018년	12.28	29.47	34.43	20.84	2.99	100.00
2019년	12.46	27.63	32.33	23.63	3.95	100.00
2020년	12.79	27.49	31.38	23.67	4.66	100.00
2021년	13.49	26.18	31.68	23.06	5.59	100.00
2022년	10.89	27.04	33.43	22.80	5.85	100.00
2023년	12.64	28.33	31.36	21.80	5.86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부표 1-6〉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학력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졸	Total
2011년	17.46	42.37	36.33	3.84	100.00
2012년	14.54	42.39	37.86	5.21	100.00
2013년	13.84	46.80	30.75	8.61	100.00
2014년	12.96	40.31	42.13	4.59	100.00
2015년	8.40	37.74	51.53	2.34	100.00
2016년	7.70	46.05	40.63	5.63	100.00
2017년	6.65	30.22	53.96	9.17	100.00
2018년	7.91	37.55	45.33	9.21	100.00
2019년	5.74	41.32	46.78	6.15	100.00
2020년	4.49	32.37	57.34	5.81	100.00
2021년	6.19	26.80	61.56	5.45	100.00
2022년	4.05	32.33	58.52	5.10	100.00
2023년	6.26	39.27	46.42	8.06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부표 1-7〉 6장: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자의 아동기 주관적 경제적 생활상태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가난	보통	부유	Total
2011년	34.13	56.26	9.60	100.00
2012년	38.76	52.62	8.62	100.00
2013년	37.70	51.95	10.35	100.00
2014년	31.02	56.75	12.23	100.00
2015년	31.66	61.19	7.14	100.00
2016년	30.89	57.90	11.21	100.00
2017년	26.68	66.31	7.00	100.00
2018년	30.83	60.04	9.13	100.00
2019년	31.72	60.42	7.85	100.00
2020년	26.00	65.40	8.61	100.00
2021년	36.87	56.49	6.64	100.00
2022년	28.53	62.80	8.67	100.00
2023년	30.49	60.41	9.10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434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부표 1-8〉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학력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고졸 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졸	Total
2011년	5.41	31.10	56.22	7.27	100.00
2012년	4.98	30.67	57.57	6.78	100.00
2013년	4.84	30.40	57.64	7.12	100.00
2014년	4.22	29.72	58.47	7.59	100.00
2015년	4.74	28.67	59.47	7.11	100.00
2016년	4.29	27.65	61.05	7.01	100.00
2017년	4.08	28.69	60.46	6.77	100.00
2018년	3.84	27.50	61.57	7.09	100.00
2019년	3.95	27.38	61.34	7.33	100.00
2020년	3.09	28.97	60.33	7.62	100.00
2021년	2.95	26.23	63.78	7.03	100.00
2022년	3.39	24.42	63.96	8.22	100.00
2023년	2.73	25.65	63.93	7.69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부표 1-9〉 6장: 정규직→정규직 유지자의 아동기 주관적 경제적 생활상태 분포 추이

(단위: %)

구분	가난	보통	부유	Total
2011년	28.91	60.59	10.50	100.00
2012년	26.68	62.68	10.64	100.00
2013년	28.22	60.73	11.04	100.00
2014년	29.46	60.02	10.52	100.00
2015년	27.79	61.67	10.53	100.00
2016년	27.81	62.55	9.63	100.00
2017년	27.66	62.71	9.63	100.00
2018년	26.62	63.97	9.42	100.00
2019년	27.49	63.06	9.45	100.00
2020년	26.45	64.15	9.40	100.00
2021년	26.35	64.44	9.21	100.00
2022년	25.01	64.49	10.50	100.00
2023년	24.76	66.18	9.05	10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2011~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부표 1-10) 10장: 연령별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만) 나이	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			80~89년생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5							148.70	149.43	152.95	171.13	177.17	180.40
26							157.51	162.23	164.62	185.82	191.80	187.42
27							174.97	183.57	174.95	195.29	202.16	194.84
28							187.03	194.76	182.77	208.98	216.35	203.89
29				171.72	192.53	134.76	200.85	212.03	186.01	220.41	236.24	198.36
30				178.23	201.59	139.39	214.82	230.77	199.11	232.97	249.20	212.37
31				187.79	213.52	143.10	232.36	250.61	199.46	243.82	260.87	219.97
32				199.86	231.81	153.37	239.77	260.25	202.10	253.61	272.24	224.33
33				208.43	235.99	142.58	257.88	281.26	211.63	265.86	288.64	224.93
34				212.53	249.47	151.33	261.04	291.46	209.54	277.01	305.02	229.22
35				219.26	265.74	144.47	272.59	304.19	215.55	288.56	320.38	231.02
36				228.28	269.65	147.69	286.66	325.66	213.87	295.43	327.91	244.50
37				230.52	276.43	152.24	282.56	320.55	213.62	300.33	337.00	237.99
38				234.40	287.74	153.03	290.07	331.55	214.99	310.51	344.58	247.61
39	197.65	229.41	150.34	239.07	305.05	151.73	295.09	341.14	214.56	318.54	359.56	254.32
40	202.98	236.46	139.57	253.62	320.77	162.85	302.96	353.84	213.06	331.50	378.66	244.91
41	187.02	226.87	125.12	250.03	309.14	159.13	309.73	363.42	216.52	338.49	382.98	254.32
42	195.91	239.15	128.27	254.08	332.12	152.63	314.56	369.46	220.00	342.59	389.36	256.75
43	204.88	251.74	131.95	264.04	340.26	160.55	323.09	382.35	224.34	334.55	388.90	230.96
44	211.47	258.98	140.08	264.69	348.66	155.74	321.79	382.64	222.68			

(만) 나이	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			80~89년생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45	210.49	258.59	141.37	266.59	359.04	156.99	320.61	385.80	223.67			
46	222.02	275.55	136.78	284.31	373.08	164.58	327.25	390.69	227.91			
47	226.32	281.66	137.15	277.20	367.43	169.16	324.63	396.27	219.70			
48	229.75	286.17	135.44	286.77	368.31	177.14	330.21	407.15	219.46			
49	237.91	294.80	140.70	288.95	368.69	179.48	324.97	400.66	218.15			
50	243.54	292.39	153.78	287.25	369.26	186.07	326.49	406.96	215.55			
51	251.91	308.08	149.99	285.75	368.31	184.94	331.47	418.22	212.69			
52	259.73	323.69	141.13	289.78	372.42	185.95	326.22	403.84	223.53			
53	252.97	316.30	139.68	296.00	373.47	194.68	323.46	411.78	204.84			
54	251.64	318.83	136.44	300.46	374.75	201.54						
55	254.17	318.43	139.68	298.26	371.63	201.09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임.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부표 1-11〉 10장: 연령별 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

(만) 나이	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			80~89년생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5	0.75	0.70	0.78	0.87	0.86	0.88
26	0.77	0.74	0.81	0.95	0.95	0.95
27	1.05	0.85	1.29	1.00	1.01	0.99
28	0.95	0.90	1.02	1.08	1.10	1.05
29	.	.	.	0.84	0.89	0.71	1.00	1.00	1.01	1.13	1.17	1.06
30	.	.	.	0.80	0.84	0.70	1.06	1.09	0.99	1.21	1.25	1.14
31	.	.	.	0.87	0.91	0.77	1.16	1.20	1.10	1.28	1.32	1.21
32	.	.	.	0.92	0.93	0.87	1.18	1.23	1.09	1.34	1.38	1.27
33	.	.	.	1.00	1.03	0.92	1.30	1.35	1.20	1.42	1.49	1.31
34	.	.	.	1.04	1.12	0.83	1.34	1.43	1.18	1.50	1.59	1.33
35	.	.	.	1.05	1.15	0.82	1.40	1.49	1.23	1.55	1.66	1.35
36	.	.	.	1.13	1.28	0.81	1.46	1.61	1.18	1.61	1.72	1.42
37	.	.	.	1.09	1.23	0.83	1.43	1.55	1.20	1.66	1.79	1.40
38	.	.	.	1.15	1.29	0.88	1.48	1.63	1.21	1.71	1.84	1.47
39	0.91	1.04	0.72	1.16	1.34	0.83	1.52	1.69	1.21	1.78	1.94	1.50
40	0.98	1.11	0.73	1.24	1.45	0.90	1.57	1.75	1.24	1.87	2.06	1.53
41	0.91	1.10	0.62	1.26	1.49	0.88	1.63	1.84	1.27	1.96	2.16	1.58
42	0.92	1.09	0.65	1.25	1.54	0.82	1.68	1.91	1.29	2.03	2.20	1.72
43	1.05	1.30	0.68	1.30	1.60	0.83	1.73	1.96	1.33	1.94	2.10	1.64
44	1.03	1.21	0.76	1.33	1.68	0.83	1.74	2.00	1.31	.	.	.

(단위: 만 원)

(만) 나이	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			80~89년생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45	1.06	1.29	0.74	1.35	1.73	0.84	1.75	2.04	1.32			
46	1.08	1.30	0.72	1.46	1.85	0.92	1.77	2.06	1.33			
47	1.14	1.40	0.73	1.39	1.75	0.92	1.79	2.11	1.33			
48	1.14	1.39	0.72	1.45	1.82	0.95	1.85	2.20	1.36			
49	1.17	1.45	0.71	1.50	1.86	1.00	1.83	2.17	1.34			
50	1.21	1.43	0.80	1.50	1.87	1.04	1.82	2.20	1.29			
51	1.30	1.59	0.76	1.51	1.87	1.06	1.88	2.29	1.31			
52	1.32	1.63	0.74	1.55	1.93	1.08	1.85	2.22	1.36			
53	1.30	1.60	0.76	1.60	1.97	1.11	1.86	2.29	1.27			
54	1.33	1.66	0.78	1.65	2.01	1.17						
55	1.30	1.63	0.72	1.67	2.04	1.18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임.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부표 1-12〉 10장: 5분위별 연령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30	92	97	90	153	154	152	203	203	203	267	265	271	395	403	365
31	130	149	121	177	182	170	223	225	218	273	276	265	369	373	353
32	135	151	126	186	190	180	233	236	223	291	298	270	382	383	378
33	141	171	122	195	200	189	241	244	232	307	313	285	401	410	359
34	153	178	136	199	211	181	260	266	243	315	322	293	415	425	374
35	167	196	147	214	225	198	264	272	244	329	338	301	426	436	380
36	177	225	149	225	232	214	274	284	247	341	351	309	460	467	427
37	170	192	154	219	231	199	285	293	266	354	364	328	481	498	401
38	183	206	168	235	243	224	299	307	275	366	374	341	469	487	396
39	187	223	172	236	246	222	308	315	293	369	379	340	493	506	440
40	190	222	178	234	246	215	321	337	275	379	385	362	531	549	449
41	188	208	180	251	259	236	341	361	265	391	395	380	526	536	476
42	191	213	184	253	269	226	355	372	290	386	389	378	510	527	427
43	186	222	173	241	270	200	366	380	300	377	383	357	605	639	448
44	189	207	182	256	274	207	379	401	284	373	380	353	564	596	387
45	191	236	175	240	255	201	395	406	321	382	399	316	579	612	395
46	191	220	179	260	281	190	394	404	298	417	427	376	609	641	421
47	189	214	180	252	271	214	404	415	310	423	429	387	634	658	476
48	194	236	180	255	291	200	378	384	325	421	422	421	649	672	499
49	219	357	189	257	306	194	378	384	331	408	414	356	584	589	533
50	244	335	215	272	318	202	405	409	360	402	405	376	591	608	424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을 사용.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부표 1-13〉 10장: 5분위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30	0.45	0.48	0.41	0.69	0.68	0.69	0.94	0.94	0.95	1.31	1.30	1.33	2.05	2.10	1.94
31	0.69	0.76	0.60	0.85	0.88	0.80	1.06	1.07	1.06	1.34	1.33	1.37	1.77	1.75	1.81
32	0.72	0.75	0.68	0.95	0.93	0.97	1.13	1.16	1.06	1.40	1.44	1.31	1.77	1.69	1.94
33	0.80	0.87	0.69	0.98	0.99	0.95	1.21	1.23	1.17	1.48	1.48	1.46	2.08	1.99	2.31
34	0.90	0.95	0.79	1.05	1.10	0.96	1.27	1.30	1.18	1.63	1.63	1.64	2.05	2.12	1.87
35	1.02	1.16	0.77	1.07	1.11	0.99	1.34	1.39	1.23	1.59	1.61	1.55	2.11	2.14	2.05
36	1.01	1.11	0.85	1.20	1.20	1.21	1.41	1.45	1.31	1.74	1.79	1.60	2.18	2.23	2.06
37	1.02	1.08	0.89	1.17	1.22	1.10	1.45	1.51	1.32	1.84	1.88	1.72	2.23	2.32	2.04
38	1.08	1.19	0.88	1.26	1.26	1.26	1.53	1.57	1.43	1.90	1.96	1.71	2.24	2.27	2.17
39	1.13	1.25	0.94	1.24	1.25	1.23	1.56	1.62	1.46	1.91	1.95	1.80	2.39	2.48	2.22
40	1.07	1.09	1.04	1.28	1.32	1.23	1.63	1.71	1.47	1.97	2.00	1.84	2.62	2.78	2.26
41	1.19	1.32	0.96	1.33	1.40	1.21	1.68	1.74	1.55	2.07	2.10	1.96	2.65	2.75	2.44
42	1.16	1.27	0.93	1.45	1.53	1.32	1.74	1.82	1.55	2.09	2.12	1.94	2.51	2.62	2.25
43	1.21	1.38	0.93	1.28	1.32	1.22	1.73	1.84	1.42	2.23	2.32	1.85	2.68	2.78	2.43
44	1.22	1.36	0.91	1.30	1.35	1.15	1.73	1.85	1.30	2.22	2.31	1.90	2.71	2.95	2.17
45	1.19	1.34	0.87	1.29	1.40	1.04	1.79	1.88	1.42	2.31	2.34	2.20	2.82	3.08	2.09
46	1.19	1.34	0.88	1.37	1.43	1.21	1.90	1.95	1.60	2.51	2.65	1.79	2.78	2.99	2.18
47	0.98	1.02	0.94	1.47	1.57	1.17	1.90	1.97	1.51	2.68	2.80	1.87	3.03	3.14	2.61
48	1.15	1.36	0.96	1.48	1.60	1.22	1.82	1.89	1.34	2.68	2.83	1.72	3.07	3.16	2.78
49	1.25	1.80	0.92	1.51	1.62	1.30	1.77	1.85	1.27	2.43	2.47	2.17	2.89	3.04	2.24
50	1.34	1.67	1.02	1.55	1.71	1.23	2.03	2.10	1.37	2.52	2.59	2.09	2.73	2.84	2.03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을 사용.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부표 1-14) 10장: 5분위별 연령별 분위유지율(월평균 임금)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3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1	38.84	26.75	44.76	33.10	24.20	46.00	37.44	38.91	33.61	51.24	54.39	39.31	58.38	60.58	50.68
32	27.47	14.99	33.57	25.55	18.78	35.37	30.67	31.38	28.81	42.85	45.21	33.93	57.67	62.30	41.48
33	24.49	10.71	31.23	15.83	9.05	25.68	24.33	26.59	18.41	37.92	41.85	23.05	60.18	66.37	38.52
34	26.55	25.47	27.08	17.42	17.85	16.81	24.76	28.07	16.09	34.37	36.83	25.08	61.62	65.60	47.72
35	18.23	7.42	23.53	15.60	16.77	13.89	19.81	22.51	12.73	33.18	38.15	14.35	62.51	70.64	34.10
36	27.16	27.97	26.76	15.55	12.97	19.29	18.62	20.07	14.80	30.92	32.27	25.81	66.71	74.19	40.55
37	25.03	29.14	23.02	16.64	16.26	17.18	12.92	11.61	16.36	28.88	30.02	24.56	68.97	79.33	32.72
38	21.89	21.42	22.11	9.67	6.44	14.35	11.78	12.54	9.81	24.74	23.49	29.46	68.33	81.14	23.54
39	21.48	14.04	25.12	13.46	11.21	16.73	13.37	15.01	9.07	22.60	21.65	26.21	73.57	86.04	29.97
40	20.36	12.63	24.14	10.07	6.10	15.82	13.44	16.16	6.34	31.28	32.17	27.94	80.12	93.83	32.18
41	15.76	15.17	16.04	12.13	7.20	19.29	11.20	13.01	6.46	25.96	27.03	21.90	74.14	86.61	30.53
42	13.27	14.95	12.45	10.05	6.52	15.19	6.75	8.18	3.02	25.44	28.41	14.24	67.76	84.53	9.11
43	18.57	14.32	20.65	8.50	6.93	10.77	9.41	11.26	4.58	19.11	20.70	13.08	72.86	88.44	18.35
44	14.53	13.33	15.12	10.03	7.11	14.27	10.38	13.28	2.77	17.27	19.97	7.05	78.00	93.89	22.45
45	16.84	13.40	18.52	11.80	9.82	14.65	9.75	13.11	0.96	14.59	17.79	2.49	85.35	99.47	35.95
46	16.68	13.29	18.34	10.80	8.33	14.38	8.48	11.71	0.04	13.84	16.07	5.41	81.46	91.89	44.98
47	14.67	8.56	17.66	12.10	12.18	11.98	6.20	8.57	0.01	16.54	17.19	14.06	82.44	92.08	48.74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을 사용.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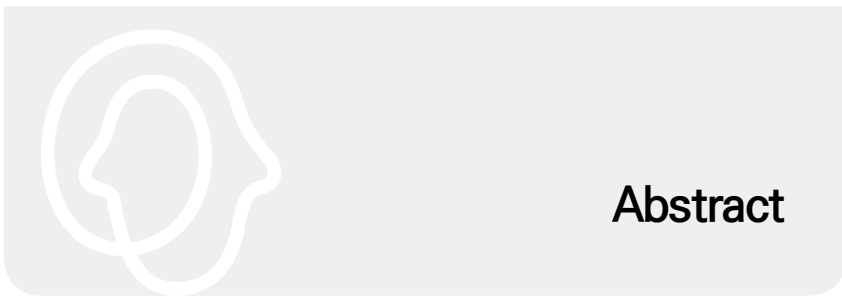
〈부표 1-15〉 10장: 5분위별 연령별 분위유지율(시간당 임금)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3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1	32.83	26.18	39.25	30.27	32.67	25.89	30.65	33.50	22.83	44.29	45.38	41.07	47.58	46.47	49.73
32	29.93	32.68	27.28	20.21	23.24	14.67	33.69	39.49	17.78	35.17	36.12	32.39	50.11	54.32	42.01
33	27.76	27.51	27.99	18.56	19.18	17.42	22.42	26.17	12.12	33.78	33.43	34.80	51.79	56.99	41.78
34	22.03	27.98	16.29	11.28	13.09	7.98	20.73	23.68	12.64	32.16	34.09	26.49	44.46	50.00	33.80
35	21.77	23.37	20.23	14.82	16.32	12.09	17.35	19.04	12.69	22.17	23.81	17.36	49.28	61.67	25.43
36	23.86	25.53	22.25	12.56	14.35	9.30	14.59	16.59	9.11	30.23	31.11	27.65	56.71	70.67	29.87
37	20.05	30.67	9.80	12.68	13.12	11.88	11.05	12.61	6.76	19.63	21.65	13.69	50.97	63.55	26.76
38	13.52	6.31	20.48	9.20	12.33	3.47	11.61	11.72	11.28	20.40	19.97	21.65	41.55	54.28	17.05
39	18.14	12.29	23.79	14.31	14.65	13.69	12.71	14.01	9.14	19.38	19.73	18.36	50.41	63.09	26.02
40	28.99	33.29	24.85	12.64	10.01	17.46	10.66	10.91	9.96	14.86	16.47	10.15	56.52	67.16	36.04
41	22.54	20.19	24.81	15.52	10.77	24.19	11.56	11.49	11.75	16.00	17.51	11.57	55.34	63.00	40.60
42	19.48	14.52	24.27	13.40	8.20	22.92	9.81	8.26	14.07	19.05	21.77	11.06	42.93	57.47	14.96
43	20.73	14.19	27.04	17.88	16.81	19.84	6.75	7.00	6.04	10.23	13.14	1.68	58.34	71.59	32.84
44	21.04	17.45	24.51	9.82	7.19	14.63	4.83	4.99	4.38	14.58	16.76	8.21	50.46	64.04	24.34
45	20.89	18.64	23.05	9.67	8.96	10.96	8.41	6.80	12.80	17.14	21.97	2.97	59.39	75.55	28.31
46	23.48	18.88	27.92	11.32	12.02	10.05	3.50	4.47	0.84	13.95	15.88	8.29	58.44	73.74	28.99
47	24.62	23.18	26.00	3.72	1.94	6.98	3.96	3.00	6.61	12.60	14.72	6.38	58.84	73.16	31.28

주: 각 년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임금(2020년 기준)으로 변환한 임금값을 사용.

출처: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6차(2023년) 개인용 자료



Abstract

Diagnosing Social Mobility and Directions for Social Policy Reform in South Korea

Project Head: Kim, Taewa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ocial mobility in South Korea and develop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it. Chapter 2 of Part I present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social mobility. It also analyzes public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based on data from the Social Survey an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income mobility along with key findings from Income Mobility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formerly Statistics Korea). Chapter 3 of Part I covers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urvey on Public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conducted with 3,000 respondents in 2025. Part II then examines social mobility across specific topics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employment, assets, education, disability, and gender.

According to income mobility statistics from the Income Mobility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which classify the population into four income groups, the poverty exit rate declined from 21.6% in 2017 to 20.3% in 2022. Over the same period, the poverty entry rate also decreased, from

Co-Researchers: Kim, Kitae · Kim, Moongil · Lim, Wansub · Lee, Jumi · Jo, Bobae · Jang, Yoonsun · Kim, Hanna · Park, Hyungjohn · Yoon, Sangyong · Lee, Seokmin · Kwon, Shinjung · Kim, Wooseong

9.0% to 8.3%. Notably, while the transition rate from poverty to the near-poverty group remains at around 10%, the transition from the near-poor group into poverty is considerably higher, in the high 20% range. This indicates a marked asymmetry in mobility between these groups.

Public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suggest that income and asset distribution is viewed as more unequal today than five years ago, while expectations for the future (five years ahead) are polarized between the anticipation of a highly unequal society and that of a more equal one. Asset distribution is perceived to be more unequal than income distribution. The primary reason for limited social mobility's perception is identified as the influence of parents' economic resources and social background, followed by dual labor market structures. Factors affecting social mobility—labor market dualism and polarization (75.0%), the persistence of income and asset disparities (74.3%), and population aging and birthrate decline (74.1%)—are perceived to be similarly significant.

Based on the sector-specific results, asset mobility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long-term or substantive changes in social status, rather than as a reflection of short-term mobility. Furthermore, the transfer of assets from the parental generation to the offspring generation suggests that asset mobility is becoming increasingly hereditary across generations. With respect to labor mobility, there has been a decline in the

dynamism of job transitions among wage workers. Panel data further indicate that transitions from non-regular to regular employment have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over time, while transitions from regular to non-regular employment have slightly increased. Educational mobility shows a clear pattern, with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closely linked to parental income levels. Children from higher-income households tend to achieve higher levels of education, suggesting that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remains closely linked to family economic background. In terms of social relationships, Korea ranks among the OECD countries with the least favorable indicators of the social relation, and pronounced generational differences are evident. In addition, inequality in social relationships by socioeconomic status is particularly high in Korea.

An examination of intragenerational mobility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ws a high degree of persistence in income quintiles. Given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in lower income quintiles, this suggests a strong tendency for low income status to become entrenched. For individuals who transitioned from non-disabled to disabled status, strong downward income mobility is evident. Moreove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d higher rates of downward mobility in asset quintiles compared to non-disabled individuals. Clear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oeconomic status are observed

depending on parental disability status. A child's own disability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ownward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mobility based on cohort-specific average wages over the life course indicates that pronounced gender disparities in wage trajectories persist not only in earlier birth cohorts (1950-59, 1960-69, and 1970-79) but also in the most recent birth cohort (1980-89). When examining trends in average wages within each gender from age 30 onward, the wage trajectories of individuals in the highest income quintile for both men and women are observed to differ markedly from those of individuals in the lower income quintiles. Regardless of gender, individuals in the lower income quintiles tend to remain at low wage trajectories, while those in the highest income quintile continue to maintain high wage levels over time.

The key implications are twofold. First, the analysis reveals that social mobility in Korea is shaped by the interplay between intragenerational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is indicates that enhancing social mobility requir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rather than policies limited to a single domain. Second, the analysis confirms that intergenerational transfers play a major role in influencing social mobility. Even when individuals start from identical or similar positions (such as age,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circumstances exert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future resource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To enhance social mobility, two policy directions are recommended. First, improving social mobility and income distribution requires integrating governance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statistical capacity. Second, in order to address disparities in the economic resources held by parents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the introduction of a “Social Assets” scheme is proposed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at the starting point.

Key words: Social Mobility,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tragenerational Mobility, Poverty dynamics, Inequality of Opportunity